

정책보고서 2022-07

발 간 등 록 번 호
12-1071031-000042-14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소득분배 변화와 원인 분석 연구

이원진

김현경·함선유·성재민·하은솔·한겨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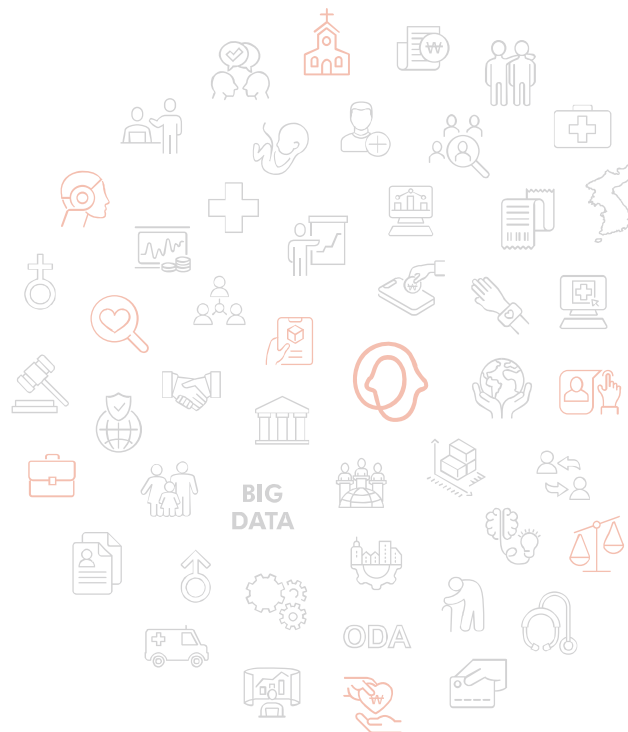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하은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한겨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제|출|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위원회와 용역계약(2022. 1. 28.)한 「소득분배 변화와 원인 분석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요약	1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구성	39
제2장 개인취업소득 분포 변화	41
제1절 분석 개요	43
제2절 분석 방법	44
제3절 분석 결과	46
제4절 소결	59
제3장 임금근로자 개인근로소득 분포 변화 분석	65
제1절 분석 개요	67
제2절 분석 방법	68
제3절 분석 결과	70
제4절 소결	109
제4장 최저임금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	113
제1절 서론	115
제2절 선행연구와 분석모형 설정	117
제3절 기초통계	122
제4절 분석 결과	129
제5절 소결	142



제5장 인구·가구 구조와 소득분배 변화	145
제1절 분석 개요	147
제2절 분석 방법	149
제3절 분석 결과	151
제4절 소결	165
제6장 소득보장제도와 소득분배 변화	171
제1절 분석 개요	173
제2절 2011~2020년 분석 결과	176
제3절 2020년 하위집단별 분석 결과	192
제4절 소결	201
제7장 코로나19 이후 소득분배 변화	205
제1절 분석 개요	207
제2절 분석 방법	209
제3절 고용형태별 코로나19 이후 취업소득 변화	213
제4절 가구형태별 코로나19 이후 취업소득 변화	226
제5절 가구형태별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 분배 변화	233
제6절 소결	246
제8장 결론	251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253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과제	260
참고문헌	261
부록	267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요약표 2-1〉 재가중 분석 설계	3
〈요약표 2-2〉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재가중 분석 결과 요약	5
〈요약표 3-1〉 2004년부터 금융위기까지 지니계수 분해	8
〈요약표 3-2〉 금융위기부터 2014년까지 지니계수 분해	8
〈요약표 3-3〉 2014~2019년 지니계수 분해	9
〈요약표 4-1〉 평균 유효최저임금에서 추정된 한계 효과	11
〈요약표 4-2〉 최저임금의 중하위 임금불평등(1분위 대 5분위 격차) 변화에서 설명력	12
〈요약표 5-1〉 재가중 분석 설계	13
〈요약표 5-2〉 2011~2020년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2020년 지니계수 및 빈곤율 변화	14
〈표 1-1〉 소득 정의	31
〈표 2-1〉 취업소득 정의	43
〈표 2-2〉 재가중 분석 설계	45
〈표 2-3〉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재가중 분석 결과 요약	61
〈표 3-1〉 임금근로자 시간당임금 분포	71
〈표 3-2〉 임금근로자 월임금 분포	72
〈표 3-3〉 무조건부 분위회귀 모형 기술통계	88
〈표 3-4〉 시간당임금 지니계수 회귀분석	99
〈표 3-5〉 월임금 지니계수 회귀분석	101
〈표 3-6〉 2004년부터 금융위기까지 지니계수 분해	103
〈표 3-7〉 금융위기부터 2014년까지 지니계수 분해	104
〈표 3-8〉 2014~2019년 지니계수 분해	105
〈표 4-1〉 청소년·경비직업군의 성별 2008~2019년 임금 증가율	127
〈표 4-2〉 분위별 로그 시간당임금 차이 추이	130
〈표 4-3〉 유효최저임금(중위 임금 기준)의 불평등 지표 영향 회귀분석 결과	133
〈표 4-4〉 유효최저임금(평균 임금 기준)의 불평등 지표 영향 회귀분석 결과	134
〈표 4-5〉 유효최저임금(중위 임금 기준)의 불평등 지표 영향 회귀분석 결과, 여성	135
〈표 4-6〉 유효최저임금(평균 임금 기준)의 불평등 지표 영향 회귀분석 결과, 여성	136
〈표 4-7〉 공공행정·보건사회복지를 제외하고 본 유효최저임금(평균 임금 기준)의 불평등 지표 영향 회귀분석 결과: 지역 고정효과 통제한 차분모형	137
〈표 4-8〉 평균 유효최저임금에서 추정된 한계 효과	137
〈표 4-9〉 최저임금의 중하위 임금불평등(1분위 대 5분위 격차) 변화에서 설명력	139



〈표 4-10〉 유효최저임금(중위 임금 기준)의 불평등 지표 영향 회귀분석 결과, 월임금	140
〈표 4-11〉 시간당임금 분위별 평균 근로시간	140
〈표 4-12〉 월임금 분위별 평균 근로시간	141
〈표 4-13〉 월임금 기준 10분위 구분	141
〈표 5-1〉 재가중 분석 설계	150
〈표 5-2〉 소득 정의	151
〈표 5-3〉 2011~2020년 성·연령 변화에 따른 2020년 지니계수 및 빈곤율 변화	154
〈표 5-4〉 2011~2020년 가구원 수 변화에 따른 2020년 지니계수 및 빈곤율 변화	156
〈표 5-5〉 2011~2020년 아동 가구원 수 변화에 따른 2020년 지니계수 및 빈곤율 변화	158
〈표 5-6〉 2011~2020년 결혼상태 변화에 따른 2020년 지니계수 및 빈곤율 변화	160
〈표 5-7〉 2011~2020년 18~64세의 결혼상태 변화에 따른 2020년 지니계수 및 빈곤율 변화	160
〈표 5-8〉 2011~2020년 65세 이상의 결혼상태 변화에 따른 2020년 지니계수 및 빈곤율 변화	160
〈표 5-9〉 2011~2020년 노인-자녀 동거 변화에 따른 2020년 지니계수 및 빈곤율 변화	163
〈표 5-10〉 2011~2020년 65세 이상의 노인-자녀 동거 변화에 따른 2020년 지니계수 및 빈곤율 변화 ..	163
〈표 5-11〉 2011~2020년 가구유형 변화에 따른 2020년 지니계수 및 빈곤율 변화	165
〈표 5-12〉 2011~2020년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2020년 지니계수 및 빈곤율 변화	166
〈표 6-1〉 주요 소득보장제도 변화	174
〈표 6-2〉 소득 정의	175
〈표 6-3〉 2020년 하위집단 정의	194
〈표 7-1〉 소득분배지표, 2017~2020년	208
〈표 7-2〉 분석대상 사례 수	210
〈표 7-3〉 분석대상 및 분석 방법	212
〈표 7-5〉 가구주 및 배우자의 고용형태별 비율	217
〈표 7-6〉 남성의 고용형태별 비율	219
〈표 7-7〉 여성의 고용형태별 비율	220
〈표 7-8〉 2019년 동분기 대비 임금근로자의 취업소득 변화	222
〈표 7-9〉 2019년 동분기 대비 자영업자의 취업소득 변화	224
〈표 7-10〉 아동이 있는 가구의 부부 취업소득	228
〈표 7-11〉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 및 고용형태	229
〈표 7-12〉 아동이 없는 가구의 부부 취업소득	230
〈표 7-13〉 가구형태 정의	235



〈표 7-14〉 가구형태별 취업소득 평균 및 취업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235
〈표 7-15〉 가구형태별 사회적 수혜금 및 총소득 평균	238
〈표 7-16〉 가구형태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빈곤율	242

그림 목차

[요약그림 1-1] 1990~2020년 가처분소득 분포, 통계청 공식 소득분배지표	1
[요약그림 1-2] 전체 인구 지니계수	2
[요약그림 2-1]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4
[요약그림 3-1] 임금불평등 추이	7
[요약그림 4-1]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상대수준 국제 비교	11
[요약그림 5-1] 성·연령·가구원 수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	15
[요약그림 6-1] 공적이전소득 및 세금·사회보험료 평균	17
[요약그림 6-2] 빈곤갭비율	18
[요약그림 6-3]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19
[요약그림 6-4] 2020년 하위집단별 빈곤갭비율	20
[요약그림 7-1] 자영업자의 분기별 취업소득과 2019년 동분기 대비 변화율	22
[요약그림 7-2] 가구주 및 배우자의 2019년 동분기 대비 고용형태별 비율 변화	23
[요약그림 7-3]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배지표 변화	24
[그림 1-1] 1990~2020년 가처분소득 분포, 통계청 공식 소득분배지표	30
[그림 1-2] 가처분소득 분포 결정 단계	31
[그림 1-3] 2011~2020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 통계청 공식 소득분배지표	33
[그림 1-4] 2011~2020년 소득원천 평균, 통계청 공식 소득분배지표	34
[그림 1-5] 전체 인구 지니계수	36
[그림 1-6] 전체 인구 빈곤율	37
[그림 1-7] 65세 이상 빈곤율	38
[그림 2-1] 성별 분포	46
[그림 2-2] 연령 분포	46
[그림 2-3] 교육수준 분포	47
[그림 2-4] 취업상태 분포	47
[그림 2-5] 성·연령별 고용률	49
[그림 2-6] 성·연령별 고용률, 경제활동인구조사	49
[그림 2-7] 종사상지위 분포	50
[그림 2-8] 15세 이상 인구 종사상지위 분포, 경제활동인구조사	50
[그림 2-9]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51
[그림 2-10] 성·연령 변화에 따른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변화	53
[그림 2-11] 교육수준 변화에 따른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변화	54



[그림 2-12] 취업상태 변화에 따른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변화	55
[그림 2-13] 종사상지위 변화에 따른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변화	56
[그림 2-14] 종사상지위별 개인취업소득 평균 및 지니계수, 재가중 표본(E)	60
[그림 3-1] 임금불평등 추이	73
[그림 3-2] 성·연령 분포	76
[그림 3-3] 성별·연령별 임금 수준	76
[그림 3-4] 학력 분포	77
[그림 3-5] 학력별 임금 수준	77
[그림 3-6] 종사상지위 및 고용형태 분포	79
[그림 3-7] 종사상지위 및 고용형태별 임금 수준	80
[그림 3-8] 근로형태별 임금 수준	81
[그림 3-9] 산업 분포	82
[그림 3-10] 산업별 임금 수준	83
[그림 3-11] 직업 분포	84
[그림 3-12] 직업별 임금 수준	84
[그림 3-13] 종사자규모 분포	85
[그림 3-14] 종사자규모별 임금 수준	85
[그림 3-15] 노조가입률 및 비조합원 대비 조합원 임금 수준	86
[그림 3-16] 남성 대비 여성 임금 격차	89
[그림 3-17] 연령별 임금 격차	90
[그림 3-18] 고졸 대비 대졸 이상 임금 격차	91
[그림 3-19]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 전일제 대비 시간제 임금 격차	93
[그림 3-20] 산업별 임금 격차	94
[그림 3-21] 직업별 임금 격차	96
[그림 3-22] 종사자규모별 임금 격차	97
[그림 3-23] 노동조합 비가입 대비 가입 임금 격차	98
[그림 3-24] 성별·연령별 비정규직 비율	106
[그림 4-1]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상대수준 국제 비교	115
[그림 4-2] 저임금 비중 국제비교	122
[그림 4-3] 중하위 임금격차(5분위 대 1분위) 국제 비교	123
[그림 4-4] 상하위 임금격차(9분위 대 1분위) 국제 비교	124



[그림 4-5] 실질 시간당임금 상승률(10분위 구분 기준)	125
[그림 4-6] 1분위 로그 실질 시간당임금 상승과 1분위 대 5분위 로그 임금격차 추이	126
[그림 4-7] 최저임금 이하율과 최저임금 인상을 추이	128
[그림 4-8] 평균 임금 기준 유효 최저임금과 중위 임금 대비 분위별 임금 수준 간 관계	129
[그림 4-9] 고임금 지역과 저임금 지역의 분위별 실질 시간당임금 인상률(2008~2019년간)	131
[그림 4-10] 고임금 지역과 저임금 지역의 최저임금 미만을 추이	132
[그림 5-1] 지니계수 및 빈곤율	148
[그림 5-2] 성·연령 변화에 따른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분포 변화	153
[그림 5-3] 가구원 수 변화에 따른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분포 변화	155
[그림 5-4] 아동 가구원 수 변화에 따른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분포 변화	157
[그림 5-5] 결혼상태 변화에 따른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분포 변화	159
[그림 5-6] 노인·자녀 동거 변화에 따른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분포 변화	162
[그림 5-7] 가구유형 변화에 따른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분포 변화	164
[그림 5-8] 성·연령·가구원 수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및 빈곤율 변화	168
[그림 5-9] 성·연령·가구원 수 변화에 따른 연령대별 빈곤율 변화	169
[그림 6-1] 공적이전소득 및 세금·사회보험료 평균	177
[그림 6-2] 시장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 및 세금·사회보험료 평균	178
[그림 6-3] 시장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 평균	179
[그림 6-4] 지니계수	181
[그림 6-5] 빈곤율	183
[그림 6-6] 빈곤갭비율	184
[그림 6-7]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지니계수 변화	185
[그림 6-8]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빈곤율 변화	186
[그림 6-9]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빈곤갭비율 변화	187
[그림 6-10]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지니계수 감소 효과	189
[그림 6-11]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빈곤율 감소 효과	190
[그림 6-12]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191
[그림 6-13] 2020년 하위집단 비율	195
[그림 6-14] 2020년 하위집단별 공적이전소득 및 세금·사회보험료 평균	196
[그림 6-15] 2020년 하위집단별 빈곤갭비율	197
[그림 6-16] 2020년 하위집단별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200



[그림 7-1] 맞벌이 비율	208
[그림 7-2] 임금근로자의 분기별 취업소득과 2019년 동분기 대비 변화율	213
[그림 7-3] 자영업자의 분기별 취업소득과 2019년 동분기 대비 변화율	214
[그림 7-4] 2019년 동분기 대비 고용형태별 비율 변화	216
[그림 7-5] 가구주 및 배우자의 2019년 동분기 대비 고용형태별 비율 변화	218
[그림 7-6] 성·교육수준별 2019년 동분기 대비 고용형태별 비율 변화	221
[그림 7-7] 재가중 결과: 임금근로자의 분기별 취업소득과 2019년 동분기 대비 변화율	223
[그림 7-8] 재가중 결과: 자영업자의 분기별 취업소득과 2019년 동분기 대비 변화율	224
[그림 7-9] 재가중 결과: 아동이 있는 가구의 부부 취업소득과 2019년 동분기 대비 변화율	227
[그림 7-10] 재가중 결과: 아동이 없는 가구의 부부 취업소득과 2019년 동분기 대비 변화율	231
[그림 7-11] 재가중 결과: 부부 소득의 지니계수 변화	232
[그림 7-12]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배지표 변화	234
[그림 7-13] 가구형태별 2019년 동분기 대비 취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변화	236
[그림 7-14] 가구형태별 2019년 동분기 대비 취업소득, 사회적 수혜금 소득, 총소득 변화	239
[그림 7-15] 비노인 1인 가구의 2019년 동분기 대비 취업소득, 사회적 수혜금, 총소득 변화	241
[그림 7-16] 집단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빈곤율 변화	244
[그림 7-17] 아동 가구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빈곤율 변화	245
[그림 7-18] 아동 가구의 취업소득	246

부표 목차

〈부표 1-1〉 지니계수 및 빈곤율	267
〈부표 2-1〉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재가중 분석 결과	268
〈부표 2-2〉 종사상지위별 개인취업소득 평균 및 지니계수, 재가중 표본(E)	269
〈부표 5-1〉 2011~2020년 연령 변화에 따른 2020년 소득분배 변화	269
〈부표 5-2〉 성·연령 분포 변화	271
〈부표 5-3〉 가구유형 분포 변화, 실제 표본(A)	272
〈부표 5-4〉 가구유형 분포 변화, 재가중 표본(B)	274
〈부표 5-5〉 성·연령·가구원 수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및 빈곤율 변화	275
〈부표 6-1〉 공적이전소득 및 세금·사회보험료 평균	276
〈부표 6-2〉 시장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 및 세금·사회보험료 평균	277
〈부표 6-3〉 지니계수, 빈곤율, 빈곤갭비율	278
〈부표 6-4〉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지니계수, 빈곤율,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280
〈부표 6-5〉 2020년 하위집단별 공적이전소득 및 세금·사회보험료 평균	282
〈부표 7-1〉 고용형태별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283



[부도 5-1] 18~64세 결혼상태 변화	270
[부도 5-2] 65세 이상 결혼상태 변화	270
[부도 5-3] 65세 이상 노인-자녀 동거 변화	271

제1장 서론

□ 연구의 목적

○ 1990년대 초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이십여 년간 소득분배는 크게 악화되었음([요약그림 1-1]).

- 노동시장 불평등 확대,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소득분배 악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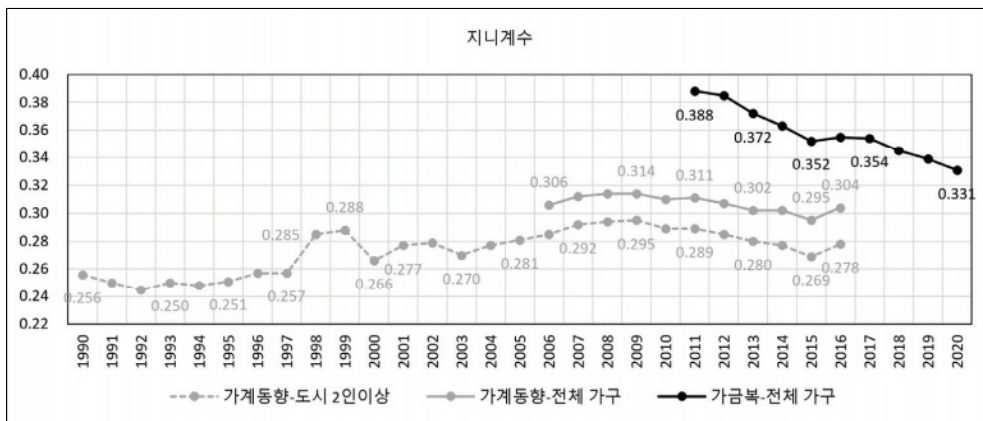
○ 2010년대에는 소득분배가 개선되었음([요약그림 1-1]).

- 최근 소득분배 개선 추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진단이 충분하지 못했음.

- 공식 소득분배지표 시계열이 단절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주요 정책과 단기 소득분배 변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컸다는 점도 최근 소득분배 추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요약그림 1-1] 1990~2020년 가처분소득 분포, 통계청 공식 소득분배지표

(단위: 0~1)



주: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한 결과이다. '가계동향'은 가계동향조사, '가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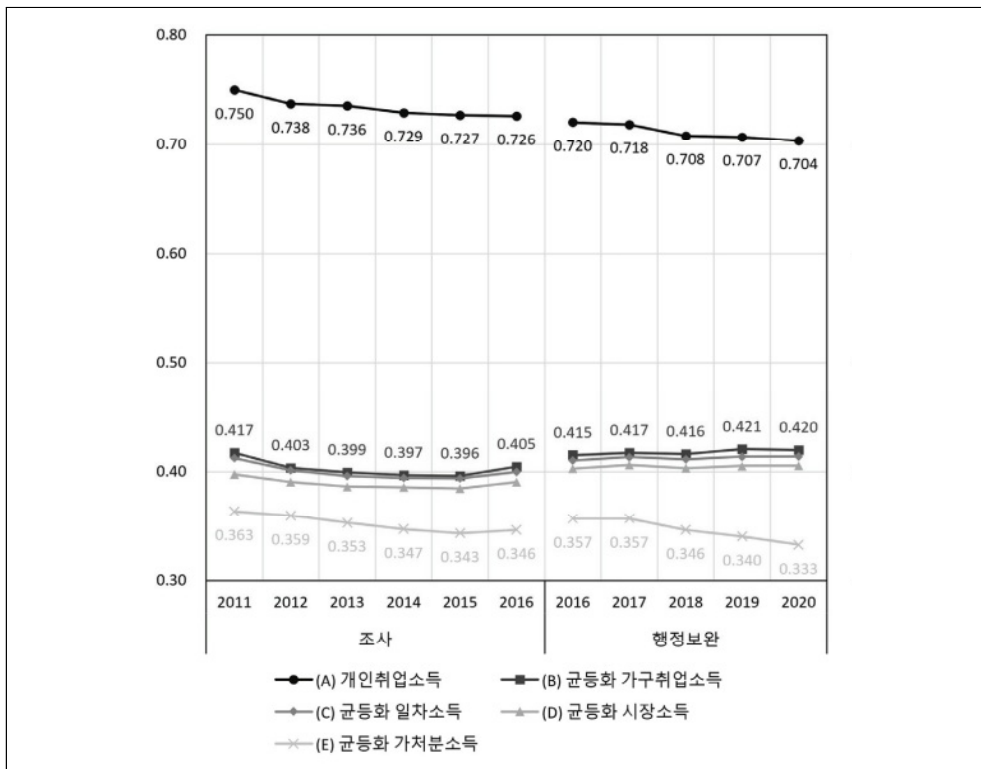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8).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집계자료; 통계청. (2021a).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집계자료.

2 소득분배 변화와 원인 분석 연구

- 이 연구는 2010년대 한국 소득분배가 어떻게, 왜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함.
- 2010년대 소득분배 기초 실태([요약그림 1-2])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설정함.
 - 첫째, 2010년대에 개인취업소득 분배가 왜 개선되었는가?
 - 둘째, 개인취업소득 분배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구취업소득 분배가 정체·악화하였는가?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셋째, 시장소득 분배가 정체·악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처분소득 분배가 개선되었는가? 소득보장제도의 분배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요약그림 1-2] 전체 인구 지니계수

(단위: 0~1)



주: 균등화 소득은 가구원 수 제공근으로 나눈 가구소득을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1-1>에 제시하였다.

제2장 개인취업소득 분포 변화

□ 분석 개요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분포 변화를 분석함.
 - 개인취업소득은 임금노동으로 획득한 근로소득과 자영업으로 획득한 사업소득을 합산한 세전소득을 의미함.
- 재가중 방법을 활용하여 성·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 종사상지위 변화가 개인취업소득 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요약표 2-1〉).

〈요약표 2-1〉 재가중 분석 설계

표본의 구성		
(A)	실제 표본	$T=t$ 실제 표본 $T=t$ 표본을 재가중하여 특성 분포를 $T=1$ 표본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B)	성·연령 재가중 표본	
(C)	성·연령×교육수준 재가중 표본	
(D)	성·연령×교육수준×취업상태 재가중 표본	
(E)	성·연령×교육수준×취업상태×종사상지위 재가중 표본	
표본 간 차이		
(A-B)	$T=1 \rightarrow T=t$ Pr(성·연령) 변화의 영향	
(B-C)	$T=1 \rightarrow T=t$ Pr(교육수준 성·연령) 변화의 영향	
(C-D)	$T=1 \rightarrow T=t$ Pr(취업상태 성·연령·교육수준) 변화의 영향	
(D-E)	$T=1 \rightarrow T=t$ Pr(종사상지위 성·연령·교육수준·취업상태) 변화의 영향	

주: 개별 변수의 범주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2개 이상의 변수를 조합한 특성을 재가중할 때는 필요에 따라 인접 범주를 통합하였다.

- 성: 남성/여성
- 연령: 0~17세/18~34세/35~49세/50~64세/65세 이상
- 교육수준: 중졸 이하/고졸/대졸 이상
- 취업상태: 비취업/취업
-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기타 종사자/무직·비경제활동인구

자료: 필자가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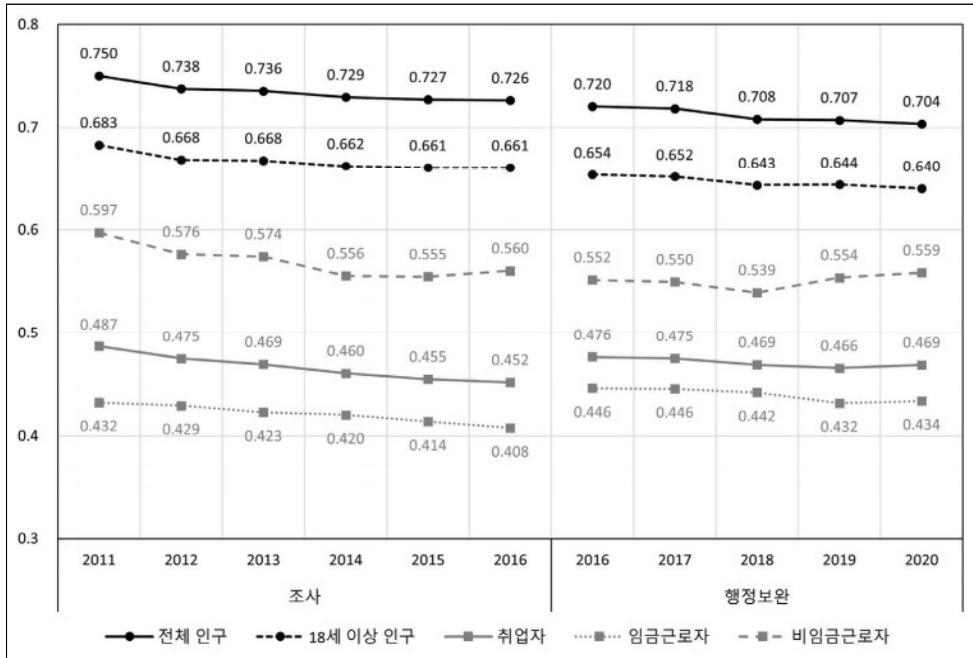
□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요약그림 2-1〕)

- 아동과 비취업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 인구, 경제활동참여가 불가능한 아동을 제외한 18세 이상 인구, 무직·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취업자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가 모두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음.

4 소득분배 변화와 원인 분석 연구

[요약그림 2-1]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단위: 0~1)



주: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를,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종사자를 포함한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고용률 증가의 영향(<요약표 2-2>)

○ 성·연령, 교육수준을 통제했을 때 2011~2020년 고용률 증가는 전체 인구나 18세 이상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를 약 0.004~0.005 감소시켰지만, 취업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를 약 0.002~0.008 증가시켰음.

- 주로 여성과 중고령자를 중심으로 고용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고용률이 증가한 결과 취업자 내에서 여성과 중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취업자의 집단 내 불평등이 증가하였음.
- 하지만 고용률 증가에 따라 개인취업소득이 존재하는 집단의 상대적인 규모가 증가한 변화는 비취업자를 포함한 전체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을 감소시켰음.

○ 고용률 증가의 분배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고용률 증가가 결과적으로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임금근로자의 집단 내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하고 소득 수준을 향상시켜 불평등과 빈곤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요약표 2-2〉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재가중 분석 결과 요약

(단위: 0~1)

구분		(a) t1→t2 변화	(b) 성·연령 변화의 영향	(c) 교육수준 변화의 영향	(d+e) 경제활동 변화의 영향			(f) 기타 영향
					(d) 취업상태 변화의 영향	(e) 종사상지위 변화의 영향	(d+e) 경제활동 변화의 영향	
전체 인구	(α) 2011→2016 조사	-0.024	-0.005	-0.003	-0.001	-0.004	-0.005	-0.011
	(β) 2016→2020 행정	-0.017	-0.001	0.000	-0.003	-0.003	-0.006	-0.010
	(α+β)	-0.041	-0.006	-0.003	-0.004	-0.007	-0.011	-0.021
18세 이상 인구	(α) 2011→2016 조사	-0.022	0.002	-0.004	-0.001	-0.006	-0.006	-0.014
	(β) 2016→2020 행정	-0.013	0.006	0.000	-0.004	-0.003	-0.007	-0.013
	(α+β)	-0.036	0.008	-0.004	-0.005	-0.009	-0.013	-0.026
취업자	(α) 2011→2016 조사	-0.035	0.004	-0.004	0.000	-0.009	-0.009	-0.025
	(β) 2016→2020 행정	-0.008	0.006	-0.001	0.005	-0.006	-0.001	-0.013
	(α+β)	-0.043	0.010	-0.005	0.005	-0.015	-0.010	-0.038
임금 근로자	(α) 2011→2016 조사	-0.025	0.003	0.000	-0.001	-0.001	-0.001	-0.026
	(β) 2016→2020 행정	-0.012	0.005	0.001	0.003	-0.001	0.002	-0.019
	(α+β)	-0.037	0.008	0.001	0.002	-0.002	0.000	-0.045
비임금 근로자	(α) 2011→2016 조사	-0.037	0.002	-0.009	0.000	-0.009	-0.010	-0.020
	(β) 2016→2020 행정	0.007	0.005	-0.004	0.008	-0.009	-0.001	0.007
	(α+β)	-0.030	0.007	-0.012	0.008	-0.019	-0.011	-0.014

주: 제3절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종사상지위 변화의 영향(〈요약표 2-2〉)

○ 성·연령, 교육수준, 고용률을 통제했을 때 상용근로자 비율 증가,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감소 등과 같은 2011~2020년 종사상지위 변화가 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전체 인구, 18세

이상 인구, 취업자, 비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를 약 0.007~0.019 감소시켰음.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일자리의 질 향상이 노동시장 불평등을 축소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할 가능성을 시사함.

- 향후 개인취업소득 분배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계자영업과 비공식부문의 축소, 고용안정성 강화, 비정규직 차별 완화 등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고용률과 종사상지위 변화를 종합하면, 경제활동 변화가 2011~2020년 전체 인구와 18세 이상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감소량의 약 1/4~1/3을 설명하였음.

○ 성·연령, 교육수준, 고용률, 종사상지위를 통제한 후에도 전체 인구, 18세 이상 인구, 취업자, 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가 시간에 따라 크게 감소하였음.

- 이는 종사상지위로 설명되지 않는 일자리 특성 변화,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요인이 개인취업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함.

제3장 임금근로자 개인근로소득 분포 변화 분석

□ 분석 개요

○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04년 이후 임금불평등 변화를 분석함.

○ 무조건부 분위회귀 모형(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UQR)(Firpo, Fortin & Lemieux, 2009)과 Oaxaca-Blinder 요인분해(OB 요인분해)(Blinder, 1973; Oaxaca, 1973) 방법을 활용함.

□ 임금불평등 추이(〔요약그림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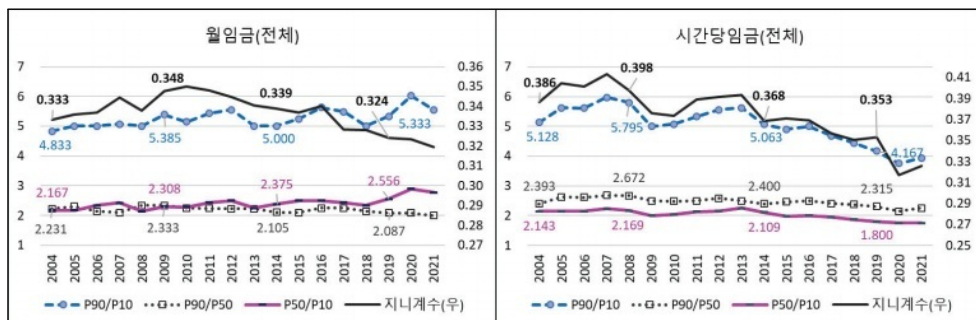
○ 2004년 이후 임금불평등은 대체로 2000년대 말 금융위기까지 증가한 후 최근까지 감소하였음.

- 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임금 지니계수는 2004년 0.386에서 2007년 0.413으로 증가한 후 2020년 0.317로 크게 감소하였음,
-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임금 지니계수는 2004년 0.333에서 2010년 0.350으로 증가한 후 2021년 0.319로 크게 감소하였음.

○ 대체로 월임금보다 시간당임금의 불평등이 더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근 단시간 근로 확대가 월임금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함.

[요약그림 3-1] 임금불평등 추이

(단위: 배, 0~1)



주: <표 3-1>, <표 3-2>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 2004~2008/2009년 임금분배 악화기(<요약표 3-1>)

- 임금근로자의 고령화, 생산직 감소 및 단순노무직 증가가 시간당임금 및 월임금 지니계수 증가량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였음. 또한 시간제 일자리 증가 역시 월임금 지니계수 증가에 중요하게 기여하였음.
- 2000년대 초중반부터 금융위기까지의 시기에는 탈산업화에 따라 제조업·생산직의 중간임금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하였고,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중고령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하고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임금불평등이 증가하였음.

8 소득분배 변화와 원인 분석 연구

〈요약표 3-1〉 2004년부터 금융위기까지 지니계수 분해

구분		시간당임금 2004→2008		월임금 2004→2009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00114	(0.00030) ***	0.00129	(0.00022) ***
	특성 효과	0.00113	(0.00013) ***	0.00145	(0.00015) ***
	계수 효과	0.00002	(0.00028)	-0.00016	(0.00019)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001	(0.00001)	-0.00001	(0.00001)
	연령	0.00086	(0.00007) ***	0.00073	(0.00005) ***
	학력	0.00017	(0.00005) ***	0.00004	(0.00003)
	가구주	-0.00001	(0.00001)	0.00000	(0.00000)
	배우자	0.00006	(0.00002) ***	0.00003	(0.00001) *
	고용형태	0.00001	(0.00003)	0.00007	(0.00002) ***
	시간제	0.00002	(0.00002)	0.00053	(0.00011) ***
	산업	-0.00015	(0.00004) ***	-0.00017	(0.00003) ***
	직업	0.00027	(0.00005) ***	0.00027	(0.00003) ***
	종사자규모	-0.00012	(0.00004) ***	-0.00003	(0.00003) ***
	노조	0.00002	(0.00002)	-0.00001	(0.00001) ***

* p<0.1, ** p<0.05, *** p<0.01

주: 괄호 안의 수치는 로버스트 표준오차이다. 음영이 있는 값은 총 격차 분해에서는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 중에 절대값의 크기가 더 큰 값이며, 세부 분해에서는 특성 효과에서 절대값의 크기가 가장 큰 3개의 요인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요약표 3-2〉 금융위기부터 2014년까지 지니계수 분해

구분		시간당임금 2008→2014		월임금 2009→2014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00253	(0.00030) ***	-0.00008	(0.00024)
	특성 효과	0.00084	(0.00014) ***	0.00097	(0.00016) ***
	계수 효과	-0.00338	(0.00029) ***	-0.00105	(0.00018)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005	(0.00002) ***	-0.00002	(0.00001) *
	연령	0.00089	(0.00007) ***	0.00045	(0.00005) ***
	학력	0.00013	(0.00004) ***	-0.00004	(0.00002) *
	가구주	0.00000	(0.00001)	-0.00001	(0.00000)
	배우자	0.00001	(0.00001)	0.00000	(0.00000)
	고용형태	-0.00051	(0.00005) ***	-0.00027	(0.00004) ***
	시간제	0.00028	(0.00004) ***	0.00085	(0.00012) ***
	산업	-0.00002	(0.00003)	0.00006	(0.00002) ***
	직업	0.00007	(0.00005)	-0.00005	(0.00003)
	종사자규모	0.00005	(0.00004)	-0.00001	(0.00003)
	노조	-0.00001	(0.00001)	0.00000	(0.00000)

* p<0.1, ** p<0.05, *** p<0.01

주: 괄호 안의 수치는 로버스트 표준오차이다. 음영이 있는 값은 총 격차 분해에서는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 중에 절대값의 크기가 더 큰 값이며, 세부 분해에서는 특성 효과에서 절대값의 크기가 가장 큰 3개의 요인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요약표 3-3〉 2014~2019년 지니계수 분해

구분		시간당임금 2014→2019		월임금 2014→2019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00454	(0.00030) ***	-0.00094	(0.00025) ***
	특성 효과	0.00061	(0.00013) ***	0.00229	(0.00017) ***
	계수 효과	-0.00515	(0.00030) ***	-0.00323	(0.00019)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007	(0.00002) ***	-0.00005	(0.00002) ***
	연령	0.00059	(0.00006) ***	0.00057	(0.00005) ***
	학력	0.00022	(0.00004) ***	0.00004	(0.00002) *
	가구주	0.00001	(0.00001)	0.00001	(0.00001)
	배우자	-0.00007	(0.00002) ***	-0.00003	(0.00001) ***
	고용형태	-0.00052	(0.00007) ***	-0.00010	(0.00005) *
	시간제	0.00044	(0.00005) ***	0.00179	(0.00013) ***
	산업	-0.00011	(0.00003) ***	-0.00002	(0.00002)
	직업	0.00010	(0.00005) **	0.00006	(0.00003) **
	종사자규모	0.00001	(0.00004)	0.00003	(0.00003)
	노조	0.00000	(0.00001)	0.00000	(0.00001)

* p<0.1, ** p<0.05, *** p<0.01

주: 괄호 안의 수치는 로버스트 표준오차이다. 음영이 있는 값은 총 격차 분해에서는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 중에 절대값의 크기가 더 큰 값이며, 세부 분해에서는 특성 효과에서 절대값의 크기가 가장 큰 3개의 요인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 2008/2009~2019년 임금분배 개선기(〈요약표 3-2〉, 〈요약표 3-3〉)

- 고령화와 시간제 일자리 증가가 분배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상용직 증가 및 임시·일용직 감소가 분배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임금근로자의 특성 변화로 설명되지 않는 임금 지니계수 감소량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 제조업·생산직 일자리 감소세가 중단되었고, 중간임금 일자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임금불평등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됨.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제조업·생산직 일자리의 완만한 감소세가 다시 시작되어 중간임금 일자리가 감소하였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일자리의 상대임금 수준을 향상시켜 임금불평등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간임금 일자리의 정책적 중요성을 시사하는데,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질 향상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임금불평등을 상당히 증가시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임.

제4장 최저임금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

□ 분석 개요

-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최저임금이 시간당임금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최저임금이 평균적인 임금 수준이 낮은 지역의 임금불평등을 더 강하게 축소할 것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최저임금의 분배 효과를 추정하였음.
-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음.

$$w_{st}(p) - w_{st}(50) = \alpha_t + \beta_1(w^m - w_{st}(50)) + \beta_2(w^m - w_{st}(50))^2 + \epsilon_{st}$$

$w_{st}(50)$: t기의 지역별 중위 임금

w^m : 최저임금

$w_{st}(p)$: 지역별 p번째 분위 임금

$w^m - w_{st}(50)$: 지역의 최저임금 영향력 (중위 임금 또는 평균 임금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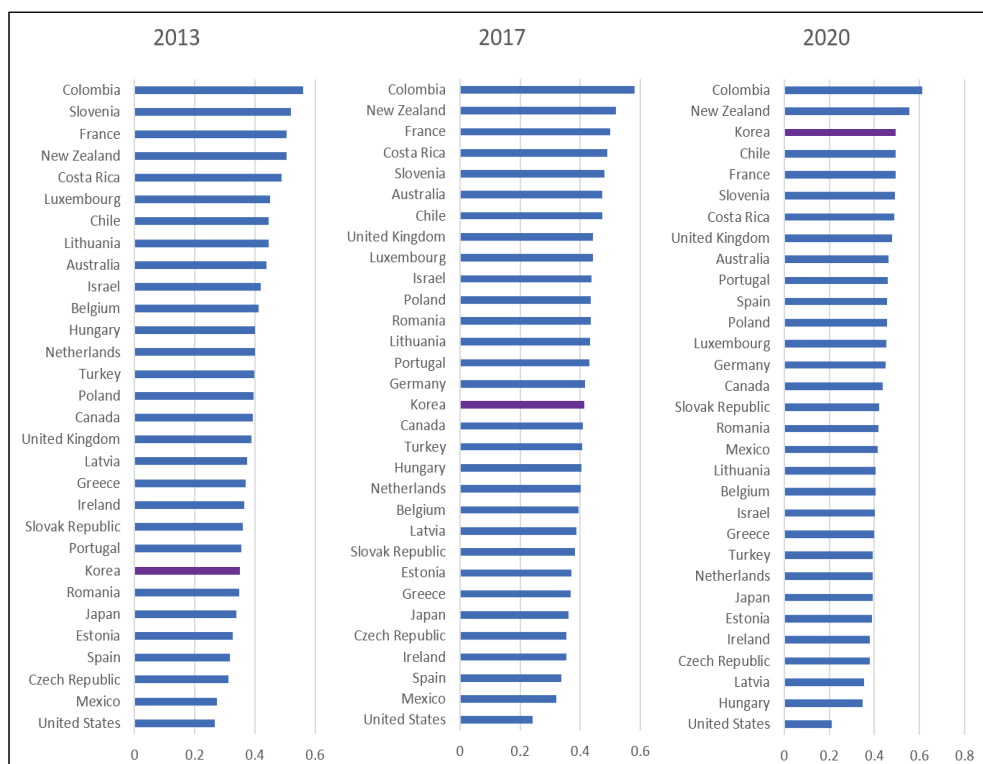
□ 최저임금 인상 현황([요약그림 4-1])

-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되었음.
 - 2010년대에 평균 임금 인상률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은 적은 없었음.
- 2017년 OECD 중간권에 속했던 최저임금 상대수준(평균 임금 기준)이 2020년 최상위권으로 향상되었음.
- 저임금 비중, 중하위 임금불평등 역시 OECD 최상위권에서 중간권 이하 수준으로 개선되었음.

□ 회귀분석 결과(<요약표 4-1>)

- 최저임금은 1분위 임금과 5분위 임금의 격차를 뚜렷하게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3분위까지 임금불평등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최저임금의 파급효과를 시사하였음.

[요약그림 4-1]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상대수준 국제 비교



자료: OECD.Stat,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IN2AVE> (2021. 9. 13. 접근)

〈요약표 4-1〉 평균 유효최저임금에서 추정된 한계 효과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평균 임금 기준 유효최저, 지역 고정효과, 지역 추세 통제	0.272*** (0.0385)	0.234*** (0.0449)	0.162*** (0.0368)	0.101** (0.0423)
평균 임금 기준 유효최저, 지역 고정효과, 지역 추세 미통제	0.366*** (0.0217)	0.304*** (0.0199)	0.204*** (0.0160)	0.126*** (0.0127)
평균 임금 기준 유효최저, 지역 고정효과, 차분 추정	0.234*** (0.0467)	0.0608** (0.0246)	0.0518** (0.0203)	0.0356 (0.0225)
평균 임금 기준 유효최저, 지역 고정효과, 차분 추정, 공공행정 및 보건사회복지 제외	0.262*** (0.0445)	0.0706** (0.0289)	0.0530** (0.0252)	0.0479** (0.0202)

*** p<0.01, ** p<0.05, * p<0.1

주: 괄호는 로버스트 표준오차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 중하위 임금불평등 변화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요약표 4-2〉)

- 평균 임금 기준 유효 최저임금으로 추정된 결과, 최저임금이 2008~2020년 중하위 임금불평등 감소량의 약 35%를 설명하였음.
- 이는 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임금불평등 감소 효과를 분명하게 실증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중하위 임금 일자리 확대 등과 같은 노동시장 변화 역시 2010년대 임금불평등 감소에 중요하게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함.

〈요약표 4-2〉 최저임금의 중하위 임금불평등(1분위 대 5분위 격차) 변화에서 설명력

구분	2008~2020년 실제 변화	2008~2020년 가상 변화	설명력(%)
중위 임금 기준 유효 최저임금, OLS	0.255	0.184	72.3
중위 임금 기준 유효 최저임금, 차분		0.204	80.0
평균 임금 기준 유효 최저임금, OLS		0.083	32.4
평균 임금 기준 유효 최저임금, 차분		0.092	36.2

주: 〈표 4-3〉, 〈4-4〉를 이용해 추정된 결과이다.

제5장 인구·가구 구조와 소득분배 변화

□ 분석 개요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가구 구조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재가중 방법을 활용하여 성·연령, 가구원 수, 결혼상태, 노인-자녀 동거 등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요약표 5-1〉).

□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요약표 5-2〉)

-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노인 비율이 증가하는 방향의 인구 구조 변화는 주로 전체 인구의 가구소득 분배를 악화시켰음.
- 2011~2020년 성·연령 변화는 2020년 전체 인구의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빈곤율을 각각 0.007~0.020, 1.0~2.5%포인트 증가시켰음.

〈요약표 5-1〉 재가중 분석 설계

표본의 구성		
(A)	실제 표본	t년 실제 표본
(B)	성·연령 재가중 표본	t년 표본을 재가중하여 특성 분포를 2011년 표본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C)	성·연령×가구원 수 재가중 표본	
(D)	성·연령×아동 가구원 수 재가중 표본	
(E)	성·연령×결혼상태 재가중 표본	
(E1)	성·연령×18~64세의 결혼상태 재가중 표본	
(E2)	성·연령×65세 이상의 결혼상태 재가중 표본	
(F)	성·연령×노인-자녀 동거 재가중 표본	
(F1)	성·연령×65세 이상의 노인-자녀 동거 재가중 표본	
(G)	성·연령×가구유형 재가중 표본	
표본 간 차이		
(A-B)	2011년→t년 Pr(성·연령) 변화의 영향	
(B-C)	2011년→t년 Pr(가구원 수 성·연령) 변화의 영향	
(B-D)	2011년→t년 Pr(아동 가구원 수 성·연령) 변화의 영향	
(B-E)	2011년→t년 Pr(결혼상태 성·연령) 변화의 영향	
(B-E1)	2011년→t년 Pr(18~64세의 결혼상태 성·연령) 변화의 영향	
(B-E2)	2011년→t년 Pr(65세 이상의 결혼상태 성·연령) 변화의 영향	
(B-F)	2011년→t년 Pr(노인-자녀 동거 성·연령) 변화의 영향	
(B-F1)	2011년→t년 Pr(65세 이상의 노인-자녀 동거 성·연령) 변화의 영향	
(B-G)	2011년→t년 Pr(가구유형 성·연령) 변화의 영향	

주: 개별 변수의 범주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2개 이상의 변수를 조합한 특성을 재가중할 때는 필요에 따라 인접 범주를 통합하였다.

- 성: 남성/여성
- 연령: 0~4세/5~9세/10~17세/18~24세/25~29세/30~34세/35~39세/40~44세/45~49세/50~54세/55~59세/60~64세/65~69세/70~74세/75~79세/80세 이상
- 가구원 수: 1명/2명/3명/4명 이상
- 아동 가구원 수: 0명/1명/2명/3명 이상
- 결혼상태: 유배우/무배우
- 노인-자녀 동거: 동거/비동거,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를 활용하여 정의하였다.
- 가구유형: 개인 연령, 0~17세 가구원 수, 18~64세 가구원 수, 65세 이상 가구원 수를 조합하여 28개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범주는 〈부표 5-3〉~〈부표 5-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필자가 작성하였다.

□ 가구 구조 변화의 영향(〈요약표 5-2〉)

- 인구 구조를 통제했을 때 가구의 소규모화, 노인-자녀 동거 감소 등과 같은 가구 구조 변화는 주로 노인의 빈곤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4 소득분배 변화와 원인 분석 연구

○ 2011~2020년 가구원 수 변화는 2020년 노인의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을 각각 2.3~3.7%포인트 증가시켰고, 2011~2020년 노인-자녀 동거 변화는 2020년 노인의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을 각각 1.6~2.2%포인트 증가시켰음.

○ 가구 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본 결과, 대체로 가구원 수 변화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음.

〈요약표 5-2〉 2011~2020년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2020년 지니계수 및 빈곤율 변화

(단위: 0~1,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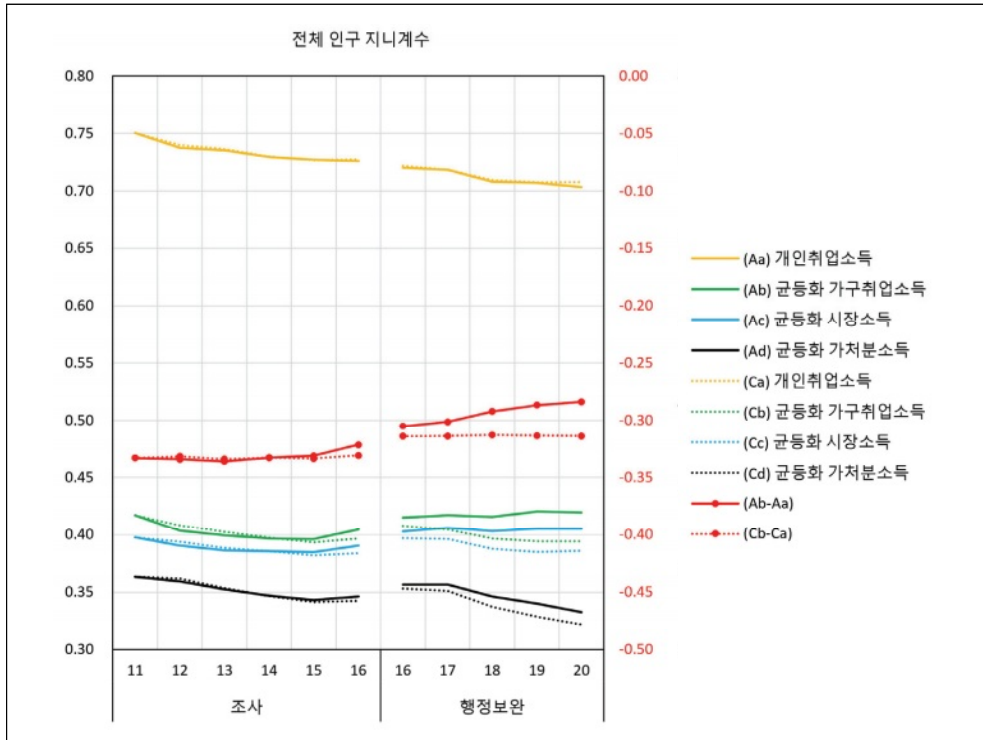
구분		(a) 성·연령 변화의 영향	성·연령 통제 시					(a+b) 성·연령 ·가구원 수 변화의 영향
			(b) 가구원 수 변화의 영향	(c) 아동 가구원 수 변화의 영향	(d) 결혼상태 변화의 영향	(e) 노인-자 녀 동거 변화의 영향	(f) 가구유형 변화의 영향	
개인 취업 소득	전체 인구 지니계수	-0.002	-0.002	-0.002	-0.001	0.000	-0.002	-0.004
	빈곤율	전체 인구	-0.9	0.0	-0.2	0.3	0.0	-0.9
		0~17세	0.0	0.0	0.0	0.0	0.0	0.0
		18~64세	-0.9	0.0	-0.3	0.4	0.0	-1.0
		65세 이상	-0.3	0.1	0.1	0.2	0.0	-0.2
균등화 가구 취업 소득	전체 인구 지니계수	0.020	0.006	0.005	0.002	0.002	0.003	0.026
	빈곤율	전체 인구	2.5	0.7	0.5	0.5	0.2	3.2
		0~17세	-0.7	-0.1	0.2	0.1	-0.2	-0.8
		18~64세	0.4	0.4	0.1	0.5	0.0	0.8
		65세 이상	-0.2	3.7	2.9	0.7	3.0	3.5
균등화 시장 소득	전체 인구 지니계수	0.015	0.005	0.004	0.001	0.002	0.003	0.019
	빈곤율	전체 인구	2.1	0.6	0.4	0.3	0.2	2.7
		0~17세	-0.5	-0.2	0.2	0.0	-0.3	-0.8
		18~64세	0.4	0.3	0.1	0.4	-0.1	0.6
		65세 이상	-0.1	3.4	2.5	0.3	2.0	3.3
균등화 가처분 소득	전체 인구 지니계수	0.007	0.003	0.003	0.000	0.001	0.002	0.010
	빈곤율	전체 인구	1.0	0.5	0.3	0.3	0.1	1.5
		0~17세	-0.6	-0.1	0.2	0.2	-0.2	-0.7
		18~64세	-0.1	0.3	0.1	0.4	-0.1	0.2
		65세 이상	-0.4	2.3	1.8	0.1	1.6	1.9

주: 제3절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로, 재가 중 시 가처분소득 중위값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요약그림 5-1] 성·연령·가구원 수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

(단위: 0~1)



주: 균등화 소득은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눈 가구소득을 의미한다.

(A) 연도별 실제 표본

(C)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가구원 수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5-5>에 제시하였다.

□ 인구·가구 구조 변화와 소득분배

○ 2010년대에 개인취업소득 분배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취업소득 및 시장소득 분배가 정체·악화된 것은 거의 대부분 인구·가구 구조 변화 때문임 ([요약그림 5-1]).

- 만약 인구·가구 구조가 변화하지 않았더라면, 개인취업소득 분배가 개선된 만큼 거의 그대로 가구취업소득 분배가 개선되었을 것임.
- 즉,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이 노동시장 불평등을 축소하는 정책이 개인취업 소득 분배 개선을 경유하여 가구소득 분배를 개선할 수 있음.

-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인구·가구 구조 변화의 소득분배 악화 효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노동시장정책, 주로 소득보장정책을 활용하여 생애과정에서 소득을 충분히 평탄화해야 함.
 -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강화가 필수적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금 등과 같은 빈곤정책, 노인일자리아업과 같은 고용정책 역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제6장 소득보장제도와 소득분배 변화

□ 분석 개요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보장제도의 분배 효과를 분석함.

□ 2010년대 소득보장제도 확대([요약그림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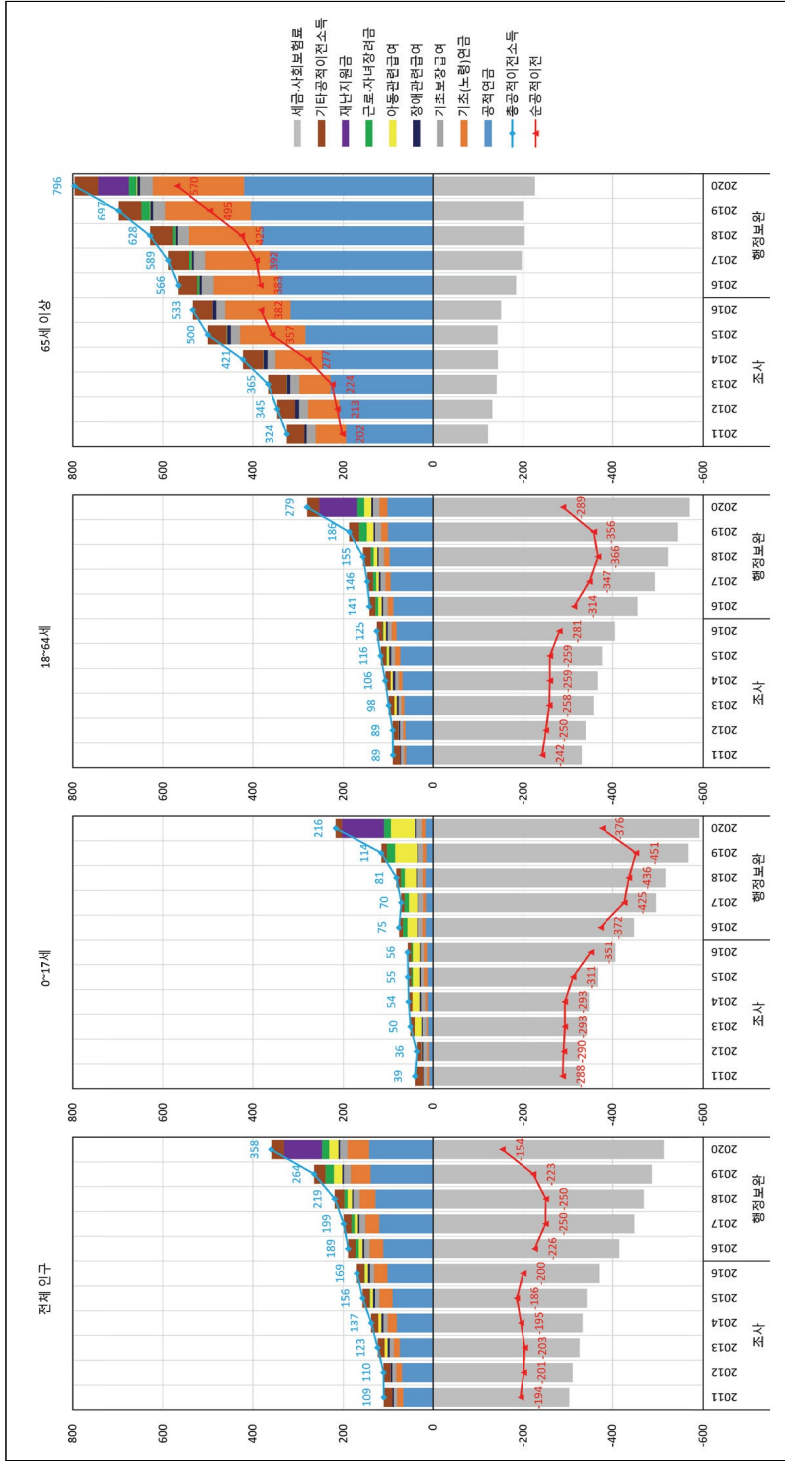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주로 공적연금 성숙과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시행·확대에 따라 소득보장체계가 양적으로 강화되어왔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양육수당,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아동 및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 역시 눈에 띄게 확대되었음.
- 이에 따라 극빈층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을 지원하는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에서 아동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아동수당·양육수당, 경제활동 참여를 전제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등으로 소득보장체계가 다변화·고도화되고 있음.

□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요약그림 6-2])

- 소득보장제도 확대 덕분에 2010년대에 시장소득 분배가 정제·악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 분배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음.
 - 2020년 노인 빈곤율은 39%까지 감소하였음.

[요약그림 6-1] 공적이전소득 및 세금·사회보험료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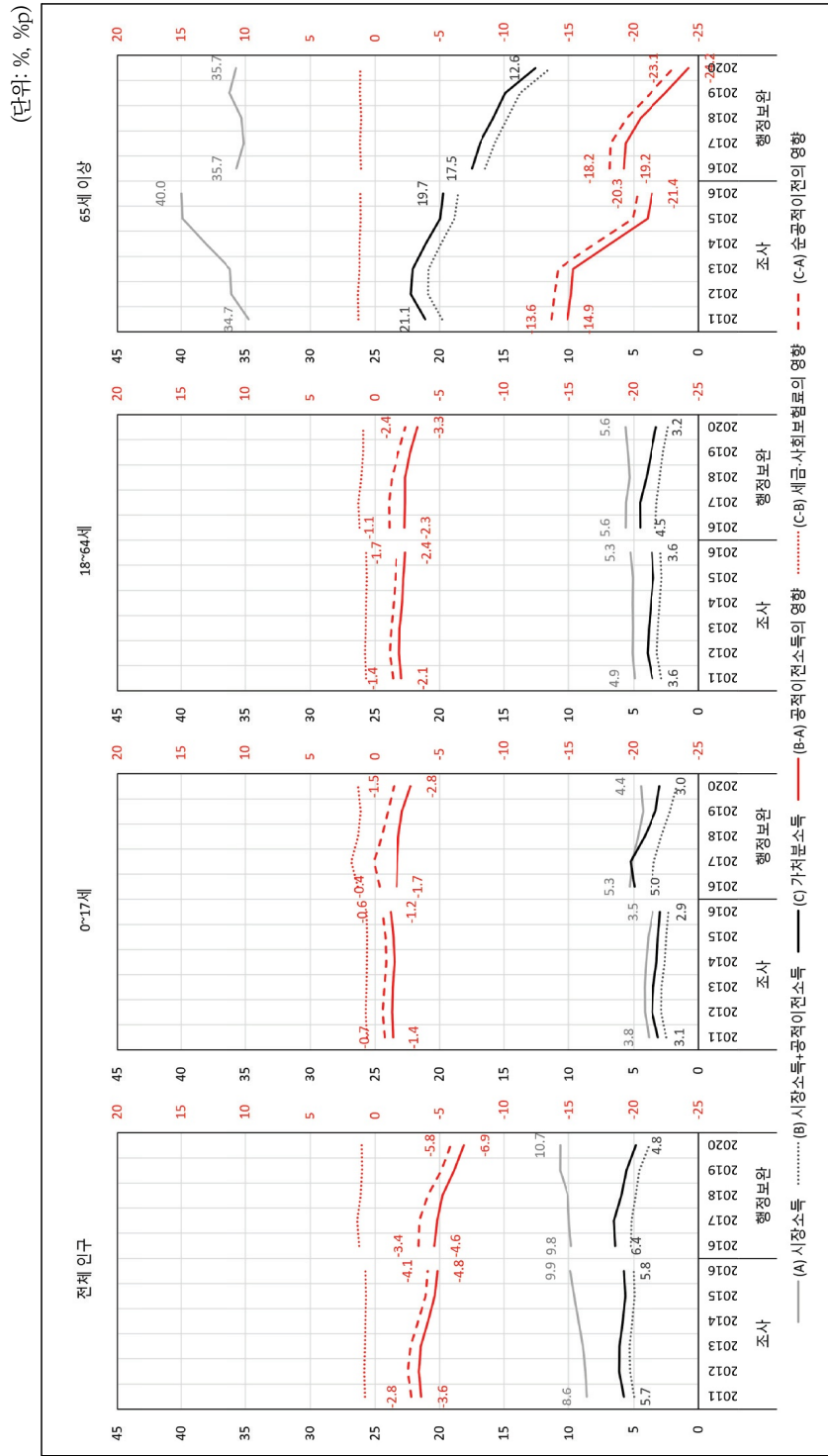
(단위: 만 원/년, 2020년 실질)



주: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아동 관련 급여는 2012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재난지원금은 2020년에 조사되었으며, 연도별로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세금·사회보험료는 음수로 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6-1)에 제시하였다. 2011~2019년 수치는 이원진 외(2021, p.203)의 [그림 6-12]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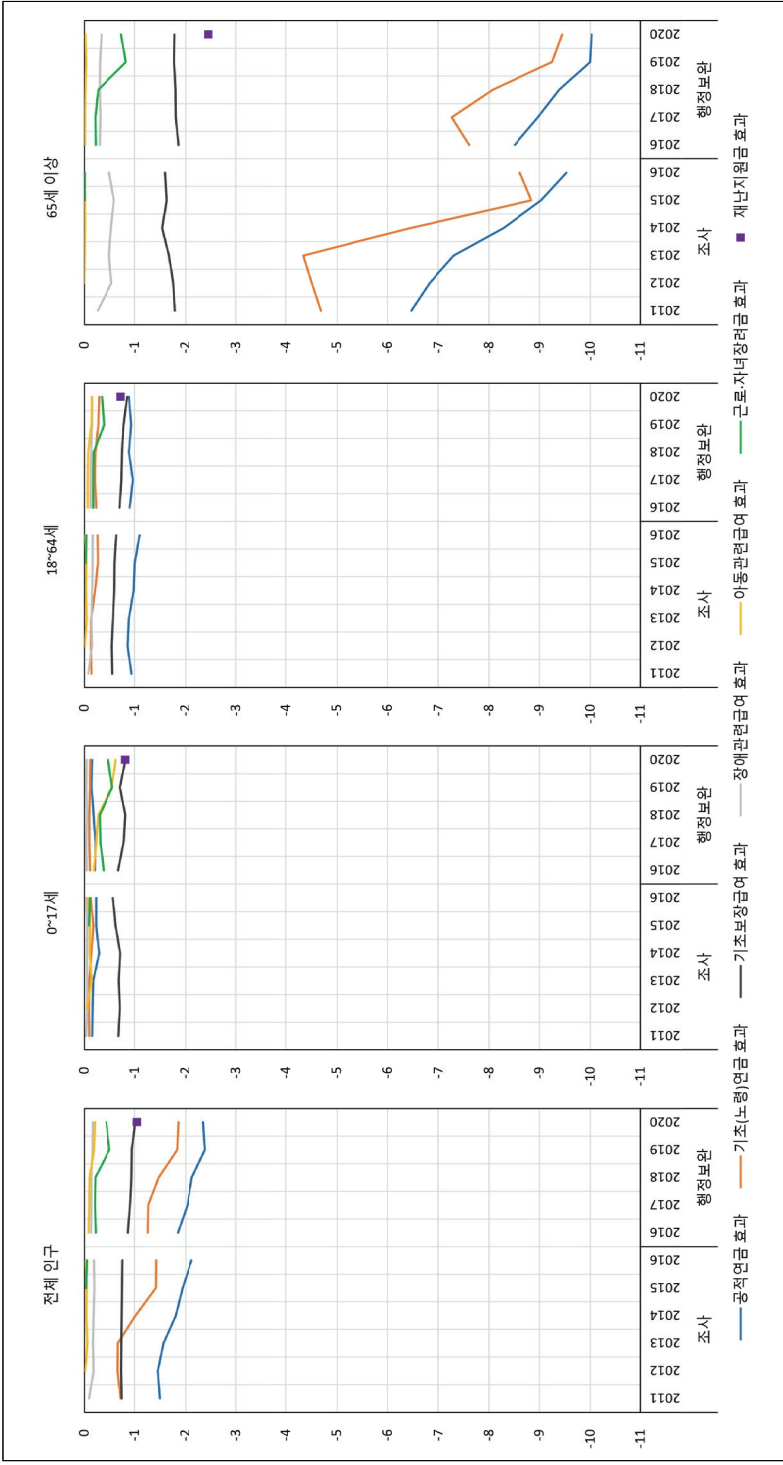
[요약그림 6-2] 빈곤감비율



주: 가구원 수 계급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증감률의 50%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6-3>에 제시하였다.

[요약그림 6-3]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빈곤감버을 감소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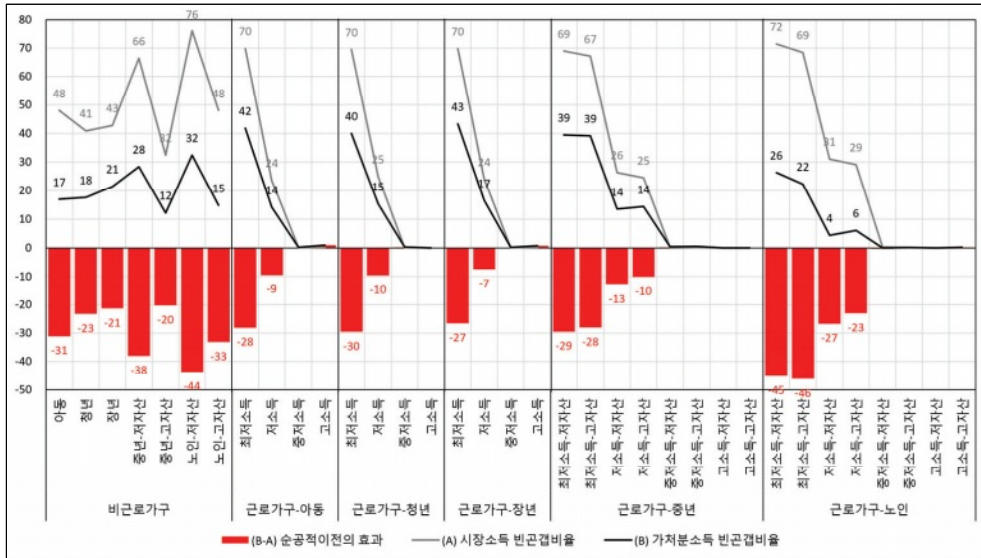
(단위: %p)



주: 가구월 수 제평균으로 나누어 표준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시장소득+해당 공적이전소득 항목>의 분배지표에서 <시장소득>의 분배지표를 차감한 값이다. 빈곤선
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6-4>에 제시하였다.

[요약그림 6-4] 2020년 하위집단별 빈곤갭비율

(단위: %, %p)



주: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이다. 최저소득은 시장소득 1분위를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2020년 하위집단별 분석([요약그림 6-4])

○ 비노인 근로가구 시장소득 1분위의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은 39~43%로, 노인 근로가구 시장소득 1분위의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인 22~26%보다 훨씬 높았음.

○ 이는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과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 노인 빈곤층에 비해 비노인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훨씬 작지만,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의 소득보장체계로는 소수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 비노인 근로빈곤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득보장체계 최적조합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

- 개별 소득보장제도는 노후소득보장, 극빈 제거에서 아동 양육 지원, 근로유인 제고, 취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목표를 가짐.
 - 기본소득이나 부의 소득세와 같은 단일 제도로 소득보장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대안은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목표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짐.
-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상병수당 시행 등으로 현행 소득보장체계에 부재하거나 약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 조합을 정비하여 전체 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보장성과 효율성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 최적조합을 설계·실행하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단기적으로 노인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같은 비기여 방식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빈곤 감소 효과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가 이미 공적연금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요약그림 6-3]).

제7장 코로나19 이후 소득분배 변화

□ 분석 개요

- 가계동향조사 분기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함.

□ 자영업자 취업소득 감소([요약그림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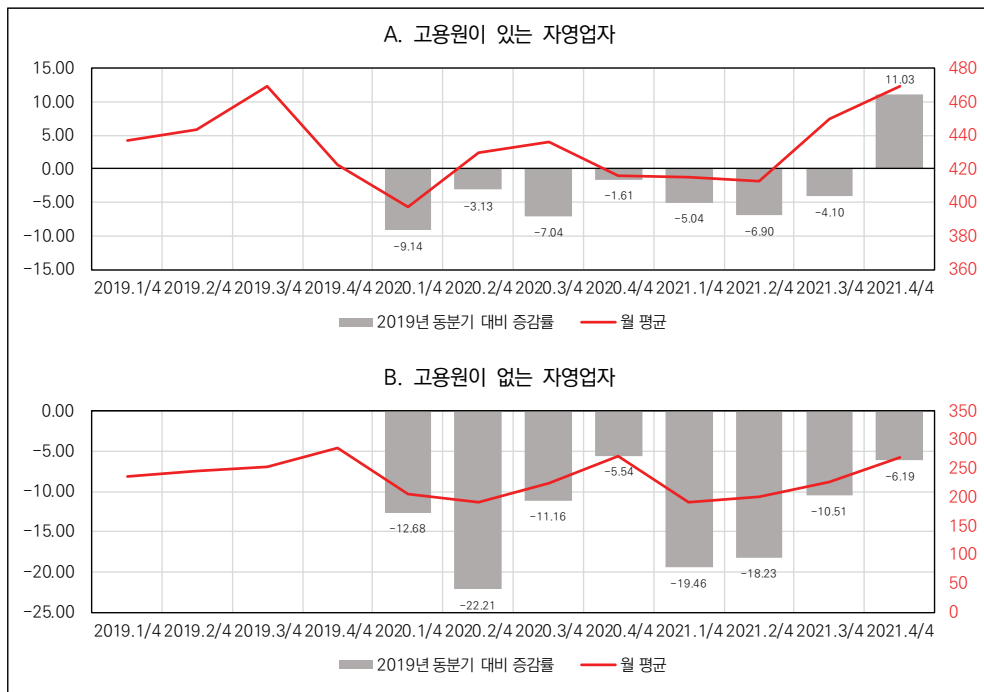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취업소득이 크게, 오랫동안 감소하였음.
 - 가구주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취업소득은 2019년 동분기와 비교할 때 2020년 2분기에 22.2%, 2021년 1분기에 19.5%, 2021년 2분기에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취업소득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분석 결과는 종사상지위별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주 지위를 통제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 1차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과 같은 대규모의 보편적 지원이 전체 인구의 소득분배 악화를 방지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하였지만, 이제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손실보상이 필요함.

[요약그림 7-1] 자영업자의 분기별 취업소득과 2019년 동분기 대비 변화율

(단위: %, 만 원/월, 2020년 실질)



주: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에 한정하여 개인의 고용형태별 평균 근로·사업소득을 계산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가구주의 배우자 집단의 고용 감소([요약그림 7-2])

○ 코로나19가 한편으로 대면서비스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한편으로 자녀 돌봄 공백을 발생시킴에 따라 여성의 고용을 크게 감소시켰음.

- 가구주의 배우자 집단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2019년 동분기와 비교할 때 미취업 비율이 2020년 2분기~2021년 4분기에 1~4%포인트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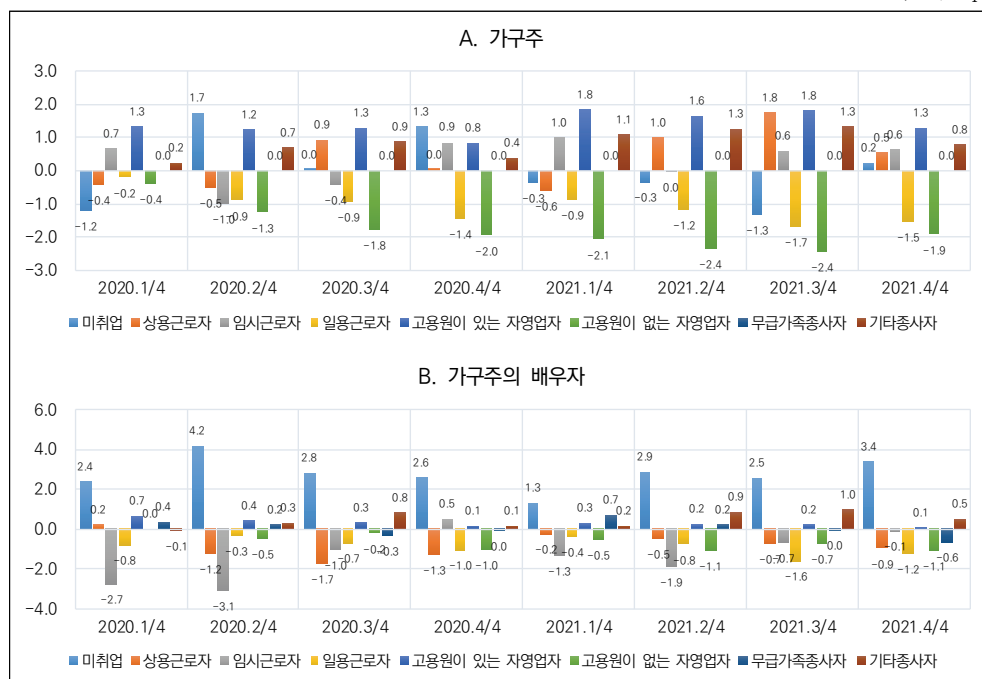
○ 2019년 동분기 대비 시장소득 빈곤율을 살펴보면,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은 2020년 2분기~2021년 4분기에 2~5%포인트 증가하였고, 모자 가구의 빈곤율은 2020년 2분기~2021년 4분기에 7~13%포인트 증가하였음.

- 이는 코로나19 이후 여성 경제활동 축소가 아동 빈곤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함.

○ 향후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을 이탈한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코로나19 이후 빈곤율이 급증한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요약그림 7-2] 가구주 및 배우자의 2019년 동분기 대비 고용형태별 비율 변화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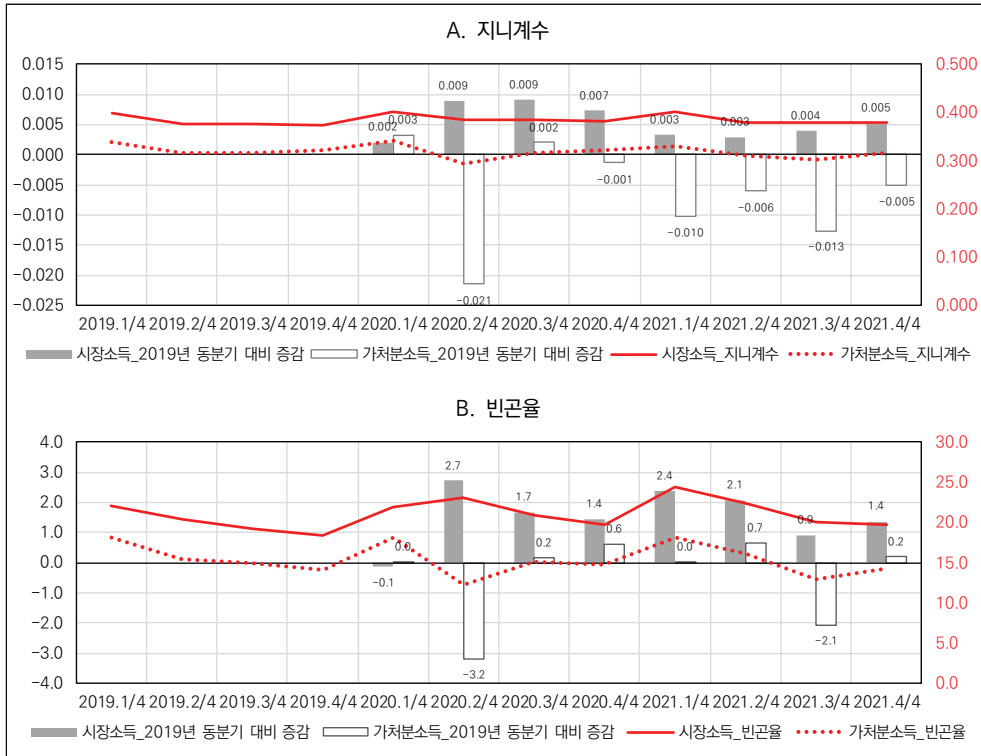
주: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에 한정하여 개인의 고용형태별 비율을 계산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4 소득분배 변화와 원인 분석 연구

[요약그림 7-3]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배지표 변화

(단위: 0~1, %, %p)



주: 시장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이다. 가처분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공적이전소득-사적·공적이전지출(비경상소득 및 사회적 현물이전 제외)>이다. 빈곤율은 각 연도 기준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을 토대로 지니계수를 계산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코로나19 이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배 변화([요약그림 7-3])

○ 코로나19 이후 지급된 다양한 재난지원금은 소득분배 악화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

- 2019년 동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시장소득 빈곤율은 2.7%포인트 증가하였지만,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3.2%포인트 감소하였음.
- 2019년 동분기 대비 2020년 3분기~2021년 4분기 시장소득 빈곤율 역시 1~2%포인트 증가하였지만,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음.

- 단, 코로나19 이후 전체 인구의 빈곤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자영업자, 아동 가구, 중년 1인 가구 등 소득 수준이 감소하거나 빈곤이 증가한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코로나19의 소득·고용 충격에 따른 피해를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집단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임.

키워드 : 소득분배, 불평등, 빈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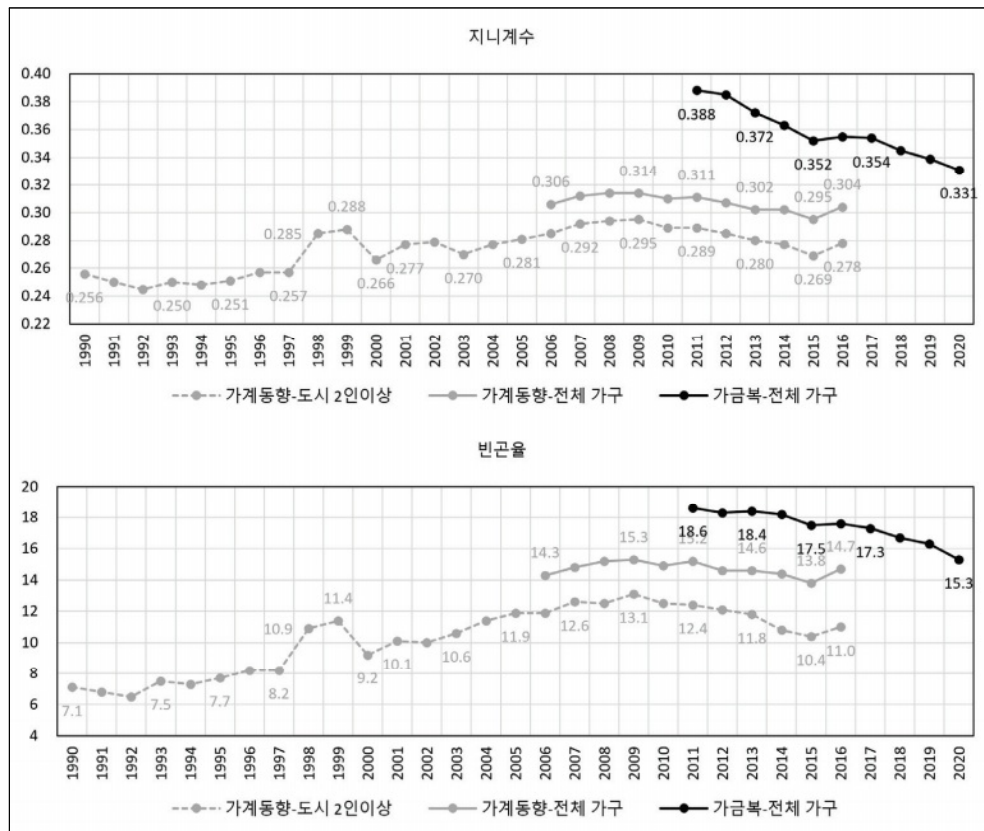
공식 소득분배지표 통계가 존재하는 1990년대 이후 한국 소득분배 추이는 크게 2000년대 후반까지의 소득분배 악화기와 2010년대의 소득분배 개선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1990년대 초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이십여년간 소득분배는 크게 악화되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통계에 따르면, 1990~2009년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256에서 0.295로,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7.1%에서 13.1%로 증가하였다([그림 1-1] 참조). 여러 선행연구는 임금 및 근로소득 분배 악화와 같은 노동시장 불평등 확대가 소득분배 악화에 주되게 기여하였다고 보고하였다(여유진 외, 2005; 이철희, 2008; 장지연, 이병희, 2013; 전병유, 2013; 이병희, 2014; 강신욱, 김현경, 2016).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노인 가구 및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 역시 소득분배 악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성명재, 박기백, 2009; 반정호, 2011; 홍석철, 전한경, 2013; 김대일, 이석배, 황운재, 2014; 정지운, 임병인, 김주현, 2014; 김대일, 2015).

한편, 2010년대에는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통계에 따르면 2009~2016년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빈곤율이 각각 0.314에서 0.304로, 15.3%에서 14.7%로 감소하였고,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통계에 따르면 2011~2020년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빈곤율이 각각 0.388에 0.331로, 18.6%에서 15.3%로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1-1] 참조). 그런데 이처럼 가처분소득 분배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론장에서는 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 담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실태와 인식의 불일치에는, 한편으로 자산 격차, 부의 세습, 교육불평등과 같이 가구소득 분배로 요약되지 않는 다양한 불평등 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한편으로 최근 소득분배 추이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0년대 후반까지의 소득분배 악화 실태가 집중적으로 검토된

것과 달리, 2010년대 소득분배 개선 실태에 주목한 연구(정준호, 전병유, 장지연, 2017a)는 많지 않다. 2010년대 공식 소득분배지표 시계열이 단절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주요 정책과 단기 소득분배 변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컸다는 점도 최근 소득분배 추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1-1] 1990~2020년 가처분소득 분포, 통계청 공식 소득분배지표

(단위: 0~1, %)



주: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한 결과이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 단위 중위값의 50%이다. '가계동향'은 가계동향조사, '가금복'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2018).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집계자료; 통계청. (2021a).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집계자료.

이 연구는 2010년대 한국 소득분배가 어떻게, 왜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한다. 가처분 소득 분배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 1-1>과 [그림 1-2]와 같이 가처분소득 분포가 결정되는 단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다양한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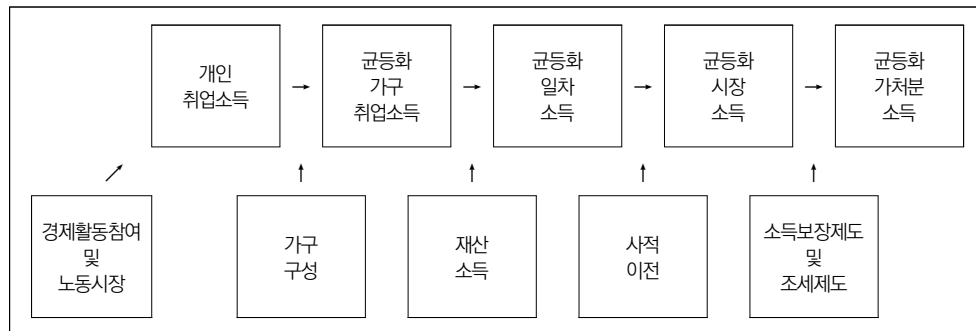
에 참여한 결과로 개인취업소득 분포가 결정되고, 1명 이상의 개인이 가구를 구성한 결과로 가구취업소득 분포가 결정되며, 재산소득, 사적이전, 소득보장제도 및 조세제도가 차례로 반영된 결과로 최종적으로 가처분소득 분포가 결정된다. 따라서 가처분소득 분배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가구 구조, 소득보장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표 1-1〉 소득 정의

근로소득	취업소득	일차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가구 간 이전소득, 비영리단체로부터의 이전소득				
(-)사적이전지출: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아동 관련 급여, 장애 관련 급여, 기초보장급여, 근로·자녀장려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지출: 세금, 사회보험료				

자료: 필자가 작성하였다.

〔그림 1-2〕 가처분소득 분포 결정 단계



자료: 이원진, 김현경, 함선유, 하은솔. (2021). 한국 소득분배 추이와 영향요인. p.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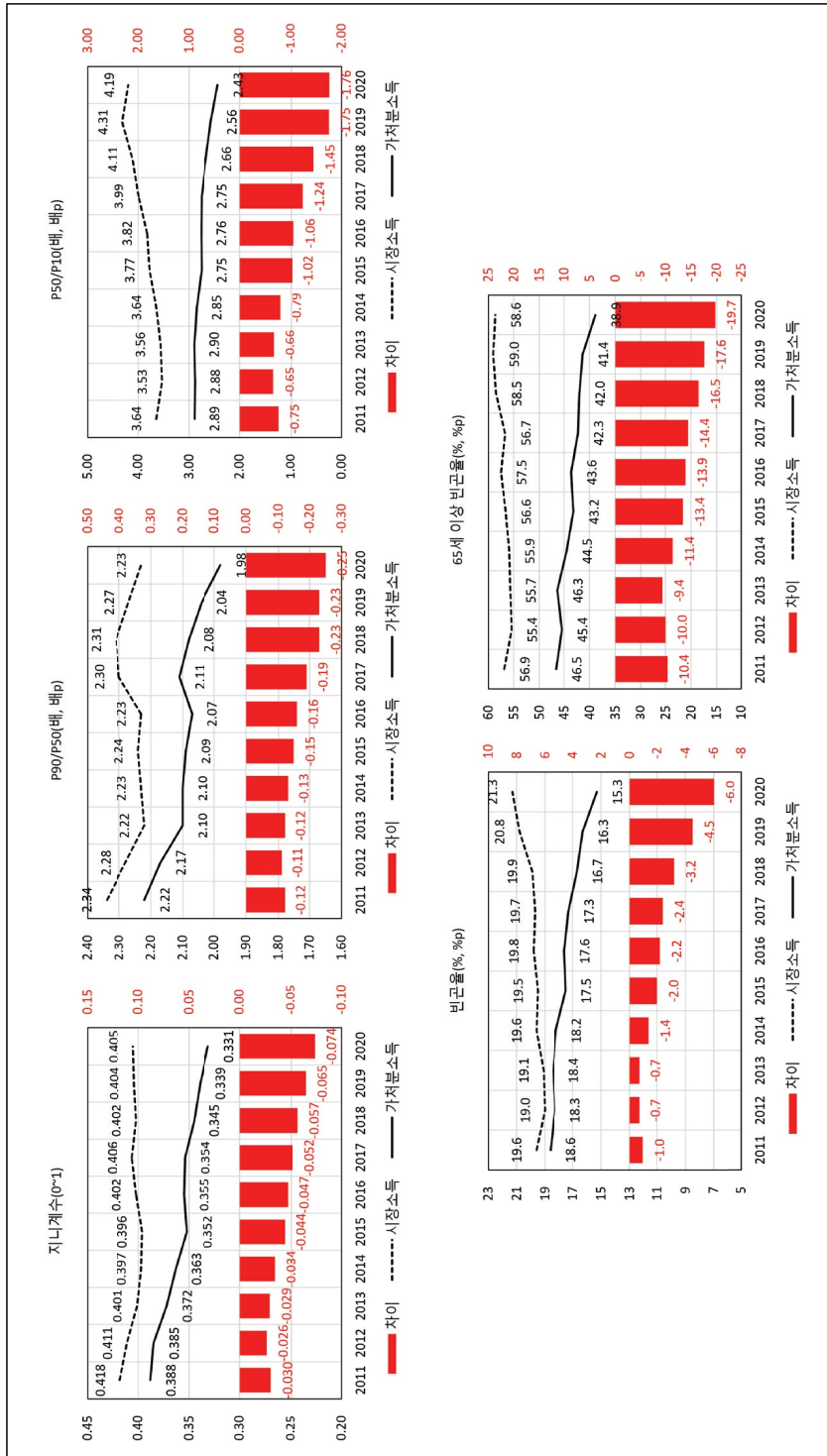
이원진 외(2021)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가장 최근의 연구이다. 이원진 외(2021)는 가구소비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분배 추이를 분석한 결과, 근로연령층 취업자 및 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이 2010년대 초반까지 증가한 후 2010년대에 감소하였고,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소득분배를 악화시켰으며, 소득보장제도 확대

가 소득분배를 개선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8월 부가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는 점, 2019년 이후 통합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원진 외(2021)의 논의에 추가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대 소득분배 개선기로 분석대상 기간을 제한하는 대신 인구·가구 구조 및 소득보장제도 요인을 보다 심층적·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노력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구성하기에 앞서, [그림 1-3]에서는 통계청의 공식 소득분배 지표 통계를 활용하여 2010년대 소득분배 추이의 기본적인 실태를 검토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처분소득 분배가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주요 정책지표인 노인 빈곤율 역시 2011년 46.5%에서 2020년 38.9%로 크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시장소득 분배를 살펴보면, 지니계수와 P90/P50이 대체로 정체하였지만 P50/P10, 전체 인구 및 노인의 빈곤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시장소득 분배가 정체·악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 확대가 가처분소득 분배를 개선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득보장제도 및 조세제도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2011년 -1.0%에서 2020년 -6.0%로 증가하였고([그림 1-3] 참조), 가처분소득 평균 대비 공적이전소득 평균 비율은 2011년 4%에서 2020년 10%로 증가하였다([그림 1-3] 참조).

이와 같은 공식 소득분배지표 통계는 시간에 따라 공적이전의 규모와 분배 효과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지만, 시장소득 분배의 정체·악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즉, [그림 1-2]에서 살펴본 가처분소득 분포 결정 단계에서 시장소득이 결정되기 이전의 단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다. 그런데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행정자료 보완 작업으로 인한 시계열 단절을 고려해야 한다. 통계청은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의 소득 및 비소비지출 응답값을 보완하고 있다. [그림 1-3]과 [그림 1-4]에 제시한 2011~2020년 공식 소득분배지표는 행정자료로 보완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지만, 이용자에게는 2016년(소득 연도) 이후 시기에 대해서만 행정자료로 보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즉, 행정자료 보완으로 인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게 된다(이원진, 정해식, 전지현,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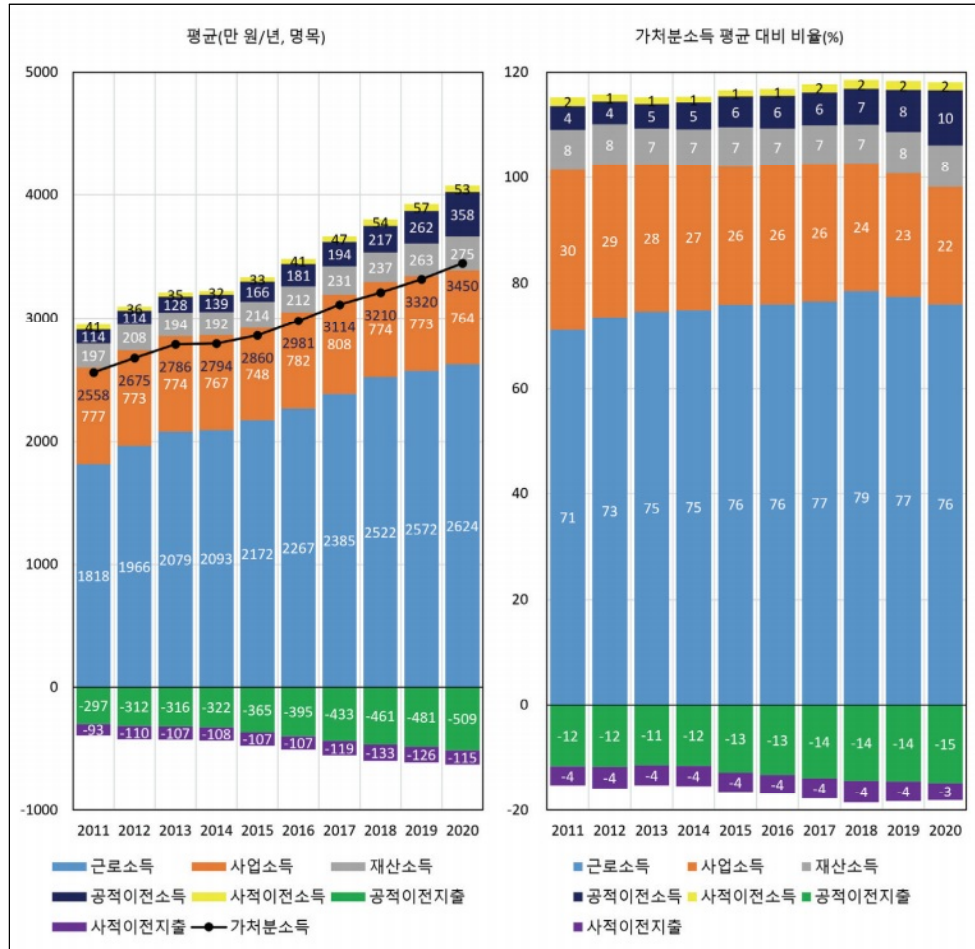
[그림 1-3] 2011~2020년 시장소득 및 가치분소득 분포, 통계청 공식 소득분배지표



주: 가구원 수 계층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한 결과이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이다.
 자료: 통계청. (2021a).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집계자료.

34 소득분배 변화와 원인 분석 연구

[그림 1-4] 2011~2020년 소득원천 평균, 통계청 공식 소득분배지표



주: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 통계청. (2021a).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집계자료.

이 연구는 2011~2016년 조사데이터와 2016~2020년 행정보완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별도의 시계열로 보고한다.¹⁾ 통계청은 2016년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를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행정자료 보완으로 인한 시계열 단절의 수준을 검토해볼 수 있다. [그림 1-5]와 [그림 1-6]을 살펴보면, 2016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조사데이터 0.346, 행정보완데이터 0.357이었고,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조사

1) t년에 시행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t-1년 1년의 소득을 조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 연도를 기준으로 연도를 표시하였다.

데이터 16.2%, 행정보완데이터 17.6%였다. 이는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동일한 시계열로 간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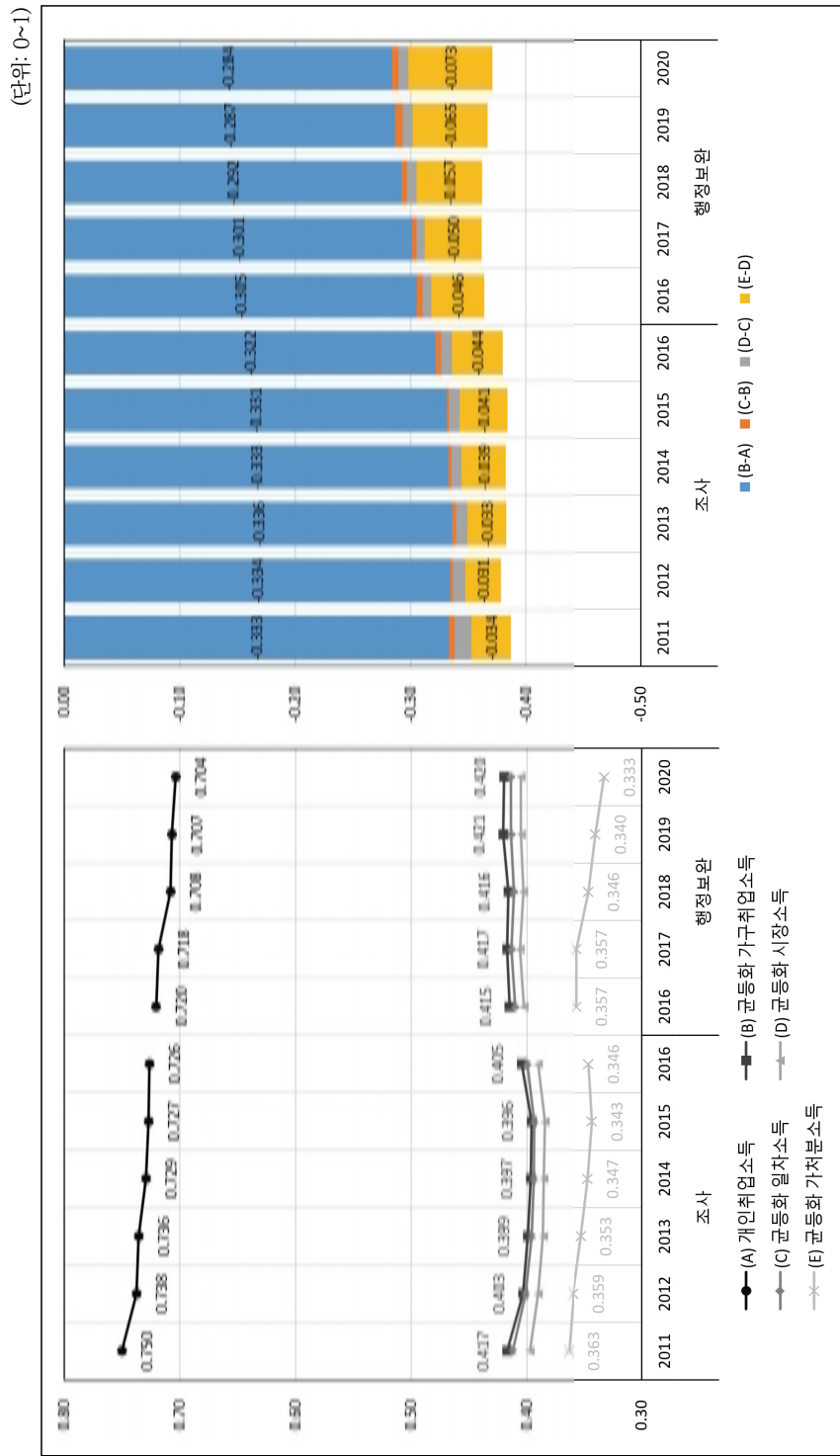
[그림 1-5]~[그림 1-7]에서는 가처분소득 분포 결정 단계의 기본적인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취업소득, 가구취업소득, 일차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의 분포를 분석하였다.²⁾ 우선 개인취업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 지니계수가 2011~2016년 0.750에서 0.726으로, 2016~2020년 0.720에서 0.704로 감소하였고, 전체 인구 빈곤율이 2011~2016년 62.6%에서 60.5%로, 2016~2020년 62.6%에서 61.3%로 감소하였다.³⁾ 노인의 개인취업소득 빈곤율은 전체 인구보다 훨씬 높았지만, 전체 인구와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 연구의 첫 번째 주제는 이와 같이 개인취업소득 분배가 개선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구취업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횡단적으로 개인취업소득보다 가구취업소득 지니계수 및 빈곤율 수준이 훨씬 낮게 나타나 가구 구성이 소득분배를 개선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획득한 취업소득의 분포는 상당히 불평등하지만, 가구 내에서 취업소득을 합산하고 균등화하면 취업소득 분포가 훨씬 평등해진다. 또한 아동, 무직·비경제활동인구, 저임금근로자 등 노동시장에서 스스로 빈곤선을 초과하는 수준의 취업소득을 획득하지 못한 비율이 약 60%였지만, 가구 내에서 취업소득을 공유한 후에는 빈곤선을 초과하는 수준의 가구취업소득을 획득하지 못한 비율이 약 20%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개인취업소득 분배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취업소득 분배는 2011~2016년에 대체로 정체하였고 2016~2020년에 대체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구 구성이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두 번째 주제는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개인취업소득 분배지표와 가구취업소득 분배지표의 격차가 시간에 따라 감소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2) <표 1-1>에 따라 소득을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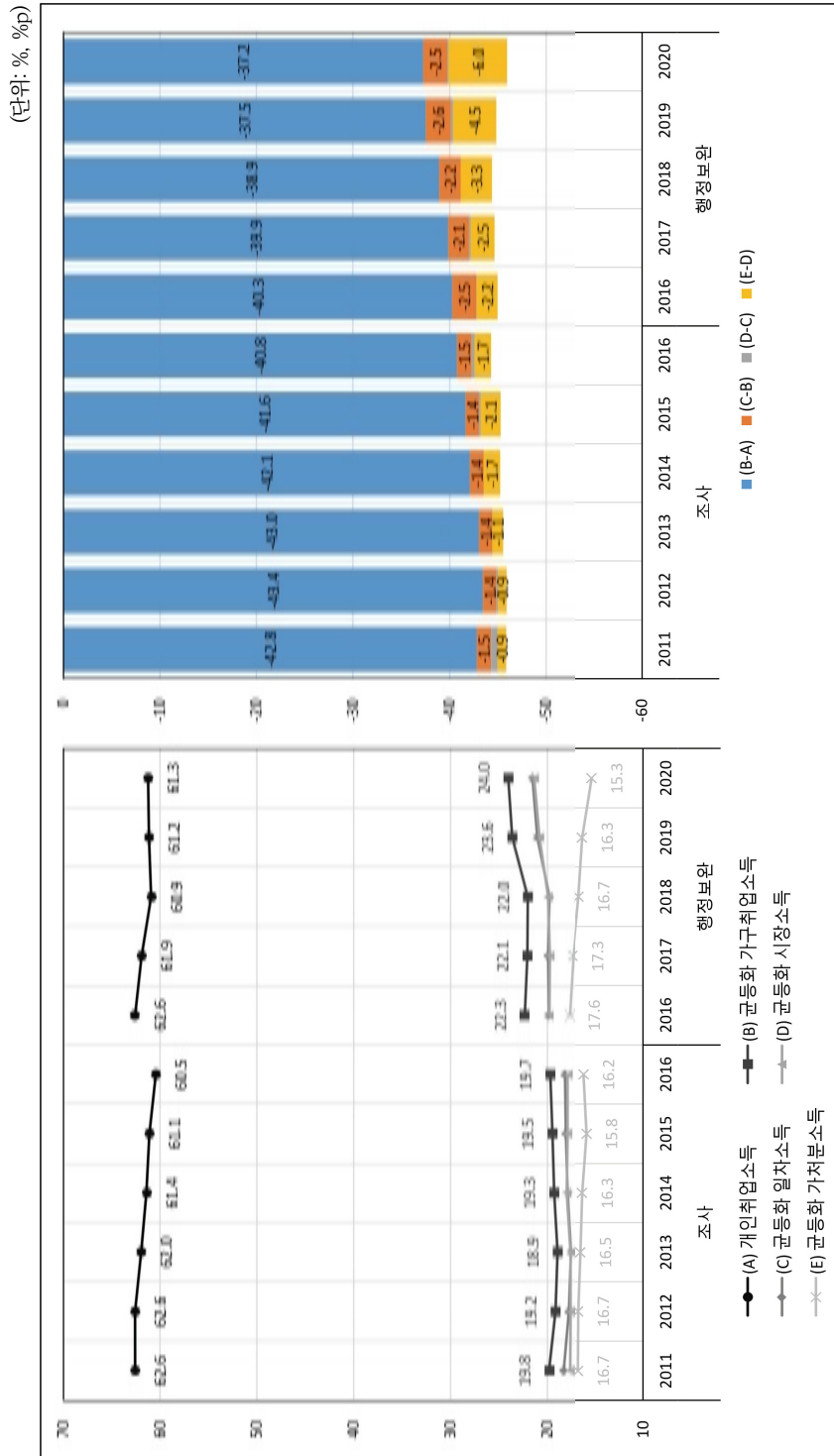
3) 가구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빈곤을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개인취업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한 개인취업소득 빈곤을 함께 살펴본다. 개인취업소득 빈곤은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획득한 근로·사업소득이 가처분소득 중윗값의 50%로 정의된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림 1-5] 전체 인구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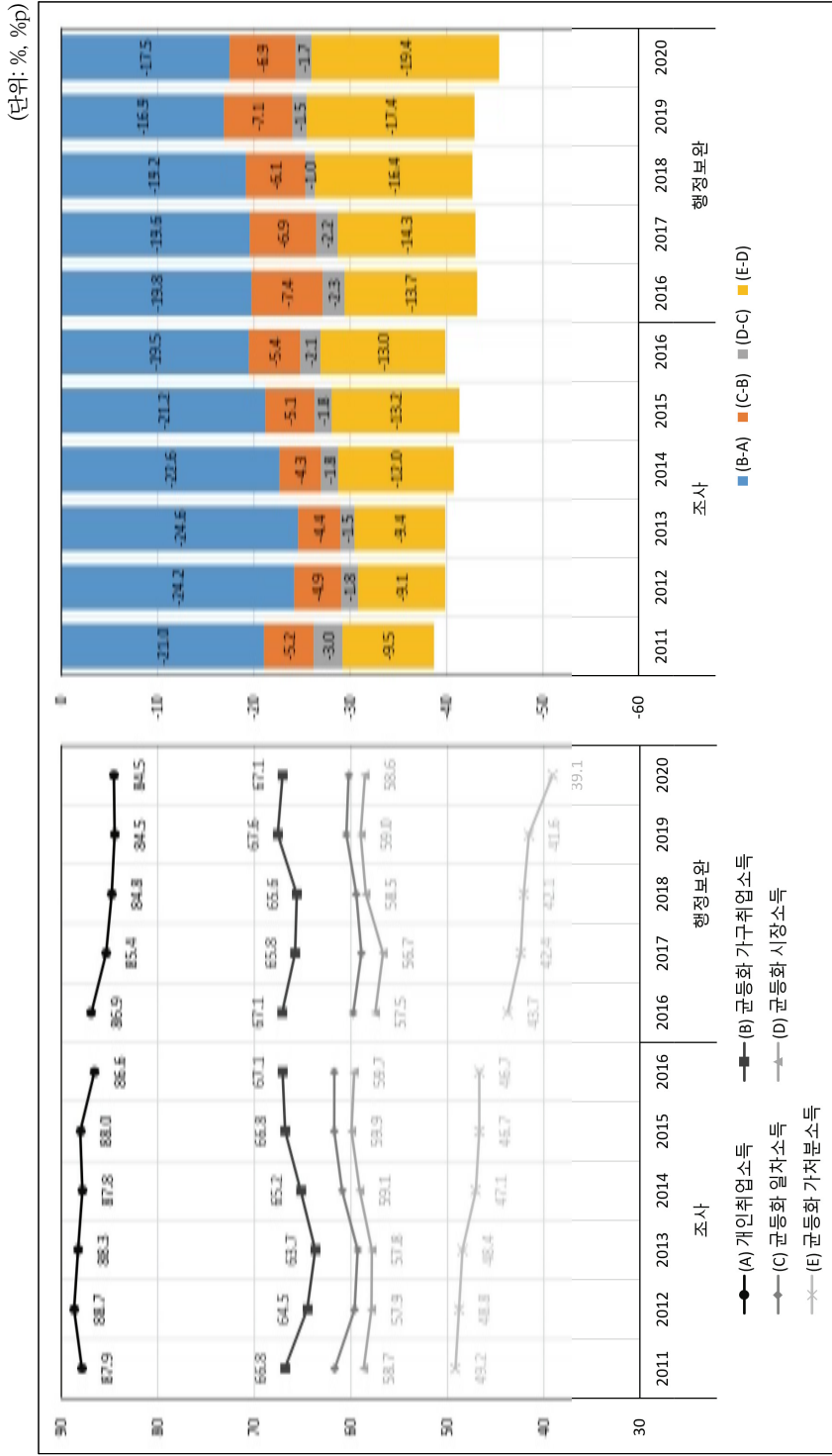
주: 균등화 소득은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눈 가구소득을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1-1>에 제시하였다.

[그림 1-6] 전체 인구 빈곤율



주: 균등화 소득은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눈 가구소득을 의미한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1-1>에 제시하였다.

[그림 1-7] 65세 이상 빈곤율



다음으로 가구취업소득 분배지표와 일차소득 및 시장소득 분배지표의 차이는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지출의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대체로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지출은 소득분배를 개선하였고, 특히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산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지출의 분배 효과가 시간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구취업소득 분배의 정체·악화 추이가 대체로 시장소득 분배의 정체·악화 추이로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지출의 영향을 별도의 장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시장소득 분배지표와 가처분소득 분배지표의 차이는 공적이전소득과 세금·사회보험료의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1-5]~[그림 1-7]은 시장소득 분배가 정체·악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이 확대된 결과 가처분소득 분배가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세 번째 주제는 이와 같은 공적이전의 분배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의 구성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처분소득 분포가 결정되는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개인취업소득 분포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 장에서는 주로 고용률과 종사상지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이 감소한 원인을 살펴본다.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개인의 일자리 특성을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8월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 불평등 변화를 분석한다. 이 장에서는 근로형태, 산업, 직업, 종사자 규모 등 다양한 일자리 특성을 중심으로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 분포가 변화한 원인을 살펴본다. 그런데 개인의 일자리 특성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노동시장 제도 역시 임금 분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최저임금이 임금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개인취업소득 분포 변화를 설명한 후, 제5장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인구·가구 구조 변화의 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개인취업소득 분배와 가구소득 분배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다음으로 제6장에서는 소득보장제도의 분배 효과를 중심으로 시장소득 분배와 가처분소득 분배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본다. 이와 같이 구성한 제2장~제6장의 분석을 통해 [그림 1-2]의 가처분소득 분포 결정 단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이상의 분석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특수한 분배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에 제7장에서는 통합가계동향조사 분기 자료를 활용하여 2019~2021년 소득분배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한다.



제2장

개인취업소득 분포 변화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2장 개인취업소득 분포 변화

제1절 분석 개요

제2장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분포 변화를 분석한다. 개인취업소득은 임금노동으로 획득한 근로소득과 자영업으로 획득한 사업소득을 합산한 세전소득을 의미한다(〈표 2-1〉 참조).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개인취업소득이 불평등하게 분포할수록 가구 내에서 개인취업소득을 합산하여 균등화한 가구취업소득이 불평등하게 분포할 것이고, 가구취업소득에 재산소득, 사적이전, 공적이전을 반영한 가처분소득의 분배 역시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가처분소득 분배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취업소득 분포가 어떻게, 왜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1〉 취업소득 정의

구분		내용
취업소득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받은 현금 및 현물 보수로서, 세금 또는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이 공제되기 전 금액
	사업소득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사업경영을 통해 얻은 사업수입(매출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대출이자 등 비용을 차감한 금액. 자가소비용 생산품 등 현물소득 포함.

자료: 통계청. (2021b).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

이 장에서는 경제활동 요인을 중심으로 개인취업소득 분포 변화를 설명한다. 우선,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개인취업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비취업자의 상대적인 규모가 전체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분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비취업자에는 경제활동참여가 불가능한 아동이 포함되고, 경제활동참여가 가능한 연령집단 중에서는 학생, 전업주부, 은퇴자 등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가 포함된다. 시간에 따라 여성이나 중고령자의 고용률이 증가하는 변화는 비취업자의 상대적인 규모를 감소시켜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비취업자의 상대적인 규모가 동일하다면,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이 개인취업소득 분포를 결정할 것이

다. 대체로 상용직과 같이 소득 수준이 높고 동질적인 집단의 상대적인 규모가 증가할 수록,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이 소득 수준이 낮고 이질적인 집단의 상대적인 규모가 감소할수록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이 감소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종사상지위 변화가 개인 취업소득 분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제2절 분석 방법

이 장에서는 2011~2020년(소득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다. t 년에 시행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은 $t-1$ 년을 기준으로, 개인 및 가구 특성은 t 년 3월말을 기준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소득과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특성이 측정된 기준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⁴⁾ 예를 들어, 경제활동상태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므로 소수의 비취업자에게 개인취업소득이 관찰될 수 있고, 또한 임금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이, 비임금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이 부분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 2011~2020년 표본의 개인단위 사례 수는 연도별로 44,034~56,652명이다.

이 장에서는 개인취업소득 분포 변화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재가중 방법(reweighting method, DiNardo, Fortin, & Lemieux, 1996)을 활용한다(〈표 2-2〉 참조). 첫째,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시계열 단절을 고려하여 분석대상 기간을 2011~2016년(조사데이터)과 2016~2020년(행정보완데이터)으로 구분한다. 이때 2011~2016년 대상 분석에서는 2011년이, 2016~2020년 대상 분석에서는 2016년이 $T=1$ 에 해당한다. 둘째, $T=t$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분포를 $T=1$ 표본과 동일하게 조정한다(B). 이때 $T=t$ 실제 표본과 재가중 표본 B의 개인취업소득 분포 차이를 성·연령 변화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T=t$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교육수준 분포를 $T=1$ 표본과 동일하게 조정한다(C). 이때 재가중 표본 B와 재가중 표본 C의 개인취업소득 분포 차이를 성·연령을 통제했을 때 교육수준 변화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T=t$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교육수준×취업상태 분포를 $T=1$ 표본과 동일하게 조정한다(D). 이때 재가중 표본 C와 재가중 표

4) 이하의 분석 결과는 모두 소득 연도를 기준으로 보고하였다.

본 D의 개인취업소득 분포 차이를 성·연령·교육수준을 통제했을 때 취업상태 변화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T=t$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교육수준×취업상태×종사상지위 분포를 $T=1$ 표본과 동일하게 조정한다(E). 이때 재가중 표본 D와 재가중 표본 E의 개인취업소득 분포 차이를 성·연령·교육수준·취업상태를 통제했을 때 종사상지위 변화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T=t$ 표본의 특성(G) 분포를 $T=1$ 표본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한 재가중치($\psi_{G=g}^{T=t}$)는 식(2-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psi_{G=g}^{T=t} = \Pr_{G=g}^{T=1} \div \Pr_{G=g}^{T=t} \quad (2-1)$$

$\Pr_{G=g}^{T=t}$: $T=t$ 표본의 g 번째 범주 비율

〈표 2-2〉 재가중 분석 설계

표본의 구성		
(A)	실제 표본	$T=t$ 실제 표본
(B)	성·연령 재가중 표본	$T=t$ 표본을 재가중하여 특성 분포를 $T=1$ 표본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C)	성·연령×교육수준 재가중 표본	
(D)	성·연령×교육수준×취업상태 재가중 표본	
(E)	성·연령×교육수준×취업상태×종사상지위 재가중 표본	
표본 간 차이		
(A-B)	$T=1 \rightarrow T=t$ Pr(성·연령) 변화의 영향	
(B-C)	$T=1 \rightarrow T=t$ Pr(교육수준 성·연령) 변화의 영향	
(C-D)	$T=1 \rightarrow T=t$ Pr(취업상태 성·연령·교육수준) 변화의 영향	
(D-E)	$T=1 \rightarrow T=t$ Pr(종사상지위 성·연령·교육수준·취업상태) 변화의 영향	

주: 개별 변수의 범주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2개 이상의 변수를 조합한 특성을 재가중할 때는 필요에 따라 인접 범주를 통합하였다.

- 성: 남성/여성
- 연령: 0~17세/18~34세/35~49세/50~64세/65세 이상
- 교육수준: 중졸 이하/고졸/대졸 이상
- 취업상태: 비취업/취업
-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기타 종사자⁵⁾/무직·비경제활동인구

자료: 필자가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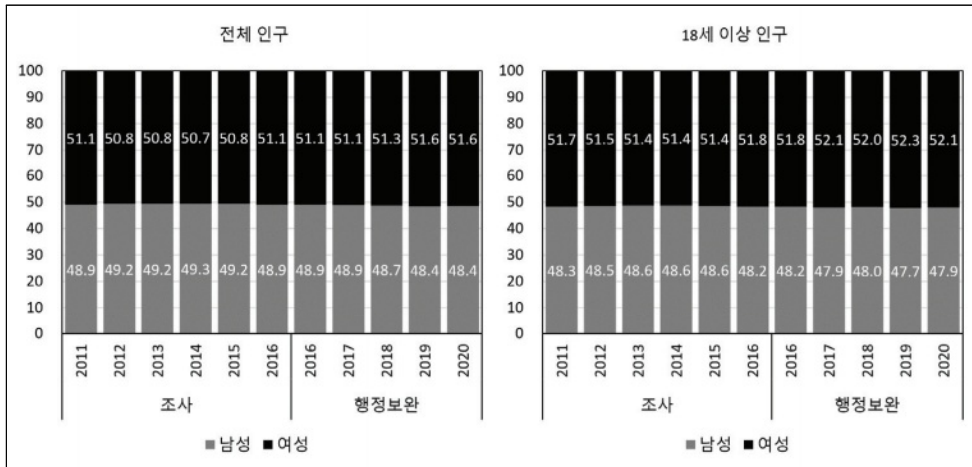
5) 기타 종사자는 “실적급의 보험설계사,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을 의미한다(통계청, 2021b).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구분할 때는 기타 종사자를 비임금근로자에 포함하였다.

제3절 분석 결과

1. 개인 특성 변화

[그림 2-1]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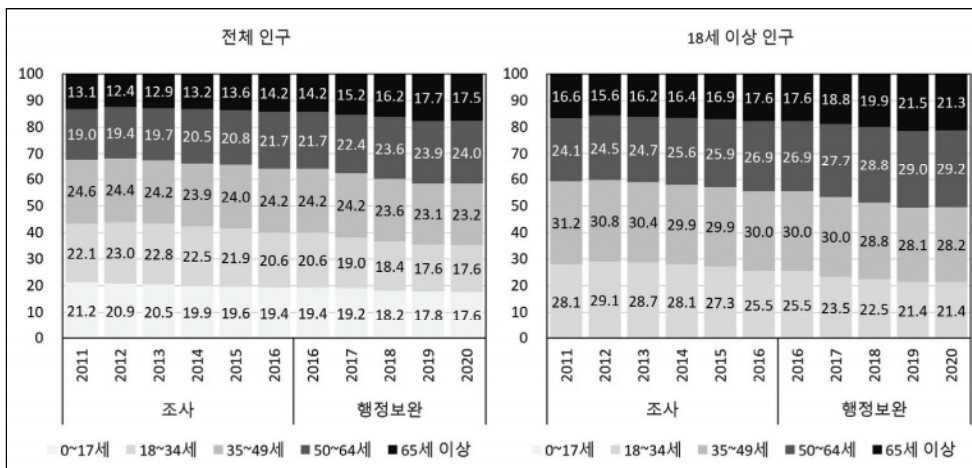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2-2]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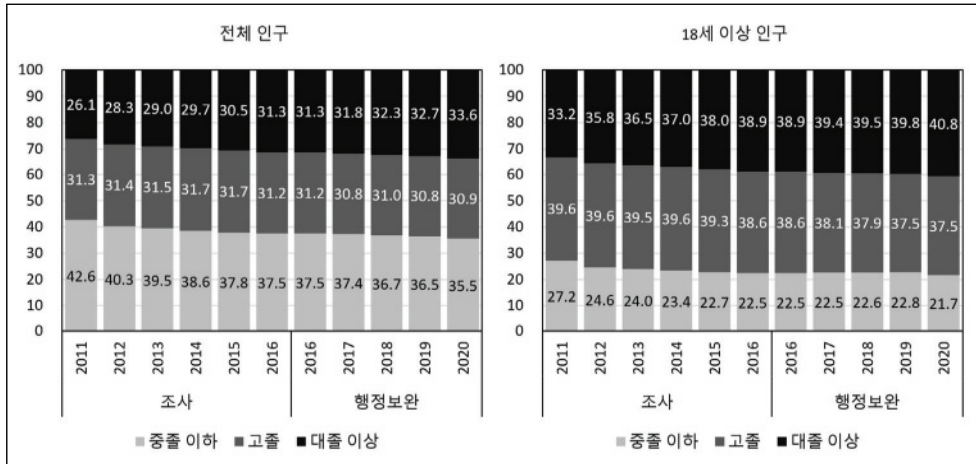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2-3] 교육수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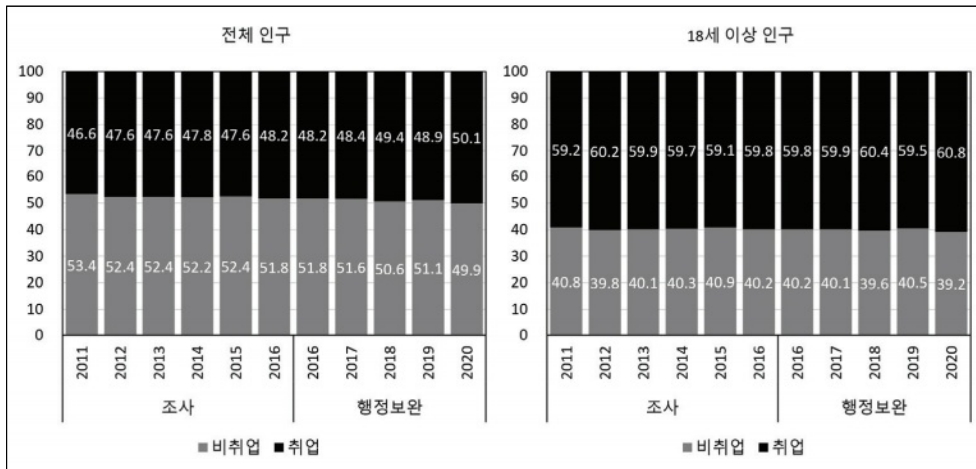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2-4] 취업상태 분포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본격적인 재가중 분석에 앞서, [그림 2-1]~[그림 2-8]에서는 개인 특성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본다.⁶⁾ 우선 [그림 2-2]는 2010년대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6) 개인 특성은 2012~2021년 3월말을 기준으로 측정되었지만, 그림에는 소득 연도인 2011~2020년을 기준으로 보고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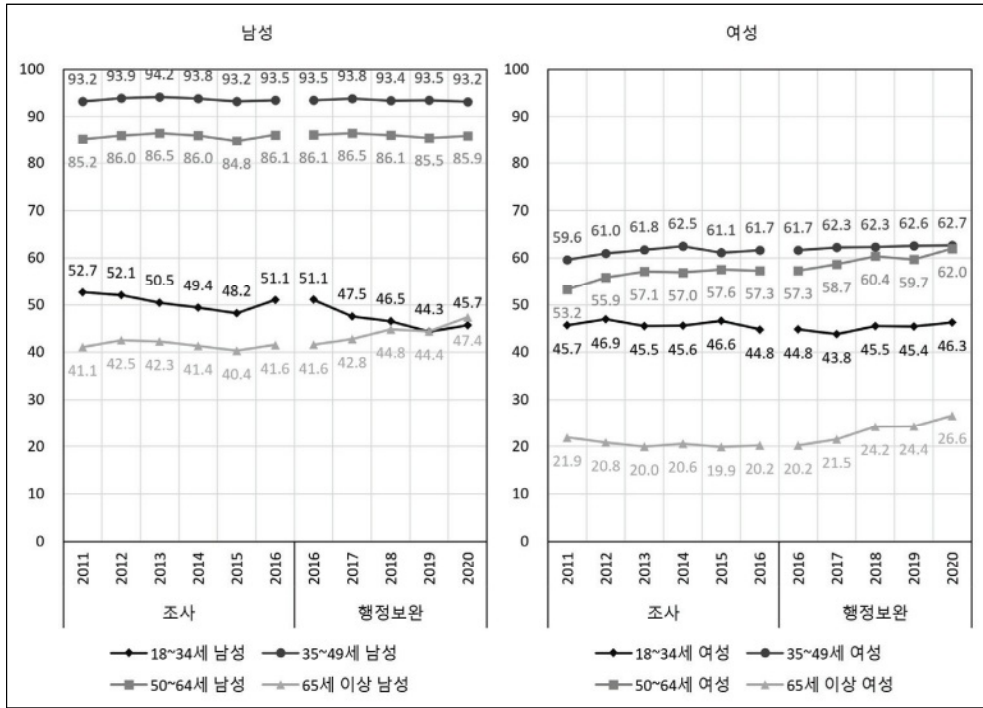
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2011~2020년 전체 인구에서 0~17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1.2%에서 17.6%로 감소하였고, 50~64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0%에서 24.0%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3.1%에서 17.5%로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참여가 불가능한 아동을 제외한 18세 이상 인구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50~64세 비율이 24.1%에서 29.2%로, 65세 이상 비율이 16.6%에서 21.3%로 증가하였다. 한편 [그림 2-3]은 시간에 따라 교육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8세 이상 인구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2011~2020년 중졸 이하 비율은 27.2%에서 21.7%로 감소하였고, 대졸 이상 비율은 33.2%에서 40.8%로 증가하였다.

[그림 2-4]에서는 고용률을 살펴보았다.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2011년 46.6%에서 2020년 50.1%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변화의 일부는 저출산에 따라 경제활동참여가 불가능한 아동의 상대적인 규모가 감소한 변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18세 이상 인구를 살펴보면, 2011~2020년 고용률이 59.2%에서 60.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에서 성·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주로 여성과 중고령자를 중심으로 고용률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1~2020년 65세 이상 남성의 고용률이 41.1%에서 47.4%로 증가하였고, 35~49세 여성, 50~64세 여성, 65세 이상 여성의 고용률이 각각 59.6%에서 62.7%로, 53.2%에서 62.0%로, 21.9%에서 26.6%로 증가하였다.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서도 여성과 중고령자의 고용률이 증가하는 유사한 패턴이 관찰되었다([그림 2-6] 참조). 이와 같은 성·연령별 고용률 변화는 여성과 중고령자의 상대적인 규모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취업자의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용률 증가는 한편으로 개인취업소득이 존재하는 집단의 상대적인 규모를 증가시켜 전체 인구의 불평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취업자의 여성·중고령자 비율을 증가시켜 취업자 집단 내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림 2-7]에서는 종사상지위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상용근로자 비율 증가가 2010년대 고용률 증가를 주로 설명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8세 이상 인구에서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28.9%에서 2020년 33.0%로 크게 증가하였다. 18세 이상 인구의 상용근로자 비율 증가량은 4.1%포인트로, 비취업 비율 감소량 1.7%포인트보다 훨씬 컸다.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서도 상용근로자 비율 증가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그림 2-8] 참조).

[그림 2-5] 성·연령별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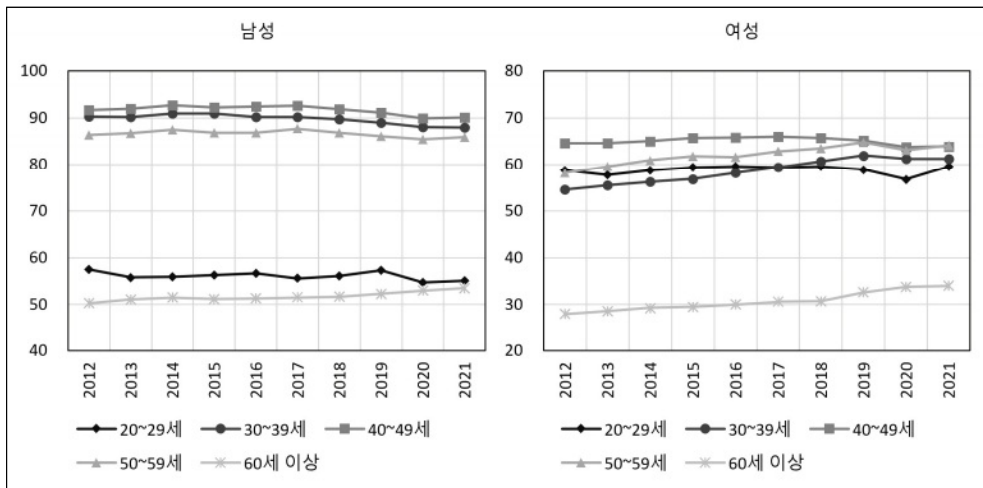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2-6] 성·연령별 고용률,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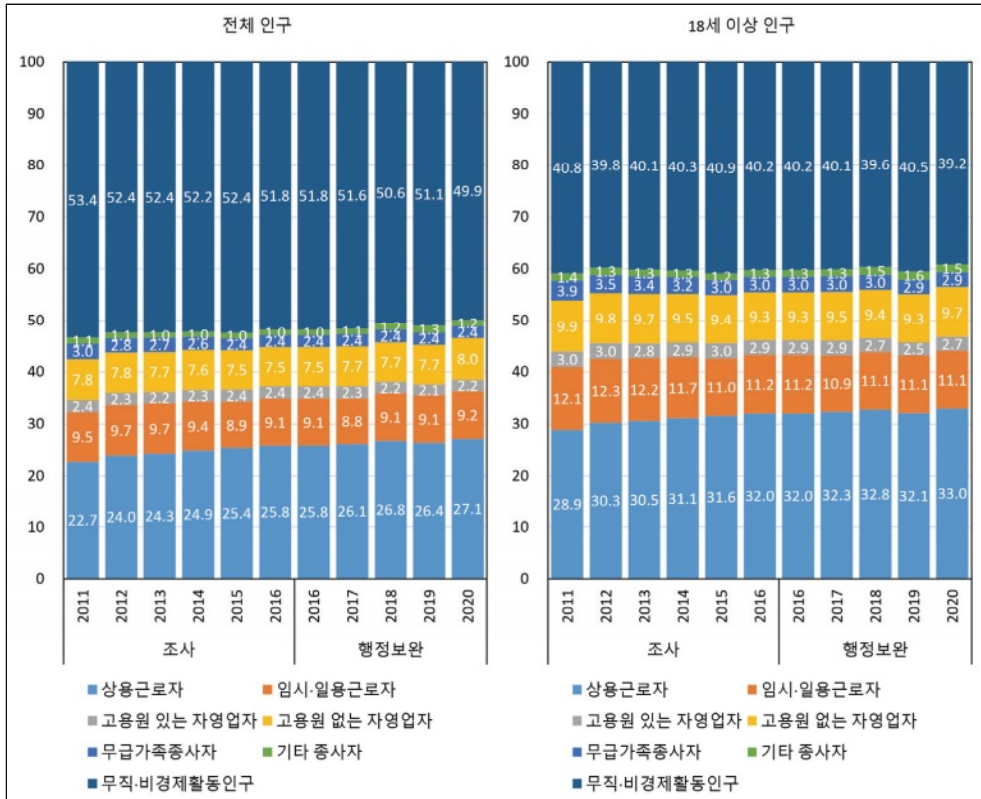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

50 소득분배 변화와 원인 분석 연구

[그림 2-7] 종사상지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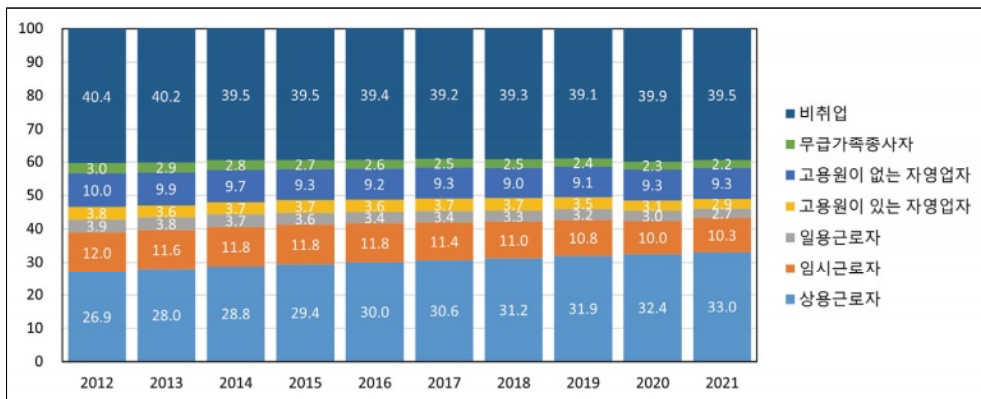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2-8] 15세 이상 인구 종사상지위 분포,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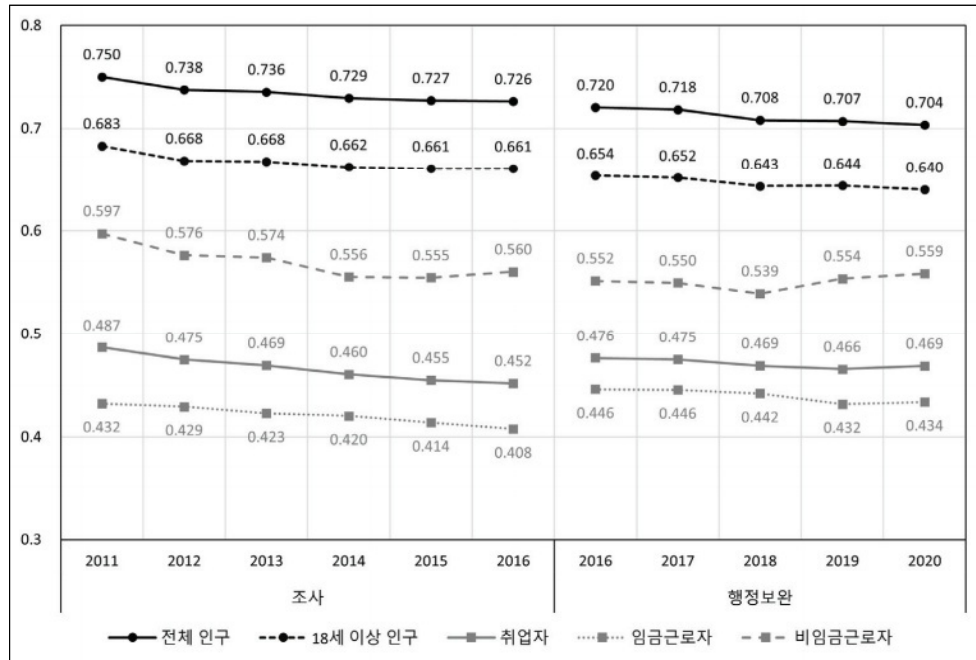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

2. 개인취업소득 불평등 변화

[그림 2-9]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단위: 0~1)



주: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를,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종사자를 포함한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2-9]에는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를 보고하였다. 아동과 비취업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는 2011~2016년 0.750에서 0.726으로, 2016~2020년 0.720에서 0.704로 뚜렷하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개인취업소득 불평등 감소의 일부는 경제활동참여가 불가능하여 개인취업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아동의 상대적인 규모가 감소한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18세 이상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2011~2016년 0.683에서 0.661로, 2016~2020년 0.654에서 0.640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 비율 변화의 영향을 제거하더라도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이 뚜렷하게 감소한 것이다.

무직·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취업자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는 2011~2016년 0.487에서 0.452로, 2016~2020년 0.476에서 0.469로 감소하였다. 이는 취업자의

상대적인 규모 증가에 따른 개인취업소득 불평등 감소 효과를 제거하더라도 개인취업 소득 불평등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취업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는 2011~2016년 0.432에서 0.408로, 2016~2020년 0.446에서 0.43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10년대에 임금불평등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임금근로자와 달리, 비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 소득 지니계수는 2011~2018년까지 대체로 감소하였지만 2018~2020년에는 0.539에서 0.559로 증가하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최근 비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불평등 증가는 전반적인 소득분배 개선 추이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2018~2020년 비임금근로자 개인취업소득 불평등 증가는 성, 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 종사상지위 변화를 통제한 후에도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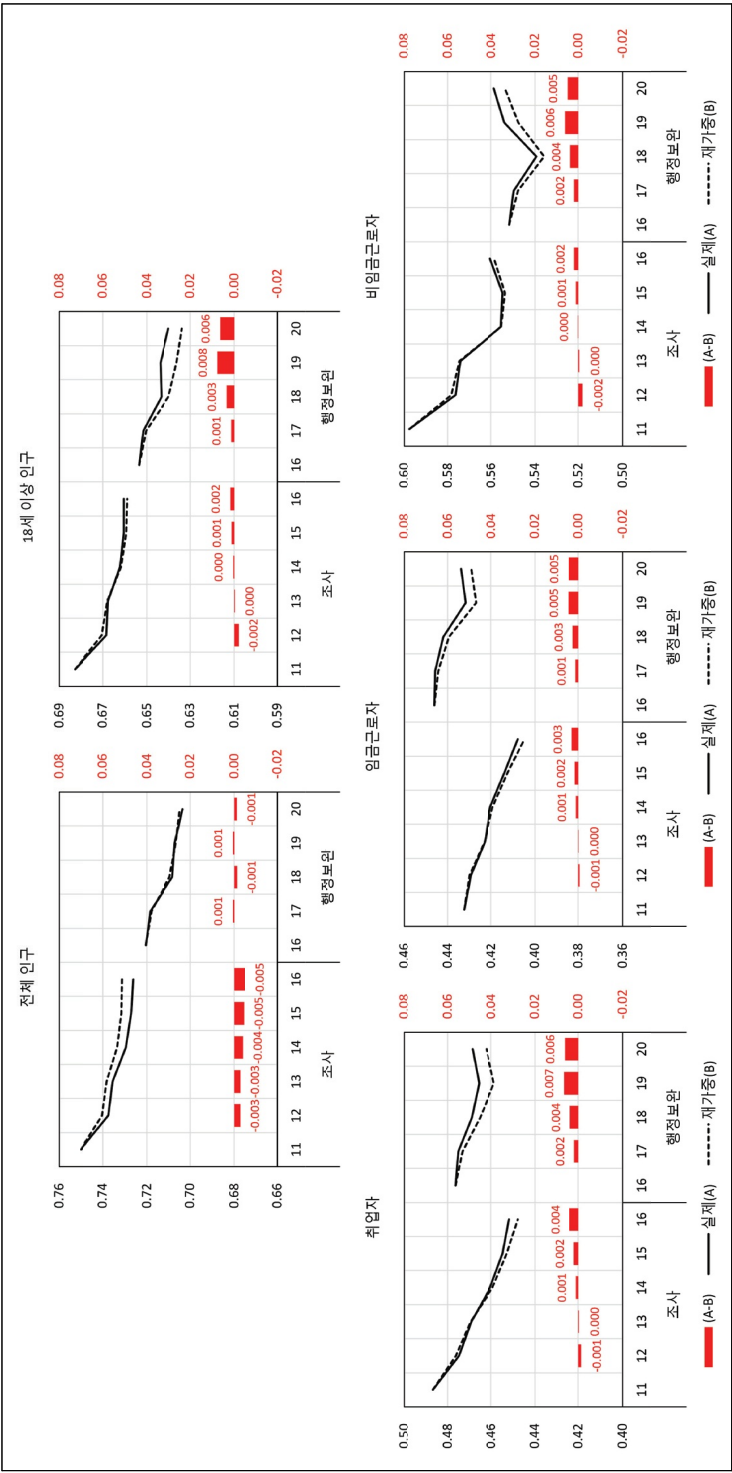
3. 개인취업소득 불평등 변화의 영향요인

[그림 2-10]에서는 성·연령 변화가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림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검정 실선은 연도별 실제 표본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체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는 2011~2016년 0.750에서 0.726으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2011~2016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하면, 2011~2016년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가 0.750에서 0.73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정 점선). 즉, 2016년의 경우 실제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는 0.726이었고, 성·연령 분포가 2011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는 0.731이었으므로, 2011~2016년 성·연령 변화가 2016년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를 0.005 감소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한 성·연령 변화의 영향을 그림에 빨강 막대로 표시하였다.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전체 인구의 성·연령 분포를 조정한 후 18세 이상 인구, 취업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⁷⁾

7) 이때 하위집단별 특성 분포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인구의 특성 분포를 조정한 후 하위집단별 지니계수를 계산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본 선택(sample selection)이 존재할 때 설명변수 분포 변화의 인과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설명변수 분포를 조정한 후 하위집단별 결과변수 분포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Chiquiar & Hanson,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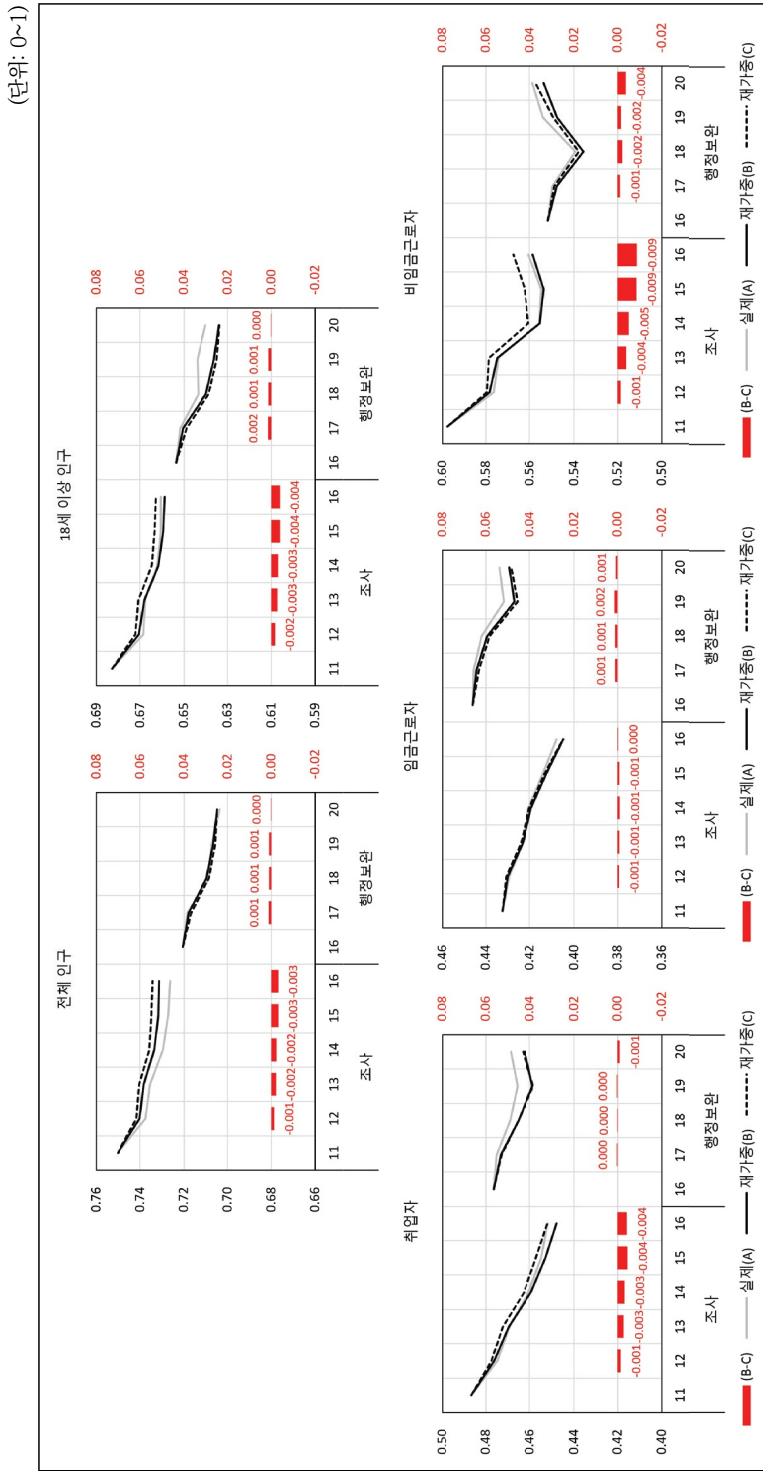
[그림 2-10] 성·연령 변화에 따른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변화

(단위: 0~1)



주: (A) 연도별 실제 표본
(B)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분포를 t1 표본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t1: 조사데이터는 2011년, 행정안전데이터는 2016년)
(A-B) 성·연령 변화의 영향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2-1>에 제시하였다.

[그림 2-11] 교육수준 변화에 따른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변화



주: (A) 연도별 실제 표본

(B)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분포를 t1 표본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t1: 조사데이터는 2011년, 행정보완데이터는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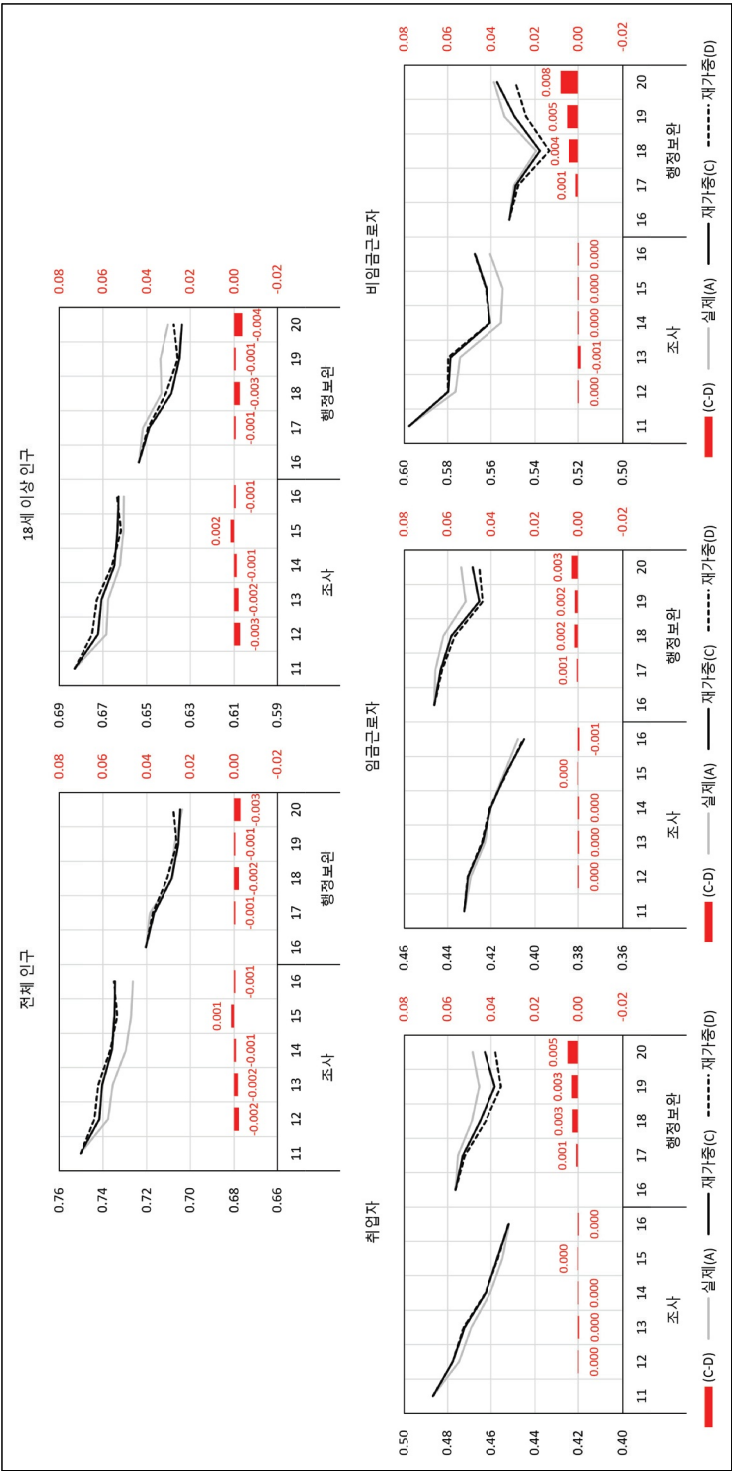
(C)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x 교육수준 분포를 t1 표본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t1: 조사데이터는 2011년, 행정보완데이터는 2016년)

(B-C) 성·연령을 통제했을 때 교육수준 변화의 영향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2-1〉에 제시하였다.

[그림 2-12] 취업상태 변화에 따른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변화

(단위: 0~1)



주: (A) 연도별 실제 표본

(C)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x 교육수준 분포를 t1 표본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t1: 조사레이터는 2011년, 행정보완레이터는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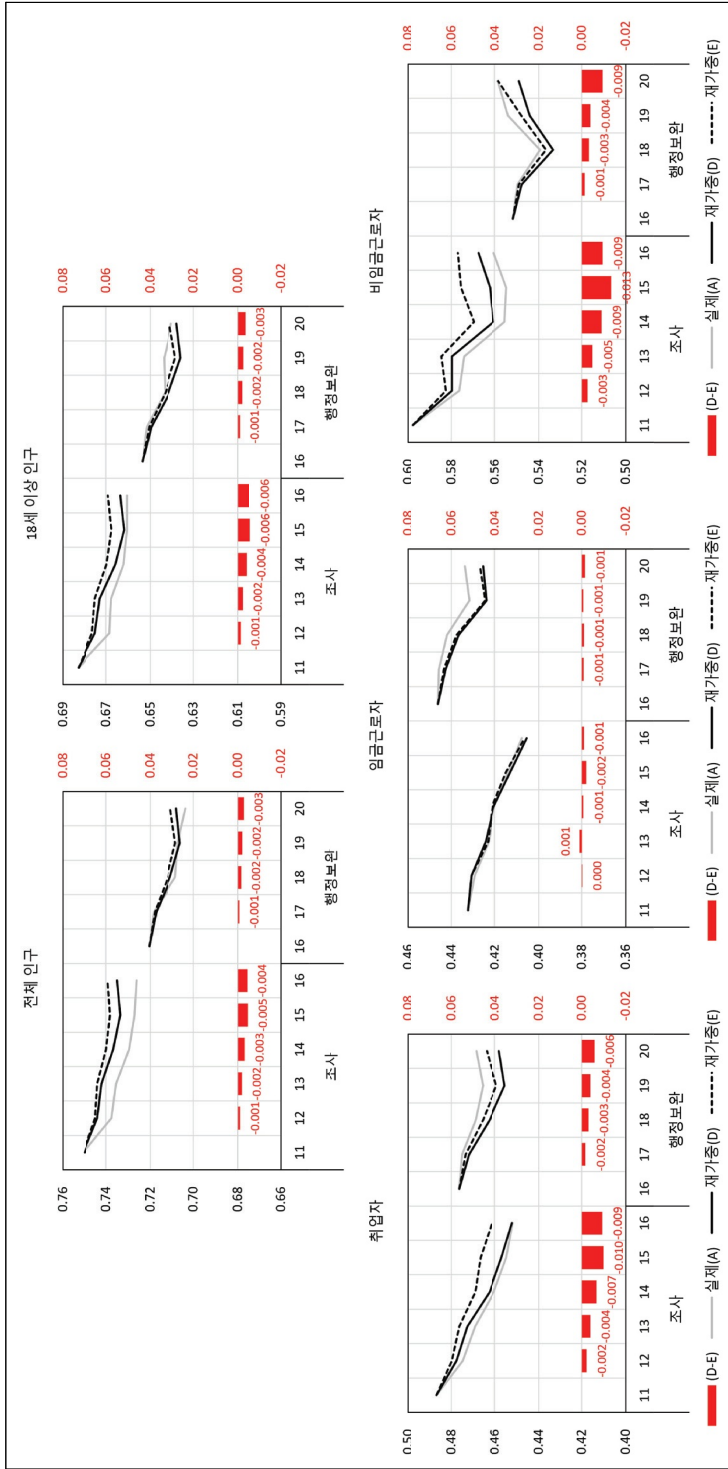
(D)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x 교육수준 x 취업상태 분포를 t1 표본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t1: 조사레이터는 2011년, 행정보완레이터는 2016년)

(C-D) 성·연령·교육수준을 통제했을 때 취업상태 변화의 영향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2-1〉에 제시하였다.

[그림 2-13] 종사상지위 변화에 따른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변화

(단위: 0~1)



주: (A) 연도별 실제 표본

(D)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x 교육수준 x 취업상태 본표를 t1 표본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t1: 조사데이터는 2011년, 행정보완데이터는 2016년)

(E)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x 교육수준 x 취업상태 x 종사상지위 본표를 t1 표본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t1: 조사데이터는 2011년, 행정보완데이터는 2016년)

(D-E) 성·연령·교육수준·취업상태를 통제했을 때 종사상지위 변화의 영향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2-1>에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림 2-10]을 살펴보면, 우선 2011~2016년 성·연령 변화가 전체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을 감소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일반적인 예측과 달리 고령화가 불평등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전체 인구에서 개인취업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18세 이상 인구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고령화에 따라 노인 비율이 증가하면서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노인은 경제활동참여율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집단 내 불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노인 비율이 증가할수록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게 된다. 2011~2016년과 2016~2020년 성·연령 변화는 각각 18세 이상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를 0.002, 0.006 증가시켰다. 또한 2010년대 성·연령 변화는 취업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불평등 역시 뚜렷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시간에 따른 아동 비율 감소는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을 감소시켰지만, 노인 비율 증가는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킨 것이다.

[그림 2-11]에서는 성·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교육수준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림에서 회색 실선은 연도별 실제 표본(A)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검정 실선은 연도별 성·연령 재가중 표본(B)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로, [그림 2-10]의 분석 결과와 동일하다. [그림 2-11]에는 성·연령×교육수준 재가중 표본(C)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를 검정 점선으로 추가하였다. 재가중 표본 B와 C는 성·연령 분포가 동일하지만 교육수준 분포가 상이하므로, B와 C의 차이를 성·연령을 통제했을 때 교육수준 변화가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에 미친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육수준 변화는 2011~2016년 전체 인구, 18세 이상 인구, 취업자, 비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을 감소시켰다. 특히 2011~2016년 교육수준 변화가 비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를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2015~2016년 -0.009).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고 집단 내 불평등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교육수준 향상은 대체로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2016~2020년에는 교육수준 변화가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단, 교육수준 변화가 비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킨 효과는 2016~2020년에도 관찰되었다.

[그림 2-12]에서는 성·연령·교육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취업상태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림을 살펴보면, 시간에 따른 고용률 변화는 대체로 전체 인구와 18세

이상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을 감소시켰지만, 취업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고용률 증가는 개인취업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비취업자의 상대적인 규모를 감소시킴으로써 비취업자를 포함한 전체 인구와 18세 이상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을 감소시켰다. 하지만 주로 여성과 중고령자를 중심으로 고용률이 증가하였으므로, 고용률 증가에 따라 취업자 내에서 여성과 중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취업자의 집단 내 불평등은 증가하게 된 것이다. 특히 2016~2020년 고용률 변화는 비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를 크게 증가시켰다(2020년 +0.008).

마지막으로 [그림 2-13]에서는 성·연령·교육수준·취업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종사상지위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시간에 따른 종사상지위 변화가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을 감소시켰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고 집단 내 불평등 수준이 낮은 상용근로자 비율이 시간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집단 내 불평등 수준이 높은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의 노동시장 변화가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을 상당히 감소시켰다. 2011~2016년 종사상지위 변화는 2016년 전체 인구, 18세 이상 인구, 취업자, 비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를 각각 0.004, 0.006, 0.009, 0.009 감소시켰고, 2016~2020년 종사상지위 변화는 2020년 전체 인구, 18세 이상 인구, 취업자, 비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를 각각 0.003, 0.003, 0.006, 0.009 감소시켰다. 단, 종사상지위 변화가 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한편, [그림 2-13]의 재가중 표본 E 분석 결과(검정 점선)는 성·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 종사상지위를 모두 통제한 상태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변화를 보여준다. 전체 인구, 18세 이상 인구, 취업자, 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감소는 부분적으로 성·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 종사상지위의 변화로 설명되지만, 이러한 특성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가 시간에 따라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사상지위 외 일자리 특성 변화나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이 성·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 종사상지위로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변화가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을 감소시켰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런데 성·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 종사상지위를 모두 통제한 후에도 2018~2020년 비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불평등 증가가 뚜렷

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2019~2020년에는 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역시 소폭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인구, 18세 이상 인구, 취업자의 개인취업소득 불평등 추이가 2011~2019년의 감소세에서 2019~2020년의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개인취업소득 불평등 악화에 중요하게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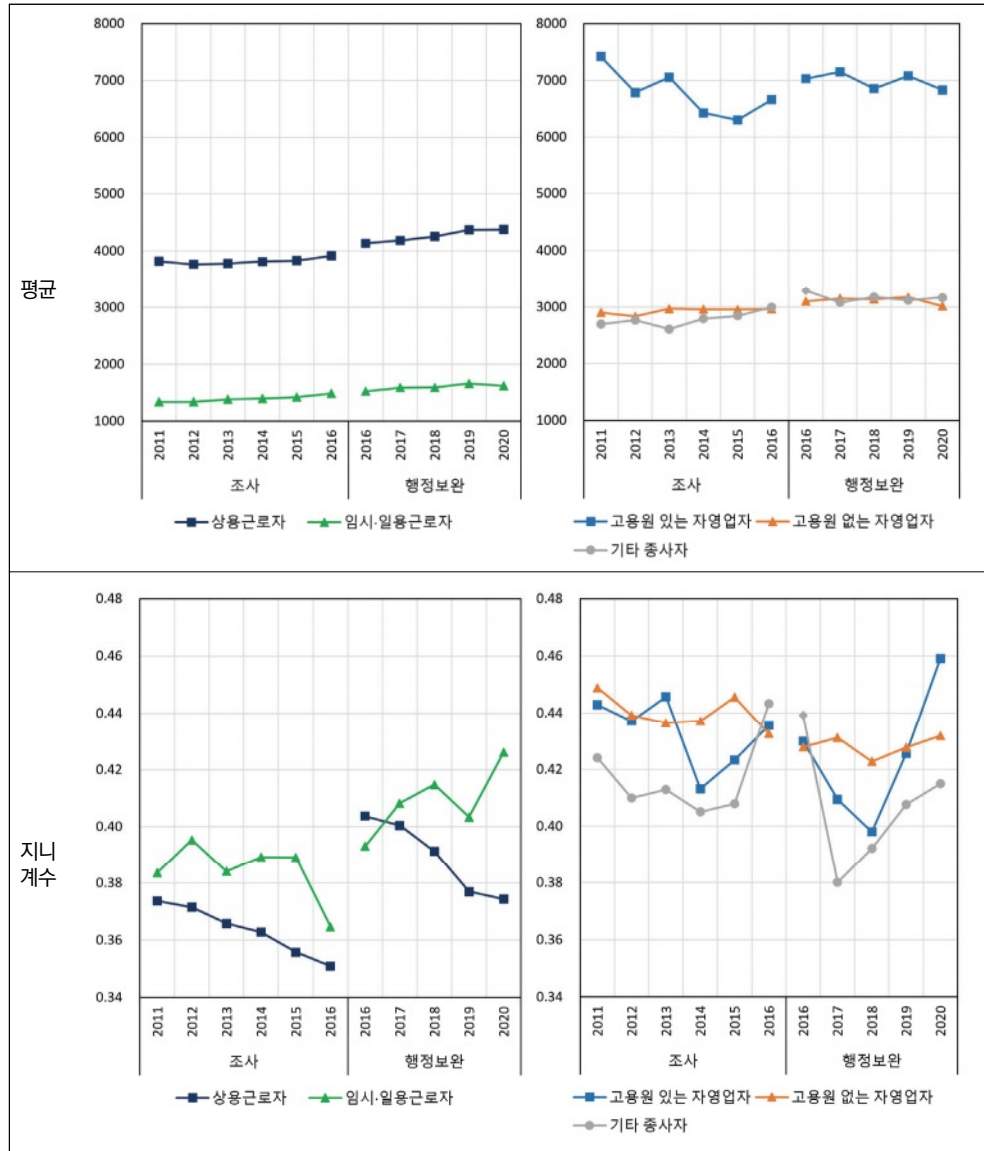
성·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 종사상지위 변화로 설명되지 않는 개인취업소득 불평등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림 2-14]에는 재가중 표본 E를 활용하여 종사상지위별 개인취업소득 평균과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성·연령, 교육수준, 종사상지위를 모두 통제한 표본을 활용하였으므로, [그림 2-14]는 종사상지위별 성·연령, 교육수준 변화를 통제한 분석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평균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19~2020년에 개인취업소득 평균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개인취업소득 평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니계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지니계수 감소세가 2019~2020년에 둔화되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2019~2020년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8~2020년에, 기타 종사자는 2017~2020년에 지니계수가 증가하였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한편으로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노동시장 불평등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7~2018년부터 비임금근로자의 집단 내 불평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개인취업소득 분포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선 2011~2020년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인구, 18세 이상 인구, 취업자, 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고, 비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은 2011~2018년에 감소하였지만 2018~2020년에 증가세로 전환되었다([그림 2-9] 참조).

[그림 2-14] 종사상지위별 개인취업소득 평균 및 지니계수, 재가중 표본(E)

(단위: 만 원/년, 2020년 실질, 0~1)



주: 성·연령×교육수준×취업상태×종사상지위 분포를 t1 표본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t1: 조사데이터는 2011년, 행정보완데이터는 2016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2-2>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재가중 분석으로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다. <표 2-3>에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저출산·고령화로 인

한 인구 구조 변화가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의 상대적인 규모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가 감소하였지만, 시간에 따라 노인의 상대적인 규모가 증가한 변화는 2011~2020년 18세 이상 인구, 취업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를 약 0.007~0.010 증가시켰다. 이처럼 아동 비율 감소와 노인 비율 증가는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에 상반된 방향의 영향을 미쳤는데, 제5장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의 분배 효과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한편, 성·연령을 통제했을 때 교육수준 변화는 주로 2011~2016년에 전체 인구, 18세 이상 인구, 취업자, 비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재가중 분석 결과 요약

(단위: 0~1)

구분		(a) t1→t2 변화	(b) 성·연령 변화의 영향	(c) 교육수준 변화의 영향				(f) 기타 영향
					(d) 취업상태 변화의 영향	(e) 종사상지위 변화의 영향	(d+e) 경제활동 변화의 영향	
전체 인구	(α) 2011→2016 조사	-0.024	-0.005	-0.003	-0.001	-0.004	-0.005	-0.011
	(β) 2016→2020 행정	-0.017	-0.001	0.000	-0.003	-0.003	-0.006	-0.010
	(α+β)	-0.041	-0.006	-0.003	-0.004	-0.007	-0.011	-0.021
18세 이상 인구	(α) 2011→2016 조사	-0.022	0.002	-0.004	-0.001	-0.006	-0.006	-0.014
	(β) 2016→2020 행정	-0.013	0.006	0.000	-0.004	-0.003	-0.007	-0.013
	(α+β)	-0.036	0.008	-0.004	-0.005	-0.009	-0.013	-0.026
취업자	(α) 2011→2016 조사	-0.035	0.004	-0.004	0.000	-0.009	-0.009	-0.025
	(β) 2016→2020 행정	-0.008	0.006	-0.001	0.005	-0.006	-0.001	-0.013
	(α+β)	-0.043	0.010	-0.005	0.005	-0.015	-0.010	-0.038
임금 근로자	(α) 2011→2016 조사	-0.025	0.003	0.000	-0.001	-0.001	-0.001	-0.026
	(β) 2016→2020 행정	-0.012	0.005	0.001	0.003	-0.001	0.002	-0.019
	(α+β)	-0.037	0.008	0.001	0.002	-0.002	0.000	-0.045
비임금 근로자	(α) 2011→2016 조사	-0.037	0.002	-0.009	0.000	-0.009	-0.010	-0.020
	(β) 2016→2020 행정	0.007	0.005	-0.004	0.008	-0.009	-0.001	0.007
	(α+β)	-0.030	0.007	-0.012	0.008	-0.019	-0.011	-0.014

주: 제3절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다음으로는 고용률 변화와 취업자 내 종사상지위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활동 변화가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연령·교육수준을 통제했을 때 전반적인 고용률 증가는 개인취업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비취업자의 상대적인 규모를 감소시켜 2011~2020년 전체 인구나 18세 이상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를 약 0.004~0.005 감소시켰다. 하지만 주로 여성과 중고령자의 고용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고용률이 증가하면서 취업자 내에서 여성과 중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2011~2020년 취업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가 0.002~0.008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고용률 증가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성과 중고령자 중심의 고용률 증가는 취업자의 집단 내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비취업자를 포함한 전체 인구의 불평등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아업과 같이 소득능력이 약한 중고령자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이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비취업자를 포함한 전체 인구의 불평등을 감소시켜 가처분소득 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

성·연령·교육수준·취업상태를 통제했을 때 종사상지위 변화는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을 뚜렷하게 감소시켰다. 소득 수준이 높고 동질적인 상용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소득 수준이 낮고 이질적인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감소하는 등의 종사상지위 변화는 2011~2020년 전체 인구, 18세 이상 인구, 취업자, 비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를 약 0.007~0.019 감소시켰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일자리의 질 향상이 소득분배를 개선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계자영업과 비공식부문의 축소, 고용안정성 강화, 비정규직 차별 완화 등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는 변화는 노동시장 불평등 축소와 소득분배 개선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 고용률 변화와 종사상지위 변화를 종합하면, 경제활동 변화가 2011~2020년 전체 인구나 18세 이상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를 약 0.011~0.013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2020년 전체 인구나 18세 이상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감소량의 약 1/4~1/3에 해당한다. 즉, 2010년대 전체 인구나 18세 이상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불평등 감소의 약 1/4~1/3은 고용률 변화와 종사상지위 변화를 결합한 경제활동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성·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 종사상지위를 통제한 후에도 2011~2020년 전체 인구, 18세 이상 인구, 취업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가 약 0.014~0.045 감소하였다. 이는 다양한 일자리 특성 변화나 최저임금 인상 등 성·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 종사상지위 변화로 설명되지 않는 노동시장 변화가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8~2019년 이후 최근의 개인취업소득 불평등 증가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13]에 따르면 성·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 종사상지위를 통제했을 때 비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이 2018~2020년에 크게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불평등 역시 2019~2020년에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2019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019~2020년에 자영업자의 개인취업소득 평균이 감소하였고 불평등이 증가하였으며, 상용근로자의 불평등 감소세가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시·일용근로자의 불평등이 증가하였다([그림 2-14] 참조). 한편으로는 긴급재난지원을 실시하고 소득보장제도를 정비하여 코로나19 확산의 소득충격에 대응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으로부터 노동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소득분배 변화에 대해서는 제7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최근 비임금근로자의 집단 내 불평등 증가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림 2-14]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는 2018~2020년에, 기타 종사자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는 2017~2020년에 증가하였다. 즉, 비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만으로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자영업 규모가 감소하면서 자영업 내 이질성이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이아영 외, 2019, pp.40-42)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충격과 맞물려 자영업의 집단 내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배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

임금근로자 개인근로소득 분포 변화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3장

임금근로자 개인근로소득 분포 변화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3장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 분포 변화를 심층 분석한다. 전체 인구의 개인 취업소득 분포 구성요소 중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 분포가 주요한 관심 대상이다. 이원진 외(2021)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비중이 점차 커지고 비임금근로자의 불평등 추이는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취업자의 개인취업소득 분포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금근로자의 취업소득 변화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로 시간당임금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임금불평등 또는 임금격차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불평등이 개선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까지 불평등이 악화되는 경향을 공통적으로 보고한다. 하지만 2010년대 임금불평등 추이는 적어도 이전과 같은 악화 추세를 지속하지 않는다. 시간당임금 불평등은 개선되거나 추세적 변화를 보이지 않고 부침을 거듭하고, 월임금 불평등은 개선되거나(경찰) 짧은 기간별로 지니계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기도 한다(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정준호, 전병유, 장지연, 2017b; 이병희, 이시균, 오상봉, 2017).

이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해 자료가 접근 가능한 최대한 긴 시계열을 대상으로 2009년 이전 임금불평등 악화기, 이후 개선기(또는 정체기)로 나누고 무조건부 분위회귀모형과 Oaxaca-Blinder 요인분해 방법으로 각 시기 월임금과 시간당임금 분포 변화와 그 요인을 분석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2020년과 2021년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2004~2019년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분포를 포함하는 가능한 긴 시기를 대상으로 임금불평등 변화를 관찰하고, 임금결정에 관여하는 가능한 모든 요인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분석대상 시기에 노동시장에 일어난 변화와 분배 실태 및 원인을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2절에서 분석 방법을 살펴보고, 제3절에서 임금불평등 추이, 특성별 분포와 임금격차의 변화, 회귀분석 및 요인분해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설명한 후, 제4절에서 결론짓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2절 분석 방법

이 장에서는 2004~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이하 경찰 8월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도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금 분포 변화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체에서 직접 또는 인터뷰를 통해 조사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임금 정보가 비교적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는 2008년부터 자료가 공개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는 임금불평 등 악화기를 분석할 수 없고, 고용형태 분포 추이가 정부가 비정규직 규모 공식발표 자료로 사용하는 경찰 8월 부가조사 결과와 다르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응답하기 때문에 임금 정보에 응답 오류가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불평등 추세가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동행하고⁸⁾, 분석가능한 기간이 길고, 고용형태 분포가 노동시장을 더 잘 대변하는 경찰 8월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기간은 2004년 이후로, 경찰 8월 부가조사 자료는 2001년과 2002년 시범조사 후 2003년부터 본격 작성되었으나, 통계청이 임금 정보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2004년 이후부터 임금에 대한 통계치를 공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무조건부 분위회귀 모형(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UQR)(Firpo, Fortin & Lemieux, 2009)과 Oaxaca-Blinder 요인분해(OB 요인분해)(Blinder, 1973; Oaxaca, 1973) 방법을 이용한다.

첫째, 2004~2019년 임금불평등 증감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의 인적 속성과 일자리 특성의 변화가 임금 각 분위에 미치는 영향과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Firpo et al.(2009)는 독립변수 분포 변화가 종속변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불편 추정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재중심영향함수(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RIF)로 대체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RIF는 종속변수의 무조건부 분포에 설명변수 분포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영향함수(Influence Function, IF)를 더한 값이다. IF의 기댓값이 0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설명변수 분포 변화가 종속변수의 무조건부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조건부 분위회귀 모형에서와 같이

8) 윤윤규 외(2020)를 보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월임금 지니계수는 2008~2012년 정체 후 2014년까
지 증가하여 금융위기 이후를 불평등이 정체 또는 감소하는 시기라고 보기 어렵다.

종속변수를 임금값으로 하면 회귀식의 추정계수가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각 설명변수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반면, 무조건부 분위회귀 모형에서는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설명변수가 τ 분위나 지니계수 등 종속변수의 무조건부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로그 월임금과 로그 시간당임금을 각각 20개의 분위로 나눈 후 P5~P95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종속변수는 로그 월임금과 로그 시간당임금이다. 시간당임금은 임금방정식에서 각 특성별 수익률(return)의 합산이기 때문에 임금구조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월임금은 시간당임금과 근로시간의 조합으로 노동시장 변화의 중요 요소인 근로시간 변화를 반영하고 실제 임금 분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월임금과 시간당임금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임금 분포 변화와 원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놓치는 중요한 변화가 없도록 하기 위해 모두를 분석한다. 조사에서는 임금에 대해 ‘최근 3개월간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를 만 원 단위로 질문한다(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조사표). 이 질문의 응답치가 월임금이며, 시간당임금은 월임금을 월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월근로시간은 경찰 본조사에서 주근로시간(‘지난 주에 실제 일한 시간(주된 일)’)을 월근로시간으로 환산한 값이다(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설명변수는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주 및 배우자 유무와 같은 개인의 인적 특성, 산업, 직종, 사업체규모, 종사상지위,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전일제/시간제), 노조가입 여부 등이다. 연령은 집단더미를 사용하는데 15~34세 청년, 35~49세 장년, 50~64세 중년, 65세 이상 노년의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고용형태는 종사상지위와 비정규직 여부를 포괄하여 정규-상용직, 정규-임시일용직, 비정규-상용직, 비정규-임시일용직 4개로 구분하였고, 근로시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제/전일제를 별도의 변수로 포함하였다. 산업은 농림어업 및 건설업, 광업·제조업, 생산자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6개로, 생산자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을, 유통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음식숙박업을, 사회서비스업은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직업은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직, 단순노무직 5개

로, 종사자규모는 1~4명, 5~9명, 10~29명, 30~299명, 300명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노조가입 여부는 노동조합원 더미를 이용하였다.

둘째, 임금불평등 증가 및 개선의 전환점이 되는 비교시점간 지니계수의 차이를 OB 요인분해 한다. OB 요인분해로 두 시점 간 분포 차이를 크게 특성 분포의 변화로 인한 영향(특성 효과, characteristics effects)과 특성별 수익률의 변화로 인한 영향(계수 효과, coefficients effects)으로 분해할 수 있다. 각 시점의 임금 분포와 가상적 임금 분포를 비교함으로써 불평등 변화에 미치는 각 요인의 기여도를 추정한다. 가상적 임금 분포는 불평등 추이의 시작 시점과 마지막 시점이 있을 때, 마지막 시점의 임금구조에 시작 시점의 특성 분포를 적용하면 어떤 분배 상태를 보이는지 실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임금불평등 악화의 시작과 끝을 2004년과 2009년으로 설정했을 때, 각각 2004년, 2009년의 지니계수와 2009년 임금구조에 2004년 특성을 적용했을 때의 가상적 지니계수를 비교하여 임금불평등 증가를 특성 변화와 계수 변화(임금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분해하는 것이다. OB 요인분해는 또한 각 특성 변수별 세부 분해(detailed decomposition)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제3절 분석 결과

1. 임금근로자 개인근로소득 분포 변화

〈표 3-1〉과 〈표 3-2〉는 각각 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임금과 월임금 분포이다. 2004년부터 금융위기까지, 금융위기부터 2014년까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3개의 시기로 구분했으며, 시간당임금과 월임금이 금융위기 시점 상승세를 보이는 연도가 달라 시간당임금은 2008년, 월임금은 2009년을 기점으로 하였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임금 분포를 보면 2004~2008년 지니계수는 증가하고 (2007년 크게 증가 후 2008년 감소) 모든 분위경쟁값 비율도 모두 증가한다. 중위보다 높은 임금계층에서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기 때문에 중상위 불평등이 악화되면서 전체 시간당임금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금융위기 이후 2개 시기는 지니계수와 모든 분위경쟁값 비율이 모두 감소하여 불평등이 감소하는 시기로, 2008~2014년보다 2014~2019년

사이 불평등 감소가 더 컸다. 2008~2014년에는 중상위 불평등 감소가 훨씬 큰 반면, 2014~2019년에는 중하위의 불평등 감소가 훨씬 커서 전체 분배 개선을 주도했다. 정리하면 평균보다 높은 임금증가율을 보인 계층이 2004~2008년에는 상위계층, 2008~2014년은 중간계층, 2014~2019년은 하위계층으로, 2004~2008년 중상위 구간이 주도하여 불평등 악화, 2008~2014년 중상위 구간이 주도하여 불평등 개선, 2014~2019년에는 중하위 구간이 주도하여 불평등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3-1〉 임금근로자 시간당임금 분포

(단위: 원/시간, 2020년 실질, 배, 0~1)

구분	평균	P10	P50	P90	P90/P10	P90/P50	P50/P10	지니계수
2004	11474	4145	8667	20656	5.128	2.393	2.143	0.386
2005	12381	4217	9020	23195	5.625	2.625	2.143	0.405
2006	12756	4321	9350	24087	5.612	2.619	2.143	0.401
2007	13783	4507	9834	26551	5.970	2.677	2.230	0.413
2008	13755	4697	10177	26422	5.795	2.672	2.169	0.398
2009	12448	4571	9458	23414	5.000	2.500	2.000	0.376
2010	12597	4796	9592	23314	5.072	2.484	2.042	0.373
2011	14029	5123	10478	25613	5.333	2.500	2.133	0.389
2012	14891	5222	11140	28042	5.556	2.578	2.155	0.391
2013	15756	5499	11720	29692	5.625	2.500	2.250	0.393
2014	15294	5769	11834	28249	5.063	2.400	2.109	0.368
2015	15382	6065	11645	28809	4.897	2.467	1.985	0.371
2016	16186	6178	12013	30034	5.000	2.500	2.000	0.369
2017	16307	6599	12691	29461	4.688	2.407	1.947	0.357
2018	17495	7258	13662	31853	4.444	2.370	1.875	0.351
2019	18602	8002	14461	32537	4.167	2.315	1.800	0.353
2020	17266	8311	14227	28767	3.750	2.143	1.750	0.317
2021	18554	8636	14594	32724	3.938	2.250	1.750	0.326
2004→2008 증가율(%)	4.5	3.5	3.8	6.7	3.1	2.8	0.3	0.7
2008→2014 증가율(%)	1.6	3.0	2.5	0.7	-2.2	-1.8	-0.5	-1.3
2014→2019 증가율(%)	3.5	3.8	3.7	3.5	-3.8	-0.7	-3.1	-0.9

주: 월임금, 근로시간, 시간당임금 값 모두 가지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월임금이 있지만 근로시간을 응답하지 않아 시간당임금이 없는 응답자가 2003~2021년 경찰 8월 부가조사 응답자 가운데 17,673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491,688명의 3.6%에 해당한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표 3-2〉 임금근로자 월임금 분포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배, 0~1)

구분	평균	P10	P50	P90	P90/P10	P90/P50	P50/P10	지니계수
2004	211.3	82.9	179.5	400.5	4.833	2.231	2.167	0.333
2005	211.3	80.6	174.7	403.2	5.000	2.308	2.167	0.336
2006	215.6	78.9	184.0	394.3	5.000	2.143	2.333	0.337
2007	222.1	79.5	192.3	402.5	5.065	2.093	2.419	0.344
2008	224.5	85.7	183.7	428.6	5.000	2.333	2.143	0.338
2009	219.3	77.5	178.8	417.1	5.385	2.333	2.308	0.348
2010	225.2	81.0	185.2	416.8	5.143	2.250	2.286	0.350
2011	225.8	77.9	189.2	422.9	5.429	2.235	2.429	0.348
2012	229.5	78.4	196.0	435.7	5.556	2.222	2.500	0.345
2013	235.0	86.0	193.5	430.1	5.000	2.222	2.250	0.340
2014	236.1	84.9	201.7	424.6	5.000	2.105	2.375	0.339
2015	241.6	84.3	210.8	442.8	5.250	2.100	2.500	0.337
2016	247.1	83.5	208.8	469.8	5.625	2.250	2.500	0.340
2017	248.7	84.0	204.8	460.9	5.488	2.250	2.439	0.328
2018	258.3	90.8	211.9	454.2	5.000	2.143	2.333	0.328
2019	265.6	90.5	231.2	482.6	5.333	2.087	2.556	0.324
2020	268.3	83.0	240.0	500.0	6.024	2.083	2.892	0.323
2021	268.0	87.8	243.9	487.8	5.556	2.000	2.778	0.319
2004→2009 증가율(%)	0.7	-1.3	-0.1	0.8	2.2	0.9	1.3	0.9
2009→2014 증가율(%)	1.5	1.8	2.4	0.4	-1.5	-2.0	0.6	-0.5
2014→2019 증가율(%)	2.4	1.3	2.8	2.6	1.3	-0.2	1.5	-0.9

주: 월임금, 근로시간, 시간당임금 값 모두 가지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월임금이 있지만 근로시간을 응답하지 않아 시간당임금이 없는 응답자가 2003~2021년 경향 8월 부가조사 응답자 가운데 17,673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491,688명의 3.6%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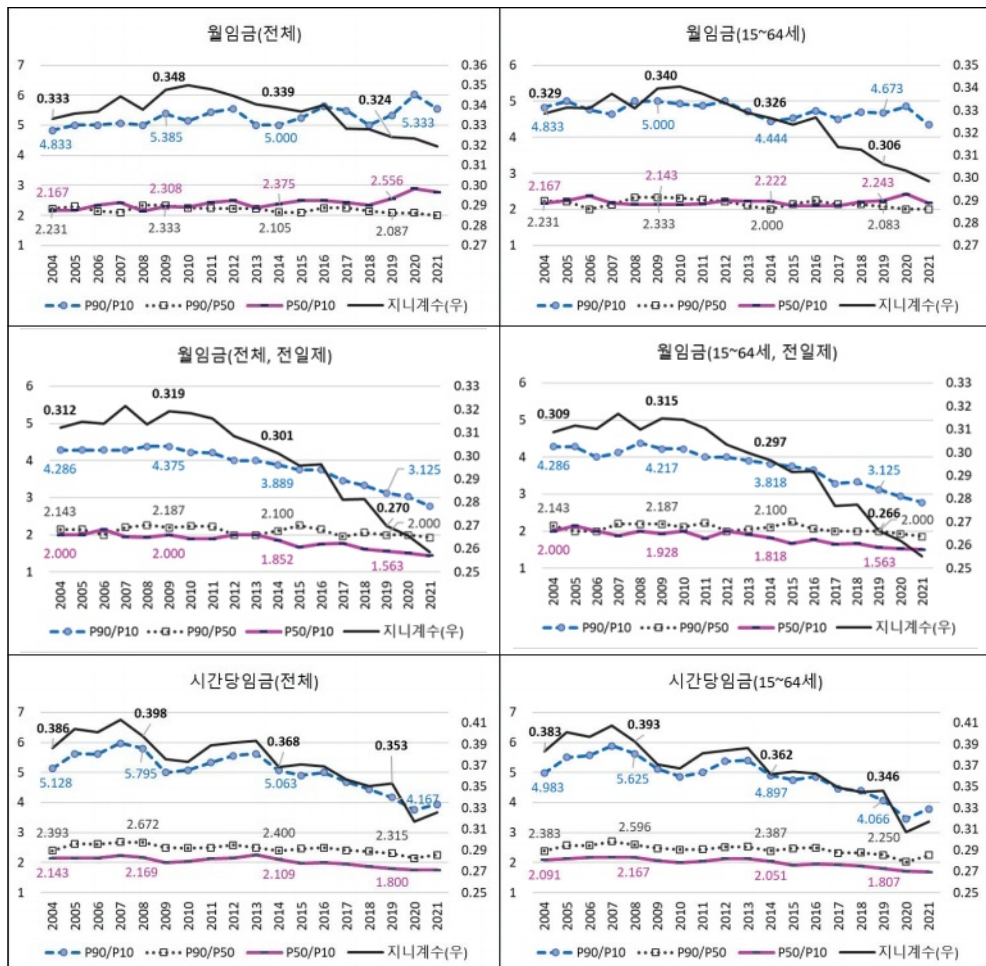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임금 분포를 보면 지니계수로 보는 각 시기 불평등도 변화는 시간당임금과 유사하다. 2004~2009년 지니계수와 분위경쟁값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고, 중하위 실질 월임금이 이 시기 감소한 반면 P90에서는 증가하여 특히 중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월임금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2009년 이후에는 지니계수 불평등도는 낮아졌으나, 2009~2014년 중하위 월임금 불평등은 심화되었고(P50/P10 증가), 월임금에서도 이 시기 분배 개선은 중상위 구간이 주도했다. 중하위 월임금 불평등 증가는 시간당임금 분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변화로, 단시간 근로자 증가로 인한 낮은 월임금

임금근로자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014~2019년에는 지니계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여 분배 개선을 보였주었으나 중하위 월임금 불평등(P50/P10)이 더 크게 악화되면서 P90/P10도 증가하여 지니계수와 다른 불평등 추이를 보였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개인 응답자료로 분위경쟁값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임금계층별 임금변화를 파악하는 데에만 활용하고 불평등 추이 파악 및 원인 분석에서는 지니계수를 주로 활용한다.

[그림 3-1] 임금불평등 추이

(단위: 배, 0~1)



주: <표 3-1>, <표 3-2>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그림 3-1]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임금, 시간당임금, 전일제 근로자의 월임금, 15~64세 근로연령층 임금근로자의 월임금, 시간당임금, 전일제 월임금의 불평등 추이를 보여준다. 임금불평등에 대한 선행연구는 시간당임금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시간 일자리 증가로 인해 월임금($=\text{시간당임금} \times \text{근로시간}$) 분포가 시간당임금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근로시간 감소는 시간제 근로자의 월임금을 낮추며, 월임금이 낮은 시간제 일자리 증가는 월임금 분포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따라서 임금불평등 추이와 원인을 살펴는 데 있어서 시간당임금과 월임금 분포를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추세와 요인들의 작동기제를 살펴 임금불평등 추이를 전체 조망하고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그림 3-1]은 지난 이십여 년간의 임금불평등 추이와 원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임금과 인구집단을 판단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 앞서 임금불평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2009년 금융위기 시점까지 불평등이 악화되는 경향, 2010년대에는 이전의 악화 추세를 멈추고 회복하거나 개선된다고 보고하였다. 이 경향은 [그림 3-1]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전체 임금근로자와 근로연령층 임금근로자의 월임금 분포는 대체로 유사하다. 지니계수가 2008년을 제외하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세가 유지된 후, 2016~2017년경 약간의 부침이 있지만 201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감소세가 유지된다. P90/P10은 2004~2009년 증가세 후, 등락을 거듭하며 2019년 5.333으로 2009년 5.385보다 약간 낮아졌다.

시간제 증가가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전일제 임금근로자만으로 임금불평등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임금 불평등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니계수가 약간의 부침이 있지만 2009년까지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과 이후 2016년을 제외하고 2010년대 감소세를 보인다는 점이 유사하다.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월임금 지니계수 감소세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지니계수 감소세보다 훨씬 가파르다는 것은 2010년대 시간제 근로, 즉 낮은 월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불평등 감소세를 늦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P90/P10은 2004~2009년 완만하게 증가한 후 2010년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다. 또한 근로연령층 전일제 임금근로자는 전체 전일제 임금근로자와 월임금 불평등 추이가 유사하다.

시간당임금 분포를 살펴보자. 시간당임금도 전체와 근로연령층 임금근로자의 임금분포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시간당임금 지니계수와 P90/P10은 동행하는 경향을

보이며, 2004~2007년 상승세를 보인 후, 2007~2010년 감소, 2010~2013년 약간 증가 후 2013년 이후 감소세다. 2010~2013년 약간의 반전을 제외하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시간당임금 불평등이 대체로 감소세라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 분포를 알기 위해 시간당임금 및 월임금(시간당임금×근로시간) 분포를 모두 분석대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를 임금불평등 악화기, 2010년대를 개선기로 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2009년에는 시간당임금의 불평등이 월임금과 다르게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각 임금의 불평등이 증가한 각 시기, 즉 시간당임금은 2004~2008년, 월임금은 2004~2009년을 임금불평등이 증가한 시기로 보고 분석한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임금불평등이 개선되는 시기를 2개 시기로 구분하여 임금 분포 변화의 원인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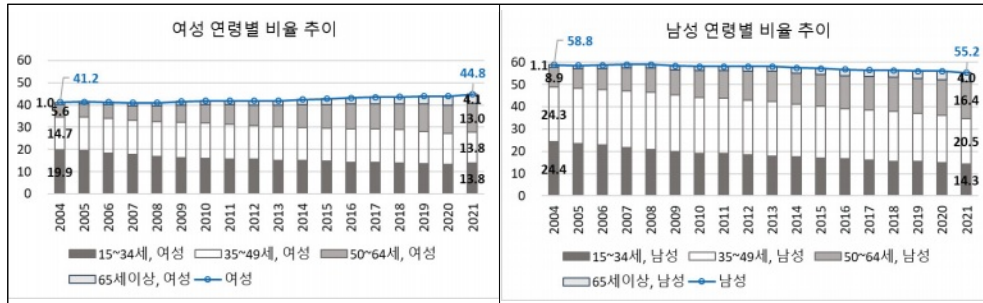
2. 특성별 분포와 임금 격차

여기서는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적특성 및 일자리 특성의 분포와 집단별 임금격차 추이를 분석하여 분석대상 기간 동안 임금분포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요인을 기초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성별 분포를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남성은 감소했다. 여성 임금근로자 증가를 낳은 주요 연령층은 50대 이상의 중고령층으로, 50~64세 여성은 2004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65세 이상은 1%에서 약 4배로 증가했다. 반면 15~34세 여성근로자 비율은 2004년 19.9%에서 2021년 13.8%로 6.1%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남성근로자 비율이 감소한 가운데, 남성 임금근로자에서도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증가속도는 여성과 유사하게 빨랐다. 반면, 15~34세 남성의 비율은 약 10%포인트 감소, 35~49세도 약 4%포인트 감소했다.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월임금은 약 57%, 시간당임금은 약 66%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비슷한 수준을 보이지만(시간당임금은 약간 감소), 이후 여성의 상대임금이 2014년까지 약한 상승세를 보인 후, 2010년대 중반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임금격차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중고령층의 높은 시간제 비율과 2010년대의 증가세로 인해 여성 월임금의 2014년 이후 증가속도가 시간당임금보다 완만하다.

[그림 3-2] 성·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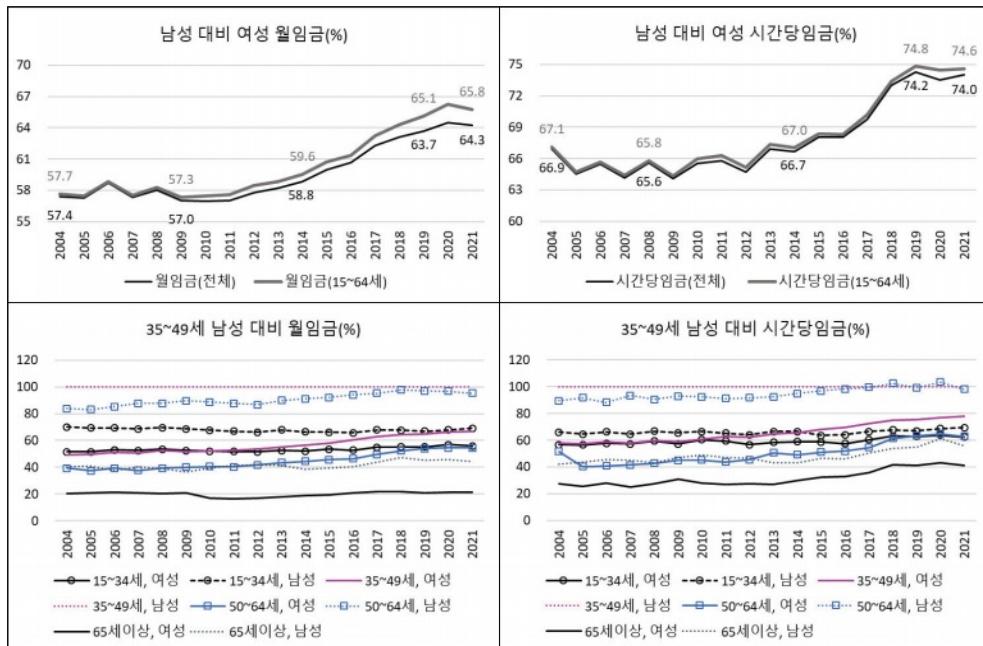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그림 3-3] 성별·연령별 임금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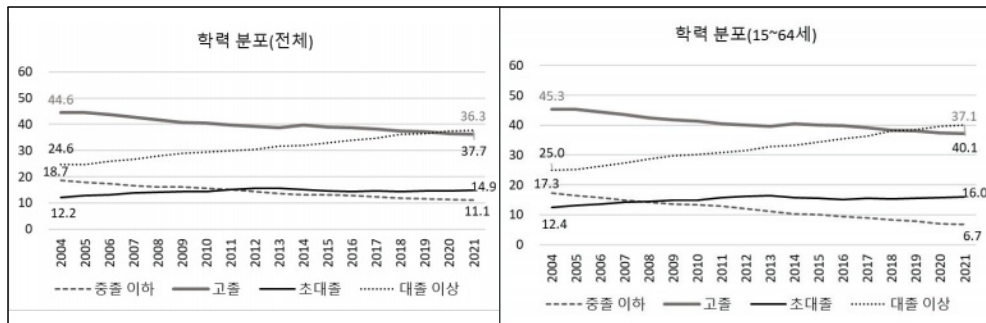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35~49세 남성 임금을 기준(100)으로 성별·연령별 임금 수준을 비교해보면, 35~49세 여성, 50~64세 여성과 남성, 65세 이상 여성과 남성이 빠르게 시간당임금 격차를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0~64세 남성의 시간당임금은 2017년부터는 35~49세 남성의 시간당임금 평균과 같거나 더 높다. 이 격차의 감소는

2013~2018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이뤄졌고, 시간당임금의 격차를 줄인 대부분의 성·연령 집단이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높은 집단임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임금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으며 이 변화가 분배에 영향을 미쳤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3-4] 학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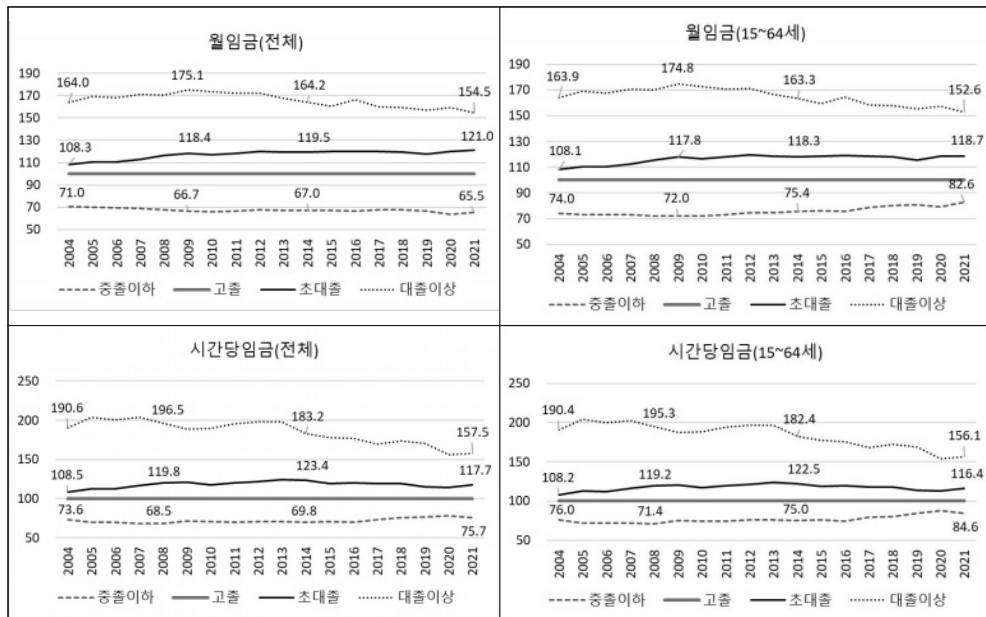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그림 3-5] 학력별 임금 수준

(단위: %)



주: 고졸 대비 비율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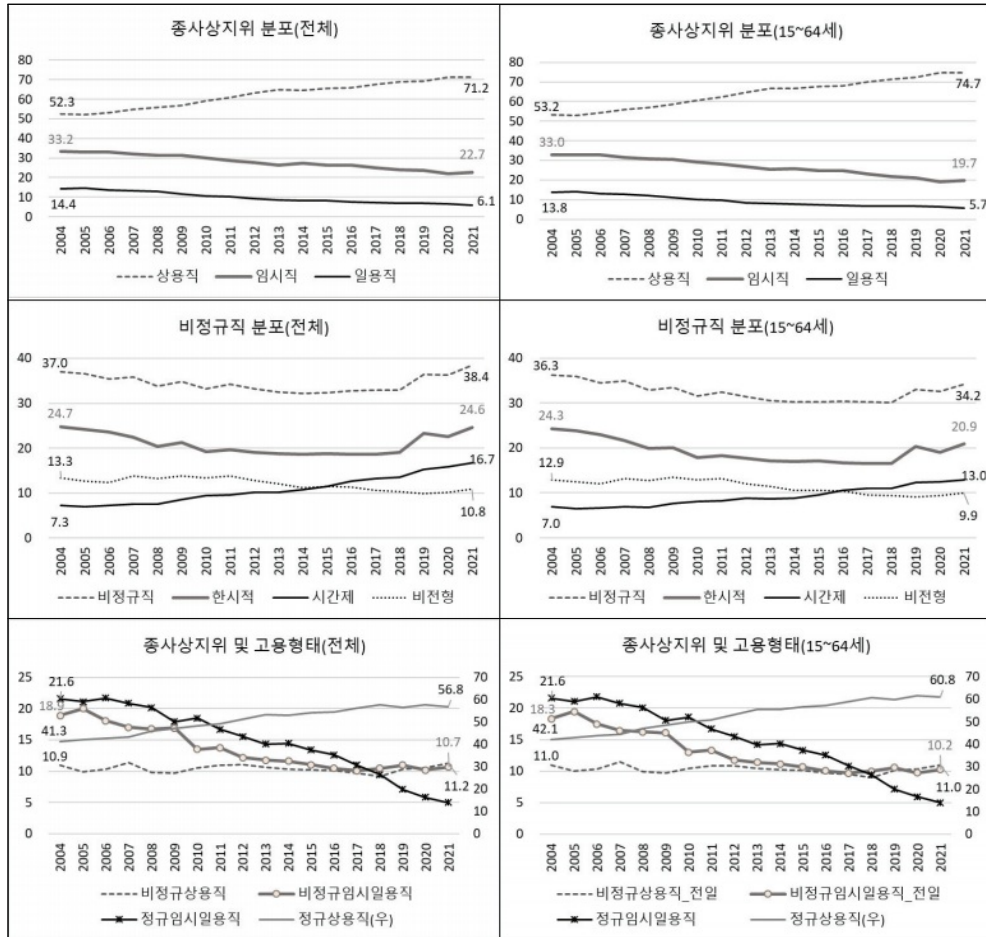
학력 분포를 보면 고졸 이하는 가파르게 감소, 초대졸은 2013년까지 완만한 증가 후 유지하는 대신 대졸 이상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고졸자의 임금을 기준(100)으로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임금비율을 보면 월임금은 2009년까지, 시간당임금은 2007년까지 임금격차가 증가했다. 이후 2013년까지 대졸자의 시간당임금 프리미엄이 증가했지만 2010년대에는 대체로,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더 크게 임금격차가 감소해 분배 개선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을 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시간당임금에서 대졸자 프리미엄은 감소하고 중졸 이하 저임금 근로자의 상대임금은 눈에 띄게 상승해 격차가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임금 추이를 보면 중졸 이하의 상대임금이 인상되지 않는데 저학력자의 단시간 근로 증가로 월임금이 시간당임금만큼 상승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종사상지위와 고용형태 분포를 살펴보면, 2004년 이후 전 기간 상용직이 증가하고, 임시·일용직은 감소하는 추세다.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 증가한 후 분석대상인 2004~2010년에는 다소 빠르게 감소한 이후 비슷하게 유지 또는 완만하게 감소해왔다. 비정규직은 한시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로 구성되는데 한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분포 변화와 유사하다.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용역직, 일일·가정내·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는데 2004~2011년까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다가 2012년부터는 감소세로 2004년부터 2021년 사이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시간제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에는 7.3%, 2009년 7.6%, 2014년 10.7%, 2019년 15.4%로 증가했다. 종사상지위와 근로형태를 비교하는 하나의 분류로 정규-상용직, 정규-임시일용직, 비정규-상용직, 비정규-임시일용직 분포를 보면, 정규 및 비정규 상용직은 매우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정규-임시일용직은 빠른 속도로, 비정규-임시일용직은 완만한 속도로 감소했다. 비정규-임시일용직에서 시간제, 비전형, 한시직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금융위기까지는 시간제 증가는 거의 없는 채 한시직 근로가 감소하기 때문에, 2010년대에는 시간제 근로가 빠르게 증가하지만 비전형 근로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비정규-임시일용직이 전 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감소하는 모습이다.

임금분포 변화의 요인으로 종사상지위와 비정규직 여부를 결합한 근로형태 구분을 사용하고, 비정규직의 한 유형인 시간제 근로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이로 인해 시간당임금과 월임금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근로형태이기 때문에 시간제 여부를 독립적인 요인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림 3-6] 종사상지위 및 고용형태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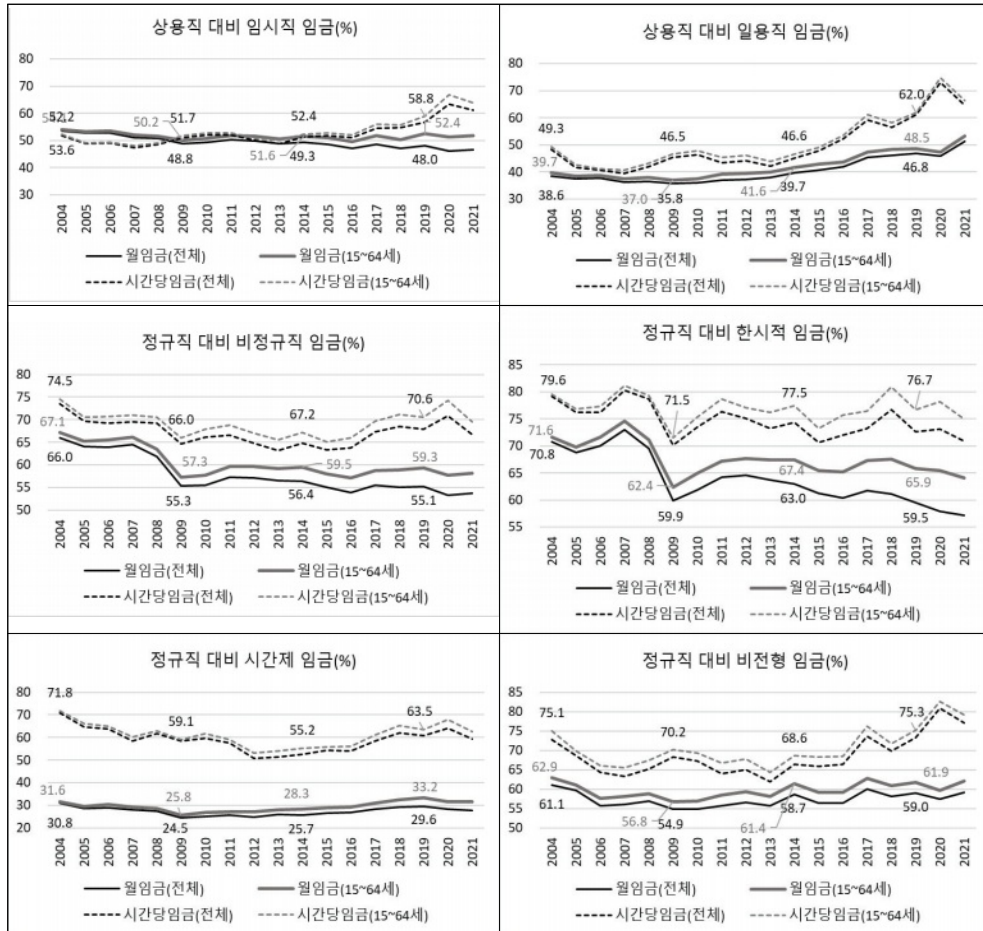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종사상지위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보면, 상용직 대비 임시직과 일용직 임금은 각각 2009년, 2007년까지 약간 감소한 후 유지 또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모습이다. 특히 시간당임금이 2010년대 후반에 빠르게 상승했다. 비정규직 월임금 수준을 보면 금융위기까지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이 감소해 격차가 커진 후 위기 이후 상대임금 수준이 유지 또는 완만하게 상승한다. 하지만 시간당임금은 임시·일용직과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빠르게 증가했다. 이런 추이는 정규·임시일용직, 비정규·임시일용직 구분에서도 관찰된다.

[그림 3-7] 종사상지위 및 고용형태별 임금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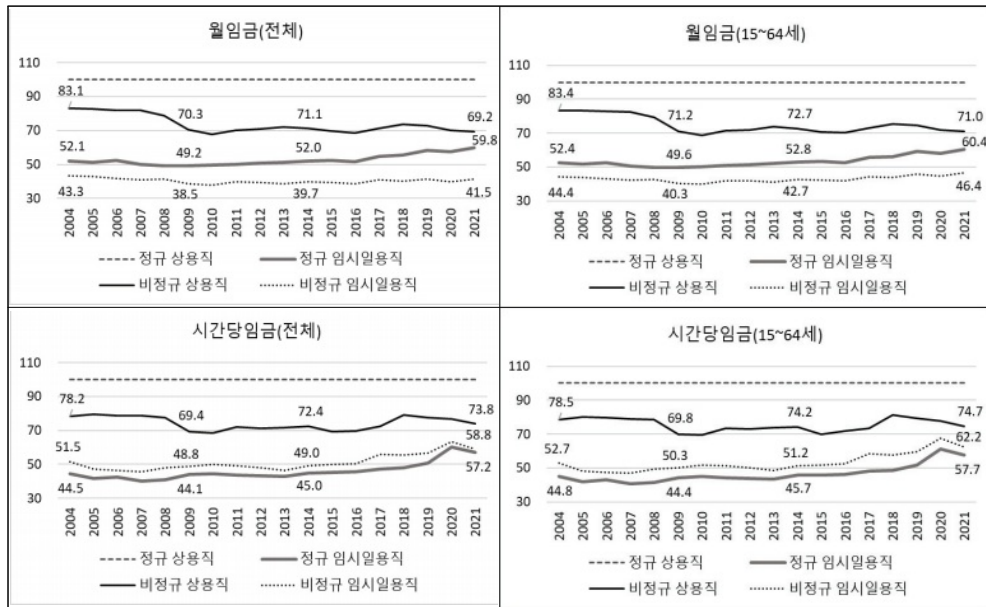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산업분포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광업·제조업이 급격하게 감소한 후 2015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유지하다가 다시 완만한 속도로 감소하는 모습이다.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음식숙박업을 포함하는 유통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완만한 속도로 이 추이를 동행하고 있다.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생산자서비스업은 2007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08년 감소 후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업은 금융위기 당시 크게 증가 후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15년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개인서비스업도 금융위기 때 급격하게 증가 후, 완만하게 하지만 산업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3-8] 근로형태별 임금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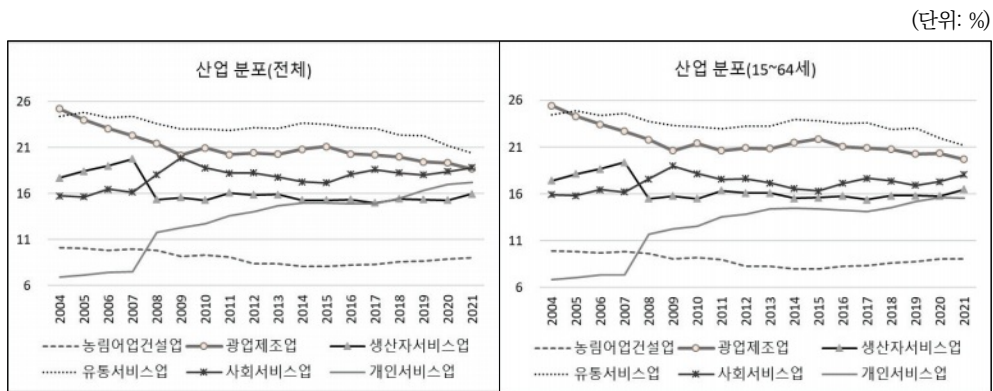
주: 정규 상용직 대비 비율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제조업 기준(100)으로 임금 수준을 비교해보면 시간당임금의 경우 생산자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임금이 높고 개인서비스업과 유통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을 보인다. 월임금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임금이 낮고 개인서비스업이 유통서비스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이 감소한다. 이는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에 단시간 근로가 많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임금격차의 추이를 보면 고임금 업종인 생산자서비스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상대임금이 크게 증가하여 임금격차를 확대한 후 2010년대 중반까지 격차가 감소하다가 이후 유지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업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생산자서비스업보다 시간당임금이 높은 일자리였으나 복지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크게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는 시간당임금 격차를 감소시키지만, 월임금

격차는 확대시킨다. 저임금 업종인 유통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은 금융위기까지 상대임금 수준이 하락하여 임금격차가 커졌다. 금융위기 때 제조업과 격차를 좁혔고 이는 다시 2016년까지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다시 격차가 감소하고 있다.

[그림 3-9] 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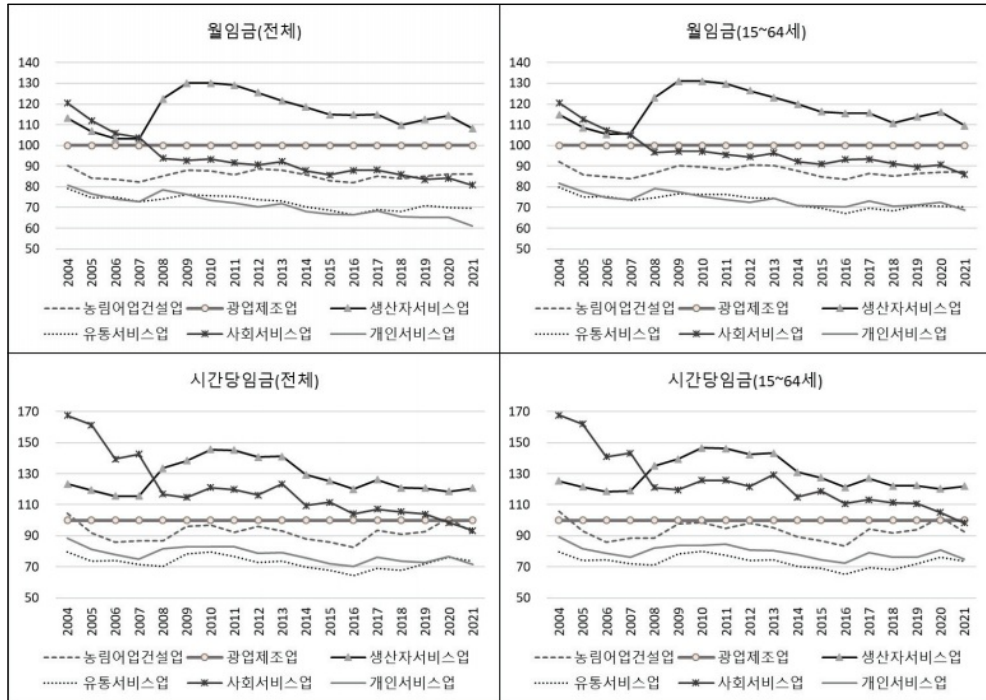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기간별로 봤을 때 금융위기까지 저임금 업종의 임금 수준이 더 낮아져 임금격차가 커지다가, 시간당임금은 2011년까지 횡보하고 월임금은 저임금 일자리 근로시간 감소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2016년까지 저임금 격차는 커지고 고임금 격차는 감소했다. 이 시기 중상위계층의 불평등 감소가 전체 임금불평등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업종 간 임금격차 추이가 뒷받침한다. 2017년부터는 고임금, 저임금 모두 제조업과의 격차가 감소하여 이 시기 불평등 완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직종별 분포를 보면, 생산직이 2009년까지 가파르게 감소한 후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2016년부터 완만한 감소세로 제조업과 같이 움직인다. 또한 큰 변화를 보이는 직종은 단순노무직으로 2009년까지 급증한 후 2013년까지 감소, 이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다가 최근 2020년과 2021년 크게 증가하였다. 저임금 직종이 금융위기까지 가파르게 증가한 점이 불평등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는 2007년까지 서비스판매직과 사무직이 감소하는 대신 관리전문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금융위기 이후에는 모두 2004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10] 산업별 임금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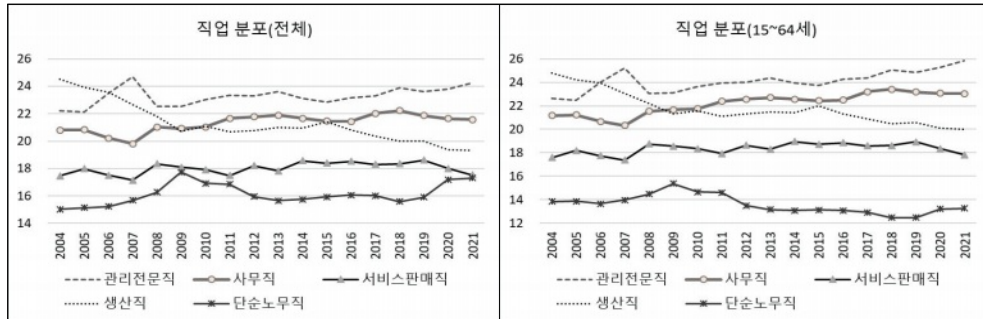
주: 광업·제조업 대비 비율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생산직 임금(100) 대비 임금 수준을 보면 고임금 직종인 관리전문직은 지속적으로 임금이 감소하여 격차를 줄이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 격차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사무직 역시 생산직보다 임금이 높는데 시간당임금이 2010년대 중반에 약간 감소하는 변화 외에 거의 상대임금에 변화가 없다. 생산직 대비 저임금 직종인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의 임금격차도 큰 변화 없이 안정되지만, 시간당임금이 2017년부터 격차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월임금에서는 이런 추세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시기 저임금 직종의 시간당임금은 증가하지만 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월임금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1] 직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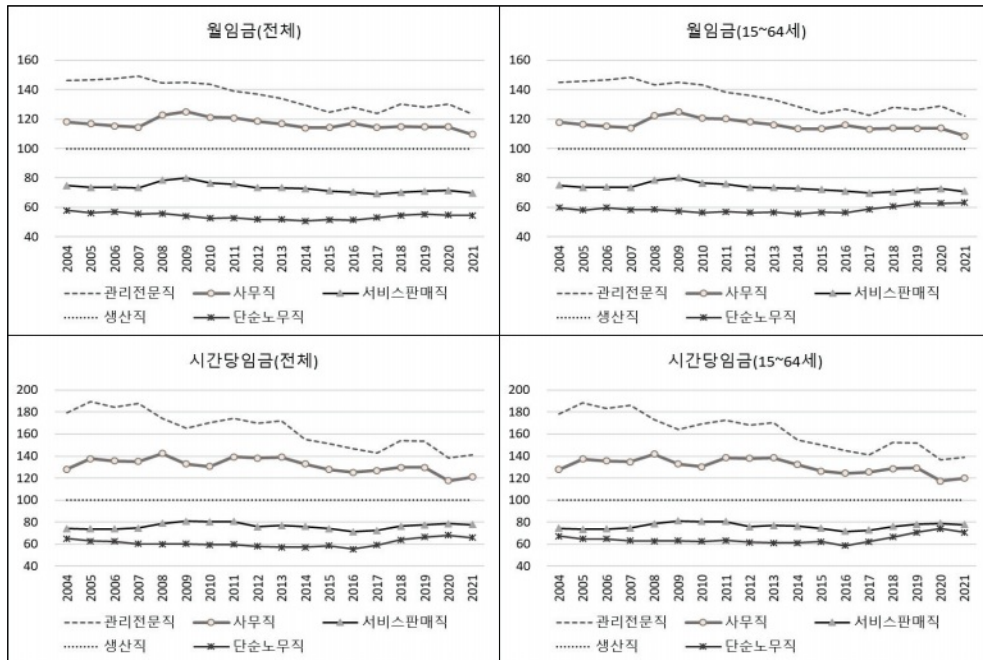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그림 3-12] 직업별 임금 수준

(단위: %)



주: 생산직 대비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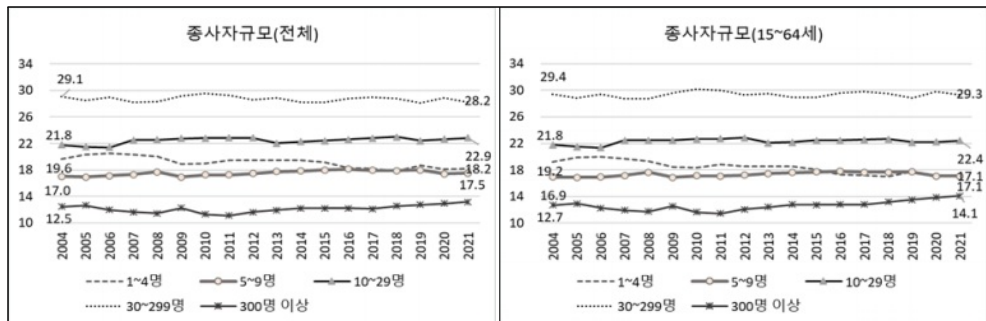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기간별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임금격차가 대체로 유지되지만 증가한 단순노무직의 임금이 약간 감소하여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영향이 있고,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 산업과 유사하게 고임금 격차는 감소, 저임금 격차는 증가하여 중상위에서 분배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 그리고 2017년부터 고임금 직종과의 시간당임금 격차는 약간 증가하는 반면, 저임금 직업(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 격차가 감소하여 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3] 종사자규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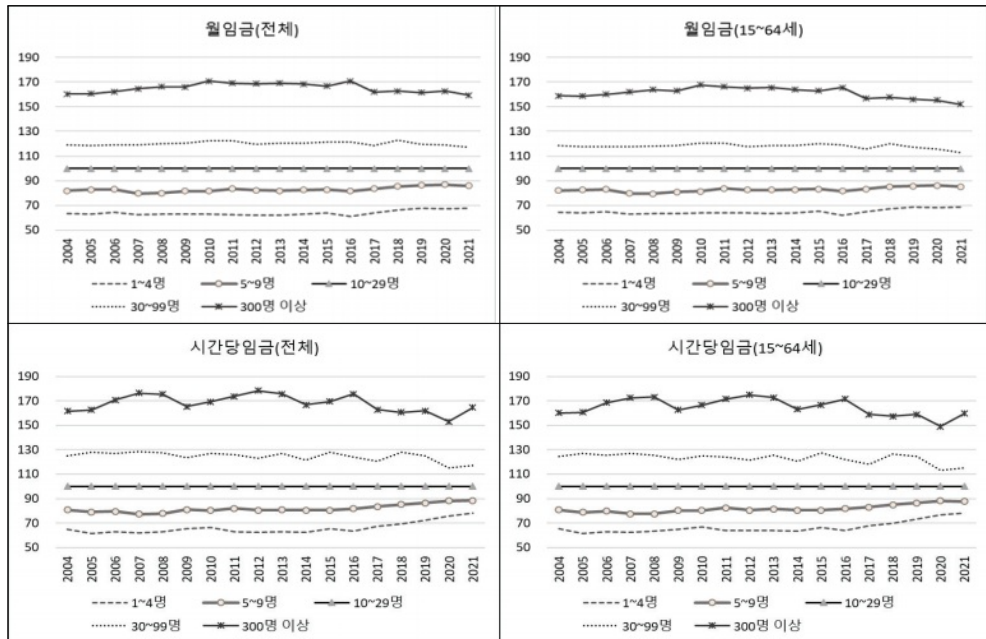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그림 3-14] 종사자규모별 임금 수준

(단위: %)



주: 10~29명 대비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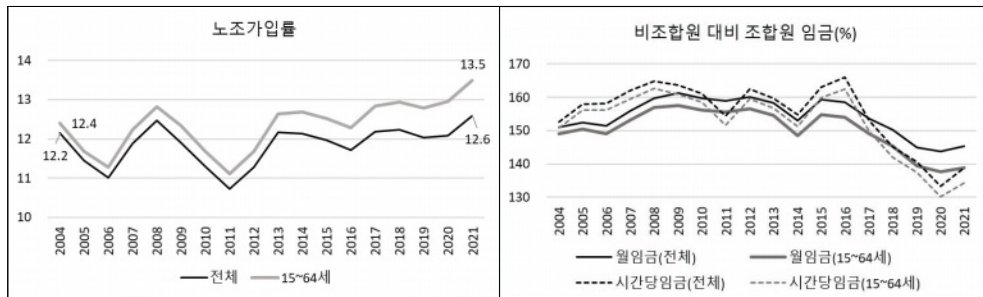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종사자규모별 분포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10년대 1~4명 사업장 근로자가 감소하고, 300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완만하게 증가해왔다는 점이다. 10~29명 대비 임금 수준을 보면 시간당임금은 짧은 시기별 부침이 있지만 대체로 2016년까지 미미하게 고임금 사업장, 저임금 사업장 모두 격차를 감소시켜오다가 2017년부터 그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시간당 임금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월임금 추이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금융위기까지 300명 이상 기업의 월임금이 증가하면서 격차가 커졌고 모든 규모별 격차가 2016년까지 유지되다가 2017년부터 격차의 감소 속도가 시간당임금 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더 빨라졌다. 즉, 금융위기까지 대규모 기업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2017년부터 특히 소기업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불평등을 감소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2004년 12.2%에서 2021년 12.6%로 기간 중 큰 변화가 없다. 비조합원에 비해 조합원은 임금 수준이 높는데 금융위기까지 임금수준이 계속 증가한 후 2015년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빠르게 감소세를 보였다.

[그림 3-15] 노조가입률 및 비조합원 대비 조합원 임금 수준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특성별 분포와 임금격차의 추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4년부터 최근까지 노동시장에서 중고령 근로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졸 이하 감소와 대졸자 증가가 모든 시기 공통적인 인적 특성 변화였다. 공통적인 일자리 특성 변화는 상용직과 시간제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시기별로 특성 분포와 상대임금 추이는 차이를 보였다.

2004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제조업과 유통서비스업, 생산직 근로자가 크게 감소했다. 대신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단순노무직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임

금격차를 보면 대졸자의 임금 프리미엄은 상승했고, 정규-상용직 대비 다른 고용형태 대부분이 2008년까지 격차가 증가했으며, 저임금 업종(유통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과 직종(단순노무직)의 임금수준은 낮아지고 고임금 업종(생산자서비스업)과 대기업 종사자, 노조가입자의 상대임금은 더 증가해서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제조업과 생산직이라는 대표적인 중간임금 일자리 감소와 함께 중상위계층의 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2009~2014년에는 시간제 일자리가 금융위기 이전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다른 비정규직의 비율은 일정하다. 이 시기에는 다른 산업과 더불어 제조업, 유통서비스업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고, 생산직 비율도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 기간에는 성별·연령별 임금격차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특성별 임금격차가 증가세를 멈췄다. 그리고 제조업에 비해 다른 모든 업종의 임금이 감소, 생산직에 비해 다른 모든 직종 임금도 감소해 중간임금과 고임금 격차는 감소했지만 저임금과의 격차는 증가했다. 사회서비스업은 금융위기 시점부터 고임금 업종에서 중간임금 일자리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따라서 중상위계층의 분배가 개선되면서 이 시기 전체적인 불평등 감소로 이끈 것으로 보인다.

2014~2019년에는 노동시장의 고령화, 고학력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업과 유통서비스업, 생산직이 다시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특성별 임금격차가 빠르게 감소했다. 대졸 및 노조 프리미엄은 감소하고, 저임금인 중졸 이하,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 유통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 10인 미만 사업장의 시간당임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따라서 이 기간 중하위층의 분배 개선이 두드러진다. 월임금이 시간당임금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시간당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근로시간 감소(단시간 근로 증가)가 반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3. 무조건부 분위회귀 분석 결과

무조건부 분위회귀모형 및 OB 요인분해의 분석 대상인 5개 연도 특성 분포를 <표 3-3>에 보고한다. 앞서 각 특성별 분포를 그림으로 제시하고 각 시기별 분포 변화를 설명한 바 있으며, 표에서 구체적인 수치 변화를 점검할 수 있다.

〈표 3-3〉 무조건부 분위회귀 모형 기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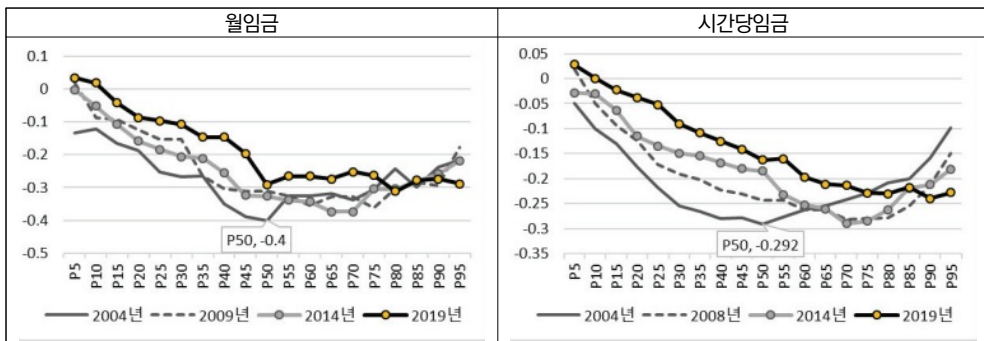
구분		전체					차이				
		2004	2008	2009	2014	2019	2008 -2004	2009 -2004	2014 -2008	2014 -2009	2019 -2014
성별	여성	0.412	0.409	0.416	0.424	0.440	-0.003	0.004	0.015	0.009	0.015
	남성	0.588	0.591	0.584	0.576	0.560	0.003	-0.004	-0.015	-0.009	-0.015
연령	15~34세	0.443	0.374	0.362	0.327	0.290	-0.069	-0.082	-0.048	-0.035	-0.037
	35~49세	0.390	0.417	0.414	0.384	0.362	0.027	0.024	-0.033	-0.030	-0.023
	50~64세	0.145	0.178	0.187	0.241	0.280	0.034	0.043	0.063	0.054	0.039
	65세 이상	0.022	0.030	0.037	0.048	0.068	0.008	0.015	0.018	0.011	0.020
학력	중졸 이하	0.187	0.161	0.160	0.132	0.117	-0.026	-0.027	-0.029	-0.029	-0.015
	고졸	0.446	0.418	0.408	0.397	0.371	-0.028	-0.038	-0.021	-0.012	-0.025
	초대졸	0.121	0.141	0.144	0.151	0.147	0.019	0.022	0.010	0.008	-0.005
	대졸 이상	0.246	0.280	0.288	0.321	0.365	0.034	0.042	0.040	0.032	0.045
가구주	가구주	0.562	0.577	0.562	0.553	0.561	0.016	0.000	-0.025	-0.009	0.008
	비가구주	0.438	0.423	0.438	0.447	0.439	-0.016	0.000	0.025	0.009	-0.008
배우자	배우자유	0.310	0.291	0.279	0.285	0.309	-0.019	-0.031	-0.005	0.006	0.024
	배우자무	0.690	0.709	0.721	0.715	0.691	0.019	0.031	0.005	-0.006	-0.024
고용 형태	정규 상용직	0.413	0.458	0.470	0.531	0.565	0.045	0.057	0.073	0.061	0.034
	정규 임시일용직	0.216	0.201	0.179	0.144	0.071	-0.014	-0.037	-0.057	-0.035	-0.073
	비정규 상용직	0.110	0.100	0.100	0.113	0.129	-0.011	-0.011	0.014	0.014	0.015
	비정규 임시일용직	0.261	0.241	0.252	0.211	0.236	-0.020	-0.009	-0.029	-0.040	0.024
근로 형태	시간제	0.073	0.075	0.085	0.105	0.151	0.002	0.012	0.031	0.020	0.046
	전일제	0.927	0.925	0.915	0.895	0.849	-0.002	-0.012	-0.031	-0.020	-0.046
산업	농림어업건설업	0.101	0.098	0.092	0.081	0.087	-0.003	-0.009	-0.017	-0.011	0.006
	광업제조업	0.252	0.214	0.201	0.208	0.194	-0.037	-0.050	-0.006	0.007	-0.014
	생산자서비스업	0.177	0.153	0.155	0.153	0.153	-0.023	-0.021	-0.001	-0.003	0.001
	유통서비스업	0.244	0.236	0.230	0.237	0.223	-0.008	-0.014	0.001	0.007	-0.014
	사회서비스업	0.157	0.180	0.199	0.172	0.180	0.023	0.041	-0.008	-0.026	0.008
	개인서비스업	0.069	0.118	0.123	0.149	0.163	0.049	0.054	0.031	0.027	0.014
직업	관리전문직	0.222	0.225	0.225	0.231	0.236	0.003	0.003	0.006	0.006	0.005
	사무직	0.208	0.210	0.209	0.217	0.219	0.002	0.001	0.006	0.007	0.002
	서비스판매직	0.175	0.183	0.181	0.186	0.186	0.009	0.006	0.002	0.005	0.001
	생산직	0.245	0.218	0.207	0.209	0.200	-0.027	-0.038	-0.009	0.002	-0.009
	단순노무직	0.150	0.163	0.177	0.157	0.159	0.013	0.027	-0.005	-0.020	0.002
종사자 규모	1~4명	0.196	0.200	0.189	0.194	0.187	0.004	-0.007	-0.006	0.005	-0.008
	5~9명	0.170	0.177	0.170	0.178	0.180	0.007	-0.001	0.001	0.009	0.002
	10~29명	0.218	0.226	0.227	0.223	0.224	0.008	0.009	-0.003	-0.005	0.001
	30~299명	0.291	0.283	0.292	0.283	0.281	-0.008	0.001	0.000	-0.009	-0.001
	300명 이상	0.125	0.114	0.122	0.122	0.128	-0.010	-0.002	0.008	0.000	0.006
노동 조합	조합원	0.121	0.125	0.119	0.121	0.120	0.003	-0.002	-0.003	0.002	-0.001
	비조합원	0.879	0.875	0.881	0.879	0.880	-0.003	0.002	0.003	-0.002	0.001
사례 수		25313	24636	25623	24515	24639	25313	24636	25623	24515	24639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로그 월임금과 로그 시간당임금에 대한 무조건부 분위회귀 모형 특성별 추정계수를 살펴보고,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표 3-4〉, 〈표 3-5〉)과 비교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그림 3-16]은 학력, 고용형태, 산업, 직업, 종사자규모, 노조가입 여부 등 다른 요인을 통제한 후 남성과 여성의 임금 변화가 각 임금분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여성과 남성의 임금 분포가 저임금분위에서 중위임금으로 갈수록 임금을 더 많이 낮추는 효과가 있어 불평등 개선 요인인데, 2019년에는 저임금은 덜 낮추고 중위분위 이상은 더 감소시켜 상대적으로 더 큰 분배 개선 효과를 보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표 3-4〉에서 여성의 추정계수가 음수이고 절대값이 커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2004년에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임금 감소 효과가 가장 컸고 금융위기 때는 시간당임금 감소 효과가 중하위분위에서는 작아졌지만 상위분위에서는 오히려 더 커져서 2004년보다 2008년에 분배 개선 효과를 보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에는 중하위분위에서 임금 감소 효과가 감소했고, 2019년에는 상위 10%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 임금 감소 효과가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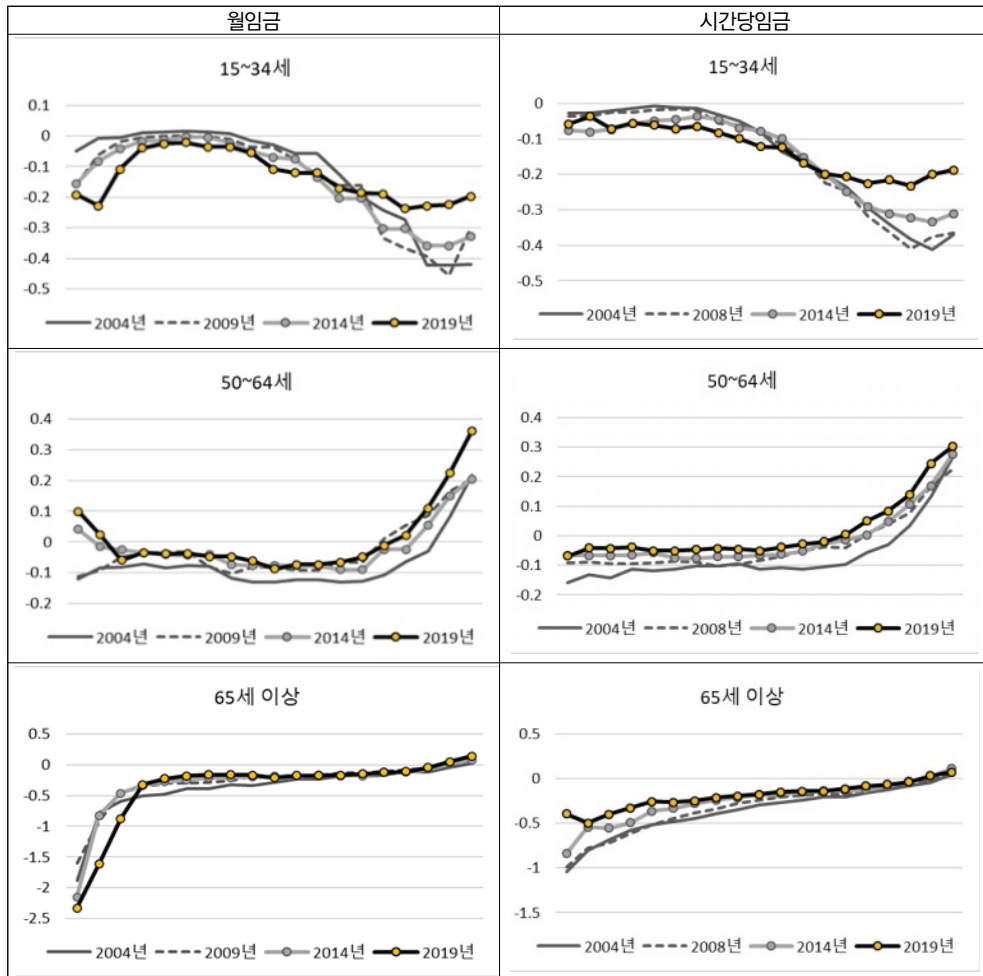
[그림 3-16] 남성 대비 여성 임금 격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35~49세 대비 각 연령집단의 분위별 계수는 아래와 같다. 15~34세 청년은 35~49세 장년층보다 임금이 낮다. 중하위분위에서와 달리 상위분위에서 2010년대에 임금 감소 효과가 감소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월임금 하위분위 임금 감소 효과가 커지는 것은 청년층의 시간제 일자리 증가로 월임금 낮은 청년 근로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간당임금 지니계수 회귀분석 결과에서 15~34세의 추정계수가 지니계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지만 그 효과가 감소하는 것과 일관된다.

[그림 3-17] 연령별 임금 격차



주: 기준 범주는 35~49세이다. 가로축은 [그림 3-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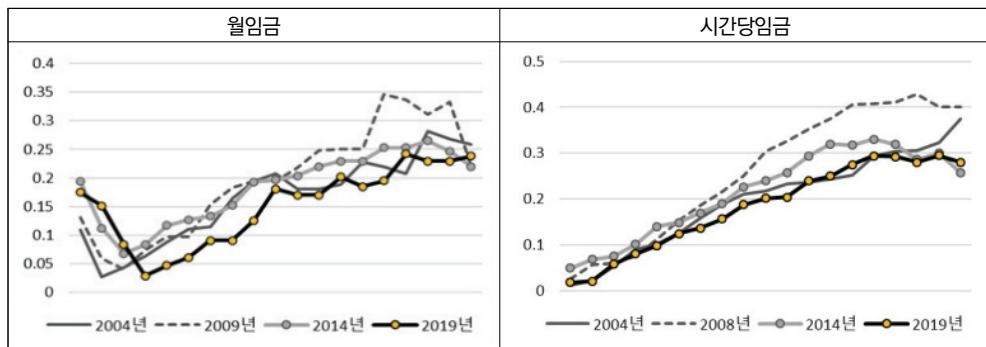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50~64세는 중하위분위 임금을 약간씩 감소시키지만 고임금분위의 임금을 크게 증가시켜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내부노동시장에 자리해 긴 근속연수로 인한 보상을 받는 관리전문직 등의 고임금 때문으로 짐작된다. 2010년대에는 금융위기 전보다 중하위분위 임금 감소는 줄어든 반면, 고임금분위의 임금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65세 이상의 시간당임금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임금 감소 효과가 점차 줄어들었고, 월임금은 2019년 최하위분위 임금을 더 크게 감소시키는데 청년과 마찬가지로 초단시간 근로 형태로 일하는 65세 이상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연령 효과가

저임금 계층의 시간당임금을 인상시키는 반면, 근속연수가 긴 고임금 중년층 근로자의 임금은 더 높아져 분배에 상반된 영향을 미쳤지만, 월임금은 저임금 분위에서는 단시간 근로 영향으로 임금을 더 감소시키며 불평등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50~64세, 65세 모두 임금이 증가할수록 각 분위 임금을 더욱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표 3-4>와 <표 3-5>에서 시간당임금은 2019년에 2014년보다 그 영향이 줄어든 반면, 월임금은 영향이 더 커지는 데서 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 이상의 임금 프리미엄은 월임금과 시간당임금 모두 임금분위가 올라갈수록 임금을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2004년과 2019년의 추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2009년(월임금) 또는 2008년(시간당임금)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기울기가 더 가팔라서 학력별 임금격차가 고임금분위의 임금을 더 크게 증가시켰다가 2010년대를 거치면서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임금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효과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커졌다가 2010년대 감소하는 모습이 이를 반영한다(<표 3-4>, <표 3-5>).

[그림 3-18] 고졸 대비 대출 이상 임금 격차



주: 가로축은 [그림 3-16]과 같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정규-임시일용직, 비정규-상용직, 비정규-임시일용직은 모두 대부분의 소득분위에서 추정계수가 0보다 작아 각 분위의 임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규-임시일용직은 2019년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간 동안 시간당임금과 월임금 모두 하위분위에서는 점차 임금 감소 효과가 커지다가 상위분위에서는 다시 줄어드는 V자 형태를 보인다. 2019년 시간당임금은 저임금을 가장 많이 낮추는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바뀌어 지니계수를 더 크게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표 3-4>, <표 3-5>). 정규-임

시일용직의 임금 수준은 시간당임금은 가장 낮고, 월임금은 시간제보다 높은데, 과반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낮은 시간당임금으로 장시간 근로하는 근로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정규-임시일용직은 2004년 21.6%에서 2019년 7.1%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데 기존에 이 고용형태로 일하던 노동자가 계속 확대되는 시간제 일자리, 즉 비정규-임시일용직으로 이동하면서 정규-임시일용직 내의 근로자 특성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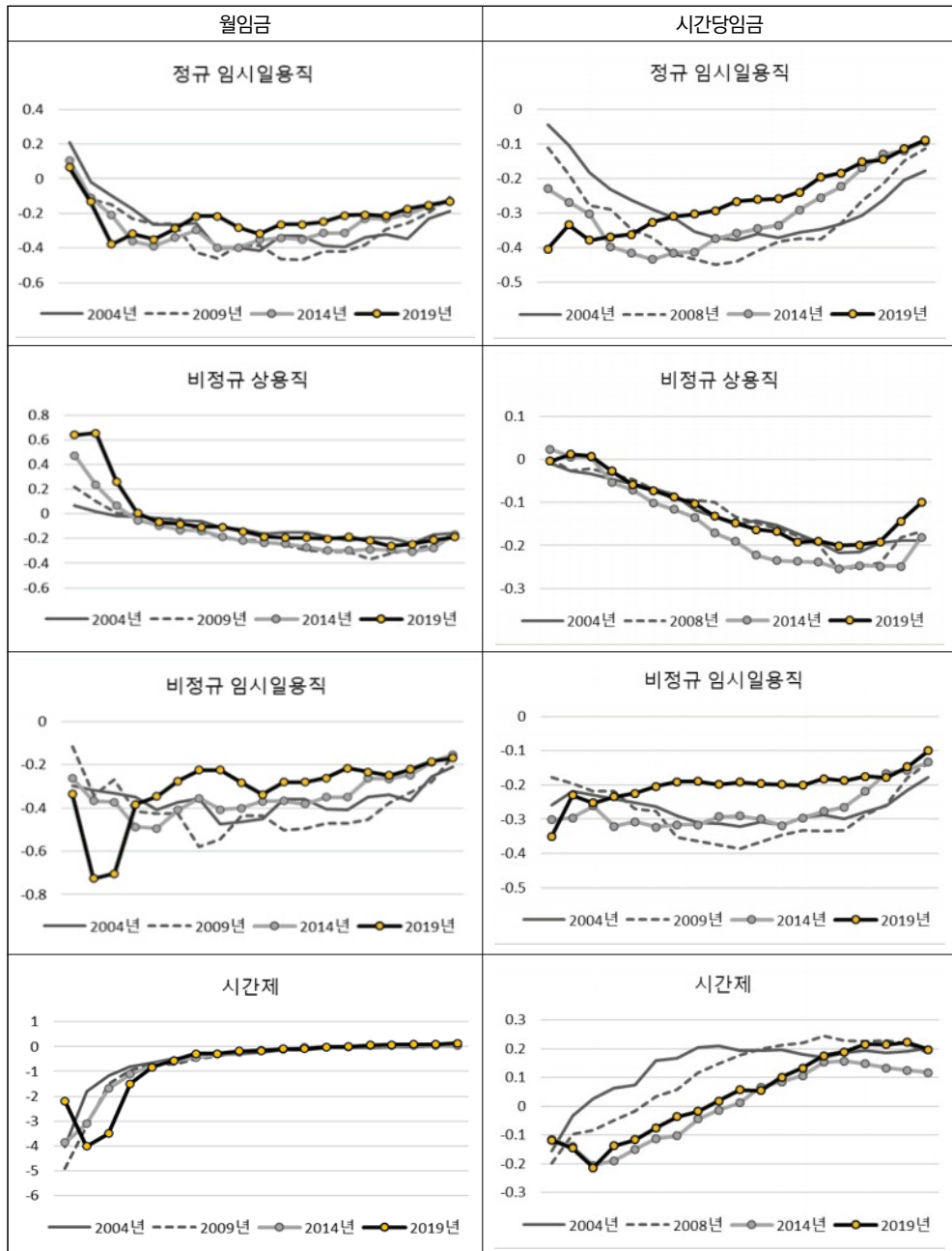
비정규-상용직은 전 기간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시적 근로자가 2/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비전형 근로자 비중이 높다. 고임금분위로 갈수록 임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 커져서 분배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표 3-4〉, 〈표 3-5〉에서 음의 추정계수).

추정 결과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는 고용형태는 비정규-임시일용직이다. 전 기간을 대상으로 했을 때 비정규-임시일용직의 41%는 시간제이며, 비전형 33%, 한시적 근로자가 26%를 차지한다. 시간제의 비중이 2004년 27.5%에서 2019년 53.4%로 크게 증가했다. 임금 감소 효과는 2009년에 약간 더 커지지만 2004~2014년까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2019년에는 시간당임금과 월임금 모두 중하위분위 임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V자 형태가 점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며 최근 들어 불평등 증가 효과가 더욱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최저임금 구간의 월임금이 낮아지는 것은 초단시간 근로 증가의 영향으로 추측된다.

시간제/전일제 임금분포는 하위분위의 임금은 감소시키고 상위분위의 임금은 증가시켜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2004년에 비해 2008년 이후에 하위분위 시간당임금을 더 크게 감소시키고 상위분위 임금은 더 크게 증가시켜 불평등을 증가시켰을 것이다. 시간제 근로가 증가하면서 고연령 고학력자의 시간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임금 분위 임금을 인상시키는 반면, 저임금 업종 및 직종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도 증가하여 저임금 분위의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더 낮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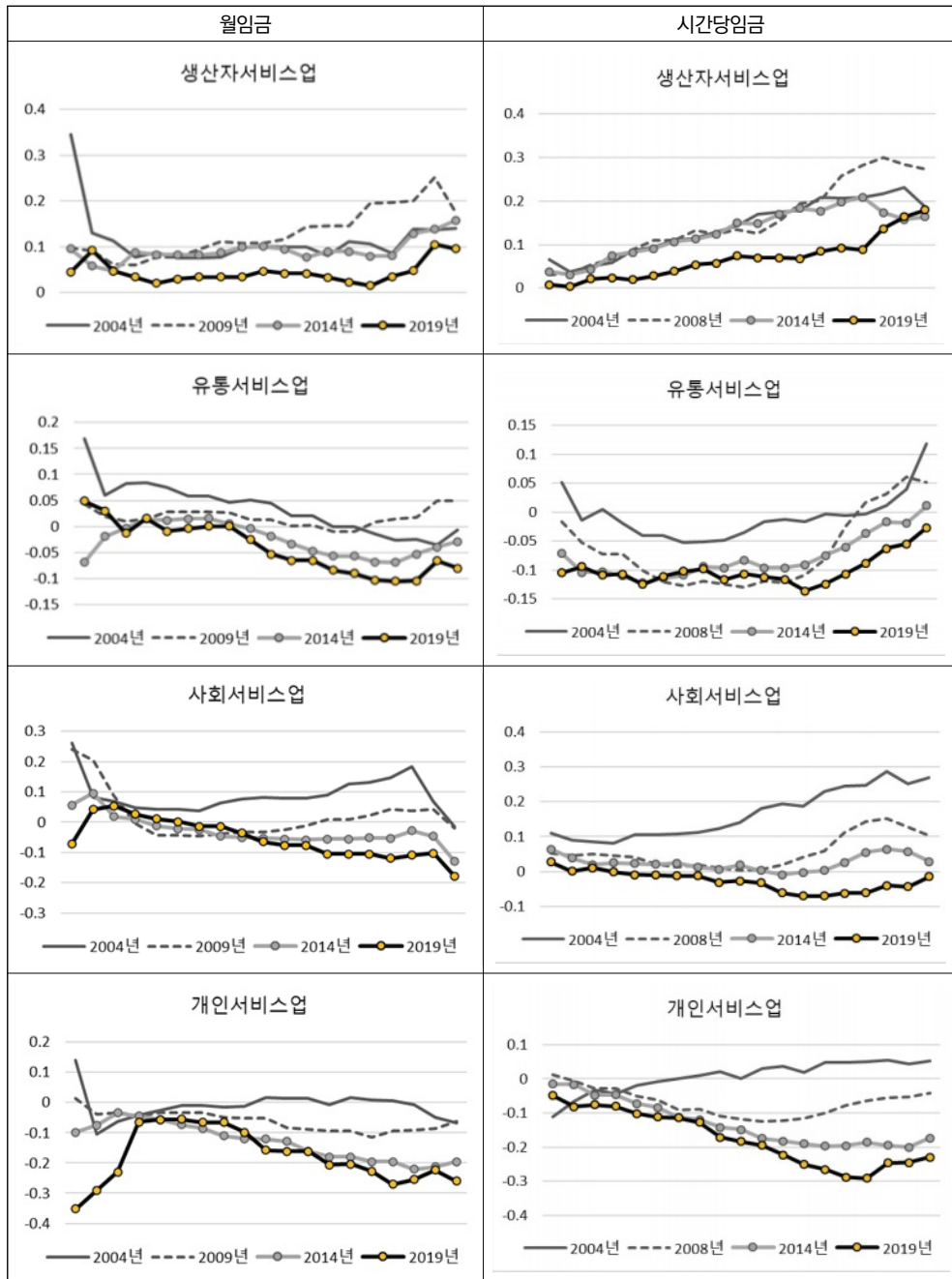
생산자서비스업의 시간당임금은 전 기간 임금분위가 높아질수록 분위임금을 더 크게 인상시켜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2004년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그 크기는 비슷하지만 2008년에 고임금 구간의 임금을 더 크게 인상시켜 불평등 악화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2014년에는 전체 기울기는 유사하지만 고임금 구간의 임금상승 효과가 감소했고, 2019년에는 기울기가 크게 완만해져 불평등 증가 효과가 감소된 모습이다. 월임금도 거의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

[그림 3-19]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 전일제 대비 시간제 임금 격차



주: 고용형태의 기준 범주는 정규-상용직이다. 가로축은 [그림 3-16]과 같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그림 3-20] 산업별 임금 격차



주: 산업의 기준 범주는 광업·제조업이다. 가로축은 [그림 3-16]과 같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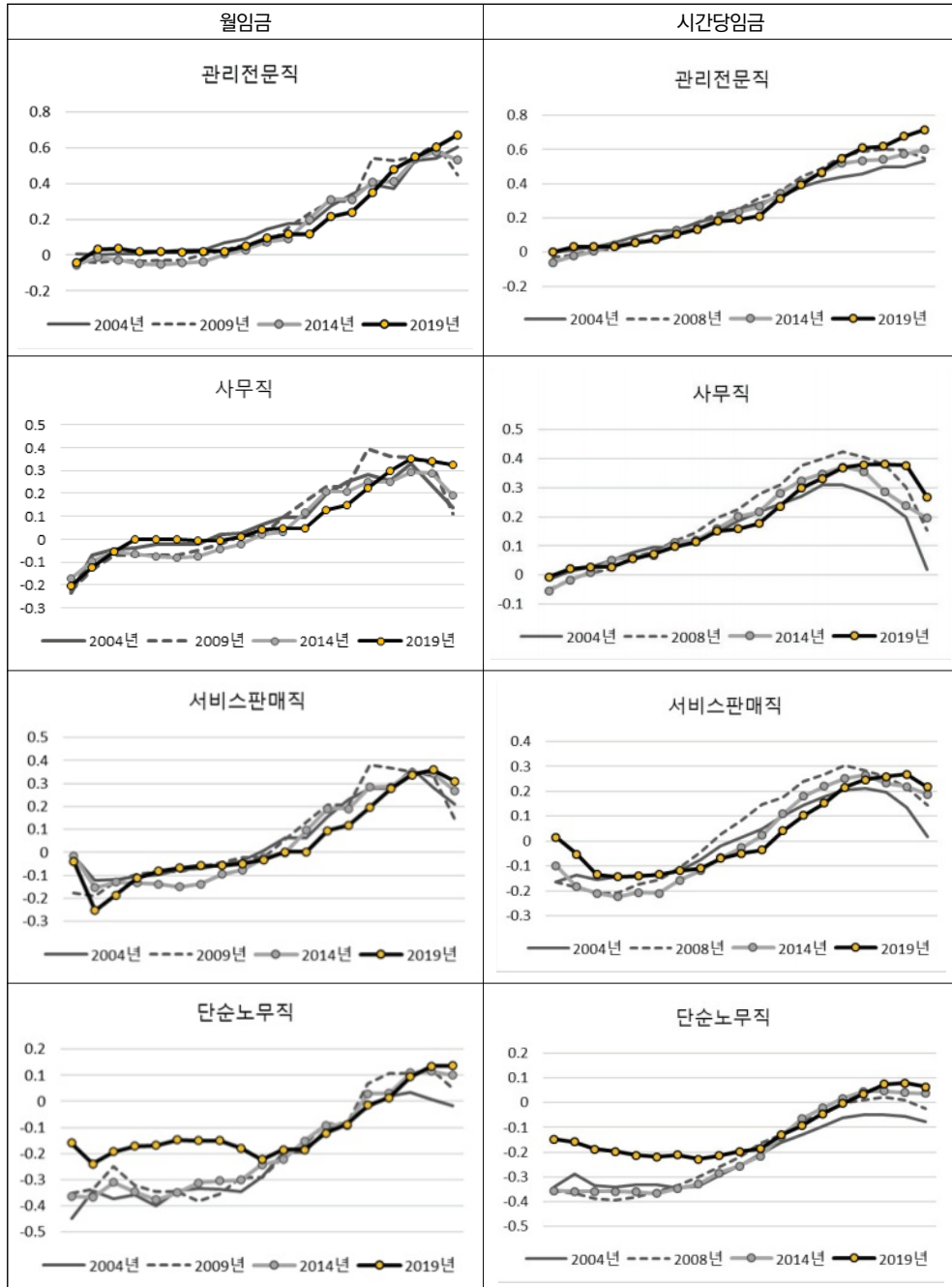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음식숙박업을 포함하는 유통서비스업 시간당임금은 개인서비스업보다 약간 낮고 월임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업종 가운데 임금이 낮은 편이다. 유통서비스업 시간당임금은 2004년보다 금융위기 때 상위분위를 제외하고 중하위 임금 수준을 더 크게 감소시켜 2004년보다 분배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2014년에는 중위계층에서는 임금감소 효과가 줄어들고 하위 및 상위분위에서는 더 커졌다. 2019년에는 중상위분위 임금을 상대적으로 하락시켜 불평등 증가 효과가 감소하였다. 월임금도 시간당임금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하위분위 임금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위에서는 임금을 감소시켜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2009년에만 이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사회서비스업은 공공행정, 교육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사회서비스업은 2004년에는 대부분의 임금분위에서 임금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 고임금분위에서 더 크게 인상시켜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컸다. 하지만 2008~2009년에는 중하위까지 임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상위분위 임금만 증가시키고 2014년에도 유사하지만 상위분위 임금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감소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불평등 증가 효과가 감소했다. 2019년에는 상위분위 임금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효과가 커져서 불평등을 개선하는 요인으로 전환되었다. 월임금도 비슷하지만 대체로 임금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개인서비스업은 2004년에는 미미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점차 우하향하는 추세로 전환되어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하위임금은 약간 감소시키지만 점차 고임금분위의 임금을 더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월임금에도 비슷한 영향을 미치지만 2019년에 최저분위에서 임금감소 효과가 커서 불평등 감소 효과가 반감되었다.

관리전문직은 생산직보다 임금수준이 높은 편이며 고임금일수록 임금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더 커져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사무직도 생산직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 직종이며, 최상위를 제외하고는 임금이 높아질수록 추정계수가 더 커져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배 악화 요인이다. 연도별 영향은 거의 비슷하지만 금융위기 때 중상위에서 임금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커졌다가 이후 기울기가 약간 더 완만해졌다. 하지만 최상위에서는 2019년 임금 인상 효과가 2009년 수준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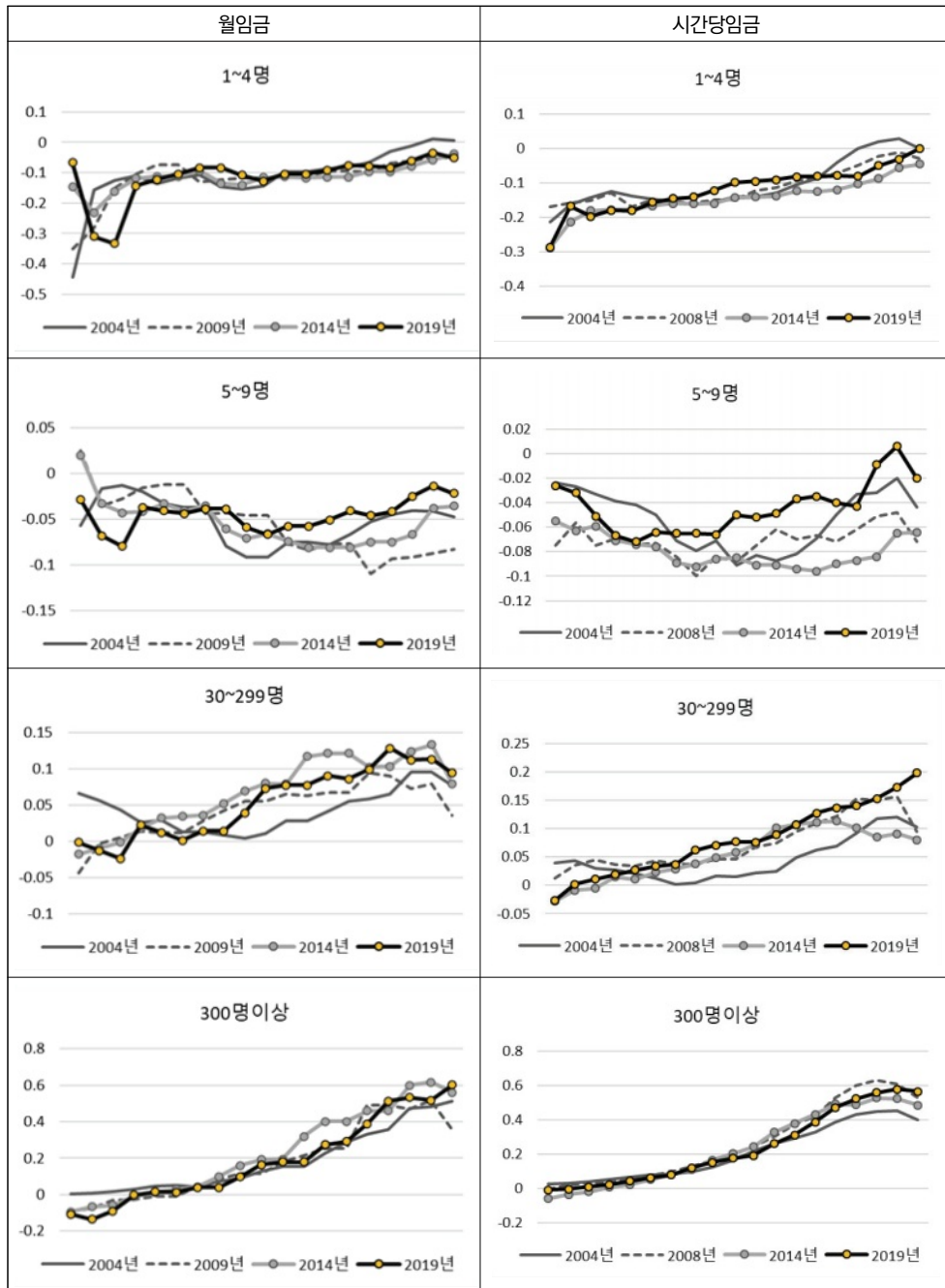
[그림 3-21] 직업별 임금 격차



주: 직업의 기준 범주는 생산직이다. 가로축은 [그림 3-16]과 같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그림 3-22] 종사자규모별 임금 격차



주: 종사자규모의 기준 범주는 10~29명이다. 가로축은 [그림 3-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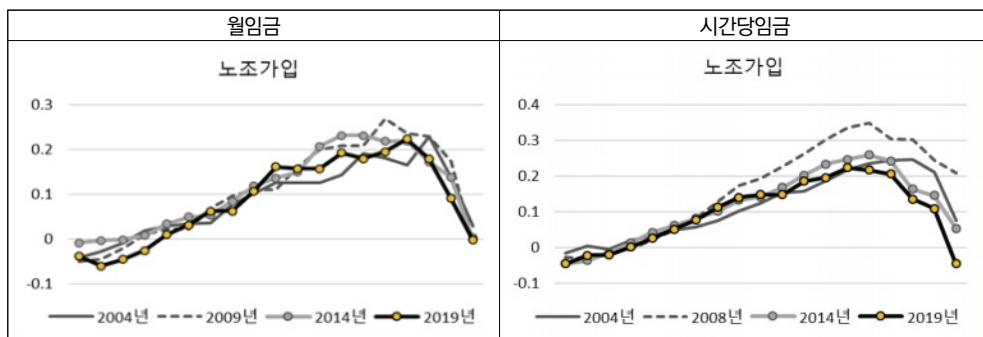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서비스판매직은 하위분위에서는 임금 수준을 감소시키는 반면 중상위에서는 임금을 증가시켜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금융위기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시간당임금 하위분위의 임금은 더 크게 감소시키고 중상위분위의 임금은 더 크게 증가해 2004년보다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영향이 더 커졌다가 2019년에는 2004년 수준을 회복했다. <표 3-4>에서 서비스판매직이 시간당임금 지니계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2004년보다 2009년에 높아졌다가 2014년에는 유지 후 2019년에 다시 낮아지는 추정계수가 이를 뒷받침한다. 월임금에서도 이 경향은 비슷하지만 P10~P15에서 2019년에 약간 더 임금이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단시간 근로의 영향으로 추측된다.

단순노무직의 추정계수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 불평등을 증가시켜왔다. 2004년보다 2009년과 2014년에 기울기가 가팔라져 이 효과가 더 커졌다가 2019년에 중하위임금 감소 효과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니계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감소했다(<표 3-4>, <표 3-5>).

1~4명 규모 근로자 임금은 우상향하는 추정계수의 모양에 큰 변화가 없지만 P20 이하에서 2010년대 임금이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중상위에서는 조금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월임금은 일부(P15) 구간에서 2019년에 임금이 더 낮아지는 것을 제외하고 연도별 차이가 거의 없다. 5~9명 규모 근로자 임금이 <표 3-4>, <표 3-5>에서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임금이 높은 30~299명, 300명 이상 기업의 임금은 분위가 올라감에 따라 우상향해 불평등을 증가시키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팔라진 후 최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3] 노동조합 비가입 대비 가입 임금 격차



주: 가로축은 [그림 3-16]과 같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노동조합 가입자의 임금 추정계수는 상위분위를 제외하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시간당임금은 2008년 중상위분위에서 임금 상승 효과가 크게 커졌다가 2014년에는 다시 2004년 수준으로 낮아졌고 2019년에는 조금 더 낮아진 모습이다. 2019년 최저분위에서 월임금을 감소시켜 2014년보다 불평등을 더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표 3-4〉 시간당임금 지니계수 회귀분석

구분		2004년	2008년	2014년	2019년
성별 (기준: 남성)	여성	0.00096 (0.00050)	-0.00215 *** (0.00045)	-0.00305 *** (0.00047)	-0.00451 *** (0.00046)
연령 (기준: 35~49세)	15~34세	-0.00797 *** (0.00054)	-0.00718 *** (0.00050)	-0.00500 *** (0.00054)	-0.00321 *** (0.00056)
	50~64세	0.00662 *** (0.00063)	0.00516 *** (0.00054)	0.00504 *** (0.00051)	0.00541 *** (0.00049)
	65세 이상	0.02585 *** (0.00140)	0.02267 *** (0.00114)	0.01892 *** (0.00101)	0.01278 *** (0.00091)
학력 (기준: 고졸)	중졸 이하	-0.00098 (0.00062)	0.00218 *** (0.00060)	0.00182 ** (0.00066)	0.00080 (0.00069)
	초대졸	-0.00333 *** (0.00066)	-0.00187 ** (0.00058)	-0.00167 ** (0.00058)	-0.00162 ** (0.00058)
	대졸 이상	0.00714 *** (0.00059)	0.00756 *** (0.00053)	0.00488 *** (0.00053)	0.00513 *** (0.00051)
가구주 (기준: 비가구주)		-0.00175 *** (0.00050)	-0.00064 (0.00046)	0.00002 (0.00048)	0.00109 * (0.00046)
유배우자 (기준: 무배우자)		-0.00212 *** (0.00055)	-0.00289 *** (0.00051)	-0.00246 *** (0.00055)	-0.00274 *** (0.00054)
고용형태 (기준: 정규 상용직)	정규 임시일용직	-0.00214 *** (0.00062)	0.00140 * (0.00057)	0.00547 *** (0.00062)	0.00798 *** (0.00078)
	비정규 상용직	-0.00390 *** (0.00066)	-0.00390 *** (0.00062)	-0.00522 *** (0.00061)	-0.00301 *** (0.00059)
	비정규 임시일용직	0.00193 ** (0.00065)	0.00071 (0.00061)	0.00426 *** (0.00066)	0.00470 *** (0.00064)
시간제 (기준: 전일제)		0.00531 *** (0.00085)	0.00921 *** (0.00079)	0.00911 *** (0.00075)	0.00962 *** (0.00068)

구분		2004년	2008년	2014년	2019년
산업 (기준: 광업·제조업)	농림어업건설업	-0.00204 ** (0.00077)	-0.00279 *** (0.00073)	-0.00587 *** (0.00080)	-0.00172 * (0.00078)
	생산자서비스업	0.00137 * (0.00065)	0.00394 *** (0.00064)	0.00183 ** (0.00067)	0.00172 *** (0.00067)
	유통서비스업	0.00060 (0.00064)	0.00250 *** (0.00061)	0.00268 *** (0.00063)	0.00221 *** (0.00064)
	사회서비스업	0.00467 *** (0.00069)	0.00114 (0.00062)	-0.00052 (0.00065)	-0.00131 * (0.00065)
	개인서비스업	0.00174 * (0.00086)	-0.00142 * (0.00069)	-0.00408 *** (0.00068)	-0.00417 *** (0.00068)
직업 (기준: 생산직)	관리전문직	0.01072 *** (0.00073)	0.01285 *** (0.00067)	0.01348 *** (0.00070)	0.01430 *** (0.00069)
	사무직	0.00305 *** (0.00069)	0.00622 *** (0.00064)	0.00634 *** (0.00066)	0.00689 *** (0.00066)
	서비스판매직	0.00679 *** (0.00075)	0.00936 *** (0.00067)	0.00906 *** (0.00069)	0.00673 *** (0.00070)
	단순노무직	0.00942 *** (0.00069)	0.01050 *** (0.00064)	0.01227 *** (0.00068)	0.00580 *** (0.00069)
종사자규모 (기준: 10~29명)	1~4명	0.00638 *** (0.00065)	0.00399 *** (0.00058)	0.00610 *** (0.00059)	0.00586 *** (0.00059)
	5~9명	0.00007 (0.00062)	0.00065 (0.00056)	-0.00023 (0.00058)	0.00063 (0.00058)
	30~299명	0.00215 *** (0.00055)	0.00237 *** (0.00050)	0.00293 *** (0.00052)	0.00435 *** (0.00052)
	300명 이상	0.00846 *** (0.00073)	0.01159 *** (0.00068)	0.01193 *** (0.00068)	0.01115 *** (0.00067)
노조가입 (기준: 비가입)		0.00420 *** (0.00065)	0.00568 *** (0.00058)	0.00344 *** (0.00061)	0.00270 *** (0.00060)
상수		0.03249 *** (0.00084)	0.02966 *** (0.00076)	0.02532 *** (0.00078)	0.01995 *** (0.00078)
F		124.388	154.032	149.525	115.298
R2		0.117	0.145	0.142	0.112
사례 수		25313	24636	24515	24639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표 3-5〉 월임금 지니계수 회귀분석

구분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성별 (기준: 남성)	여성	0.00002 (0.00030)	-0.00269 *** (0.00029)	-0.00197 *** (0.00032)	-0.00345 *** (0.00032)
연령 (기준: 35~49세)	15~34세	-0.00456 *** (0.00032)	-0.00430 *** (0.00032)	-0.00363 *** (0.00036)	-0.00120 ** (0.00038)
	50~64세	0.00220 *** (0.00038)	0.00313 *** (0.00034)	0.00173 *** (0.00034)	0.00224 *** (0.00033)
	65세 이상	0.01872 *** (0.00084)	0.01615 *** (0.00067)	0.02083 *** (0.00068)	0.02180 *** (0.00063)
학력 (기준: 고졸)	중졸 이하	-0.00003 (0.00037)	0.00116 ** (0.00038)	0.00228 *** (0.00045)	0.00295 *** (0.00047)
	초대졸	-0.00190 *** (0.00040)	-0.00188 *** (0.00037)	-0.00189 *** (0.00039)	-0.00166 *** (0.00040)
	대졸 이상	0.00251 *** (0.00036)	0.00271 *** (0.00033)	0.00117 ** (0.00036)	0.00161 *** (0.00035)
가구주 (기준: 비가구주)		-0.00160 *** (0.00030)	-0.00066 * (0.00030)	0.00070 * (0.00032)	0.00146 *** (0.00031)
유배우자 (기준: 무배우자)		-0.00235 *** (0.00034)	-0.00083 * (0.00033)	-0.00044 (0.00037)	-0.00120 ** (0.00037)
고용형태 (기준: 정규 상용직)	정규 임시일용직	-0.00313 *** (0.00038)	-0.00079 * (0.00037)	0.00060 (0.00042)	0.00137 * (0.00053)
	비정규 상용직	-0.00274 *** (0.00040)	-0.00449 *** (0.00040)	-0.00643 *** (0.00041)	-0.00819 *** (0.00040)
	비정규 임시일용직	0.00166 *** (0.00040)	0.00143 *** (0.00038)	0.00392 *** (0.00044)	0.00525 *** (0.00044)
시간제 (기준: 전일제)		0.03361 *** (0.00051)	0.04263 *** (0.00047)	0.04258 *** (0.00051)	0.03904 *** (0.00046)
산업 (기준: 광업·제조업)	농림어업건설업	-0.00287 *** (0.00047)	-0.00193 *** (0.00047)	-0.00439 *** (0.00054)	-0.00437 *** (0.00054)
	생산자서비스업	-0.00160 *** (0.00039)	0.00189 *** (0.00041)	0.00046 (0.00045)	0.00034 (0.00046)
	유통서비스업	-0.00182 *** (0.00039)	0.00032 (0.00039)	-0.00020 (0.00042)	-0.00125 ** (0.00044)
	사회서비스업	-0.00107 ** (0.00041)	-0.00170 *** (0.00039)	-0.00230 *** (0.00044)	-0.00203 *** (0.00044)
	개인서비스업	-0.00071 (0.00052)	-0.00128 ** (0.00044)	-0.00174 *** (0.00046)	0.00021 (0.00047)

구분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직업 (기준: 생산직)	관리전문직	0.00707 *** (0.00044)	0.00854 *** (0.00043)	0.00834 *** (0.00047)	0.00802 *** (0.00047)
	사무직	0.00483 *** (0.00042)	0.00609 *** (0.00041)	0.00551 *** (0.00044)	0.00586 *** (0.00045)
	서비스판매직	0.00510 *** (0.00045)	0.00615 *** (0.00043)	0.00550 *** (0.00047)	0.00568 *** (0.00048)
	단순노무직	0.00799 *** (0.00042)	0.00720 *** (0.00041)	0.00824 *** (0.00046)	0.00461 *** (0.00047)
종사자규모 (기준: 10~29명)	1~4명	0.00425 *** (0.00039)	0.00274 *** (0.00037)	0.00270 *** (0.00040)	0.00248 *** (0.00041)
	5~9명	-0.00020 (0.00038)	-0.00158 *** (0.00036)	-0.00053 (0.00039)	0.00038 (0.00040)
	30~299명	0.00040 (0.00033)	0.00104 ** (0.00031)	0.00159 *** (0.00035)	0.00178 *** (0.00036)
	300명 이상	0.00621 *** (0.00044)	0.00750 *** (0.00042)	0.00936 *** (0.00046)	0.00858 *** (0.00046)
노조가입 (기준: 비가입)		0.00165 *** (0.00039)	0.00203 *** (0.00038)	0.00106 ** (0.00041)	0.00164 *** (0.00041)
상수		0.02061 *** (0.00050)	0.01758 *** (0.00048)	0.01519 *** (0.00053)	0.01166 *** (0.00054)
F		407.468	634.289	730.270	801.768
R2		0.303	0.401	0.446	0.468
사례 수		25313	25623	24515	24639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4. OB 요인분해 결과

3개의 시기별로 로그 시간당임금과 로그 월임금의 지니계수를 분해한 결과는 <표 3-6>~<표 3-8>과 같다.

〈표 3-6〉 2004년부터 금융위기까지 지니계수 분해

구분		시간당임금 2004→2008			월임금 2004→2009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00114	(0.00030)	***	0.00129	(0.00022)	***
	특성 효과	0.00113	(0.00013)	***	0.00145	(0.00015)	***
	계수 효과	0.00002	(0.00028)	.	-0.00016	(0.00019)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001	(0.00001)	.	-0.00001	(0.00001)	.
	연령	0.00086	(0.00007)	***	0.00073	(0.00005)	***
	학력	0.00017	(0.00005)	***	0.00004	(0.00003)	.
	가구주	-0.00001	(0.00001)	.	0.00000	(0.00000)	.
	배우자	0.00006	(0.00002)	***	0.00003	(0.00001)	***
	고용형태	0.00001	(0.00003)	.	0.00007	(0.00002)	***
	시간제	0.00002	(0.00002)	.	0.00053	(0.00011)	***
	산업	-0.00015	(0.00004)	***	-0.00017	(0.00003)	***
	직업	0.00027	(0.00005)	***	0.00027	(0.00003)	***
	종사자규모	-0.00012	(0.00004)	***	-0.00003	(0.00003)	***
	노조	0.00002	(0.00002)	.	-0.00001	(0.00001)	***
	상수항	0.00096	(0.00113)	.	0.00294	(0.00087)	***
계수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027	(0.00006)	***	0.00024	(0.00004)	***
	연령	0.00103	(0.00066)	.	0.00054	(0.00045)	.
	학력	-0.00039	(0.00012)	***	-0.00008	(0.00008)	.
	가구주	0.00007	(0.00004)	*	0.00006	(0.00003)	***
	배우자	0.00015	(0.00015)	.	-0.00029	(0.00009)	***
	고용형태	-0.00013	(0.00014)	.	0.00016	(0.00007)	***
	시간제	-0.00167	(0.00068)	***	-0.00385	(0.00062)	***
	산업	0.00056	(0.00014)	***	0.00020	(0.00009)	***
	직업	-0.00005	(0.00006)	.	0.00006	(0.00004)	.
	종사자규모	-0.00022	(0.00009)	***	0.00001	(0.00005)	.
	노조	-0.00056	(0.00038)	.	-0.00014	(0.00018)	.
	상수항	0.00096	(0.00113)	.	0.00294	(0.00087)	***

* p<0.1, ** p<0.05, *** p<0.01

주: 괄호 안의 수치는 로버스트 표준오차이다. 음영이 있는 값은 총 격차 분해에서는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 중에 절대값의 크기가 더 큰 값이며, 세부 분해에서는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에서 각각 절대값의 크기가 가장 큰 3개의 요인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시기별 총 격차 분해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의 첫 번째 시기에는 월임금과 시간당임금의 지니계수가 모두 증가해 불평등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지니계수 차이의 대부분 또는 그 이상을 특성 효과가 설명하는 반면, 계수 효과의 크기는 미미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다. 금융위기 이후는 월임금과 시간당임금의 지니계수가 모두 감소해 불평등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대 중반까지 임금불평등은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10년대 후반기에 더 가파르게 감소했

다. 그리고 두 시기 모두 계수 효과가 지니계수 감소분의 모두 또는 그 이상을 설명하며, 특성 효과는 계수 효과보다 크기는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불평등을 오히려 악화시켜왔다. 시간당임금에서는 특성 효과의 크기가 계수 효과의 약 1/10에 해당할 만큼 작은 반면, 월임금에서는 계수 효과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는 차이가 있다.

〈표 3-7〉 금융위기부터 2014년까지 지니계수 분해

구분		시간당임금 2008→2014		월임금 2009→2014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00253	(0.00030) ***	-0.00008	(0.00024)
	특성 효과	0.00084	(0.00014) ***	0.00097	(0.00016) ***
	계수 효과	-0.00338	(0.00029) ***	-0.00105	(0.00018)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005	(0.00002) ***	-0.00002	(0.00001) *
	연령	0.00089	(0.00007) ***	0.00045	(0.00005) ***
	학력	0.00013	(0.00004) ***	-0.00004	(0.00002) *
	가구주	0.00000	(0.00001)	-0.00001	(0.00000)
	배우자	0.00001	(0.00001)	0.00000	(0.00000)
	고용형태	-0.00051	(0.00005) ***	-0.00027	(0.00004) ***
	시간제	0.00028	(0.00004) ***	0.00085	(0.00012) ***
	산업	-0.00002	(0.00003)	0.00006	(0.00002) ***
	직업	0.00007	(0.00005)	-0.00005	(0.00003)
	종사자규모	0.00005	(0.00004)	-0.00001	(0.00003)
	노조	-0.00001	(0.00001)	0.00000	(0.00000)
계수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008	(0.00007)	-0.00006	(0.00004)
	연령	0.00111	(0.00051) **	-0.00083	(0.00035) ***
	학력	-0.00007	(0.00012)	-0.00016	(0.00008) *
	가구주	0.00005	(0.00005)	0.00008	(0.00003) ***
	배우자	-0.00009	(0.00016)	-0.00009	(0.00011)
	고용형태	-0.00003	(0.00015)	0.00020	(0.00009) **
	시간제	0.00004	(0.00064)	0.00002	(0.00057)
	산업	0.00036	(0.00009) ***	0.00017	(0.00006) ***
	직업	-0.00004	(0.00004)	-0.00002	(0.00003)
	종사자규모	0.00004	(0.00009)	-0.00012	(0.00005) **
	노조	0.00084	(0.00036) **	0.00037	(0.00018) **
	상수항	-0.00566	(0.00096) ***	-0.00060	(0.00075)

* p<0.1, ** p<0.05, *** p<0.01

주: 괄호 안의 수치는 로버스트 표준오차이다. 음영이 있는 값은 총 격차 분해에서는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 중에 절대값의 크기가 더 큰 값이며, 세부 분해에서는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에서 각각 절대값의 크기가 가장 큰 3개의 요인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표 3-8〉 2014~2019년 지니계수 분해

구분		시간당임금 2014→2019			월임금 2014→2019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00454	(0.00030)	***	-0.00094	(0.00025)	***
	특성 효과	0.00061	(0.00013)	***	0.00229	(0.00017)	***
	계수 효과	-0.00515	(0.00030)	***	-0.00323	(0.00019)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007	(0.00002)	***	-0.00005	(0.00002)	***
	연령	0.00059	(0.00006)	***	0.00057	(0.00005)	***
	학력	0.00022	(0.00004)	***	0.00004	(0.00002)	*
	가구주	0.00001	(0.00001)	.	0.00001	(0.00001)	.
	배우자	-0.00007	(0.00002)	***	-0.00003	(0.00001)	***
	고용형태	-0.00052	(0.00007)	***	-0.00010	(0.00005)	*
	시간제	0.00044	(0.00005)	***	0.00179	(0.00013)	***
	산업	-0.00011	(0.00003)	***	-0.00002	(0.00002)	.
	직업	0.00010	(0.00005)	**	0.00006	(0.00003)	**
	종사자규모	0.00001	(0.00004)	.	0.00003	(0.00003)	.
	노조	0.00000	(0.00001)	.	0.00000	(0.00001)	.
	상수항	-0.00649	(0.00083)	***	-0.00484	(0.00066)	***
계수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011	(0.00006)	*	0.00011	(0.00004)	***
	연령	0.00137	(0.00039)	***	-0.00001	(0.00031)	.
	학력	0.00013	(0.00014)	.	-0.00007	(0.00011)	.
	가구주	0.00006	(0.00004)	.	0.00004	(0.00003)	.
	배우자	0.00006	(0.00017)	.	0.00016	(0.00011)	.
	고용형태	-0.00058	(0.00019)	***	0.00011	(0.00011)	.
	시간제	-0.00020	(0.00054)	.	0.00140	(0.00048)	***
	산업	-0.00039	(0.00010)	***	-0.00011	(0.00007)	.
	직업	0.00034	(0.00005)	***	0.00015	(0.00004)	***
	종사자규모	0.00016	(0.00009)	*	0.00006	(0.00005)	.
	노조	0.00028	(0.00036)	.	-0.00022	(0.00019)	.
	상수항	-0.00649	(0.00083)	***	-0.00484	(0.00066)	***

* p<0.1, ** p<0.05, *** p<0.01

주: 괄호 안의 수치는 로버스트 표준오차이다. 음영이 있는 값은 총 격차 분해에서는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 중에 절대값의 크기가 더 큰 값이며, 세부 분해에서는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에서 각각 절대값의 크기가 가장 큰 3개의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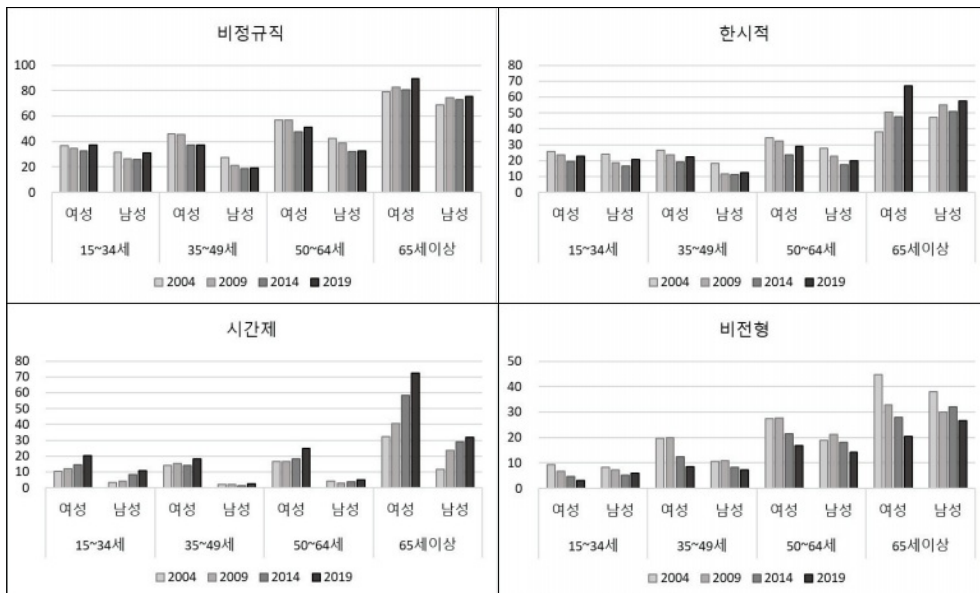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특성 효과 세부 분해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연령으로 모든 시기, 월임금과 시간당임금의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연령 외에 눈에 띄는 것은 시간제 증가가 2004~2009년 시간당임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기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시간제 특성 효과가 월임금 분포 변화에 있어서는 2004~2009년에는 연령 효과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여전히 큰 불평등 악화 요인이었고, 2009년 이후에는 두 시기 모두 연령 효과의 크기를 넘어서는 불평등 악화 요인이었다. 금융위기 이

전에는 시간당임금 분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연령과 고용 형태 다음으로 큰 특성 효과로 모두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모든 시기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던 특성 효과에서 연령과 시간제의 분포 변화로 월임금 분포 변화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시간제가 첫 번째 시기에는 완만하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월임금 분포에서 단시간 일하는 저임금 계층을 증가시키거나 전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낮은 시간제의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임금불평등을 악화시켰다. 이는 노동시장의 고령화와 상호작용하며 임금불평등을 증가시켰다. 기술통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분석대상 기간 동안 15~34세의 비율이 크게 감소, 35~49세의 비율이 약간 감소하는 반면 50~64세는 2004년 14.5%에서 2019년 28.0%로 크게 증가했고, 65세 이상도 2004년 2.2%에서 2019년 6.8%로 증가했다. 이 기간 [그림 3-24]와 같이 중고령자가 시간제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로 저임금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임금불평등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시기별로 월임금과 시간당임금에 따라 요인들이 조금씩 다른 효과를 보이며 임금불평등 변화를 설명한다.

[그림 3-24] 성별·연령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2004년부터 금융위기까지의 첫 번째 시기에 주목해보면, 월임금의 불평등 증가는 연령, 시간제, 직업, 고용형태의 세부 특성 효과가 임금불평등 증가를 대부분 설명한다. 다른 시기와 달리 연령과 함께 임금불평등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직업이다. 이 시기 생산직은 2004년 24.5%에서 2009년 20.7%로 3.8%포인트 감소한 반면,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단순노무직이 2004년 15.0%에서 2009년 17.7%로 2.7%포인트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광업·제조업과 생산자서비스업이 2004~2009년 각각 5.1%포인트, 2.2%포인트 감소한 반면,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이 각각 4.2%포인트, 5.4%포인트 증가한 산업의 분포 변화도 매우 뚜렷한 변화이지만 생산자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은 광업·제조업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반면 개인서비스업은 낮기 때문에 산업의 특성 효과가 불평등을 오히려 약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시기 광업·제조업의 감소는 그만큼의 생산직 감소로, 개인서비스업의 증가는 단순노무직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증가가 특히 중고령층 여성의 취업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고령화,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빠르게 진행된 산업공동화, 서비스업 수요 증가가 맞물려 연령 및 직업, 시간제 분포의 변화를 낳았고 이 요인들이 월임금 불평등을 증가시켰다고 해석된다. 같은 시기 시간당임금의 불평등 증가에 시간제 분포 변화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앞서 월임금 분포에는 연령, 직업과 함께 주되게 영향을 미쳤다.

기초분석 결과들과 함께 살펴보면 <표 3-2>의 연도별 월임금 분포의 변화에서 2004~2009년 하위권 실질임금은 감소한 반면 상위분위 임금은 평균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는 점과 P90/P50이 불평등 증가의 대부분을 설명한다는 점을 짚은 바 있다. 그리고 특성별 분포 변화와 임금격차 추이 요약에서 이 시기에 저임금 일자리인 개인서비스업과 단순노무직 근로자는 증가하고, 제조업과 생산직이라는 대표적인 중간임금 일자리는 감소했으며, 대졸자 임금 프리미엄 상승, 고임금 업종인 생산자서비스업과 대기업 종사자, 노조가입자의 상대임금은 더 증가해서 중상위계층 분배 악화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특성 효과의 변화는 금융위기 시점의 계수에 영향을 미쳤고, 이 시점에서 더 커진 다양한 임금격차에 2004년의 특성을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가 <표 3-6>과 같은 요인 분해 결과로 요약 및 확인되었다.

분배가 지속적으로 개선된 금융위기부터 2014년까지의 두 번째 시기, 2014~2019년의 세 번째 시기에도 연령과 시간제는 임금불평등을 증가시킨 세부 특성 효과다.

2010년대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비중은 가파르게 높아졌고 시간제 비율은 더 빠르게 증가했다. 반면 정규 상용직, 정규 임시일용직, 비정규 상용직, 비정규 임시일용직으로 분류한 고용형태는 시간제 증가가 불평등을 악화시킨 효과보다 더 크게 시간당임금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는데, 이 시기 정규 및 비정규 상용직은 증가하고 정규 및 비정규 임시일용직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종사상 지위나 비정규직 유형별 추이를 보면 상용직은 모든 시기 증가하는 추세이고,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도 미미하게 감소하는 추세였음을 앞서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계속 증가하는데 비정규직 일자리 내에서 시간제 일자리 비율은 계속 증가하지만 다른 유형의 비정규 일자리가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시간제 효과를 따로 추정했을 때 전체 고용형태 특성 효과는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부터 최근 까지 시간제 증가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데 시간당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데 비해 월임금에는 연령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시간제 근로자 증가가 최저임금 계층의 월임금을 하락시켜 월임금 불평등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부터 2019년까지 임금불평등 감소를 설명하는 주된 효과는 계수 효과이므로 계수 효과 세부 분해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시간당임금 분포를 먼저 살펴보면 2008~2014년에는 조합원의 임금프리미엄과 연령 계수 효과가 유의하게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2014~2019년에는 연령 계수 효과가 불평등을 증가시킨 반면 고용형태 및 산업 계수 효과는 감소시켰는데, 이 시기 비정규 임시일용직의 임금격차가 확연히 줄었고 대부분의 산업의 분위별 추정계수가 2014년 우상향하던 모습보다 평탄해졌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각 요인의 계수 효과로 설명할 수 없는 상수항의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즉, 금융위기 이후 두 시기 모두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의 임금을 변화로 설명할 수 없는 계수 효과가 전체 임금불평등 변화의 대부분을 설명한다.

금융위기부터 이후의 임금 분포 변화와 특성 분포 변화, 임금격차 및 회귀분석의 추정계수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요인분해에서 전체 격차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계수 효과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위기부터 2014년에는 분위경쟁값 비율이 감소하여 불평등 감소를 보여주는데 이 시기에도 불평등 개선을 주도했던 것은 P90/P50으로 중간이상 계층의 임금 분포 변화였다. 금융위기 이전과 달리 두드러진 특성 변화가 없다. 고령화, 고학력화, 상용직과 시간제 증가는 모든 시기 공통적인 특

성 변화였지만 이전 시기와 달리 제조업과 생산직은 감소세를 중단했고 단순노무직도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반전되었다. 공통적인 특성 효과는 임금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작동했지만 대부분의 특성별 임금 격차가 금융위기까지 이어지던 증가세를 멈추었다. 대졸자의 상대임금 감소, 제조업 대비 모든 업종, 생산직 대비 모든 직종의 상대임금이 감소하면서 중간임금과 고임금 격차는 감소했지만 저임금과의 격차는 증가했다. 월임금은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분배가 오히려 악화되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업은 금융위기 시점부터 중간임금 일자리 성격을 띠면서 증가했고, 제조업, 생산직은 중간임금 일자리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고임금과의 격차를 줄였다. 이로 인해 중상위계층 분배가 개선되면서 이 시기 전체적인 불평등 감소를 설명한다.

2014년까지와는 달리 2014~2019년 불평등 감소를 주도한 것은 P50/P10으로 중간 이하의 임금 분포 변화였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특성별 임금 격차가 빠르게 감소했다. 대졸 및 노조 프리미엄은 감소하고, 저임금인 중졸 이하,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 유통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 10인 미만 사업장의 시간당임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따라서 이 기간 중하위층의 분배 개선이 두드러진다. 무조건부 분위회귀식의 추정계수 그림에서 우상향하던 그래프가 2019년 상당 부분 훨씬 평탄한 모습 또는 기울기 감소를 보였다는 데서 계수효과가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월임금이 시간당임금의 분배 개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시간당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단시간 근로 증가로 인한 특성 효과 및 계수 효과가 반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경찰 8월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2004~2019년의 월임금과 시간당임금 분포 변화를 추적하고 그 변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2004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의 임금불평등 악화기, 2010년대 이후의 임금불평등 개선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정책의 대응이 각 시기 임금불평등 변화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까지 임금불평등이 증가하던 시기는 1990년대 초 이래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탈산업화가 계속되던 시기이다(전병유, 2007). 분석을 통해 중간임금 일자리 성격을 갖는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가 금융위기까지 매우 가파르게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제조업을 대신하는 서비스업의 상대적인 비중의 증가는 중간일자리 감소-하위 및 상위 일자리 증가라는 U자 형태의 고용변동을 낳았다(전병유, 2007). 이는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 특성별 고임금 일자리의 상대임금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임금 중상위분위의 분배가 크게 악화되면서 이 시기의 임금불평등 증가를 낳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는 임금불평등이 개선되는 시기로,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약진, 중국 등 개도국 해외투자 규모 정체, 중국과 한국 제조업 선순환의 영향으로 제조업 고용이 20년 만에 증가하기 시작했다(정준호, 2022; 성재민, 2022). 금융위기까지 계속되던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 감소세가 멈추고 그 비중을 유지한 데서 이 산업구조 변화가 고용변동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간임금 일자리인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증가, 임금 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기업 종사자의 영향으로 중간임금 이상의 계층에서 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간임금 일자리인 사회서비스업, 특히 보건업 및 복지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제조업 일자리와 함께 중간 일자리를 지탱한 것이 불평등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성재민, 2018).

2014~2019년은 2015년 자동차 부품과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고용이 줄기 시작한 시기이다. 제조업 절대 고용은 감소하고, 제조업과 서비스 고용 사이에 나타나는 음의 동조화 현상으로 저임금 서비스업종이 제조업이나 생산자서비스업에서 배출된 인력의 경기완충 역할, 고용흡수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정준호, 2022) 이 시기 산업 수요의 변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같이 임금불평등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다. 따라서 2010년대 후반의 임금불평등 개선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같은 정책적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시작된 제조업과 생산직 감소세,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저임금 일자리 상대임금이 2017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여 중간임금과의 격차를 줄인 분석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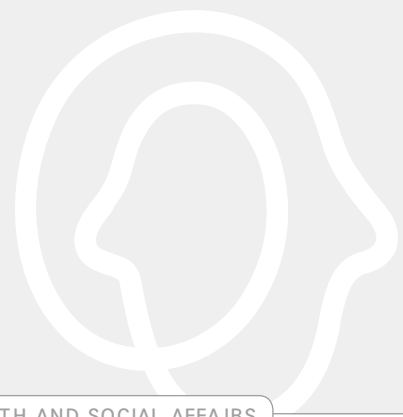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중간임금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⁹⁾ 광주형 일자리와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일자리보장제가 중간임금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미있는 정책 시도 또는 논의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산업정책적 접근도 가능한데, 서유럽과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이 경제 전반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의 가능성과 제조업 공급사슬을 통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 일자리의 고용효과에 주목한 결과이다(정준호, 2017).

둘째, 사회정책 또는 일자리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업이 가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고령화 추세에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대면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변화로 인한 인력의 대체 가능성이 매우 작은 분야일 뿐 아니라, 공공의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과 책임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제고 또는 종사자 처우 개선과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과제가 있다. 그리고 2010년대 급증한 돌봄 분야 단시간 일자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간제 일자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10년대 월임금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이 업종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가 되었다. 최저 근로시간 보장이나 월임금제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도 요구된다.

셋째, 최저임금 제도와 정규직화와 같이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정책적 대응도 요구된다. 노동시장 제도는 산업구조 변화, 기술변화, 세계화, 감염병 위기와 같은 다양한 변화 요인으로부터 노동시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또한 저임금으로 인한 근로빈곤의 위험을 줄이고 이로 인해 요구되는 사회재정지출의 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다.

9) 전병유(2007) 역시 노동시장 양극화 분석을 통해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제4장

최저임금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와 분석모형 설정

제3절 기초통계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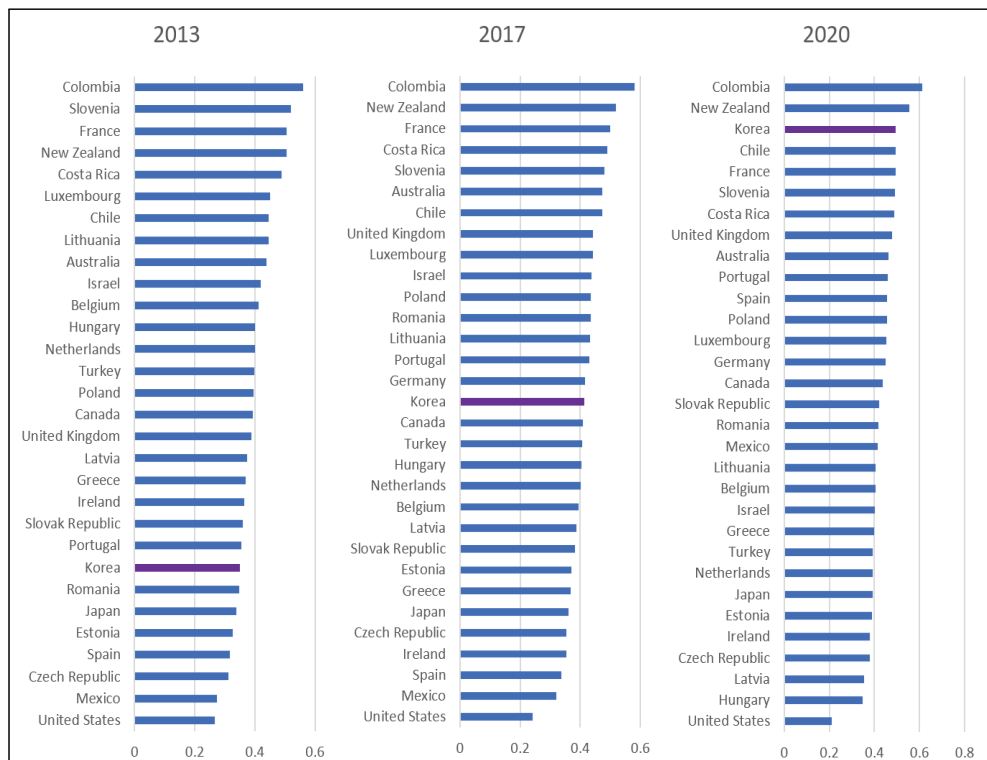
제 4 장

최저임금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

제1절 서론

이번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크게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2017년 OECD 중간권에 속했던 최저임금 상대수준(평균 임금 기준)은 2020년이 되면 최상위권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그림 4-1]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상대수준 국제 비교



자료: OECD.Stat,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IN2AVE> (2021. 9. 13. 접근)

비록 경기 후퇴 등을 감안해 2020년 인상률은 2.9%로 낮췄고, 코로나 경제위축에 따라 2021년 인상률은 1.5%로 더 낮아졌으나, 2022년 인상률은 5.0%로 최저시급이 9천

원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인상되었다. 나라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다르고 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자료의 기준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절대적 순위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인 위치에서 상당한 상승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번 정부만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된 것은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결정된 2010년 최저임금 2.8%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2010년대에 평균 임금 인상률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은 적은 없었으며, 박근혜 정부 기간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7%를 하회한 적이 없었다. 동기간 명목임금상승률이 2014년 2.3%, 2015년 2.8%, 2016년 4%, 2017년 2.6%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매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오른 셈이다. 이 때문에 2013년 최저임금의 상대수준은 OECD 하위권이었으나 2017년이 되면 중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이와 같이 인상된 최저임금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개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근방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 불평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직접 효과). 최저임금 인상은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임금까지 높여 불평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간접 효과).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이와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있다. 제2절에서는 기존 연구 정리를 통해 위 효과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정리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활용할 분석 방법 소개와 데이터 소개를 통해 이 연구의 차별성을 보일 것이다.

제3절에서는 기초통계를 정리한다. 국제 통계를 이용해 저임금 비중, 중하위 임금불평등 변화를 정리하고, 이 장의 분석을 위해 활용할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통해 분위별 임금 상승률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임금불평등 관련 지표 추이를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최저임금의 불평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하위 분포에서 나타난 불평등 변화를 얼마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는지 수치적 결과도 제시하겠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월임금 불평등에 미친 영향도 보완적으로 추정한다. 이 장의 분석은 시간당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보고서 전체의 목적인 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의 월임금에 대한 영향을 보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월임금 기준으로도

저임금 분위에서 주로 임금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월임금이 낮은 분위에는 근로시간이 짧아 월임금이 높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낮은 시간당임금을 긴 근로시간으로 별충하는 경비, 청소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저임금 직종들은 시간당임금 기준으로는 최하위에 속해도 월임금으로는 최하위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월임금이나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불평등을 분석할 때는 개인의 소득 잠재력을 보여주는 시간당임금이 최저 수준이 아님에도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낮아 월임금이나 연간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들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해석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생활 균형이 날로 중요해지는 트렌드의 결과일 수 있어 소득 불균형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나, 연쇄적인 영향이 소득 분포 전체에 미쳐 상위 소득에선 별다른 상황이 없어도 상위 소득 점유율이 증가하는 등 마치 소득 불평등이 악화된 것처럼 보일 여지를 키우기 때문이다. 제5절에서는 전체 연구 결과를 정리한다.

제2절 선행연구와 분석모형 설정

최저임금이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경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효과와 파급효과를 통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분위의 임금도 인상시키는 간접적 효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2010년대에 들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정진호 외(2011)의 연구에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처음으로 연구해 이 효과가 있음을 발견한 바 있다. 성재민(2013)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해 중위 임금 근방까지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발견하였으며, 이와 같은 최저임금의 효과로 인해 금융위기 이래 우리나라 하위 임금불평등 완화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이 최대 80% 가까이 차지할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강승복(2016)의 연구는 사업체 자료를 이용해 최저임금이 사업체 내 임금불평등을 완화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의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폭을 제한하여 임금 압축 효과를 발생시킴을 실증하였다.

김태훈(2019)은 2008~2018년간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최저임금 미만율(다음 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비율) 변수를 최저임금 영향 변수로, 종속 변수를 시간당임금과 월급여로 한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이 시간당임금과 월급여를 모두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지역 고정효과 및 지역 추세를 통제한 모형을 추정하였다. 시간당임금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는 3.76%, 상용직 근로자는 2.59%, 임시직 근로자는 3.35%, 일용직 근로자는 7.30% 상승하여 이와 같은 임금 인상은 특히 일용직 근로자에게서 크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월급여 기준으로는 전체 근로자는 3.58%, 상용직 근로자는 2.05%, 임시직 근로자는 2.62%, 일용직 근로자는 7.45% 증가하였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업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한다는 결과도 제시하였다.

김영민, 정지운(2020)의 연구는 지역별 고용조사의 지역 상세 자료(A형)가 아닌 산업 상세 자료(B형)를 이용해 시간당임금 상승효과를 실증하였으며,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이질성이 있을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로 인해 월임금에 대해서는 산업별로 감소하는 업종이 있을 수 있음도 발견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2008년 이래 최저임금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라면, 황선웅(2021)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18~2019년 최저임금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김태훈(2019)이 최저임금 효과 식별을 위해 지역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사용하였다면, 이 연구는 성, 연령, 학력 구간별 차년도 최저임금과 현재 최저임금 사이 근로자 비율을 최저임금 영향력 변수로 사용하였다. 또 다른 특징은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시간당임금을 계산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2017년까지보다 더 높았던 2018~2019년의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직접 영향 노동자뿐 아니라 4~5분위까지의 노동자에 대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도 나타났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시간당임금과 월임금의 불평등 지표인 P90/P10, 지니계수, 분산 모두에서 완화시키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음도 발견하였다. 성, 연령, 학력, 근속, 사업체규모, 고용형태 간 격차 축소에도 영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상과 같이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직접적인 영향권의 임금 인상 및 (약간의) 파급효과와 임금불평등 축소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은 불평등 축소 효과가 고용감소를 동반하는지, 월임금에서도 불평등 축소가 나타나는지 정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

구 대상 시기나 분석 데이터 설정에 따른 결과 차이도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2008~2020년을 대상으로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해 최저임금의 임금불평등 개선효과를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추정모형은 Lee(1999)와 Autor, Manning, & Smith(2016)의 연구를 따라 지역별 임금 수준 차이에 따른 최저임금 영향력 차이가 임금 분위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모형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른 장의 분석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구성변화로 잘 설명되지 않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하위 임금불평등 완화에서 최저임금이 한 역할을 수치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연구들은 지역 간 최저임금 영향력 차이가 임금 분위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후, 해당 모형의 추정치를 이용해 분석대상 기간의 중하위 임금불평등 변화를 최저임금이 얼마나 설명하는지까지 간단히 시뮬레이션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들의 방법을 활용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된 중하위 임금불평등 변화를 최저임금의 인상이 얼마나 설명하는지 분석해 본다.

Lee(1999)는 지역별 임금 수준 차이 때문에 명목으로는 같은 최저임금이 지역별 임금 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를테면, 저임금 지역에서 최저임금은 임금 분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추정모형은 아래와 같다.

$$w_{st}(p) - w_{st}(50) = \alpha_t + \beta_1(w^m - w_{st}(50)) + \beta_2(w^m - w_{st}(50))^2 + \epsilon_{st} \quad (4-1)$$

$w_{st}(50)$ 는 t기의 지역별 중위 임금, w^m 은 최저임금, $w_{st}(p)$ 는 지역별 p번째 분위 임금을 의미한다. $w^m - w_{st}(50)$ 은 지역의 최저임금 영향력 변수이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지역 중위 임금에 가깝냐에 따라 임금 분포에 대한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다. 이 점을 더 반영하기 위해 최저임금 영향력 변수의 제곱항도 통제한다. 위 추정식에서 도출되는 한계효과는 $\beta_1 + 2\beta_2(w^m - w_{st}(50))$ 이기 때문이다. Lee(1999)의 연구는 지역 고정효과(fixed effect)와 지역별 추세를 고려하지 않지만, Autor et al.(2016)의 연구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및 지역별로 다를 수 있는 실업률 추세 등 다양한 추세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이 두 변수를 통제한다.

지역별 중위 임금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추세, 일시적 충격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Autor et al.(2016)에 따르면, 지역별 중위 임금에 일시적 충격이 있다면 식(4-1)

과 식(4-2)의 잔차의 공분산이 0이 아닌 상황이 가능할 수 있다. 중위 임금의 측정오차 등의 오차 가능성도 식(4-2)의 잔차와 식(4-1)의 설명변수에 들어가는 중위값의 공분산을 0이 아니게 만들기 때문에 유효 최저임금 계수의 편의를 일으킬 수 있다.

$$w_{st}(50) = \mu_{s0} + \mu_{s1} \times time_t + \gamma_t^\mu + \epsilon_{st}^\mu \quad (4-2)$$

이로 인한 편의를 교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구변수를 찾는 것이겠지만, Autor et al.(2016)이 활용한 지역 간 법정 최저임금 차이 같은 도구는 전국 단일 최저임금 체제인 우리나라에선 활용이 불가능하다. Autor et al.(2016)은 식(4-1)과 식(4-2)의 잔차 상관관계는 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하에, $cov(w^m - w_{st}(50), w_{st}(50)) < 0$ 인 상황, 즉 고임금 지역(=중위 임금이 높은 지역)에서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약할 것이란 가정이 성립한다면 중위 임금에서 멀어질수록 추정치가 상향 편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는 곧 1분위 대 5분위 격차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력도 크고, 9분위 대 5분위 격차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력도 크며, 4분위 대 5분위 격차나 6분위 대 5분위 격차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력은 약하게 추정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회귀계수가 (+)라는 의미이므로 하위분위일수록 최저임금의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고 상위분위로 갈수록 최저임금의 불평등 강화 효과가 크게 추정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인데, 이는 곧 추정치가 편의된 결과 나타난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 문제는 Lee(1999)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 해당 논문이 분석대상으로 하는 시기에는 미국도 단일 최저임금에 가까웠던 시기여서 지역 간 법정 최저임금 차이를 직접 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에 모두 들어가 문제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는 중위 임금 대신 평균 임금을 이용해 유효 최저임금 변수를 만들어 분석에 활용한 결과를 함께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중위 임금 외에 평균 임금을 지역별 임금 수준을 보여주는 변수로 활용해 분석한 결과를 함께 보고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추정한 결과를 이용해 중하위 임금불평등 감소 중 얼마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설명 가능한지도 보일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식(1)의 β_1 , β_2 와 관련되므로, Lee(1999)는 아래 식(4-3)과 같은 예측치를 구해 각 분위 근로자의 2020년 임금에 더해지면 최저임금과 관련된 가상의 2008년 임금분포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활용해 분배지표를 재계산하여 실제 분배지표 변화와 비교하면 최저임금이

실제 2008~2020년간 중하위 임금불평등 변화를 얼마나 설명하는지에 대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음을 보였다.

$$\Delta w_{st}^p = \hat{\beta}_1^p(\tilde{m}_{s,\tau 0} - \tilde{m}_{s,\tau 1}) + \hat{\beta}_2^p(\tilde{m}_{s,\tau 0}^2 - \tilde{m}_{s,\tau 1}^2) \quad (4-3)$$

위와 같은 시뮬레이션은 Autor et al.(2016)도 수행하였는데, Lee(1999)는 최저임금이 중하위 임금불평등 변화의 80% 내외를, Autor et al.(2016)은 주별 최저임금 차이를 활용한 진전된 연구방법을 통해 80% 내외가 아닌 30~40% 가량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80%를 최저임금이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최저임금으로 중하위 임금불평등 변화가 설명된다는 것인데, 이는 동 기간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는 고속권 친화적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로 인한 저임금 노동수요 감소, 노동조합의 약화 같은 다른 요인들의 설명력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저임금이 30~40%를 설명한다는 것은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이들 요인들의 설명력 또한 있다는 정도의 의미가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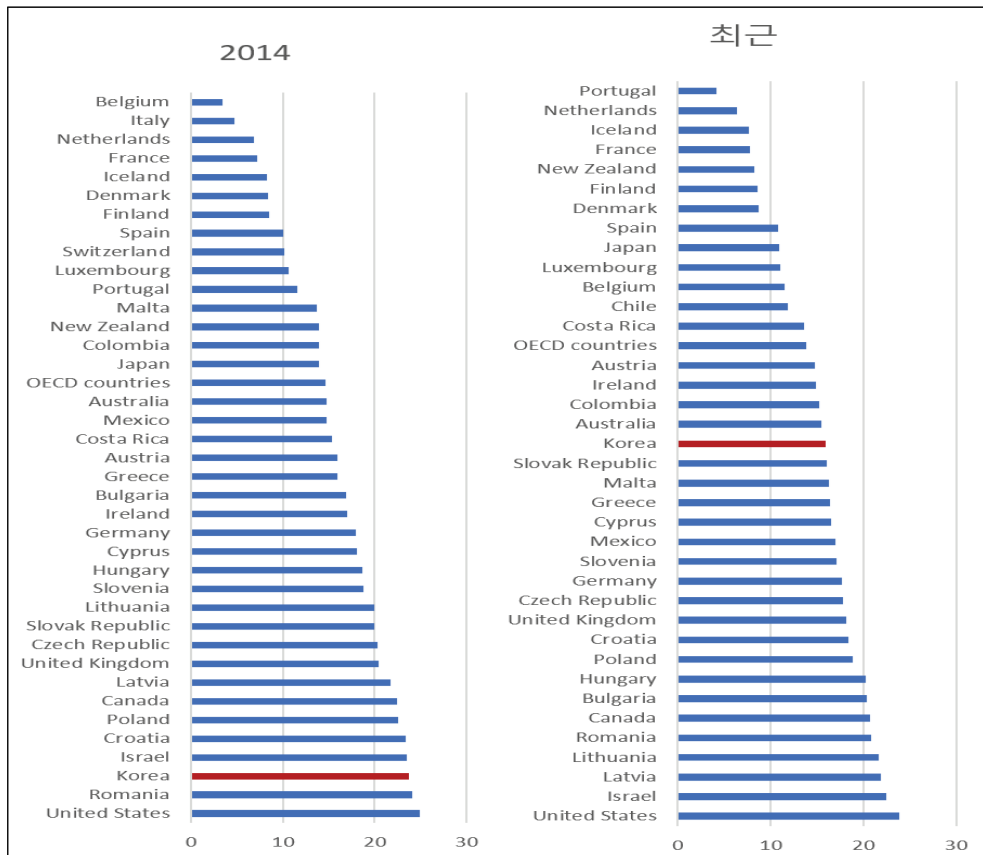
미국의 분석은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아 최저임금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였다. 이하에서 분석할 우리나라 대상 시기는 최저임금이 하위 1~2분위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 수준이 상승한 시기라는 특징이 있다. 이 연구의 다른 장에서 서술된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기는 그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중하위 임금불평등이 빠르게 개선되며, 중상위 임금불평등도 정체되거나 다소 완화된 시기이다. 일자리 측면에서도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위시하여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상당한 일자리 증가가 있어 고용 없는 성장을 걱정했던 2000년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노동시장 특성도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2010년대가 2000년대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중하위 임금불평등을 줄이는 데에서도 전적이 아니라 부분적인 역할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하위에서 노동수요의 빠른 증가는 최저임금이 아니어도 중하위 임금불평등의 완화를 야기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이 중하위 불평등 변화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규명함을 통해 이 시기 불평등 변화 원인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키도록 하겠다.

제3절 기초통계

1. 국제 비교 통계에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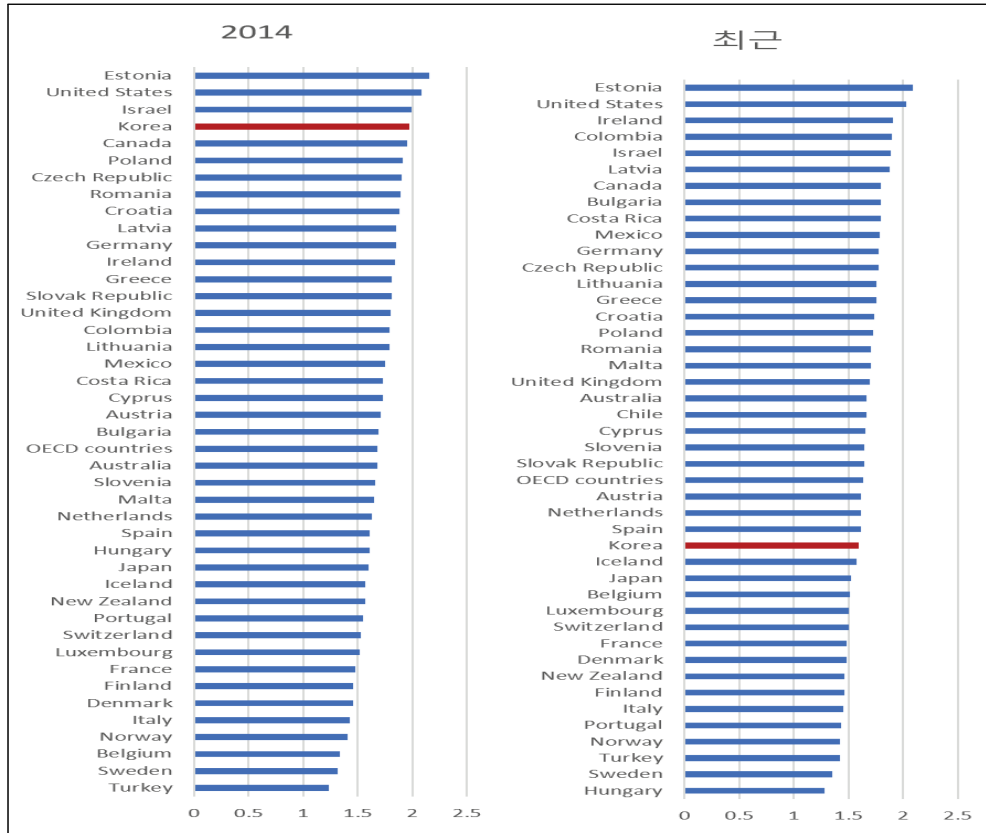
[그림 4-2] 저임금 비중 국제비교



주: 최근 자료는 미국, 폴란드, 체코, 멕시코, 슬로바키아, 우리나라, 콜롬비아, OECD Countries, 코스타리카, 칠레, 일본, 뉴질랜드는 2020년, 캐나다, 헝가리, 영국,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는 2019년, 나머지는 2018년 수치이다.

자료: OECD.Stat,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4193> (2022. 4. 11. 접근)

[그림 4-3] 중하위 임금격차(5분위 대 1분위)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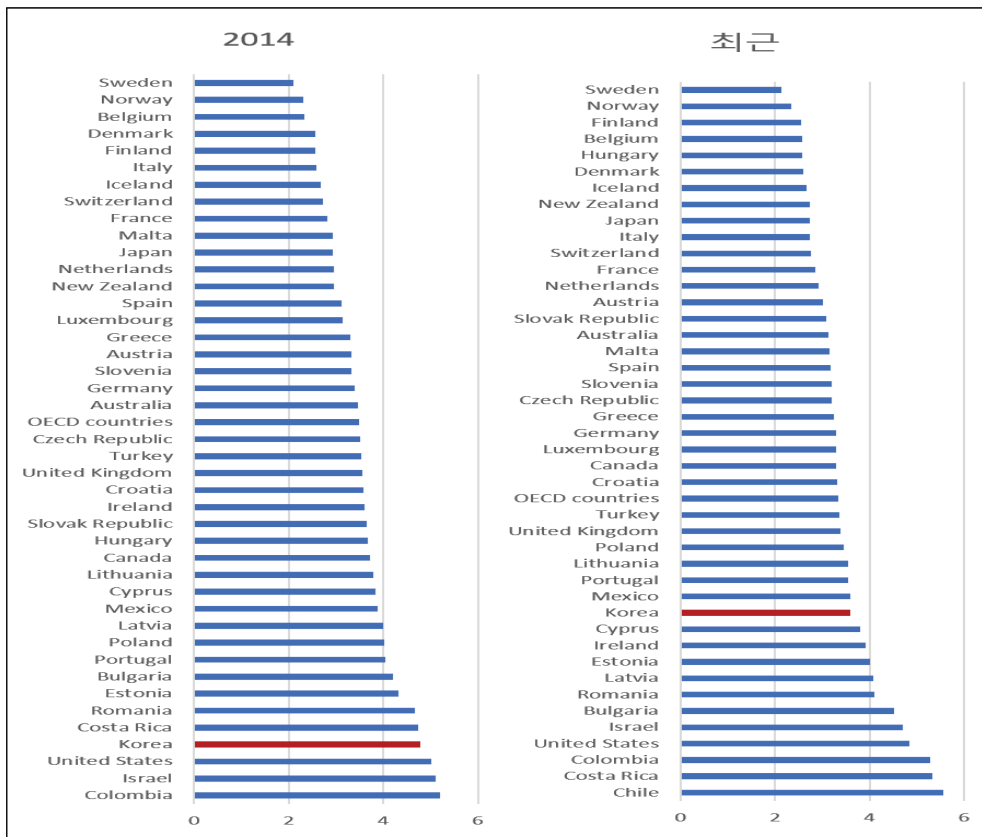
주: 최근은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일본, 헝가리, 호주, OECD countries,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 콜롬비아, 영국, 슬로바키아, 그리스,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체코, 폴란드, 캐나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2020년, 벨기에,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는 2019년, 나머지는 2018년 수치이다.

자료: OECD.Stat, [https://stats.oecd.org/viewhtml.aspx?datasetcode=DEC_I&lang=en#\(2022. 4. 11. 접근\)](https://stats.oecd.org/viewhtml.aspx?datasetcode=DEC_I&lang=en#(2022. 4. 11. 접근))

최저임금 인상과 직접 관련되는 지표라 볼 수 있는 저임금 비중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에만 해도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했으나, 최근으로 오면 중간권에 속하는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하위 임금불평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중위 임금 대 하위 1분위 격차(전체 10분위 구분 기준 5분위 대 1분위 격차)도 현격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중하위 불평등이 최상위권에 속했으나, 국가별 최신 자료인 최근 자료 기준으로 보면 중간 이하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마다 데이터 산출의 기반이 되는 원자료의 인구 포괄 범위가 달라 절대적 수치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상대 수준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중하위 임금불평등 지표 상의 큰 변화는 전반적인 임금불평등을 보여주는 9분위 대 1분위(전체 10분위 구분 기준) 격차의 부분적인 개선으로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만 해도 OECD 국가들 중 최상위권에 속했으나 최근 자료 기준으로는 자료를 제출한 나라 중 12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상하위 임금격차(9분위 대 1분위) 국제 비교



주: 최근은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미국, 불가리아, 우리나라, 멕시코, 포르투갈, 폴란드, 영국, OECD countries, 크로아티아, 캐나다, 그리스, 체코,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뉴질랜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웨덴은 2020년, 아일랜드, 독일, 덴마크, 벨기에, 핀란드는 2019년, 나머지는 2018년 수치이다.

자료: OECD.Stat, [https://stats.oecd.org/viewhtml.aspx?datasetcode=DEC_I&lang=en#\(2022. 4. 11. 접근\)](https://stats.oecd.org/viewhtml.aspx?datasetcode=DEC_I&lang=en#(2022. 4. 11.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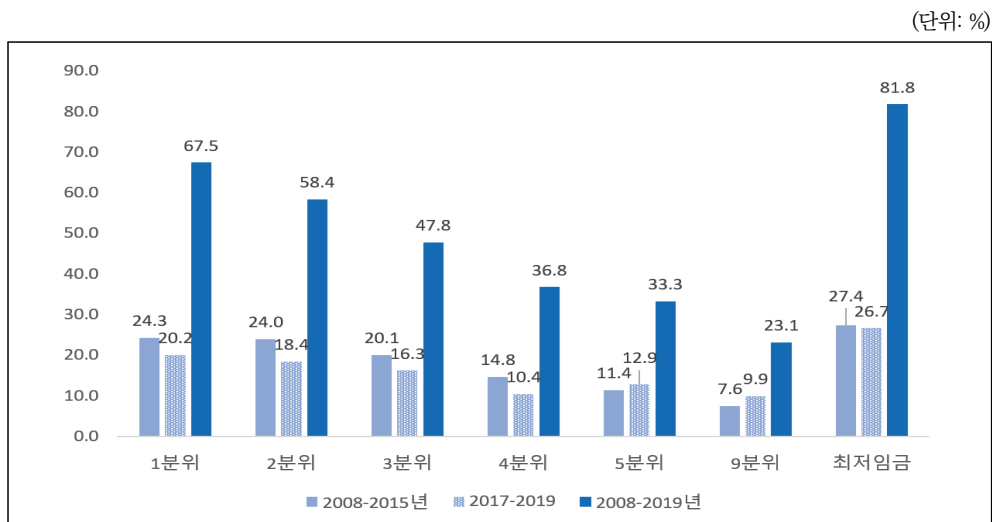
이와 같이 최저임금과 직접적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저임금 비중, 중하위 임금 불평등 지표에서 큰 개선이 있고, 이것이 전반적인 임금불평등에서도 약간의 개선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 정책의 결과 임금불평등에서 개선이 있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 임금불평등 변화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었는지, 있다면 그 영향을 얼마나 추산할 수 있는지를 분석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2.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로 본 기초통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는 지역의 고용 대표성을 갖는 자료로 설계되어 2008년부터 조사되고 있다. 이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처럼 3개월 간 주된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을 조사하고 있으며, 주당 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당임금을 생성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근로시간은 주업과 부업의 근로시간을 조사하고 있다. 임금이 주된 직장의 임금이므로, 시간당임금 계산에서는 주업의 근로시간만 이용하였다.¹⁰⁾ 시간당임금은 3개월 평균 임금 ÷ [주당 근로시간 × (365 ÷ (12 × 7))]로 계산하였으며,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해 실질화하였다.

[그림 4-5] 실질 시간당임금 상승률(10분위 구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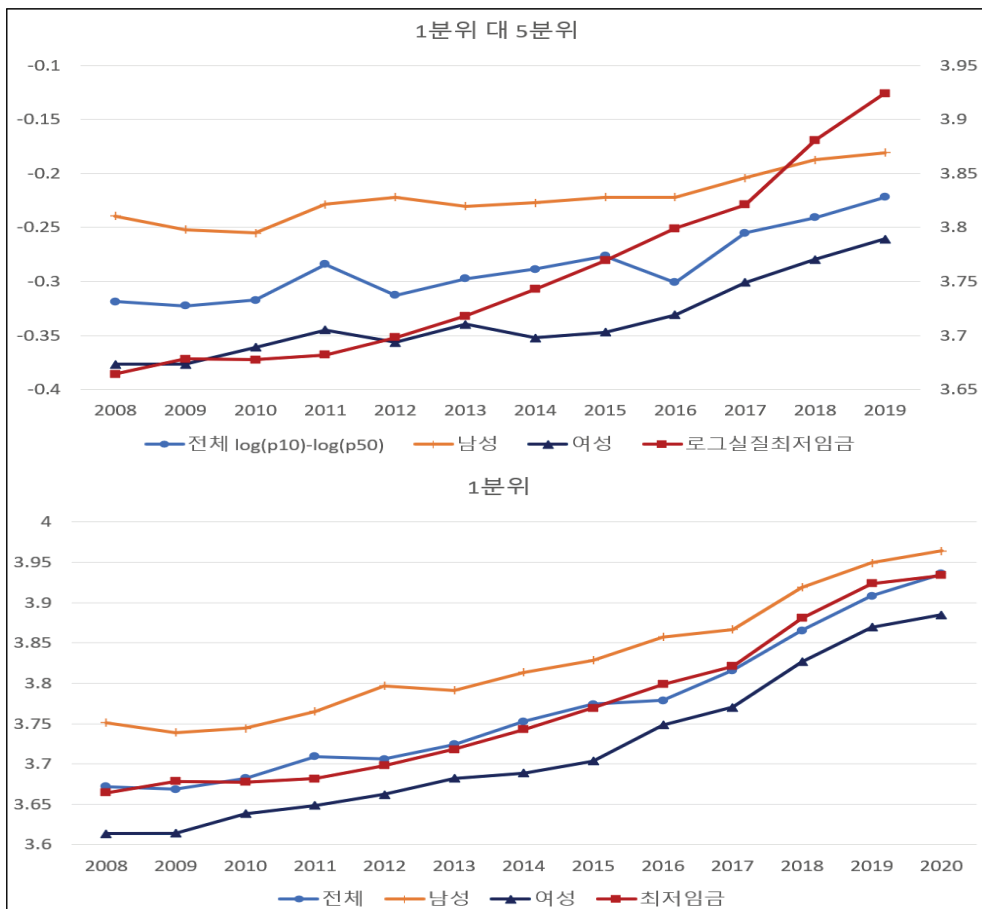
주: 3개월 평균 임금, 주업 주당 근로시간을 이용해 시간당임금을 계산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10)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해 최저임금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는 임금은 3개월 평균 임금, 근로시간은 조사 대상 주간(이른바, 2021년 상반기 조사라면 2021년 4월 11일부터 4월 17일이 됨) 1주일 동안 일한 근로시간이라는 점에서 측정오차를 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시간당임금을 10개 분위로 나누어 분위별 성장률을 보면, 가장 낮은 1분위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상승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은 81.8% 올랐는데, 1분위 시간당임금은 67.5% 상승하였으며, 2분위는 58.4%, 3분위는 47.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에는 없지만, 고령층 재정지원 일자리가 많은 공공행정, 보건복지업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1분위는 2008~2019년간 72.4% 증가하여 최저임금 증가율에 보다 근접하는 인상률을 보인다.

[그림 4-6] 1분위 로그 실질 시간당임금 상승과 1분위 대 5분위 로그 임금격차 추이



주: 10분위 구분 기준이며, 5분위 수치는 전체 수치를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의 1분위 대 5분위를 작성하였다. 우측은 로그실질최저임금, 좌측은 1분위 대 5분위 격차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1분위 임금은 최저임금과 유사한 인상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성별로 보면 최저임금과 거리가 있는 남성 1분위보다는 여성 1분위 임금이 최저임금 인상 궤적을 잘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1분위 임금이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1분위 대 5분위 격차도 최저임금 인상 궤적에 따라 감소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을 보면, 감소 추세가 확연히 나타난다¹¹⁾. 최저임금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0.26 로그 포인트 증가했는데, 여성의 1분위 대 5분위 격차는 0.12, 남성은 0.06, 전체는 0.1 로그 포인트 개선되어 여성의 개선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폭의 절반 미만 수준으로 중하위 불평등이 개선되었는데, 이는 앞서 [그림 4-5]에서 본 것처럼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인상률이 높은 이 시기 분위별 임금 성장 특성상 5분위 임금 역시 1분위보다는 느리지만 상당히 인상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표 4-1〉 청소·경비직업군의 성별 2008~2019년 임금 증가율

(단위: %)

구분		시간당임금 증가율	월임금 증가율	주당 근로시간 증가율	최저임금 증가율
청소경비, 여성	평균	105.3	77.6	-15.8	121.5
	중위	120.0	97.4	0.0	
청소경비, 남성	평균	101.7	70.0	-20.0	
	중위	141.3	85.0	-21.4	

주: 표준직업분류 94번 직업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많이 포함된 공공행정, 보건복지서비스업은 제외 후 계산하였다. 명목임금의 증가율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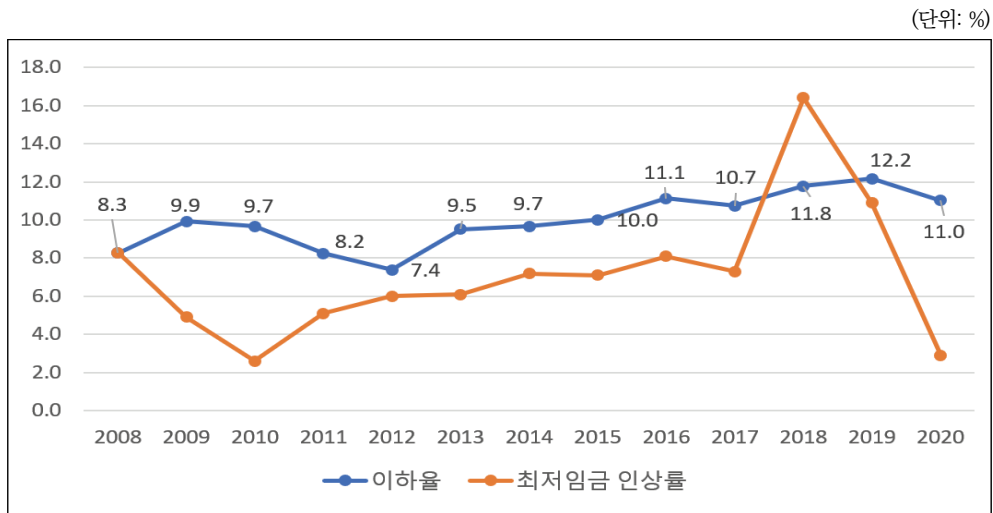
대표적인 저임금 직업군인 표준직업분류 상 단순노무직의 94번에 해당하는 청소·경비직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변화를 살펴보았다. 시간당임금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청소직일 여성의 경우 시간당임금 증가율은 2008~2019년간 평균 임금 기준 105.3%, 중위 임금 기준 120%의 증가율을 보여 최저임금 증가율인 121.5%에 거의 근접하는 증가율을 보였으며, 대부분 경비직일 남성의 경우 각각 101.7%와 141.3%의 증가율을 보여 역시 최저임금 증가율에 준하거나 능가하는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월임금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여성의 경우 평균 임금 기준 77.6%, 중위 임금 기준 97.4%의 증가율을 보이고, 남성의 경우 각각 70.0%, 85%의 증가율을 보여 역시 상당한 수준의 증

11) 그림에서 1분위 대 5분위 격차는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0에 근접할수록 감소하는 것이다.

가올이긴 하지만, 시간당임금보다는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시간당임금과 월임금 증가율의 차이는 상당 부분 근로시간의 축소가 나타났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 평균 근로시간은 15.8% 감소하였으며, 남성의 경우 평균 근로시간이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최저임금 이하 고용 비중은 주업 근로시간으로 월임금을 나눠 계산할 때 2014년까지 10% 미만, 그 이후는 10% 초반대로 나타난다. 2018, 2019년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이하율은 2017년 10.7%에서 2018년 11.8%, 2019년 12.2% 수준으로 완만한 상승만 보였다. 이로부터 볼 때 시간당임금 기준 최저임금의 불평등 감소효과는 전체 10개 분위 구분 기준 하위 1분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그림 4-7] 최저임금 이하율과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주: 지역별 고용조사를 연 2회 조사할 때는 하반기 기준, 분기별 조사할 때는 2011년(4분기)을 제외하고는 3분기 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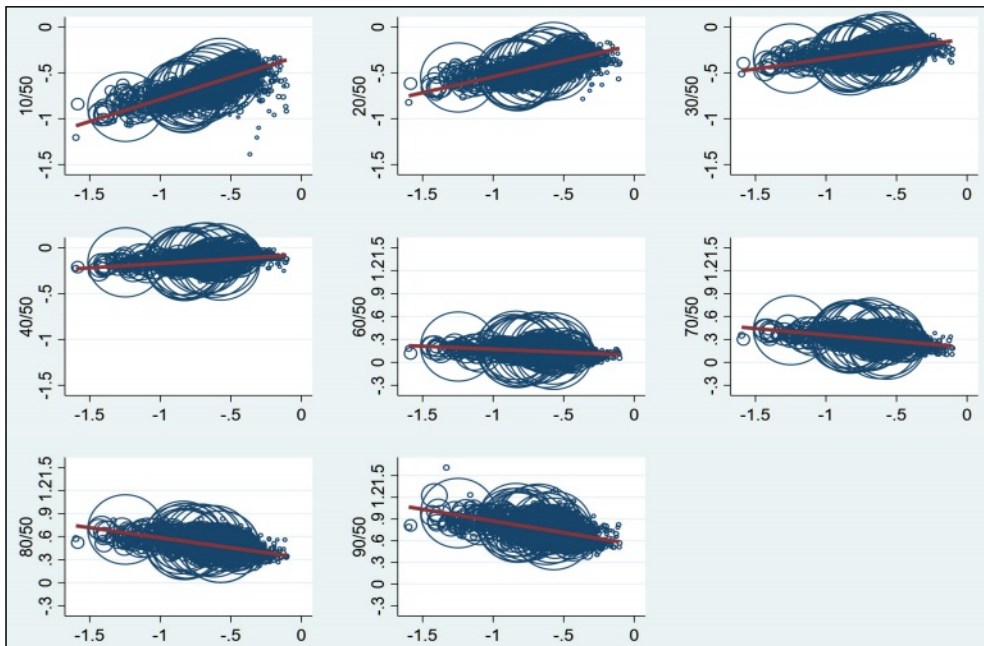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제4절 분석 결과

1. 회귀분석 결과

최저임금의 임금불평등 영향력 검증을 위해 식(1)을 추정할 때 최저임금의 영향력 변수는 중위 임금뿐 아니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연도별로 임금분포의 상·하위 3%는 3%에 해당하는 값으로 대체(winsorize)하여 분석하였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시군단위 대표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중치를 제공하는데, 이 가중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연도별 가중치 총합을 동일하게 해 최저임금 효과가 특정 연도의 가중치 총합 차이로 영향을 받지 않게 조정하였다.

[그림 4-8] 평균 임금 기준 유효 최저임금과 중위 임금 대비 분위별 임금 수준 간 관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4-8]은 가로축 최저임금과 평균 임금 로그 차이, 세로축 중위 임금 대비 각 분위 격차를 보여주는데, 하위 분위는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높을수록(즉, 중위 임

금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중하위 격차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경향의 정도는 기울기의 가파른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하위 1분위에서 더 강하고, 4분위로 올라올수록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6분위 이상에서는 중상위 격차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중위 임금이 낮은 지역은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지역이어서 최저임금과 중위 임금 거리도 좁고, 상위 9분위 임금도 낮은 관계로 중위 임금과 9분위 임금 거리도 작아 이와 같은 관계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역의 임금 수준 문제이므로,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하는 회귀분석에서는 이 문제가 교정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저임금 지역에서 중위 임금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를 받아 중위 임금과 상위 9분위 임금 간 거리가 좁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표 4-2〉 분위별 로그 시간당임금 차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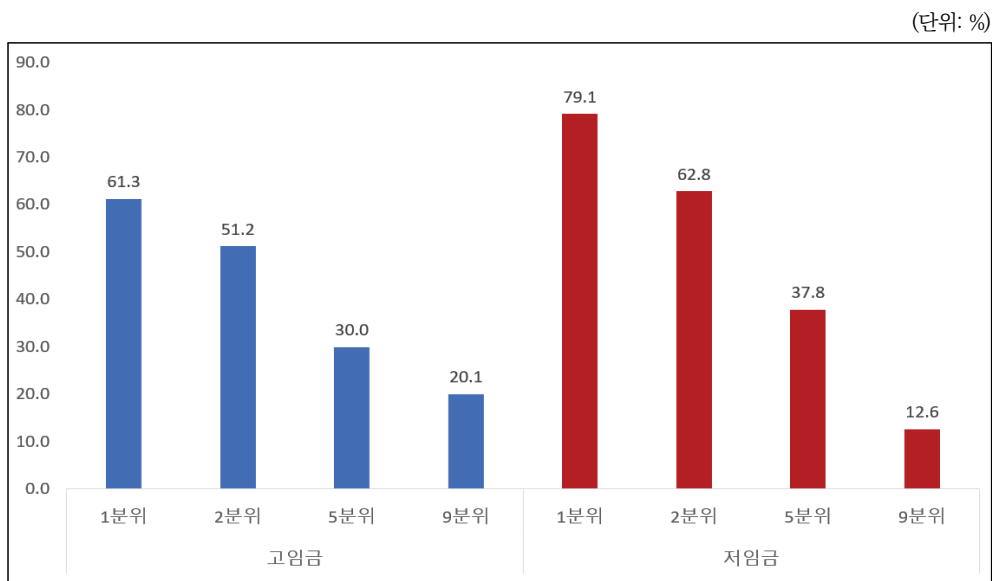
구분	고임금 지역			저임금 지역		
	5분위/1분위	5분위/2분위	9분위/5분위	5분위/1분위	5분위/2분위	9분위/5분위
2008년	0.337	0.233	0.353	0.302	0.206	0.356
2009년	0.329	0.239	0.352	0.267	0.179	0.374
2010년	0.319	0.214	0.388	0.280	0.187	0.368
2011년	0.319	0.222	0.380	0.275	0.176	0.354
2012년	0.327	0.229	0.355	0.280	0.183	0.373
2013년	0.340	0.234	0.342	0.271	0.176	0.352
2014년	0.301	0.222	0.347	0.245	0.170	0.329
2015년	0.301	0.204	0.352	0.273	0.176	0.301
2016년	0.273	0.176	0.388	0.232	0.161	0.317
2017년	0.281	0.193	0.360	0.231	0.146	0.301
2018년	0.266	0.181	0.319	0.220	0.166	0.269
2019년	0.243	0.167	0.318	0.188	0.134	0.268
2020년	0.222	0.143	0.334	0.222	0.155	0.243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08~2020년간 중위 임금이 평균적으로 상위 20개에 속했던 지역을 고임금 지역, 하위 40개에 속했던 지역을 저임금 지역(전체 지역 수는 164개)으로 나눠서 5분위 대 1분위 차이 추이를 보면, 두 지역 모두 격차가 감소해 중하위 불평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격차가 감소한 정도는 코로나 영향이 있는 2020년을 제외하고 보면 2008~2019년간 저임금 지역에서 0.114 로그 포인트, 고임금 지역에서 0.094 로그

포인트 감소해 저임금 지역에서 다소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상위 불평등(9분위 대 5분위)은 고임금 지역에서는 동 기간 0.034 로그 포인트 감소했는데 저임금 지역에서는 0.088 로그 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세 차이 때문에 2008년에만 해도 고임금 지역과 저임금 지역의 중상위 임금불평등 수준은 0.353대 0.356으로 거의 비슷했으나, 2019년에는 각각 0.318과 0.268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게 변화되었다.

[그림 4-9] 고임금 지역과 저임금 지역의 분위별 실질 시간당임금 인상률(2008~2019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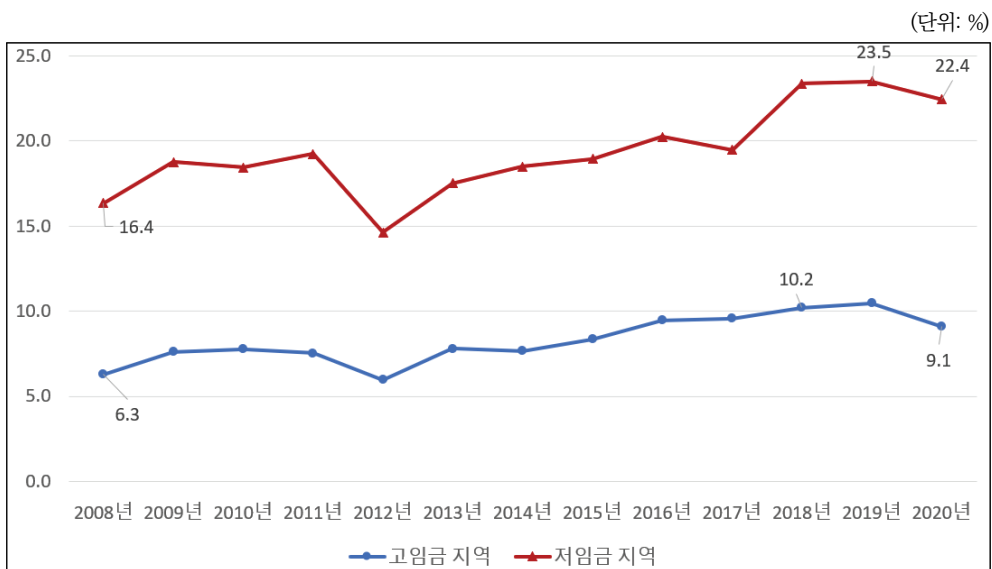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1분위 임금 인상률을 보면 저임금 지역에서는 79.1%가 상승했으며, 고임금 지역에서는 61.3% 증가해 인상률에서 상당한 격차가 나타났다. 그러나, 5분위 임금 역시 저임금 지역에서는 37.8%, 고임금 지역에서는 30.0%로 저임금 지역에서 더 많이 상승해 결과적으로 1분위 대 5분위 격차는 저임금 지역에서 다소 더 축소되는 수준에서 그친 것으로 보인다. 9분위 인상률은 고임금 지역에서 20.1%, 저임금 지역에서 12.6% 증가해 저임금 지역의 인상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며, 여기에 5분위 인상률이 저임금 지역 인상률이 높은 것까지 겹쳐져 고임금 지역보다 저임금 지역에서 현격히 중상위 불평등이 감소할 수 있었다.

최저임금 미만을 추이를 보면 고임금 지역은 최근에 와서 약 10%의 미만을 보이며, 저임금 지역은 20%를 상회하는 미만을 보인다. 파급효과와 같은 간접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고임금 지역의 경우 10% 근방까지, 저임금 지역은 20% 근방까지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다. 이 때문인지 2분위 인상률도 고임금 지역은 51.2%, 저임금 지역은 이보다 11.6%포인트 높은 62.8%로 나타났다.

[그림 4-10] 고임금 지역과 저임금 지역의 최저임금 미만을 추이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이상에서 지역 임금 수준에 따라 불평등의 수준과 불평등 추세가 다를 수 있음을 보았다. 이는 지역 고정효과와 지역별 불평등 추세를 통제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을 추정할 때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Lee(1999)가 지적하는 것처럼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하는 추정 모형에서 중위값 표본오차가 더 클 수 있으므로, 결과를 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표 4-3〉은 중위 임금 기준으로 유효최저임금 변수를 만들어 최저임금의 불평등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이다. 지역 고정효과와 지역 추세를 통제한 모형의 결과를 보면 전 분위에서 모두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상위 분위로 갈수

록 추정계수가 커지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Lee(1999)에서 지적된 것처럼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할 때 중위 임금에서 상당한 표본오차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이를 통제하지 않는 모형이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Autor et al.(2016)을 따라 차분 모형을 추정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Lee(1999)를 따라 지역 고정효과와 추세를 통제하지 않는 모형은 다른 모형들에 비해 하위 분위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추정계수를 보이는 반면, 상위 분위에서 회귀계수가 (+)이면서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표 4-3〉 유효최저임금(중위 임금 기준)의 불평등 지표 영향 회귀분석 결과

구분	(1) 10/ 중위 임금	(2) 20/ 중위 임금	(3) 30/ 중위 임금	(4) 40/ 중위 임금	(5) 60/ 중위 임금	(6) 70/ 중위 임금	(7) 80/ 중위 임금	(8) 90/ 중위 임금
지역 고정효과와 지역 추세 통제								
유효 최저	0.643*** (0.0576)	0.652*** (0.0568)	0.487*** (0.0548)	0.527*** (0.109)	0.579*** (0.110)	0.616*** (0.112)	0.694*** (0.105)	1.164*** (0.264)
유효최저 제곱	0.0547* (0.0303)	0.0943*** (0.0219)	0.0453* (0.0246)	0.0653* (0.0350)	0.152*** (0.0312)	0.166*** (0.0456)	0.242*** (0.0778)	0.547*** (0.197)
R-squared	0.924	0.914	0.855	0.623	0.512	0.724	0.808	0.810
지역 고정효과와 지역 추세 미통제								
유효 최저	0.406*** (0.0580)	0.424*** (0.0440)	0.285*** (0.0295)	0.260*** (0.0503)	-0.0538 (0.0403)	-0.138** (0.0570)	-0.206* (0.112)	-0.113 (0.244)
유효최저 제곱	0.00142 (0.0353)	0.0595** (0.0293)	0.0366** (0.0180)	0.0727*** (0.0274)	0.000615 (0.0254)	-0.0231 (0.0392)	-0.0214 (0.0813)	0.0671 (0.176)
R-squared	0.828	0.804	0.724	0.391	0.166	0.338	0.400	0.402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한 차분 모형								
유효 최저	0.776*** (0.0678)	0.781*** (0.0534)	0.586*** (0.0666)	0.617*** (0.102)	0.646*** (0.0841)	0.678*** (0.0958)	0.745*** (0.118)	1.202*** (0.244)
유효최저 제곱	0.111*** (0.0341)	0.140*** (0.0233)	0.0631** (0.0282)	0.0895** (0.0396)	0.159*** (0.0327)	0.165*** (0.0426)	0.254*** (0.0791)	0.561*** (0.191)
R-squared	0.729	0.589	0.480	0.360	0.299	0.447	0.488	0.601

*** p<0.01, ** p<0.05, * p<0.1

주: 괄호는 로버스트 표준오차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중속변수와 설명변수에 모두 중위 임금이 있어 생기는 오차 문제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영향력 변수를 생성하면 완화될 수 있다. 추정 결과를 보면, 지역 고정효과와 지역 추세를 통제한 경우 상위분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거의 사라지며, 하위 분위 계수 크기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 고정효과와 지역 추세를 통제하지 않으면 중위 임금으로 유효최저임금 변수를 만들 때와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타난다. 지역 고정효과와 추세를 통제한 모형에서는 3분위까지 중하위 불평등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며, 이를 차분모형으로 추정할 경우에는 4분위까지 중하위 불평등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

〈표 4-4〉 유효최저임금(평균 임금 기준)의 불평등 지표 영향 회귀분석 결과

구분	(1) 1분위	(2) 2분위	(3) 3분위	(4) 4분위	(5) 6분위	(6) 7분위	(7) 8분위	(8) 9분위
지역 고정효과와 지역 추세 통제								
유효 최저	0.301*** (0.0680)	0.292*** (0.0707)	0.148** (0.0657)	0.0755 (0.0759)	-0.0646 (0.0637)	-0.141* (0.0835)	-0.227*** (0.0839)	-0.107 (0.186)
유효최저 제곱	0.0168 (0.0264)	0.0333* (0.0199)	-0.00856 (0.0191)	-0.0146 (0.0222)	0.0124 (0.0187)	0.0143 (0.0281)	0.0649 (0.0461)	0.277*** (0.114)
R-squared	0.900	0.877	0.802	0.478	0.412	0.676	0.810	0.848
지역 고정효과와 지역 추세 미통제								
유효 최저	0.430*** (0.0518)	0.414*** (0.0337)	0.257*** (0.0232)	0.204*** (0.0348)	-0.157*** (0.0264)	-0.263*** (0.0465)	-0.331*** (0.112)	-0.228 (0.274)
유효최저 제곱	0.0367 (0.0299)	0.0635*** (0.0215)	0.0307*** (0.00946)	0.0448*** (0.0161)	-0.0211* (0.0117)	-0.0352 (0.0247)	-0.00789 (0.0659)	0.110 (0.161)
R-squared	0.828	0.796	0.712	0.342	0.271	0.479	0.561	0.556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한 차분 모형								
유효 최저	0.389*** (0.0800)	0.385*** (0.0814)	0.209** (0.0968)	0.188* (0.103)	-0.0166 (0.0808)	-0.111 (0.0974)	-0.269*** (0.0992)	-0.158 (0.154)
유효최저 제곱	0.0542** (0.0256)	0.0698*** (0.0242)	0.0134 (0.0268)	0.0226 (0.0304)	0.0238 (0.0233)	0.0176 (0.0297)	0.0531 (0.0426)	0.262*** (0.0942)
R-squared	0.630	0.383	0.260	0.075	0.106	0.312	0.487	0.683

*** p<0.01, ** p<0.05, * p<0.1

주: 괄호는 로버스트 표준오차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표 4-5〉 유효최저임금(중위 임금 기준)의 불평등 지표 영향 회귀분석 결과, 여성

구분	(1) 10/ 중위 임금	(2) 20/ 중위 임금	(3) 30/ 중위 임금	(4) 40/ 중위 임금	(5) 60/ 중위 임금	(6) 70/ 중위 임금	(7) 80/ 중위 임금	(8) 90/ 중위 임금
지역 고정효과와 지역 추세 통제								
유효 최저	0.839*** (0.0933)	0.767*** (0.0847)	0.738*** (0.0533)	0.664*** (0.0685)	0.496*** (0.0615)	0.537*** (0.186)	0.548*** (0.161)	0.763*** (0.214)
유효최저 제곱	0.0722* (0.0390)	0.0634* (0.0375)	0.0794*** (0.0267)	0.0642* (0.0376)	0.0390 (0.0412)	0.0478 (0.0436)	0.114* (0.0594)	0.217** (0.100)
R-squared	0.904	0.923	0.925	0.909	0.808	0.828	0.820	0.776
지역 고정효과와 지역 추세 미통제								
유효 최저	0.335*** (0.0597)	0.307*** (0.0742)	0.313*** (0.0936)	0.192 (0.129)	-0.0745 (0.215)	-0.317 (0.226)	-0.433*** (0.211)	-0.494* (0.297)
유효최저 제곱	-0.0679* (0.0349)	-0.0764** (0.0349)	-0.0479 (0.0366)	-0.0817 (0.0531)	-0.128 (0.0797)	-0.225** (0.0883)	-0.257*** (0.0775)	-0.268*** (0.120)
R-squared	0.783	0.808	0.760	0.653	0.104	0.076	0.121	0.178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한 차분 모형								
유효 최저	0.947*** (0.109)	0.806*** (0.0837)	0.889*** (0.0566)	0.762*** (0.0734)	0.582*** (0.0781)	0.609*** (0.175)	0.639*** (0.150)	0.906*** (0.199)
유효최저 제곱	0.140*** (0.0446)	0.0727 (0.0451)	0.119*** (0.0258)	0.0826* (0.0397)	0.0578 (0.0468)	0.0898* (0.0507)	0.143*** (0.0528)	0.323*** (0.0925)
R-squared	0.667	0.622	0.565	0.449	0.247	0.338	0.407	0.408

*** p<0.01, ** p<0.05, * p<0.1

주: 괄호는 로버스트 표준오차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에 대해서도 동일한 모형을 추정해 보았다. 지역 고정효과와 지역 추세를 통제한 모형에서는 1분위, 2분위, 8분위, 9분위에서 뚜렷하게 추정치가 남성을 포함한 전체 추정 결과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할 때도 지역 고정효과와 추세를 통제한 모형에서는 상위 분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 나타나며, 더 상위로 올라갈수록 계수도 커져, 중위값 기준 유효최저임금 변수를 이용하여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할 경우 최저임금 효과가 과잉 추정되는 방향으로 편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차분한 모형에서는 하위 분위에서만 추정치가 남성을 포함한 전체 추정 결과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 모형에서도 상위분위로 갈수록 추정치가 커져 역시 편의된 추정 결과일 것으로 추측된다.

지역 고정효과와 지역 추세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남성을 포함한 전체 추정 결과보다 계수 절대값이 하위 분위에서 작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3분위까지만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고 4분위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차이도 나타났다.

〈표 4-6〉 유효최저임금(평균 임금 기준)의 불평등 지표 영향 회귀분석 결과, 여성

구분	(1) 1분위	(2) 2분위	(3) 3분위	(4) 4분위	(5) 6분위	(6) 7분위	(7) 8분위	(8) 9분위
지역 고정효과와 지역 추세 통제								
유효 최저	0.476*** (0.107)	0.406*** (0.0811)	0.377*** (0.0622)	0.397*** (0.0865)	0.0579 (0.0834)	0.0894 (0.118)	-0.135 (0.117)	-0.466*** (0.157)
유효최저 제곱	0.0407 (0.0351)	0.0223 (0.0275)	0.0272 (0.0237)	0.0385 (0.0289)	-0.0158 (0.0354)	0.00329 (0.0320)	-0.0143 (0.0392)	-0.0290 (0.0599)
R-squared	0.874	0.890	0.889	0.870	0.766	0.788	0.800	0.770
지역 고정효과와 지역 추세 미통제								
유효 최저	0.322*** (0.0641)	0.253*** (0.0857)	0.236** (0.0975)	0.116 (0.121)	-0.186 (0.193)	-0.438** (0.195)	-0.656*** (0.170)	-0.827*** (0.230)
유효최저 제곱	-0.0238 (0.0258)	-0.0487** (0.0245)	-0.0347 (0.0241)	-0.0617* (0.0323)	-0.111** (0.0502)	-0.184*** (0.0514)	-0.249*** (0.0435)	-0.280*** (0.0629)
R-squared	0.767	0.781	0.720	0.607	0.083	0.102	0.192	0.265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한 차분 모형								
유효 최저	0.580*** (0.135)	0.428*** (0.0816)	0.494*** (0.0832)	0.475*** (0.102)	0.0821 (0.0814)	0.199 (0.137)	-0.0574 (0.123)	-0.419** (0.181)
유효최저 제곱	0.0913** (0.0402)	0.0314 (0.0246)	0.0677*** (0.0258)	0.0637** (0.0313)	0.000829 (0.0361)	0.0455 (0.0388)	0.0180 (0.0367)	0.0225 (0.0624)
R-squared	0.572	0.472	0.320	0.192	0.054	0.193	0.333	0.397

*** p<0.01, ** p<0.05, * p<0.1

주: 괄호는 로버스트 표준오차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평균 임금 기준으로 유효최저임금 변수를 만들어 추정할 경우, 지역 고정효과와 지역 추세를 통제한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의 효과는 역시 남성을 포함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보다 추정치 절대값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하위분위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여주지만, 상위분위에서는 중위 임금 기준일 때와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한 (+) 결과는 모두 사라진다. 중위 임금에서 나타난 편익된 결과는 평균 임금으로 바꿀 때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 수준별로 지역을 구분해볼 때 불평등 수준과 추세가 달라 가급적 지역 고정효과와 추세를 통제하는 모형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유효 최저임금을 작성하고, 지역 고정효과와 지역 추세를 통제한 모형 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다.

정부 지출이 임금과 고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행정, 보건 사회복지업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도 보고하였다. <표 4-4>의 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7> 공공행정·보건사회복지를 제외하고 본 유효최저임금(평균 임금 기준)의 불평등 지표 영향 회귀 분석 결과: 지역 고정효과 통제한 차분모형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유효 최저	0.353*** (0.0933)	0.338*** (0.0935)	0.229** (0.100)	0.275** (0.125)	0.0460 (0.0907)	-0.0197 (0.140)	-0.214** (0.106)	-0.212 (0.144)
유효최저 제곱	0.0323 (0.0328)	0.0432 (0.0289)	0.0162 (0.0309)	0.0382 (0.0348)	0.0317 (0.0239)	0.0361 (0.0397)	0.0674* (0.0404)	0.213*** (0.0741)
R-squared	0.634	0.437	0.252	0.078	0.136	0.336	0.514	0.702

*** p<0.01, ** p<0.05, * p<0.1

주: 괄호는 로버스트 표준오차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표 4-8> 평균 유효최저임금에서 추정된 한계 효과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평균 임금 기준 유효최저, 지역 고정효과, 지역 추세 통제	0.272*** (0.0385)	0.234*** (0.0449)	0.162*** (0.0368)	0.101** (0.0423)
평균 임금 기준 유효최저, 지역 고정효과, 지역 추세 미통제	0.366*** (0.0217)	0.304*** (0.0199)	0.204*** (0.0160)	0.126*** (0.0127)
평균 임금 기준 유효최저, 지역 고정효과, 차분 추정	0.234*** (0.0467)	0.0608** (0.0246)	0.0518** (0.0203)	0.0356 (0.0225)
평균 임금 기준 유효최저, 지역 고정효과, 차분 추정, 공공행정 및 보건사회복지 제외	0.262*** (0.0445)	0.0706** (0.0289)	0.0530** (0.0252)	0.0479** (0.0202)

*** p<0.01, ** p<0.05, * p<0.1

주: 괄호는 로버스트 표준오차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지금까지 본 결과는 회귀계수 추정치여서 β_1 은 부호의 방향을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만, β_2 는 반대로 해석해 주어야 한다. 한계효과가 $\beta_1 + 2\beta_2(w^m - w_{st}(50))$ 인데,

$w^m - w_{st}(50)$ 가 일반적으로 (-)의 값을 갖기 때문이다. 계산의 복잡성 때문에 <표 4-8>에서 주요 추정 모형의 한계 효과를 정리하였다. 한계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유효 최저임금은 전 기간, 전 지역 평균 유효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대입하였다.

한계 효과 추정 결과를 보면, 뚜렷하게 1분위에서 효과가 크고, 중위 임금에 접근할수록 추정치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 고정효과와 지역 추세를 통제하지 않는 모형은 한계 효과 절대치가 큰데, 지역별 임금불평등과 지역 임금 수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하위 분위로 갈수록 추정치의 상향 편의가 나타날 수 있어 생긴 차이일 가능성이 크다. 차분 추정할 경우 지역 고정효과, 지역 추세 통제한 모형에 비해 한계 효과가 전반적으로 작아지는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4분위에서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된다. 4분위는 최저임금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금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효과인 파급효과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차분 모형에서는 4분위까지는 파급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다. 다만, 같은 모형을 공공행정 및 보건 사회복지업을 제외하고 추정할 경우에는 4분위까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파급효과가 관찰되었다.

2. 중하위 임금불평등 변화에서 최저임금의 역할

제2절의 식(4-3)에 따라 중하위 임금불평등 변화에서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추산해 보았다. 분석 시작 시점인 2008년의 최저임금을 이용해 작성한 유효 최저임금, 분석의 끝 시점인 2020년의 최저임금을 이용해 작성한 유효최저임금, 전체 임금 분포를 연도별, 지역별로 20개 분위씩으로 각각 나눠 9분위까지 추정한 유효최저임금의 분위별 회귀계수를 이용해 2020년 해당 분위 개인의 실제 시간당임금 값에 식(4-3)을 빼주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¹²⁾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의 중하위 임금불평등에 대한 영향력은 유효 최저임금 변수로 중위 임금을 사용할 때 2008~2020년간 중하위 임금 불평등 감소의 거의 전부에 가까운 70~80% 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추정치는 상향 편이된 회귀계수 추정치일 가능성이 높다. 중위 임금의 오차에 기인하는 상향 편

12) Autor et al.(2016)의 80쪽 설명과 Lee(1999)의 각주 33을 참조하였다.

의가 적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임금 기준으로 작성된 유효 최저임금으로 추정된 최저임금 설명력은 대략 35% 내외일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최저임금의 중하위 임금불평등(1분위 대 5분위 격차) 변화에서 설명력

구분	2008~2020년 실제 변화	2008~2020년 가상 변화	설명력(%)
중위 임금 기준 유효 최저임금, OLS	0.255	0.184	72.3
중위 임금 기준 유효 최저임금, 차분		0.204	80.0
평균 임금 기준 유효 최저임금, OLS		0.083	32.4
평균 임금 기준 유효 최저임금, 차분		0.092	36.2

주: 〈표 4-3〉, 〈4-4〉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이다.

3. 참고: 월임금에 대한 결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중하위 불평등은 시간당임금으로 보면 감소추세이지만, 월임금으로는 증가추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월임금 기준 중하위 임금 불평등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월중위 임금과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의 로그 차이를 유효최저임금 지표로 하였으며, 나머지 분위도 모두 월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금융위기 이래 고령층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증가폭이 컸던 점을 감안해 15~64세로 분석대상을 제한하였다. 〈표 4-10〉의 분석 결과를 보면 1분위에는 효과가 없을 가능성도 있으며, 2분위부터 4분위까지 격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 대 5분위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더라도 2분위 대 5분위 격차 감소 효과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다.

〈표 4-11〉과 〈표 4-12〉는 각각 시간당임금과 월임금 기준으로 10분위를 구분할 때 각 분위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면, 시간당임금 기준으로는 하위 1분위가 2008년 51.6시간, 코로나19 영향이 있는 2020년은 제외하고 2019년을 보아도 36.1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전일제에 가까운 영역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월임금을 기준으로 분위기를 나누면 하위 1분위는 2008년에는 35.9시간이었으나 빠르게 근로시간이 줄어 2012년부터 20시간대로 시간제가 주축인 영역으로 바뀌며, 2019년에는 평균 19.8시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0〉 유효최저임금(중위 임금 기준)의 불평등 지표 영향 회귀분석 결과, 월임금

	(1) 1분위	(2) 2분위	(3) 3분위	(4) 4분위	(5) 6분위	(6) 7분위	(7) 8분위	(8) 9분위
지역 고정효과와 지역 추세 통제								
유효 최저	1.536 (1.063)	2.053*** (0.564)	2.355*** (0.575)	1.739*** (0.633)	1.015 (1.464)	1.333** (0.669)	-1.251 (1.137)	0.393 (0.640)
유효최저 제곱	0.160 (0.188)	0.219* (0.112)	0.346*** (0.110)	0.128 (0.130)	0.0121 (0.291)	0.105 (0.138)	-0.358 (0.222)	-0.0683 (0.128)
R-squared	0.666	0.809	0.704	0.652	0.603	0.623	0.736	0.799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한 차분 모형								
유효 최저	1.601* (0.924)	1.887*** (0.510)	2.196*** (0.639)	1.346** (0.615)	-0.451 (1.286)	0.208 (0.780)	-0.918 (0.801)	-0.138 (0.761)
유효최저 제곱	0.162 (0.166)	0.196** (0.0963)	0.307** (0.120)	0.0732 (0.126)	-0.254 (0.255)	-0.110 (0.159)	-0.302* (0.156)	-0.174 (0.151)
R-squared	0.291	0.423	0.306	0.511	0.469	0.422	0.371	0.368

*** p<0.01, ** p<0.05, * p<0.1

주: 괄호는 로버스트 표준오차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표 4-11〉 시간당임금 분위별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년	51.6	49.0	47.7	48.6	47.7	46.6	44.2	45.0	43.2	41.2	46.6
2010년	50.8	48.6	47.2	48.4	46.8	47.5	44.4	45.2	43.8	41.1	46.4
2012년	44.7	45.1	46.2	46.5	44.7	43.2	45.2	43.4	42.2	40.8	44.1
2014년	43.2	45.3	45.1	43.9	45.6	42.5	44.1	42.4	42.4	41.0	43.6
2015년	43.1	44.2	45.8	43.4	45.3	42.7	43.9	42.2	42.1	40.6	43.3
2016년	40.7	44.8	43.5	44.7	42.7	45.2	43.3	42.2	41.8	40.3	42.7
2017년	42.5	42.8	43.5	44.5	42.5	45.1	42.7	42.1	41.7	40.0	42.6
2018년	38.2	41.7	42.2	42.3	40.9	42.3	41.2	41.9	40.8	39.3	41.1
2019년	36.1	39.5	41.2	40.5	42.0	41.7	40.9	41.5	40.3	38.9	40.2
2020년	33.2	39.7	39.5	39.2	41.9	40.1	40.4	40.6	39.5	38.2	39.2

주: 3개월 평균 임금, 주당 주당 근로시간을 이용해 시간당임금을 계산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표 4-12〉 월임금 분위별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8년	35.9	47.3	49.0	48.8	49.3	48.2	48.1	47.5	46.7	46.2	46.1
2010년	32.6	46.3	48.7	48.8	49.3	48.3	48.2	47.1	46.9	46.1	46.0
2012년	27.9	43.3	46.1	46.1	47.2	45.8	46.0	45.3	45.1	44.8	43.7
2014년	26.7	43.2	45.6	46.8	46.4	46.8	46.4	45.7	45.3	44.7	43.6
2015년	29.8	43.9	45.5	46.5	45.9	46.9	46.2	46.0	45.2	44.8	43.3
2016년	27.5	42.6	44.2	45.7	45.6	45.9	45.6	45.4	44.7	44.0	42.7
2017년	25.9	42.9	45.0	45.3	46.5	46.0	45.6	45.4	44.8	44.2	42.6
2018년	22.0	39.8	43.0	43.8	44.9	44.5	44.5	44.4	43.7	43.2	41.1
2019년	19.8	38.3	42.3	42.6	43.7	44.3	43.8	43.8	43.2	43.0	40.2
2020년	19.6	36.0	41.4	-	42.9	43.5	43.1	43.1	42.6	42.4	39.2

주: 3개월 평균 임금 기준 구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표 4-13〉 월임금 기준 10분위 구분

(단위: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8년	13.0	12.0	7.4	15.7	2.0	18.0	3.0	9.0	10.8	9.2
2009년	12.1	12.5	7.5	15.7	3.7	16.1	3.0	16.3	3.7	9.4
2010년	10.5	11.0	10.8	12.3	8.3	12.0	10.4	9.6	8.2	6.9
2011년	10.2	10.2	10.5	12.2	8.7	11.8	10.5	10.1	8.5	7.4
2012년	10.3	13.8	15.0	2.2	18.8	0.0	11.3	10.7	9.6	8.3
2013년	15.0	6.1	15.0	4.3	17.3	3.6	9.4	10.0	10.1	9.4
2014년	13.3	8.8	11.6	9.3	12.8	4.7	10.6	9.7	9.6	9.8
2015년	12.4	7.9	11.1	9.3	13.4	12.3	12.1	1.7	10.0	10.0
2016년	10.8	17.2	2.9	19.7	0.0	12.9	12.2	6.4	8.7	9.4
2017년	10.2	13.6	10.0	13.1	3.2	10.7	13.7	6.5	9.2	10.0
2018년	10.7	10.9	9.7	12.0	14.5	2.5	11.8	8.0	13.3	6.7
2019년	10.6	14.0	14.7	1.5	14.4	5.0	10.0	14.7	7.8	7.4
2020년	10.5	13.0	15.0	1.6	14.6	5.6	9.8	14.6	7.8	7.6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단시간 근로가 확산되면서 월급으로 보면 단시간 근로를 하기 때문에 월급이 낮은 사람들이 하위분위에 많이 분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월급 기준 5:1 격차는 시간급 기준 5:1 격차와는 달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시간당임금 기준으로 볼 때는 1분위에서 가장 최저임금의 영향이 크고, 중위분위로 갈수록

영향력이 감소하는데, 월임금으로 볼 때는 1분위에 대한 최저임금의 개선 효과는 불분명하고, 2분위에서 보다 영향이 큰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은 결과는 단지 잠정적인 것일 뿐이다.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서 월임금은 분위 구분하여 활용하기엔 특정 금액 단위에 응답이 몰리는 히핑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2008년, 2009년, 2017년에는 5분위에 10%가 있어야 하지만 겨우 2~3%만이 위치하고 있을 뿐이며, 2016년에는 5분위가 4분위와 구분되지 않는다. 반면에 2012년과 2013년에는 거의 20%에 육박하는 18.8%, 17.3%가 위치하고 있다. 종속변수가 중위 임금 대비 하위 분위의 격차로 표현되기 때문에 5분위 구분이 안정적이지 않은 지역별 고용조사에서는 월임금을 기준으로 한 분석은 단지 참고사항으로 보아야겠다.

제5절 소결

이번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크게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2017년 OECD 중간권에 속했던 최저임금 상대수준(평균 임금 기준)은 2020년이 되면 최상위권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다만, 이번 정부만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된 것은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결정된 2010년 최저임금 2.8%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2010년대에 평균 임금 인상률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은 적은 없었으며, 박근혜 정부 기간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7%를 하회한 적이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빠르게 이어지면서 최저임금과 직접 관련되는 지표라 볼 수 있는 저임금 비중도 OECD 국가들 중 최상위권에서 중간권 정도로 개선되었으며, 중위 임금 대 하위 1분위 격차도 최상위권에서 중간 이하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2008~2020년을 대상으로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해 최저임금의 임금불평등 개선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뚜렷하게 1분위에서 임금불평등 축소 효과가 나타났으며, 중위 임금에 접근할수록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1분위뿐 아니라 3분위까지는 파급효과를 통해 대부분의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불평등 축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추정 결과를 자료에 적합해 볼 때 2008~2020년간 중하위 임금불평등 감소의 최대 70~80%, 적어도 35%

내외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치는 상향 편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아마도 35%에 근접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중하위 임금불평등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이 기간 나타난 중하위 임금 일자리의 대폭적 증가 같은 다른 요인들의 영향도 함께 받은 결과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제5장

인구·가구 구조와 소득분배 변화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5장 인구·가구 구조와 소득분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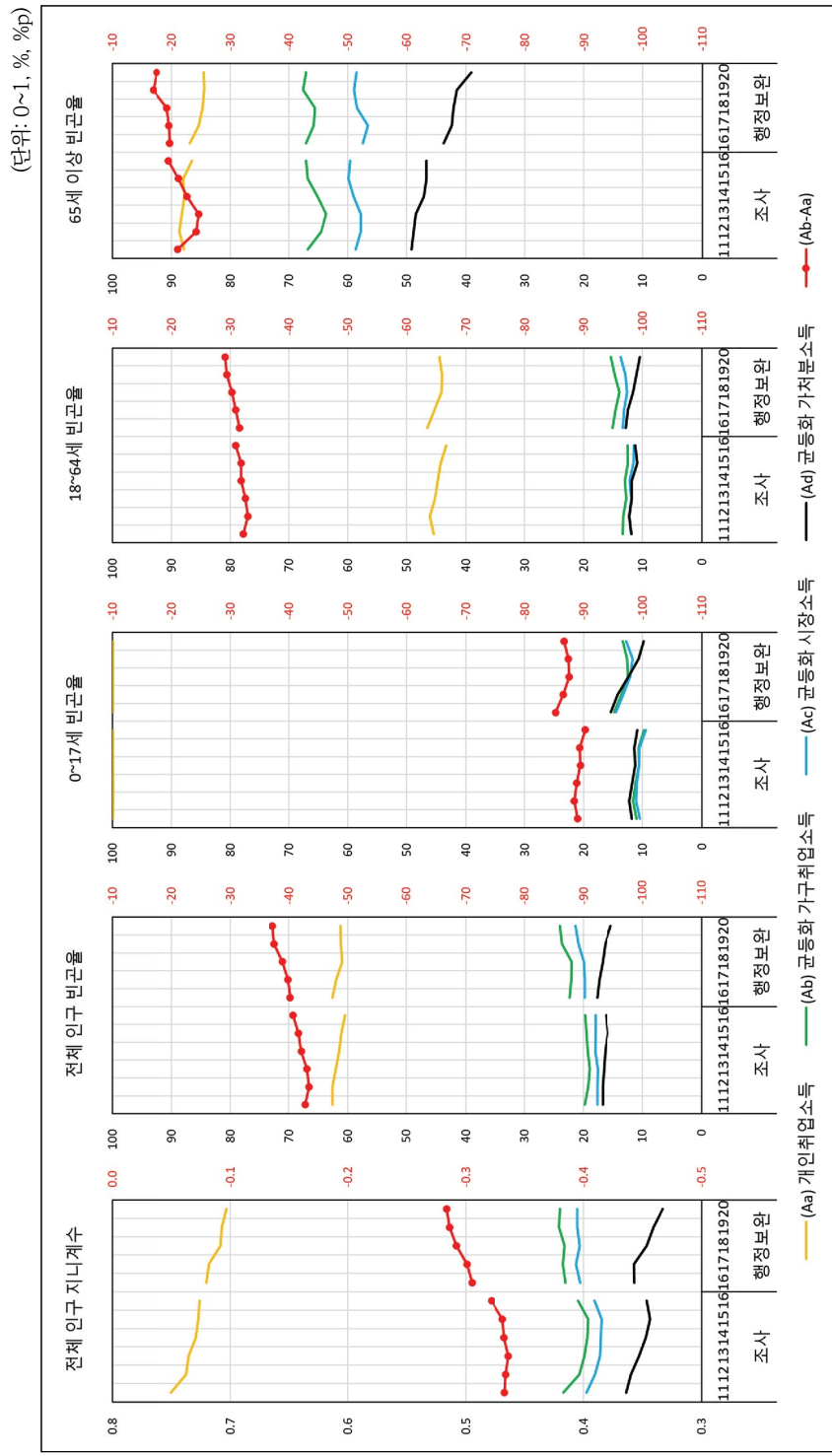
제1절 분석 개요

제5장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그림 5-1]에서 보듯이, 2010년대에 개인취업소득 분배(노랑 실선)가 꾸준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취업소득 분배(초록 실선)는 대체로 정체·악화하였다. 예를 들어, 2016~2020년 전체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와 빈곤율이 각각 0.720에서 0.704로, 62.6%에서 61.3%로 감소하였지만, 전체 인구의 가구취업소득 지니계수와 빈곤율은 각각 0.415에서 0.420으로, 22.3%에서 24.0%로 증가하였다. 즉, 개인취업소득 분배와 가구취업소득 분배의 격차(빨강 실선)가 시간에 따라 축소된 것이다. 이러한 패턴은 18~64세 근로연령층 집단과 65세 이상 노인 집단 내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¹³⁾ 이 장의 목적은 인구·가구 구조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개인취업소득 분배와 가구취업소득 분배의 격차를 설명하는 것이다.

개인취업소득이 없거나 적은 개인과 개인취업소득이 많은 개인이 가구를 구성하여 가구 내에서 소득을 공유하면 취업소득 분배가 개선된다. 예를 들어, 2020년 전체 인구 중 개인취업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은 61.3%였지만, 가구 내에서 취업소득을 공유하여 균등화한 가구취업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은 24.0%였다. 그런데 개인취업소득 분배와 가구취업소득 분배의 격차가 시간에 따라 축소되었다는 [그림 5-1]의 분석 결과는 이와 같은 가구 구성의 분배 효과가 시간에 따라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개인취업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인이 자녀와 동거함으로써 빈곤선을 초과하는 수준의 가구취업소득을 획득하는 사례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변화는 노인의 가구취업소득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노인의 개인취업소득 빈곤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구 구조 변화가 노인의 가구취업소득 및 시장소득 빈곤율을 정체·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3) 0~17세 아동은 경제활동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취업소득 빈곤율이 거의 100%였고, 이들의 가구취업소득 빈곤율은 주로 18~64세 근로연령층의 개인취업소득 빈곤율과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었다.

[그림 5-1] 지니계수 및 빈곤율



주: 균등화 소득은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눈 가구소득을 의미한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증감의 50%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5-5>에 제시하였다.

가구 구조(개인의 가구유형 분포)¹⁴⁾는 인구 구조(개인의 성·연령 분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시간에 따라 1~2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변화는 다음과 같이 인구 구조 변화와 가구 구조 변화가 결합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횡단적으로 비노인에 비해 노인의 1~2인 가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고령화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할수록 전체 인구의 1~2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둘째,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동일할 때, 노인-자녀 동거가 감소하면 노인의 1~2인 가구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전체 인구의 1~2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1~2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변화가 소득 분배에 미친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성·연령 변화의 분배 효과와 성·연령을 통제했을 때 가구원 수 변화의 분배 효과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인구·가구 구조는 개인취업소득 분배와 가구취업소득 분배의 격차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구취업소득 분배와 시장소득 분배의 격차, 시장소득 분배와 가처분소득 분배의 격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노인에 비해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공적이전을 받으므로, 고령화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할수록 공적이전이 전체 인구의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인이 받는 공적이전이 시간에 따라 확대되는 변화가 고령화의 소득분배 악화 효과를 완화할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개인취업소득,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분배에 미친 영향을 함께 분석한다.

제2절 분석 방법

이 장에서는 2011~2020년(소득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 년 소득 데이터와 결합된 연령 및 가구 특성은 $t+1$ 년 3월말을 기준으로 측정되었는데,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모든 분석 결과

14) 가구 구조는 첫째, 전체 가구에서 특정 가구유형에 해당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가구단위 비율과 둘째, 전체 인구에서 특정 가구유형에 속한 개인이 차지하는 개인단위 비율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소득 분배를 개인단위로 분석하므로, 가구 구조 역시 개인단위 비율로 분석한다.

를 소득 연도를 기준으로 보고하였다. 2011~2020년 표본의 개인단위 사례 수는 연도 별로 44,034~56,652명이다.

〈표 5-1〉 재가중 분석 설계

표본의 구성		
(A)	실제 표본	t년 실제 표본
(B)	성·연령 재가중 표본	t년 표본을 재가중하여 특성 분포를 2011년 표본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C)	성·연령×가구원 수 재가중 표본	
(D)	성·연령×아동 가구원 수 재가중 표본	
(E)	성·연령×결혼상태 재가중 표본	
(E1)	성·연령×18~64세의 결혼상태 재가중 표본	
(E2)	성·연령×65세 이상의 결혼상태 재가중 표본	
(F)	성·연령×노인-자녀 동거 재가중 표본	
(F1)	성·연령×65세 이상의 노인-자녀 동거 재가중 표본	
(G)	성·연령×가구유형 재가중 표본	
표본 간 차이		
(A-B)	2011년→t년 Pr(성·연령) 변화의 영향	
(B-C)	2011년→t년 Pr(가구원 수 성·연령) 변화의 영향	
(B-D)	2011년→t년 Pr(아동 가구원 수 성·연령) 변화의 영향	
(B-E)	2011년→t년 Pr(결혼상태 성·연령) 변화의 영향	
(B-E1)	2011년→t년 Pr(18~64세의 결혼상태 성·연령) 변화의 영향	
(B-E2)	2011년→t년 Pr(65세 이상의 결혼상태 성·연령) 변화의 영향	
(B-F)	2011년→t년 Pr(노인-자녀 동거 성·연령) 변화의 영향	
(B-F1)	2011년→t년 Pr(65세 이상의 노인-자녀 동거 성·연령) 변화의 영향	
(B-G)	2011년→t년 Pr(가구유형 성·연령) 변화의 영향	

주: 개별 변수의 범주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2개 이상의 변수를 조합한 특성을 재가중할 때는 필요에 따라 인접 범주를 통합하였다.

- 성: 남성/여성
- 연령: 0~4세/5~9세/10~17세/18~24세/25~29세/30~34세/35~39세/40~44세/45~49세/50~54세/55~59세/60~64세/65~69세/70~74세/75~79세/80세 이상
- 가구원 수: 1명/2명/3명/4명 이상
- 아동 가구원 수: 0명/1명/2명/3명 이상
- 결혼상태: 유배우/무배우
- 노인-자녀 동거: 동거/비동거,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를 활용하여 정의하였다.
- 가구유형: 개인 연령, 0~17세 가구원 수, 18~64세 가구원 수, 65세 이상 가구원 수를 조합하여 28개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범주는 〈부표 5-3〉~〈부표 5-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필자가 작성하였다.

이 장에서는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재가중 방법을 활용한다(〈표 5-1〉 참조). 첫째, $T=t$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

령 분포를 2011년 표본과 동일하게 조정한다(B). 이때 $T=t$ 실제 표본과 재가중 표본 B의 소득분배 차이를 성·연령 변화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T=t$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가구 구조 분포를 2011년 표본과 동일하게 조정한다(C~G). 이때 재가중 표본 B와 재가중 표본 C~G의 소득분배 차이를 성·연령을 통제했을 때 가구 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T=t$ 표본의 특성(G) 분포를 2011년 표본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한 재가중치($\psi_{G=g}^{T=t}$)는 식(5-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로, 재가중 시 가처분소득 중위값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노인 빈곤율에 미친 영향은 첫째, 인구·가구 구조 변화로 인한 노인의 집단 내 소득 분포 변화와 둘째, 인구·가구 구조 변화로 인한 전체 인구의 가처분소득 중위값 및 빈곤선 변화가 결합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표 5-2>의 소득 정의를 활용한다.

$$\psi_{G=g}^{T=t} = \Pr_{G=g}^{T=2011} \div \Pr_{G=g}^{T=t} \quad (5-1)$$

$\Pr_{G=g}^{T=t}$: $T=t$ 표본의 g 번째 범주 비율

<표 5-2> 소득 정의

근로소득	취업소득	일차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가구 간 이전소득, 비영리단체로부터의 이전소득				
(-)사적이전지출: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아동 관련 급여, 장애 관련 급여, 기초보장급여, 근로·자녀장려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지출: 세금, 사회보험료				

자료: 필자가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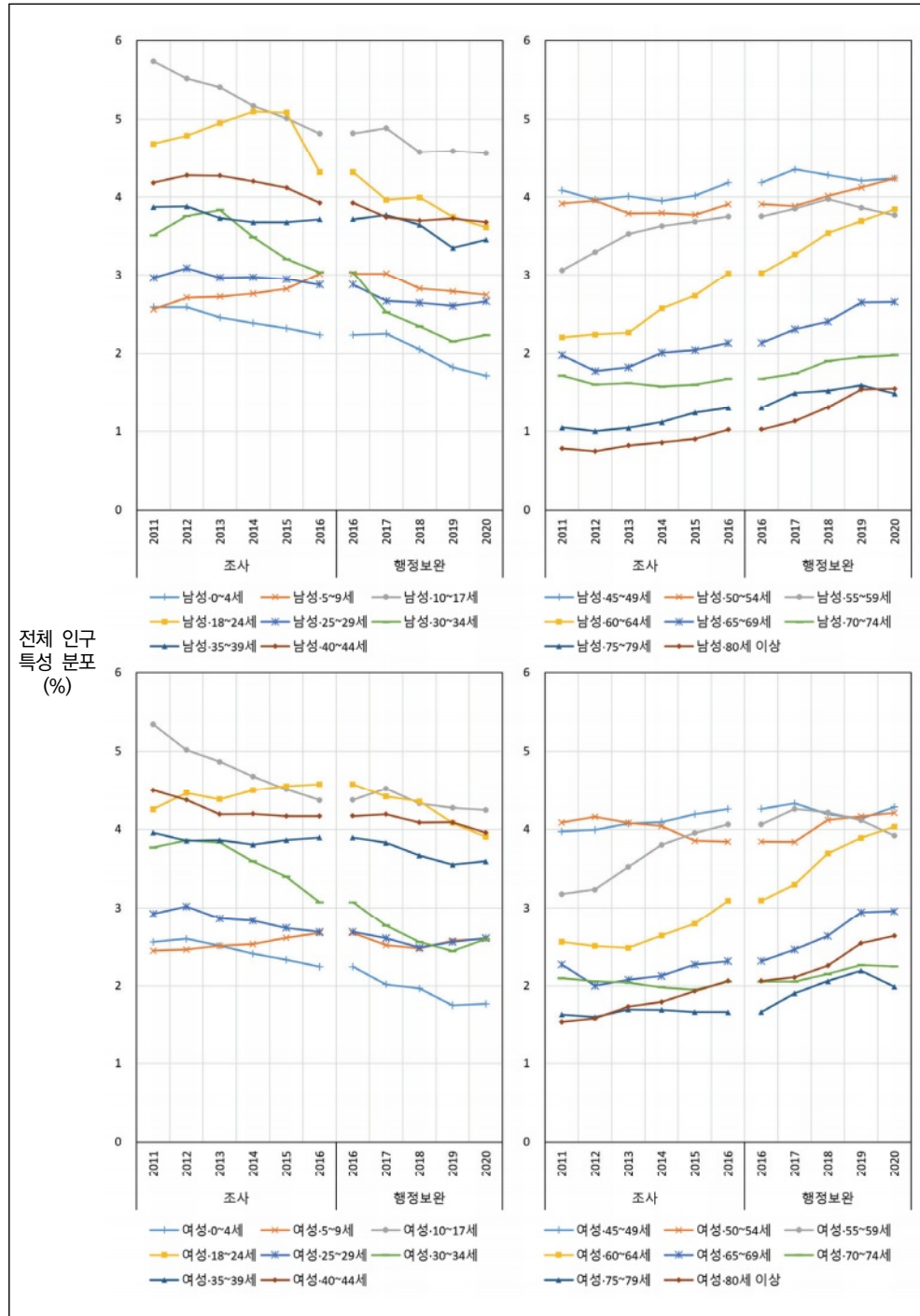
제3절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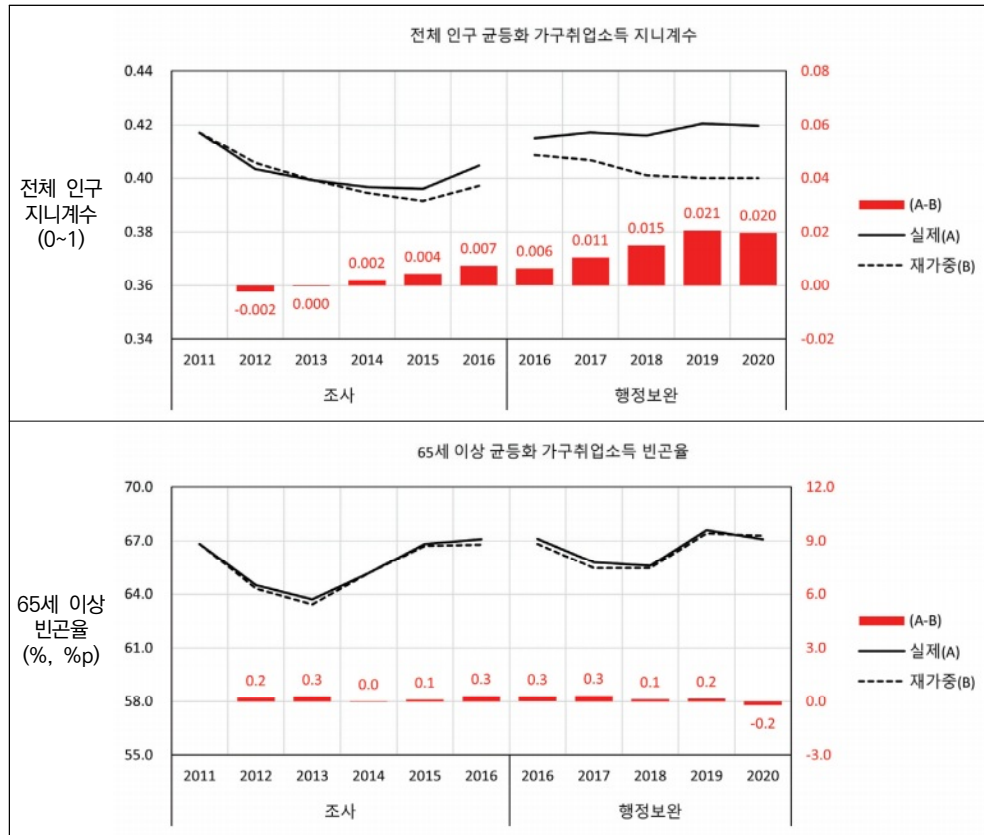
우선 [그림 5-2]와 <표 5-3>에는 성·연령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림 5-2]에서 전체 인구의 특성 분포를 살펴보면, 2011~2020년 전체 인구의 고령화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대체로 40대 중반을 경계로 저연령 집

단의 상대적인 규모는 감소하였고 고연령 집단의 상대적인 규모는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그림 5-2]의 전체 인구 지니계수 및 65세 이상 빈곤율 분석 결과는 이와 같은 성·연령 변화가 가구취업소득 분배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검정 실선은 실제 표본을, 검정 점선은 성·연령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재가중 표본 B를 의미하고, 따라서 (A-B)를 성·연령 변화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실제 표본의 지니계수는 0.420, 재가중 표본 B의 지니계수는 0.400이었으므로, 2011~2020년 성·연령 변화가 2020년 지니계수를 0.020 증가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십여 년간의 고령화가 가구취업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킨 것이다. 한편, 성·연령 변화가 노인 빈곤율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표 5-3〉에는 2011~2020년 성·연령 변화가 2020년 개인취업소득,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및 연령대별 빈곤율에 미친 영향을 모두 보고하였다. 십여 년간의 인구 구조 변화는 전체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분배를 소폭 개선하였지만 가구취업소득 분배를 크게 악화시켰다. 고령화에 따라 개인취업소득 분배가 개선된 것은,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로 개인취업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아동의 상대적인 규모가 감소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구취업소득 수준이 낮고 불평등한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변화는 가구취업소득 분배를 크게 악화시켰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연령 변화가 가구소득 지니계수와 빈곤율을 증가시킨 효과는 가구취업소득(0.020, 2.5%포인트)보다 시장소득(0.015, 2.1%포인트)에게, 시장소득보다 가처분소득(0.007, 1.0%포인트)에게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즉, 재산소득, 사적이전, 공적이전이 인구 구조의 소득분배 악화 효과를 일정하게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가구취업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이 재산소득, 사적이전, 공적이전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성·연령 변화가 전체 인구의 불평등과 빈곤율을 증가시켰지만, 아동, 근로연령층, 노인의 빈곤율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의 소득분배 악화 효과가 주로 노인 비율 증가 때문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성·연령 변화의 분배 효과가 거의 대부분 연령 변화로 설명된다는 점도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령 변화의 영향을 살펴본 〈부표 5-1〉의 분석 결과는 〈표 5-3〉의 분석 결과와 거의 동일하다.

[그림 5-2] 성·연령 변화에 따른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분포 변화





주: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로, 재가중 시 가처분소득 중위값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A) 연도별 실제 표본

(B)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특성 분포의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5-2>에 제시하였다.

<표 5-3> 2011~2020년 성·연령 변화에 따른 2020년 지니계수 및 빈곤율 변화

(단위: 0~1, %p)

구분		개인취업소득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균등화 시장소득	균등화 가처분소득
전체 인구 지니계수		-0.002	0.020	0.015	0.007
빈곤율	전체 인구	-0.9	2.5	2.1	1.0
	0~17세	0.0	-0.7	-0.5	-0.6
	18~64세	-0.9	0.4	0.4	-0.1
	65세 이상	-0.3	-0.2	-0.1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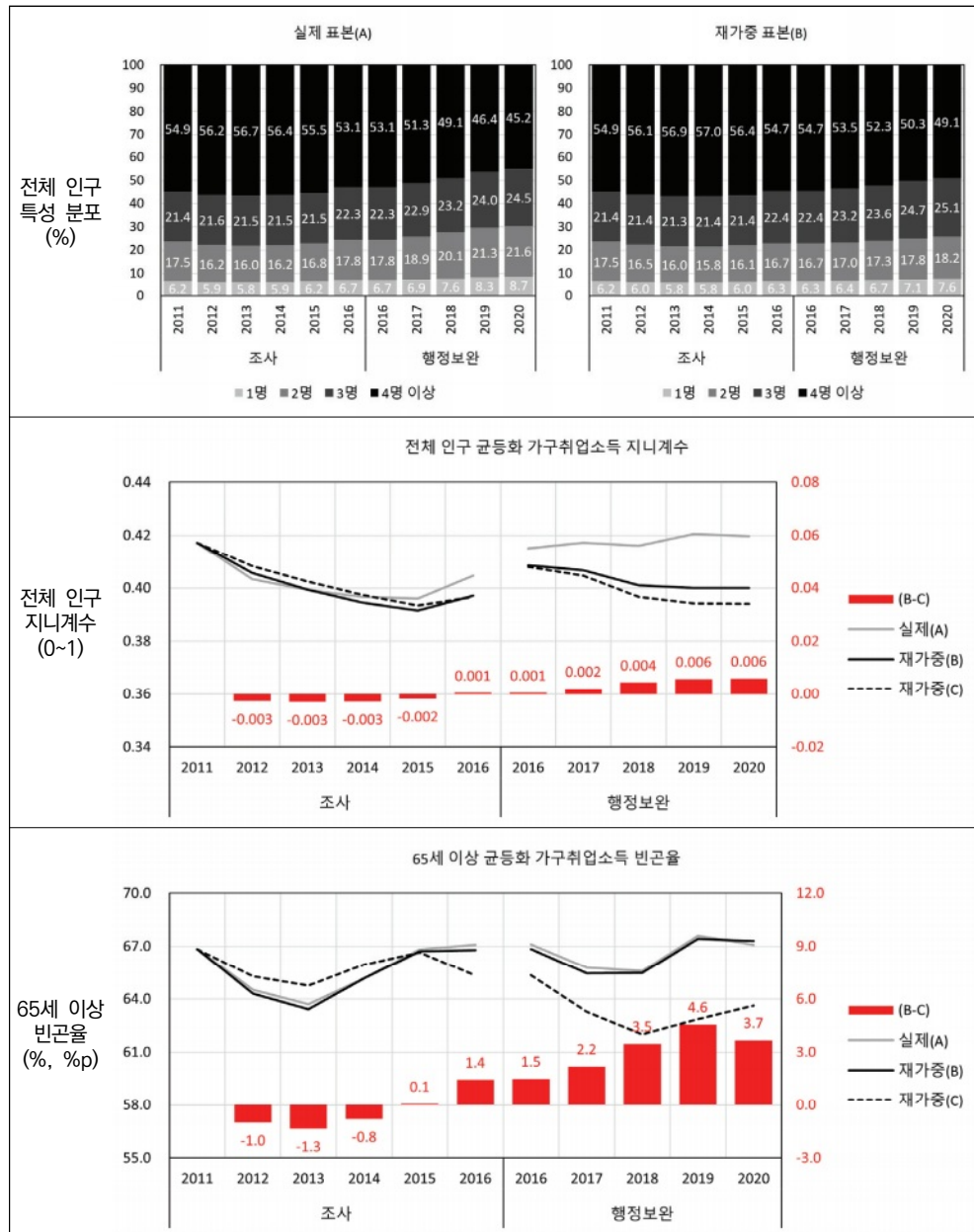
주: 2020년 실제 표본 A의 분배지표에서 재가중 표본 B의 분배지표를 차감한 값이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로, 재가중 시 가처분소득 중위값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A) 연도별 실제 표본

(B)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5-3] 가구원 수 변화에 따른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분포 변화



주: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로, 재가중 시 가처분소득 중위값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A) 연도별 실제 표본

(B)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C)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가구원 수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5-4〉 2011~2020년 가구원 수 변화에 따른 2020년 지니계수 및 빈곤율 변화

(단위: 0~1, %p)

구분		개인취업소득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균등화 시장소득	균등화 가처분소득
전체 인구 지니계수		-0.002	0.006	0.005	0.003
빈곤율	전체 인구	0.0	0.7	0.6	0.5
	0~17세	0.0	-0.1	-0.2	-0.1
	18~64세	0.0	0.4	0.3	0.3
	65세 이상	0.1	3.7	3.4	2.3

주: 2020년 재가중 표본 B의 분배지표에서 재가중 표본 C의 분배지표를 차감한 값이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로, 재가중 시 가처분소득 중위값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B)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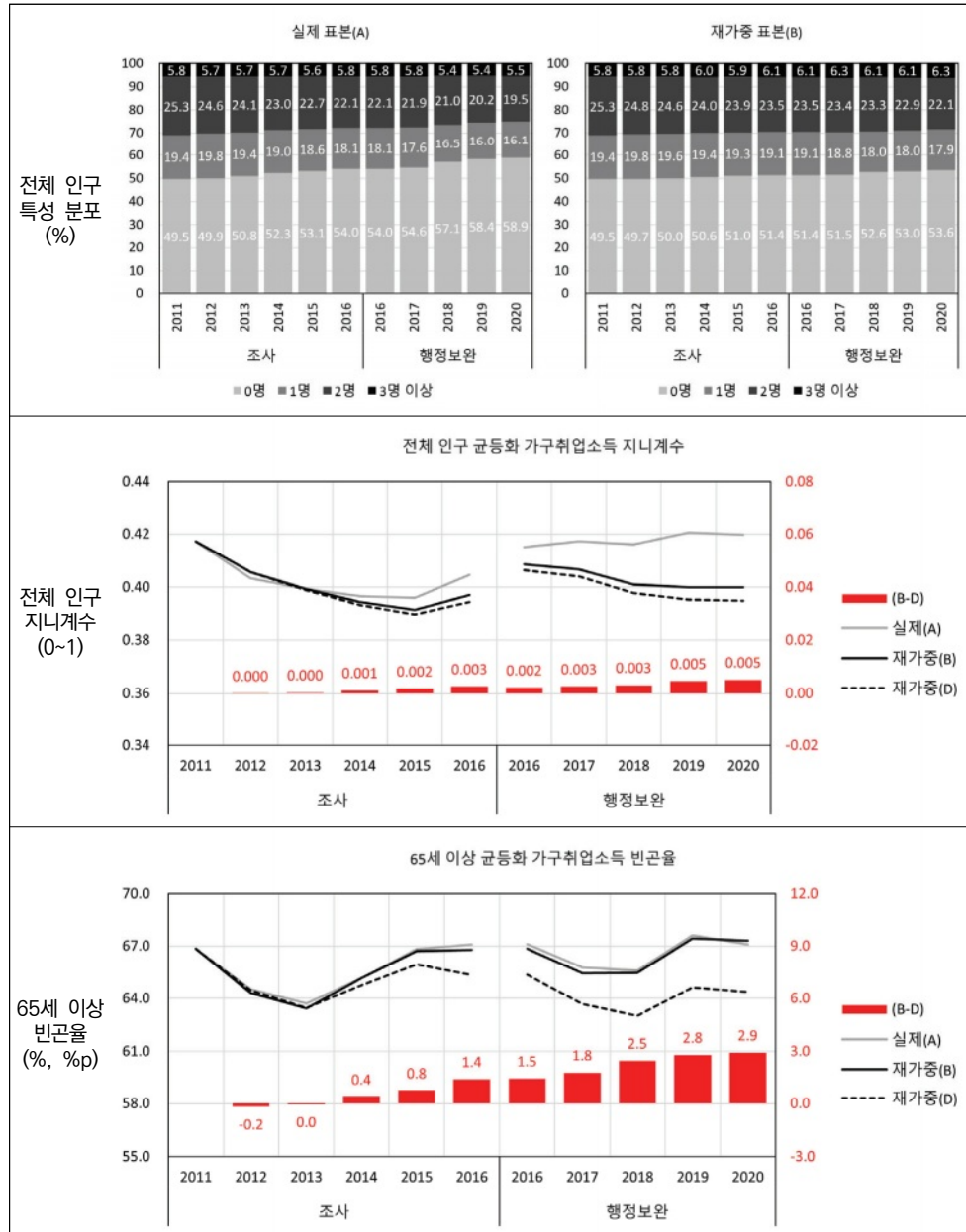
(C)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가구원 수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5-3〕과 〈표 5-4〉에는 가구원 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2011~2020년 전체 인구의 1인 가구 비율은 6.2%에서 8.7%로, 2인 가구 비율은 17.5%에서 21.6%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구 규모가 감소한 변화는 부분적으로 상대적으로 1~2인 가구 비율이 높은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인구 구조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성·연령을 2011년과 동일하게 통제하고 살펴보면, 2011~2020년 1인 가구 비율과 2인 가구 비율은 각각 6.2%에서 7.6%로, 17.5%에서 18.2%로 증가하였다. 즉, 인구 구조를 통제하더라도 가구의 소규모화 현상이 관찰된 것이다.

가구원 수 변화는 소득분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011~2020년 가구원 수 변화는 2020년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각각 0.006, 0.005, 0.003 증가시켰고, 2020년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을 각각 0.7%포인트, 0.6%포인트, 0.5%포인트 증가시켰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가구원 수 변화가 노인의 빈곤율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1~2020년 가구원 수 변화는 2020년 노인의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을 각각 3.7%포인트, 3.4%포인트, 2.3%포인트 증가시켰다. 노인의 실제 가구취업소득 빈곤율은 2016~2020년 67.1%로 거의 변화하지 않았는데, 성·연령·가구원 수를 2011년과 동일하게 통제하면 2016년 65.3%에서 2020년 63.6%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구의 소규모화가 2010년대 노인 빈곤율을 증가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5-4] 아동 가구원 수 변화에 따른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분포 변화



주: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로, 재가중 시 가처분소득 중위값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A) 연도별 실제 표본

(B)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D)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아동 가구원 수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5-5〉 2011~2020년 아동 가구원 수 변화에 따른 2020년 지니계수 및 빈곤율 변화

(단위: 0~1, %p)

구분		개인취업소득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균등화 시장소득	균등화 가처분소득
전체 인구 지니계수		-0.002	0.005	0.004	0.003
빈곤율	전체 인구	-0.2	0.5	0.4	0.3
	0~17세	0.0	0.2	0.2	0.2
	18~64세	-0.3	0.1	0.1	0.1
	65세 이상	0.1	2.9	2.5	1.8

주: 2020년 재가중 표본 B의 분배지표에서 재가중 표본 D의 분배지표를 차감한 값이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로, 재가중 시 가처분소득 중위값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B)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D)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아동 가구원 수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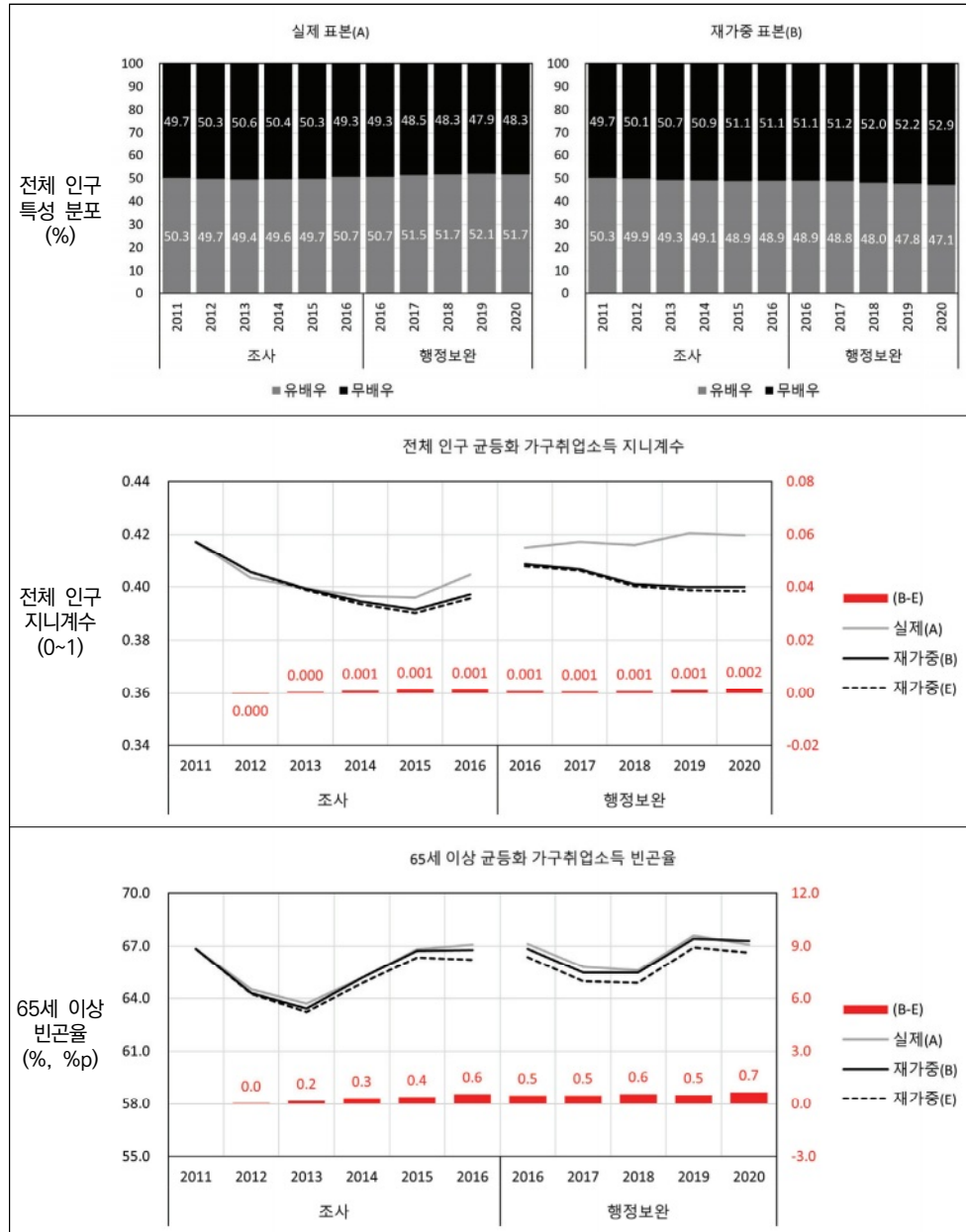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5-4〕와 〈표 5-5〉에서는 아동 가구원 수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연령을 2011년과 동일하게 통제했을 때, 2011~2020년 아동 가구원이 0명인 비율은 49.5%에서 53.6%로 증가하였고, 1명인 비율과 2명인 비율은 각각 19.4%에서 17.9%로, 25.3%에서 22.1%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아동 가구원 수 감소는 주로 출산율 하락의 영향을 반영하지만, 부분적으로 3세대 가구 감소와 같은 가구 구성 행위의 변화를 반영하기도 한다.

아동 가구원 수 감소는 가구소득 분배를 악화시켰다. 2011~2020년 아동 가구원 수 변화는 2020년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각각 0.005, 0.004, 0.003 증가시켰고, 2020년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을 각각 0.5%포인트, 0.4%포인트, 0.3%포인트 증가시켰다. 또한 2011~2020년 아동 가구원 수 변화는 2020년 노인의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을 각각 2.9%포인트, 2.5%포인트, 1.8%포인트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나, 3세대 가구 감소가 노인 빈곤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아동 가구원 수 감소가 가구소득 분배를 악화시킨 것은, 대체로 아동 가구원이 존재하지 않는 가구보다 아동 가구원이 1~2명 존재하는 가구의 가구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동질적이기 때문이다.¹⁵⁾

15) 〈표 5-5〉는 아동 가구원 수와 가구소득 분포의 관계를 2020년과 동일하게 고정할 때 2011~2020년 아동 가구원 수 감소가 2020년 가구소득 분배를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출산율 하락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으므로(신윤정 외, 2021, p.134), 이 연구의 분석 결과로부터 저출산이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해석할 때는 그 전체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득계층별 출산율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5-5] 결혼상태 변화에 따른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분포 변화



주: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증위값의 50%로, 재가중 시 가처분소득 증위값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A) 연도별 실제 표본

(B)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E)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결혼상태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5-6〉 2011~2020년 결혼상태 변화에 따른 2020년 지니계수 및 빈곤율 변화

(단위: 0~1, %p)

구분		개인취업소득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균등화 시장소득	균등화 가처분소득
전체 인구 지니계수		-0.001	0.002	0.001	0.000
빈곤율	전체 인구	0.3	0.5	0.3	0.3
	0~17세	0.0	0.1	0.0	0.2
	18~64세	0.4	0.5	0.4	0.4
	65세 이상	0.2	0.7	0.3	0.1

주: 2020년 재가중 표본 B의 분배지표에서 재가중 표본 E의 분배지표를 차감한 값이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로, 재가중 시 가처분소득 중위값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B)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E)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결혼상태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5-7〉 2011~2020년 18~64세의 결혼상태 변화에 따른 2020년 지니계수 및 빈곤율 변화

(단위: 0~1, %p)

구분		개인취업소득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균등화 시장소득	균등화 가처분소득
전체 인구 지니계수		-0.001	0.001	0.001	0.001
빈곤율	전체 인구	0.3	0.4	0.3	0.3
	0~17세	0.0	0.1	0.0	0.2
	18~64세	0.4	0.5	0.4	0.4
	65세 이상	0.0	0.1	0.0	0.3

주: 2020년 재가중 표본 B의 분배지표에서 재가중 표본 E1의 분배지표를 차감한 값이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로, 재가중 시 가처분소득 중위값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B)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E1)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18~64세의 결혼상태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특성 분포는 [부도 5-1]에 제시하였다.

〈표 5-8〉 2011~2020년 65세 이상의 결혼상태 변화에 따른 2020년 지니계수 및 빈곤율 변화

(단위: 0~1, %p)

구분		개인취업소득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균등화 시장소득	균등화 가처분소득
전체 인구 지니계수		0.000	0.000	0.000	0.000
빈곤율	전체 인구	0.0	0.1	0.0	0.0
	0~17세	0.0	0.0	0.0	0.0
	18~64세	0.0	0.0	0.0	0.0
	65세 이상	0.1	0.5	0.3	-0.2

주: 2020년 재가중 표본 B의 분배지표에서 재가중 표본 E2의 분배지표를 차감한 값이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로, 재가중 시 가처분소득 중위값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B)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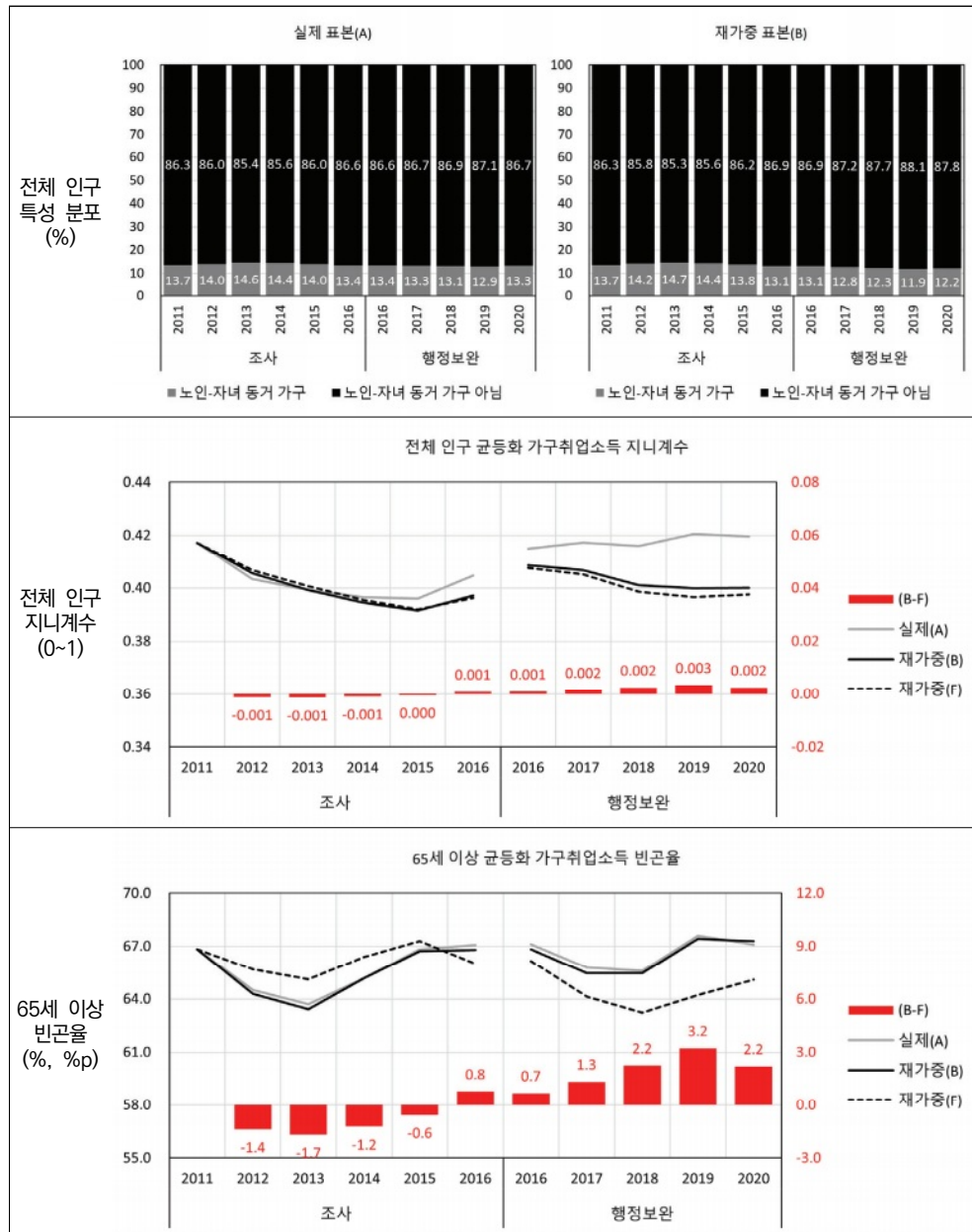
(E2)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65세 이상의 결혼상태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특성 분포는 [부도 5-2]에 제시하였다.

[그림 5-5]와 <표 5-6>~<표 5-8>에서는 결혼상태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연령을 2011년과 동일하게 통제했을 때, 2011~2020년 유배우 비율이 50.3%에서 47.1%로 감소하였다. <표 5-6>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결혼상태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결혼상태 변화는 근로연령층과 노인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혼·비혼·만혼의 확산으로 근로연령층의 유배우 비율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지만([부도 5-1] 참조), 기대수명 증대로 노인의 유배우 비율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기 때문이다([부도 5-2] 참조). 이에 <표 5-7>에서는 18~64세의 결혼상태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표 5-8>에서는 65세 이상의 결혼상태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5-7>에 따르면, 근로연령층의 유배우 비율 감소가 전체 인구의 빈곤율을 소폭 증가시켰지만 그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 <표 5-8>에 따르면, 노인의 유배우 비율 증가가 노인의 가구취업소득 및 시장소득 빈곤율을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 증가시켰지만 가처분소득 빈곤율을 0.2%포인트 감소시켰다. 노인의 유배우 비율 증가가 노인의 가구취업소득 및 시장소득 빈곤율을 증가시킨 것은 유배우 노인이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일 것으로, 노인의 유배우 비율 증가가 노인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을 감소시킨 것은 유배우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단, 이러한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는 점을 언급해둔다.

[그림 5-6]과 <표 5-9>~<표 5-10>에서는 노인-자녀 동거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연령을 2011년과 동일하게 통제했을 때, 전체 인구 중 노인-자녀 동거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은 13.7%에서 12.2%로 감소하였고([그림 5-6] 참조), 65세 이상 인구 중 노인-자녀 동거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은 33.3%에서 28.4%로 감소하였다([부도 5-3] 참조). 이와 같은 노인-자녀 동거 감소는 전체 인구의 가구소득 분배를 소폭 악화시켰고, 노인의 가구소득 빈곤율을 비교적 크게 증가시켰다. <표 5-9>를 살펴보면, 2011~2020년 노인-자녀 동거 감소는 2020년 전체 인구의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을 0.1~0.2%포인트 증가시켰고, 2020년 노인의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을 1.6~2.2%포인트 증가시켰다. <표 5-10>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자녀 동거 변화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1~2020년 65세 이상의 노인-자녀 동거 감소가 2020년 노인의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을 1.8~2.5%포인트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6] 노인-자녀 동거 변화에 따른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분포 변화



주: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로, 재가중 시 가처분소득 중위값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A) 연도별 실제 표본

(B)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F)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노인-자녀 동거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5-9〉 2011~2020년 노인-자녀 동거 변화에 따른 2020년 지니계수 및 빈곤율 변화

(단위: 0~1, %p)

구분		개인취업소득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균등화 시장소득	균등화 가처분소득
전체 인구 지니계수		0.000	0.002	0.002	0.001
빈곤율	전체 인구	0.0	0.2	0.2	0.1
	0~17세	0.0	-0.2	-0.3	-0.2
	18~64세	0.0	0.0	-0.1	-0.1
	65세 이상	0.0	2.2	2.0	1.6

주: 2020년 재가중 표본 B의 분배지표에서 재가중 표본 F의 분배지표를 차감한 값이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로, 재가중 시 가처분소득 중위값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B)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F)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노인-자녀 동거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5-10〉 2011~2020년 65세 이상의 노인-자녀 동거 변화에 따른 2020년 지니계수 및 빈곤율 변화

(단위: 0~1, %p)

구분		개인취업소득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균등화 시장소득	균등화 가처분소득
전체 인구 지니계수		0.000	0.003	0.002	0.001
빈곤율	전체 인구	0.0	0.3	0.2	0.2
	0~17세	0.0	0.0	-0.1	-0.1
	18~64세	0.0	0.0	-0.1	-0.1
	65세 이상	0.0	2.5	2.3	1.8

주: 2020년 재가중 표본 B의 분배지표에서 재가중 표본 F1의 분배지표를 차감한 값이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로, 재가중 시 가처분소득 중위값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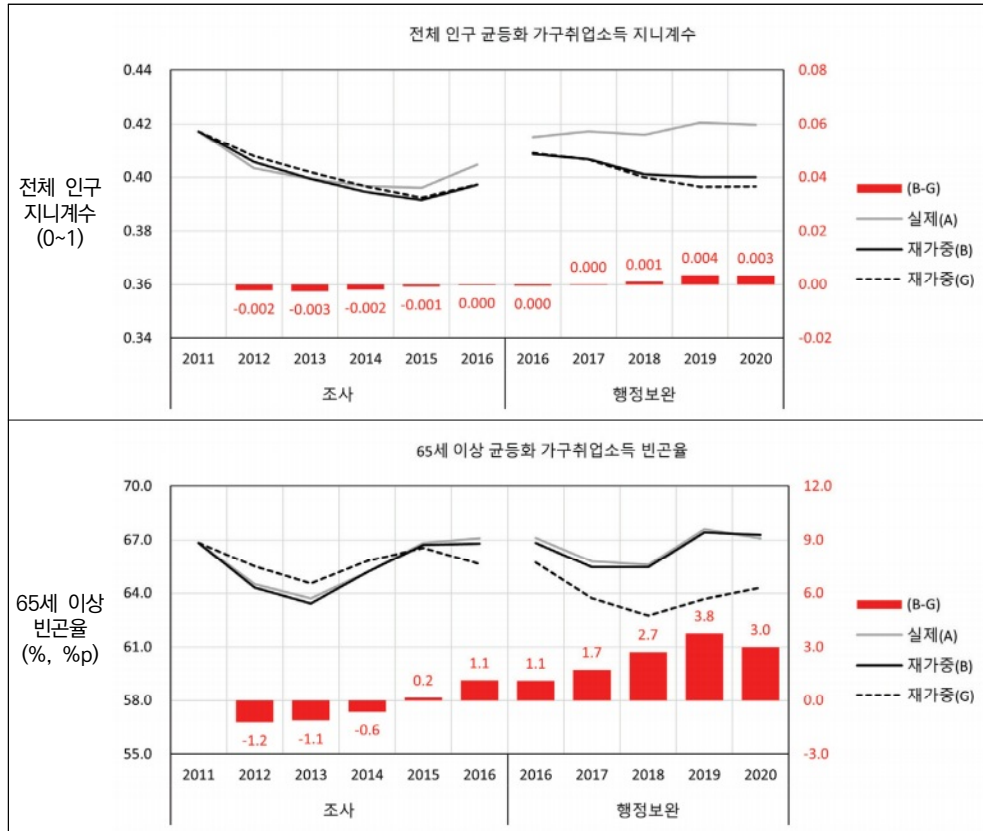
(B)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F1)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65세 이상의 노인-자녀 동거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특성 분포는 [부표 5-3]에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림 5-7]과 〈표 5-11〉에서는 가구유형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가구유형은 개인 연령, 0~17세 가구원 수, 18~64세 가구원 수, 65세 이상 가구원 수를 조합하여 구성하였으므로, 대체로 출산율 하락, 기대수명 증가, 이혼·비혼·만혼 확산, 노인-자녀 동거 감소 등에 따른 다양한 가구 구성 변화를 요약하여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연령을 2011년과 동일하게 통제했을 때, 2011~2020년 18~34세·성인 가구원 2명 이상·아동 가구원 0명·노인 가구원 0명 집단의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1.8%포인트, 〈부표 5-4〉 참조), 18~34세·성인 가구원 1명 이상·아동 가구원 1명 이상·노인 가구원 0명 집단의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2.1%포인트, 〈부표 5-4〉 참조).

[그림 5-7] 가구유형 변화에 따른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분포 변화



주: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로, 재가중 시 가처분소득 중위값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A) 연도별 실제 표본

(B)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G)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가구유형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특성 분포는 <부표 5-3>~<부표 5-4>에 제시하였다.

가구유형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2011~2020년 가구유형 변화는 2020년 전체 인구의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빈곤율을 각각 0.002~0.003, 0.4%포인트 증가시켰고, 2020년 노인의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을 2.0~3.0%포인트 증가시켰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를 통제했을 때 다양한 가구 구성 행위의 변화가 전체 인구의 소득분배를 소폭 악화시켰고 노인의 빈곤율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5-11〉 2011~2020년 가구유형 변화에 따른 2020년 지니계수 및 빈곤율 변화

(단위: 0~1, %p)

구분		개인취업소득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균등화 시장소득	균등화 가처분소득
전체 인구 지니계수		-0.002	0.003	0.003	0.002
빈곤율	전체 인구	0.1	0.4	0.4	0.4
	0~17세	0.0	-0.8	-0.8	-0.3
	18~64세	0.0	0.3	0.3	0.3
	65세 이상	0.2	3.0	2.7	2.0

주: 2020년 재가중 표본 B의 분배지표에서 재가중 표본 G의 분배지표를 차감한 값이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로, 재가중 시 가처분소득 중위값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B)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G)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가구유형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5-12〉에는 재가중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2010년대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노인 비율이 증가하는 방향의 인구 구조 변화는 주로 전체 인구의 가구소득 분배를 악화시켰다. 2011~2020년 성·연령 변화는 2020년 전체 인구의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빈곤율을 각각 0.007~0.020, 1.0~2.5%포인트 증가시켰다. 또한 인구 구조를 통제했을 때 가구의 소규모화, 노인-자녀 동거 감소 등과 같은 가구 구조 변화는 주로 노인의 빈곤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20년 가구원 수 변화는 2020년 노인의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을 각각 2.3~3.7%포인트 증가시켰고, 2011~2020년 노인-자녀 동거 변화는 2020년 노인의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을 각각 1.6~2.2%포인트 증가시켰다. 가구 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본 결과, 대체로 가구원 수 변화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가구 구조 변화의 소득분배 악화 효과를 주로 가구원 수 감소로 포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성·연령·가구원 수 변화의 영향을 종합하면, 2011~2020년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2020년 전체 인구의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빈곤율을 각각 0.010~0.026, 1.5~3.2%포인트 증가시켰고, 2020년 노인의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을 1.9~3.5%포인트 증가시켰다.

〈표 5-12〉 2011~2020년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2020년 지니계수 및 빈곤율 변화

(단위: 0~1, %p)

구분		(a) 성·연령 변화의 영향	성·연령 통제 시					(a+b) 성·연령 ·가구원 수 변화의 영향
			(b) 가구원 수 변화의 영향	(c) 아동 가구원 수 변화의 영향	(d) 결혼상태 변화의 영향	(e) 노인·자 녀 동거 변화의 영향	(f) 가구유형 변화의 영향	
개인 취업 소득	전체 인구 지니계수	-0.002	-0.002	-0.002	-0.001	0.000	-0.002	-0.004
	빈곤율	전체 인구	-0.9	0.0	-0.2	0.3	0.0	-0.9
		0~17세	0.0	0.0	0.0	0.0	0.0	0.0
		18~64세	-0.9	0.0	-0.3	0.4	0.0	-1.0
		65세 이상	-0.3	0.1	0.1	0.2	0.0	-0.2
균등화 가구 취업 소득	전체 인구 지니계수	0.020	0.006	0.005	0.002	0.002	0.003	0.026
	빈곤율	전체 인구	2.5	0.7	0.5	0.5	0.2	3.2
		0~17세	-0.7	-0.1	0.2	0.1	-0.2	-0.8
		18~64세	0.4	0.4	0.1	0.5	0.0	0.8
		65세 이상	-0.2	3.7	2.9	0.7	3.0	3.5
균등화 시장 소득	전체 인구 지니계수	0.015	0.005	0.004	0.001	0.002	0.003	0.019
	빈곤율	전체 인구	2.1	0.6	0.4	0.3	0.2	2.7
		0~17세	-0.5	-0.2	0.2	0.0	-0.3	-0.8
		18~64세	0.4	0.3	0.1	0.4	-0.1	0.6
		65세 이상	-0.1	3.4	2.5	0.3	2.0	3.3
균등화 가처분 소득	전체 인구 지니계수	0.007	0.003	0.003	0.000	0.001	0.002	0.010
	빈곤율	전체 인구	1.0	0.5	0.3	0.3	0.1	1.5
		0~17세	-0.6	-0.1	0.2	0.2	-0.2	-0.7
		18~64세	-0.1	0.3	0.1	0.4	-0.1	0.2
		65세 이상	-0.4	2.3	1.8	0.1	1.6	1.9

주: 제3절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로, 재가 중 시 가처분소득 중위값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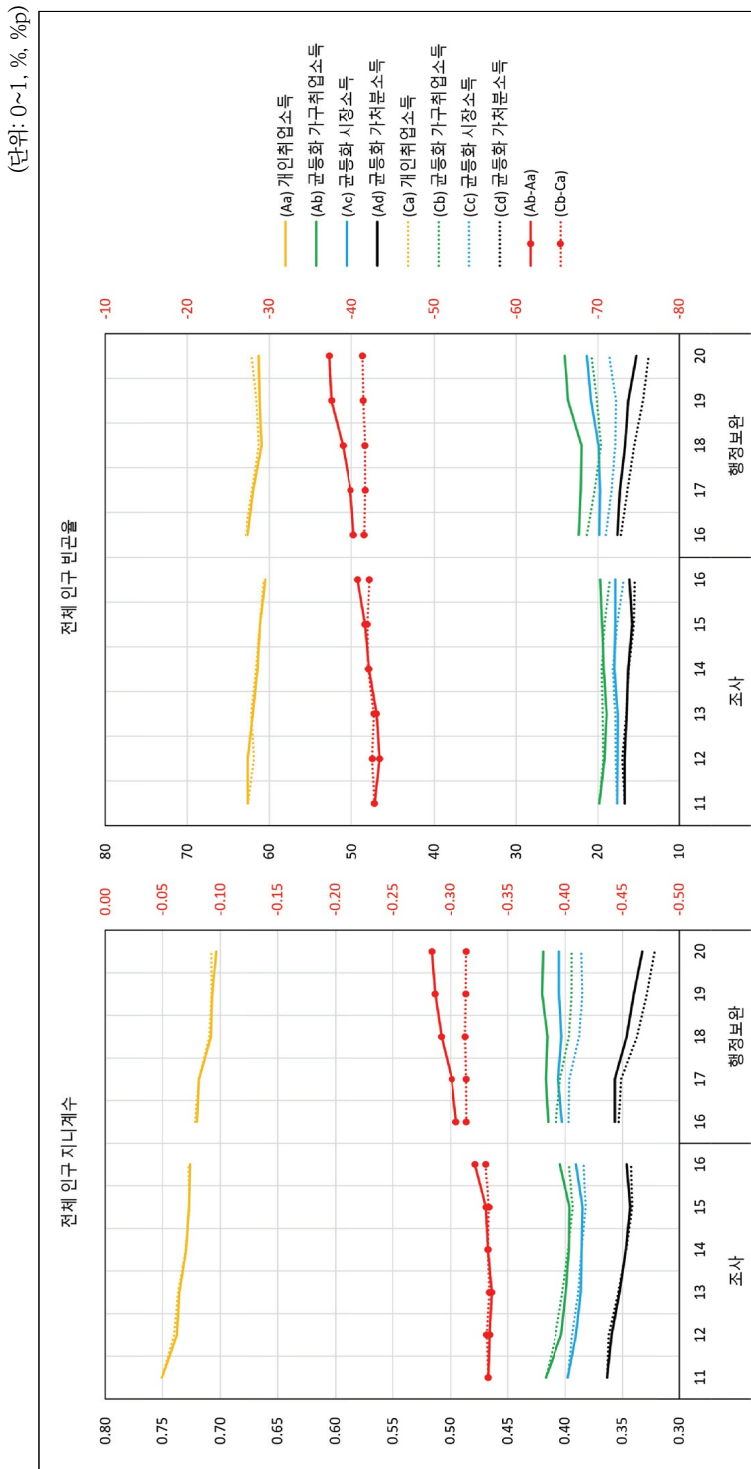
[그림 5-8]과 [그림 5-9]에는 성·연령·가구원 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실선은 실제 표본의 분배지표를, 점선은 성·연령·가구원 수 재가중 표본 C의 분배지표를, 실선과 점선의 차이는 성·연령·가구원 수 변화

의 영향을 의미한다. 그림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2010년대 소득분배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인구·가구 구조 변화는 주로 개인취업소득 분배보다 가구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표본과 재가중 표본 C의 개인취업소득 분배지표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노랑 실선, 노랑 점선), 이는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2010년대 개인취업소득 분배 개선 추이를 그다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제2장~제4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0년대 개인취업소득 분배 개선에는 고용률 증가, 일자리 질 향상,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시장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인구·가구 구조 변화를 통제했을 때 2018년 이후 전체 인구와 근로연령층의 개인취업소득 분배가 정체·악화하는 추이가 관찰되었다. 이는 2018~2020년 개인취업소득 분배가 정체·악화된 원인을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최근 노동시장 불평등이 확대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2010년대에 개인취업소득 분배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취업소득 및 시장소득 분배가 정체·악화된 변화는 거의 대부분 인구·가구 구조 변화로 설명된다. 인구·가구 구조 변화를 통제하면, 개인취업소득 분배와 마찬가지로 가구취업소득 및 시장소득 분배가 개선된 추이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패턴은 개인취업소득 분배지표와 가구취업소득 분배지표의 차이로부터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을 살펴보면, 실제 표본의 개인취업소득 분배지표와 가구취업소득 분배지표의 격차가 시간에 따라 축소되었지만(빨강 실선), 인구·가구 구조 변화를 통제하면 개인취업소득 분배지표와 가구취업소득 분배지표의 격차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빨강 점선). 이러한 분석 결과는 2010년대 가구취업소득 및 시장소득 분배가 정체·악화된 원인이 노동시장 변화가 아니라 인구·가구 구조 변화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최근 2~3년을 제외하면, 2010년대 노동시장이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노인 비율이 증가하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전체 인구의 가구소득 분배가 악화하였고, 가구 규모가 축소되고 노인-자녀 동거가 감소하는 가구 구조 변화로 인해 노인의 가구소득 빈곤율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인구·가구 구조 변화의 영향을 통제하면, 개인취업소득 분배가 개선된 만큼 거의 그대로 가구취업소득 분배가 개선되었다. 이는 노동시장 불평등을 축소하는 정책이 개인취업소득 분배뿐만 아니라 가구소득 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림 5-8] 성·연령·가구원 수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및 빈곤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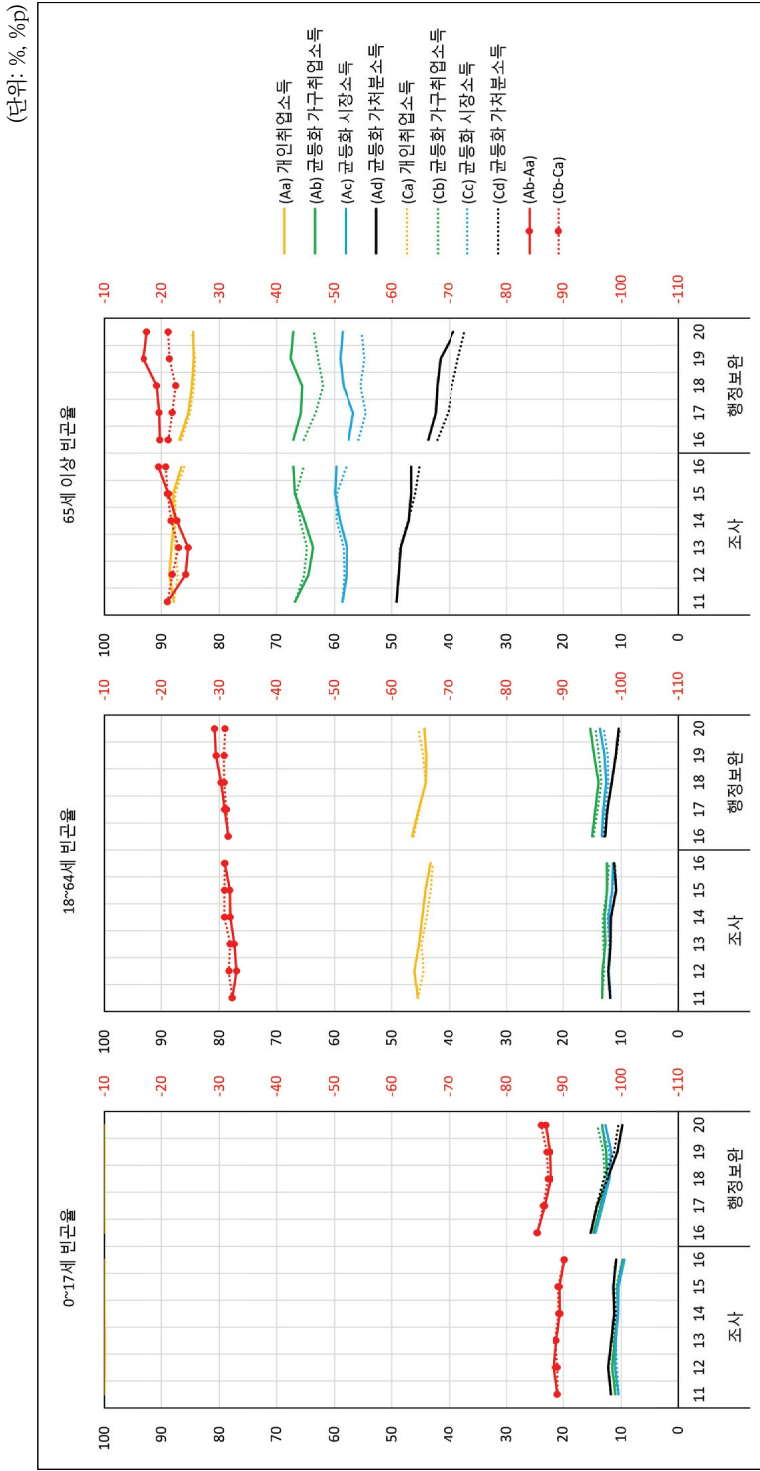


주: 균등화 소득은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눈 가구소득을 의미한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로, 재가중 시 가처분소득 중위값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A) 연도별 실제 표본

(C)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가구원 수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구체적 인 수치는 <부표 5-5>에 제시하였다.

[그림 5-9] 성·연령·가구원 수 변화에 따른 연령대별 빈곤율 변화



주: 공동화 소득은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눈 가구소득을 의미한다. 빈곤선은 연도별 공동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로, 재가중 시 가처분소득 중위값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A) 연도별 실제 표본

(C)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가구원 수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5-5>에 제시하였다.

셋째, 공적이전은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효과를 완화한다. [그림 5-8]에서 보듯이, 인구·가구 구조 변화로 인해 가구취업소득 및 시장소득 분배가 정체·악화하였지만, 공적이전이 확대된 덕분에 가처분소득 분배는 개선되었다(검정 실선). 만약 인구·가구 구조가 변화하지 않았더라면, 가처분소득 분배는 더욱 빠르게 개선되었을 것이다(검정 점선). 또한 <표 5-12>을 살펴보면, 2011~2020년 성·연령·가구원 수 변화에 따른 2020년 가구취업소득 빈곤율 증가량은 3.2%포인트였지만, 2020년 가처분소득 빈곤율 증가량은 1.5%포인트에 그쳤다. 이처럼 공적이전은 인구·가구 구조 변화의 소득분배 악화 효과를 완화해왔고, 따라서 향후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소득분배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적이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연령대별 빈곤율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2010년대에 노인의 개인취업소득 빈곤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구 구조 변화로 인해 노인의 가구취업소득 및 시장소득 빈곤율이 정체·악화하였으나, 공적이전 확대에 힘입어 노인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이는 가구 구조 변화의 빈곤율 증가 효과와 공적이전 확대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경합한 결과로 향후 노인 빈곤율 추이가 주되게 결정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노인·자녀 동거 감소, 3세대 가구 감소 등 노인 가구의 소규모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2018년 이후 최근의 아동 빈곤율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대체로 아동 빈곤율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가운데, 2016~2018년 아동의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모두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다. 그런데 2018~2020년에는 근로연령층의 개인취업소득 빈곤율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빈곤율이 증가하였으나, 아동수당, 근로·자녀장려금, 재난지원금 등의 공적이전 확대에 의해 아동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감소하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노동시장 불평등이 확대되는 변화가 아동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아동과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꾸준히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 전반적인 공적이전 자원의 분배와 확대 방향에 대해서는 제6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제6장

소득보장제도와 소득분배 변화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2011~2020년 분석 결과

제3절 2020년 하위집단별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6장

소득보장제도와 소득분배 변화

제1절 분석 개요

제6장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2010년대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한다. 지난 이십여 년간 공적이전의 규모와 분배 효과가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1990년대에는 소득보장제도가 빈곤을 거의 감소시키지 못했지만,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소득보장제도가 빈곤을 감소시키기 시작하였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p.282). 2000년대 이후 주로 국민연금 성숙과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시행·확대가 소득보장체계의 양적 확대를 견인해왔고, 2010년대에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 아동과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제도 역시 상당히 강화되었다(이원진 외, 2021, pp.200-219).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에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아동돌봄쿠폰 등의 다양한 재난지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표 6-1〉 참조). 2010년대에 시장소득 분배가 정체·악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 분배가 지속적으로 개선된 주된 원인은 이와 같은 공적이전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그림 1-5〉~〈그림 1-7〉 참조).

이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2010년대 소득보장제도 분배 효과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첫째, 개별 소득보장제도의 분배 효과를 자세하게 살펴본다. 국민연금 성숙에 따른 노인 빈곤 감소 효과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2014년 기초연금 시행, 2018년 이후 기초연금 인상, 2018년 아동수당 시행, 2019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 등 매 시기 개별 소득보장제도 시행·확대가 분배 효과의 강화로 이어졌는가? 2020년 재난지원금은 소득분배를 얼마나 개선하였는가? 둘째, 하위집단별 분배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개별 소득보장제도는 아동 빈곤과 노인 빈곤을 각각 얼마나 감소시켰는가? 시장소득 빈곤 수준이 높고 소득보장 욕구가 강한 집단은 어떤 특성을 갖는가? 소득보장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해 가처분소득 빈곤 수준이 높은 집단은 어떤 특성을 갖는가?

〈표 6-1〉 주요 소득보장제도 변화

연도	내용
2000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08년	· 기초노령연금 시행: 월 84,000원
2009년	· 가정양육수당 시행: 차상위 저소득층 만 0~1세 대상, 월 10만 원 · 근로장려금 시행
2013년	· 가정양육수당 확대: 전체 소득계층 만 5세 이하 대상, 월 10~20만 원
2014년	·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개편: 월 20만 원
2015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개별급여 시행, 상대빈곤선 도입
2018년	· 기초연금 인상: 월 25만 원 · 아동수당 시행: 하위 90% 소득계층 만 6세 미만 대상, 월 10만 원
2019년	· 기초연금 인상: 2019~2021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월 30만 원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 연령·소득·재산 조건 완화, 급여액 인상 · 아동수당 확대: 전체 소득계층 만 7세 미만 대상, 월 10만 원
2020년	· 코로나19 관련 지원: 1차 긴급재난지원금(1인 가구 40만 원), 아동돌봄쿠폰,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자료: 이원진 외(2021, p.184)가 아래 문헌을 토대로 정리한 표에 2020년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추가하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태진 외.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시행 20년의 변화와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24-27.
-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보건복지부. (각 연도).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각 연도). 기초연금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가정양육수당·아동수당: 김미곤 외. (2019).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세종,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p.331-332.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김현경, 이원진, 정은희, 정해식, 김예슬. (2020). 주요 소득보장제도 효과 평가 연구. 서울, 세종: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23-24.

이 장에서는 2011~2020년(소득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제2장과 제5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 년 소득 데이터와 결합된 연령, 경제활동, 자산 특성은 $t+1$ 년 3월말을 기준으로 측정되었고, 소득 연도를 기준으로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2011~2020년 표본의 개인단위 사례 수는 연도별로 44,034~56,652명이다.

이 장에서는 모든 소득 항목에 대해 가구소득을 균등화하여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과 같은 개인단위 급여를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하였으므로, 공적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이 공적연금을 받는 배우자의 급여를 공유한다. 또한 자녀가 기초연금을 받는 노부모와 동거할 때 급여를 공유하므로, 기초연금이 노인뿐만 아니라 비노인의 빈곤을 일정하게 감소시킨다. 이 장에서는 〈표 6-2〉와 같이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을 정의하였고, 공적이전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를 차감하여 순공적이전으로 정의하였다. 평균적으로 공적이전소득보다 많은 세금·사회보험료를 지출하는 근로연령층은 음의 순공적이전을 갖지만, 평균적으로 세금·사회보험료보다 많은 공적이전소득을 받는 노인은 양의 순공적이전을 갖는다(〈그림 6-1〉 참조).

〈표 6-2〉 소득 정의

구분	내용
시장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기초(노령)연금	2014년 이전 기초연금, 2014년 이후 기초노령연금
기초보장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금급여
아동 관련 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한부모 지원 등
장애 관련 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난지원금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자녀돌봄/생계/무급휴직/구직/소상공인 지원 등
기타 공적이전소득	기타 공적이전소득
순공적이전	공적이전소득-세금·사회보험료
가처분소득	시장소득+순공적이전

주: 아동 관련 급여는 2012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재난지원금은 2020년에 조사되었으므로, 연도 별로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자료: 필자가 작성하였다.

빈곤선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로 정의하였다. 빈곤선을 z , i 번째 개인의 소득을 y_i , 빈곤층의 수를 q , 빈곤층과 비빈곤층을 모두 포함한 개인의 수를 n 이라 할 때,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은 각각 식(6-1)과 식(6-2)와 같이 정의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2020, pp.95-96). 빈곤율은 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개인의 비율을 의미한다. 빈곤율이 높을수록, 빈곤층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빈곤갭비율이 높아지므로, 빈곤갭비율은 빈곤의 규모와 심도를 모두 반영하는 빈곤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text{빈곤율} = \frac{q}{n} \quad (6-1)$$

$$\text{빈곤갭비율} = \frac{\sum_{i=1}^q (z - y_i)}{n \times z} \quad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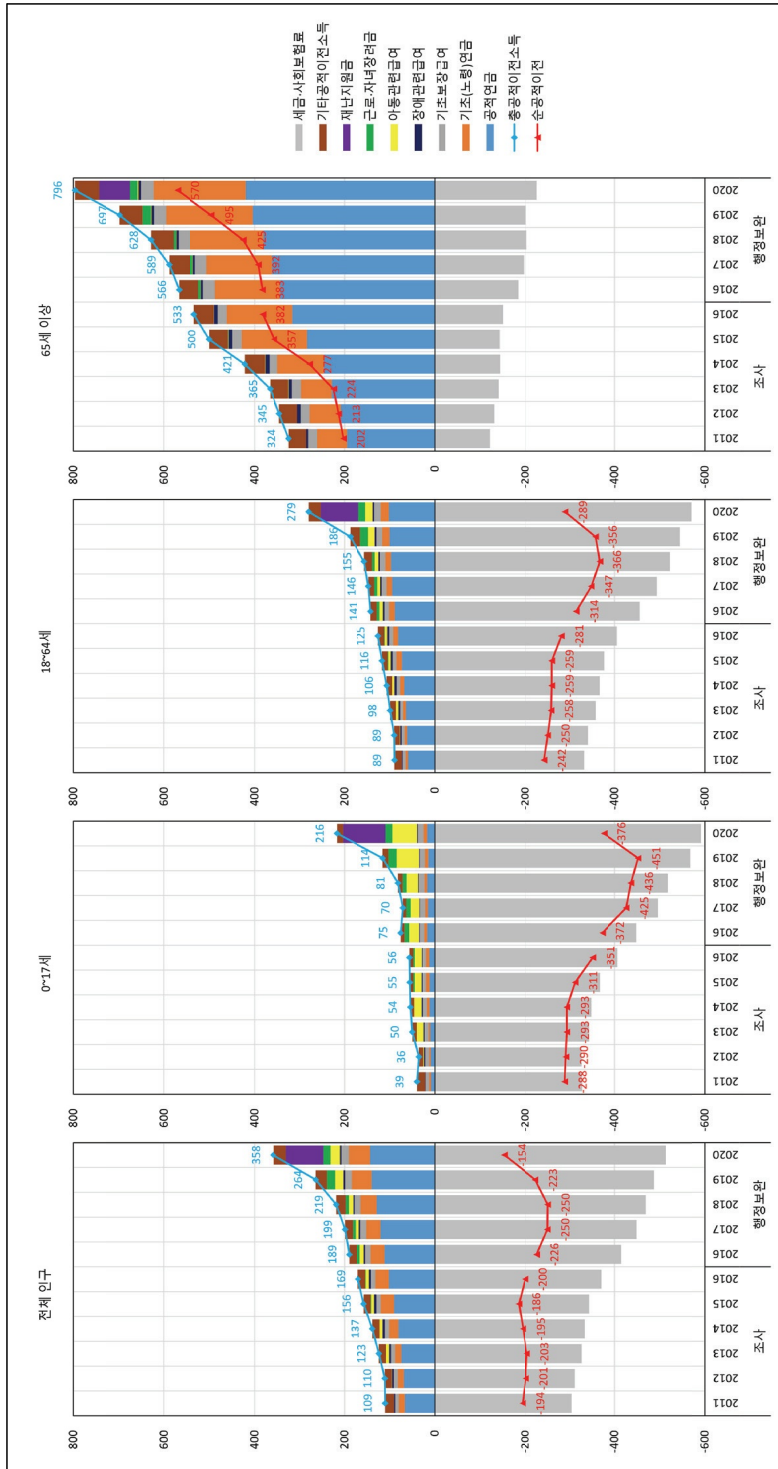
제2절 2011~2020년 분석 결과

[그림 6-1]에서는 공적이전소득과 세금·사회보험료의 평균을 분석하였다. 시간에 따라 공적이전 급여와 세금·사회보험료가 모두 증가하였기 때문에 2010년대 중반까지 전체 인구의 순공적이전이 그다지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2018~2020년에는 세금·사회보험료보다 공적이전 급여가 더 빠르게 증가한 결과 전체 인구의 순공적이전이 연간 -250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주로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2019년 이후에는 아동 관련 급여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역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016~2020년 공적연금은 연간 110만 원에서 142만 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은 연간 30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아동 관련 급여는 연간 9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연간 7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는 2016~2020년 연간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증가한 데 그쳤다. 한편, 2020년 재난지원금은 연간 84만 원으로 공적연금보다 작았지만 기초연금보다 컸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주로 노인에게, 아동 관련 급여는 주로 아동에게 집중된 반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아동, 근로연령층, 노인에게 대체로 고르게 지급되었다. 아동은 전반적으로 공적이전소득 수준이 매우 낮았지만, 2013년 양육수당 확대, 2018년 아동수당 시행, 2019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라 점차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였다. 아동과 근로연령층에 비해 노인은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훨씬 많이 받았고 세금·사회보험료를 훨씬 적게 지출하였기 때문에 순공적이전 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공적이전소득은 주로 공적연금-기초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합으로 구성되었는데, 2019년 이후에는 근로장려금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2020년 재난지원금은 아동, 근로연령층, 노인의 소득에 모두 크게 기여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연간 95만 원)이 노인(연간 69만 원)보다 좀 더 많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편으로 제곱근 균등화지수를 적용할 때 가구 규모가 클수록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아동돌봄쿠폰 등 아동 대상 재난지원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림 6-1] 공적이전소득 및 세금·사회보험료 평균

(단위: 만 원/년, 2020년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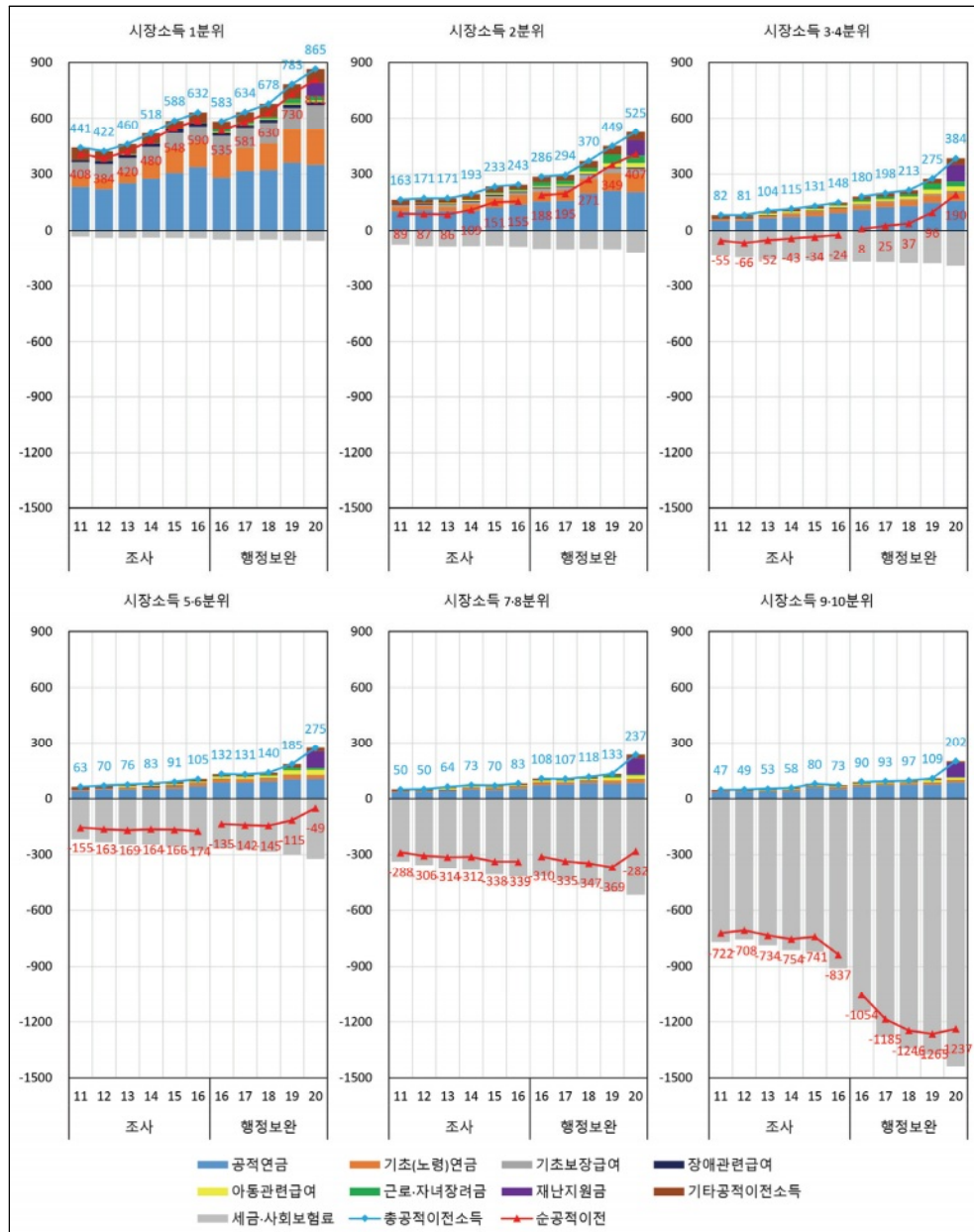


주: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아동·관련 급여는 2012년부터, 재·가족장려금은 2015년부터, 재·가족장려금은 2020년에 조사되었으므로, 연도별로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세금·사회보험료는 음수로 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구체적인 수치는 이원진 외(2021, p.203)의 [그림 6-12]와 동일하다.

[그림 6-2] 시장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 및 세금·사회보험료 평균

(단위: 만 원/년, 2020년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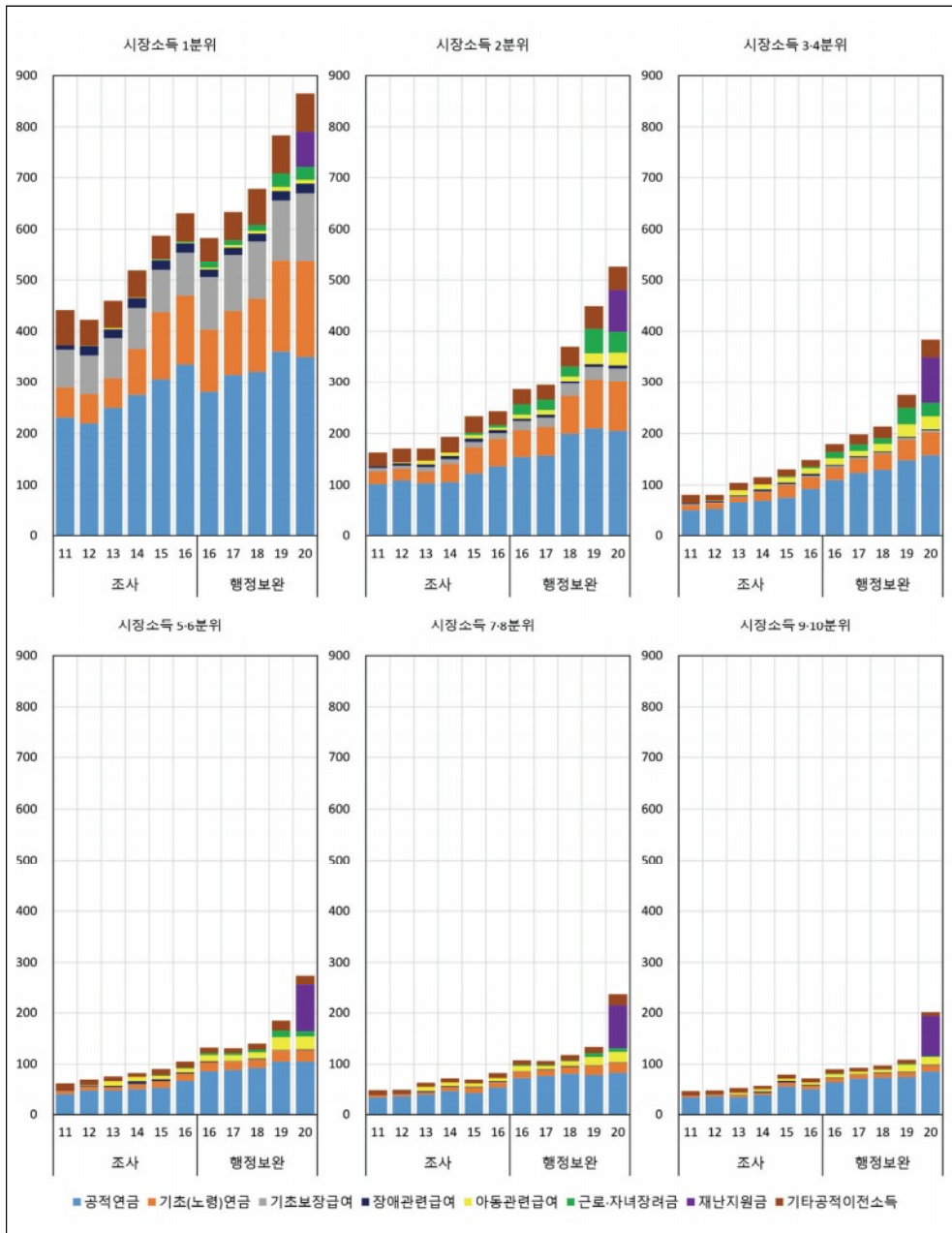


주: 가구원 수 제공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시장소득분위는 균등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를 10등분하여 구성하였다. 아동 관련 급여는 2012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재난지원금은 2020년에 조사되었으므로, 연도별로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세금·사회보험료는 음수로 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6-2>에 제시하였다.

[그림 6-3] 시장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 평균

(단위: 만 원/년, 2020년 실질)



주: 가구원 수 제공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시장소득분위는 균등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를 10등분하여 구성하였다. 아동 관련 급여는 2012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재난지원금은 2020년에 조사되었으므로, 연도별로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6-2>에 제시하였다.

[그림 6-2]에는 시장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 및 세금·사회보험료 평균을 보고하였고, 개별 공적이전소득 항목의 변화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그림 6-3]에는 세금·사회보험료를 제외한 분석 결과를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시장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공적이전소득을 받았고 더 적은 세금·사회보험료를 지출하였다는 분석 결과는 소득보장제도 및 조세제도의 분배 효과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2016~2020년 시장소득 1분위의 순공적이전은 연간 535~811만 원으로 횡단적으로 컸고 시간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시장소득 2분위의 순공적이전 역시 연간 188만 원에서 407만 원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반면 시장소득 9·10분위의 순공적이전은 2016~2020년 연간 -1054만 원에서 -1237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면 더욱 크게 감소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시장소득 3·4분위의 순공적이전은 2011~2016년 음의 값에서 2016~2020년 양의 값으로 전환되었고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다. 즉, 2016년을 경계로 시장소득 3·4분위가 공적이전소득보다 세금·사회보험료를 더 많이 지출하는 집단에서 세금·사회보험료보다 공적이전소득을 더 많이 받는 집단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처럼 2010년대 중반에 소득보장제도·조세제도의 순수혜 집단이 시장소득 1·2분위에서 3·4분위로 확장되었다는 분석 결과는 소득보장체계의 선별성이 시간에 따라 약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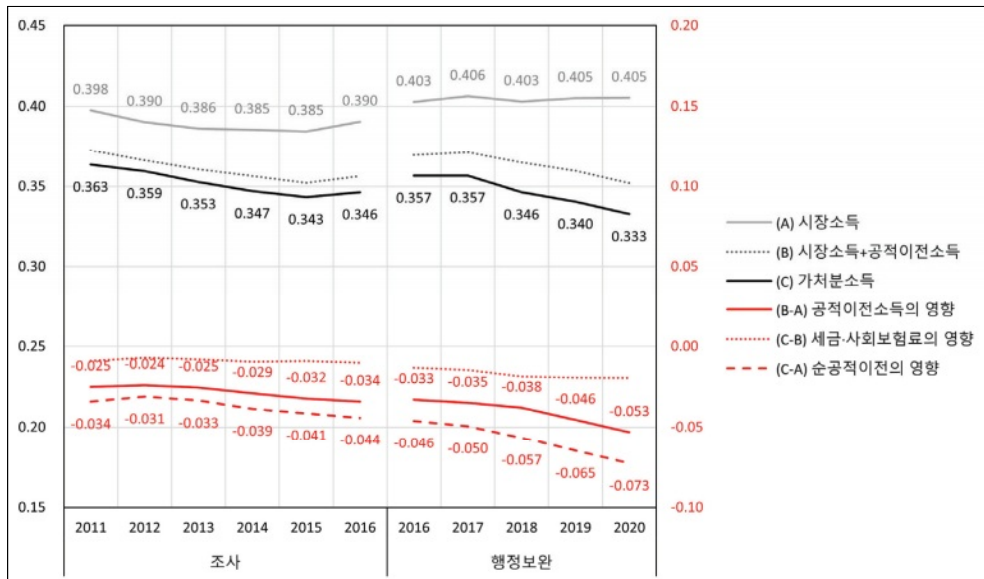
[그림 6-3]에서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개별 소득보장제도의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시장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공적연금을 받았지만, 시장소득 5분위 이상의 고소득층 역시 일정한 수준의 공적연금을 받았다. 공적연금은 수평적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보험 급여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에게도 급여를 지급하지만, 급여대상인 노인의 시장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시장소득과 급여의 부적 관계가 관찰되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은 한편으로 근로연령층으로부터 노인에게로 자원을 이전하는 수평적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다른 한편으로 소득·재산 하위 70%의 노인을 지원하는 수직적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은 공적연금보다 좀 더 강하게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극빈층의 최저생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로 시장소득 1분위에게, 부분적으로 시장소득 2분위에게 거의 대부분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장 선별적인 소득보장제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장소득과 급여의 부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과 달리, 아동 관련 급여는 시장소득 1분위의 급여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는 현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아동 가구의 시장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노인이 시장소득 1분위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대체로 시장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급여 수준이 높았지만, 시장소득 1분위가 아니라 2분위가 가장 많은 급여를 받았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관찰되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공공 부조이지만,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때문에, 취업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극빈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한 시장소득 1분위보다 2분위가 더 많은 급여를 받은 것이다. 요컨대, 극빈층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을 지원하는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에서 아동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아동수당·양육수당, 경제활동 참여를 전제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등으로 소득보장체계가 다변화·고도화되면서 조금씩 선별성이 완화된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4] 지니계수

(단위: 0~1)



주: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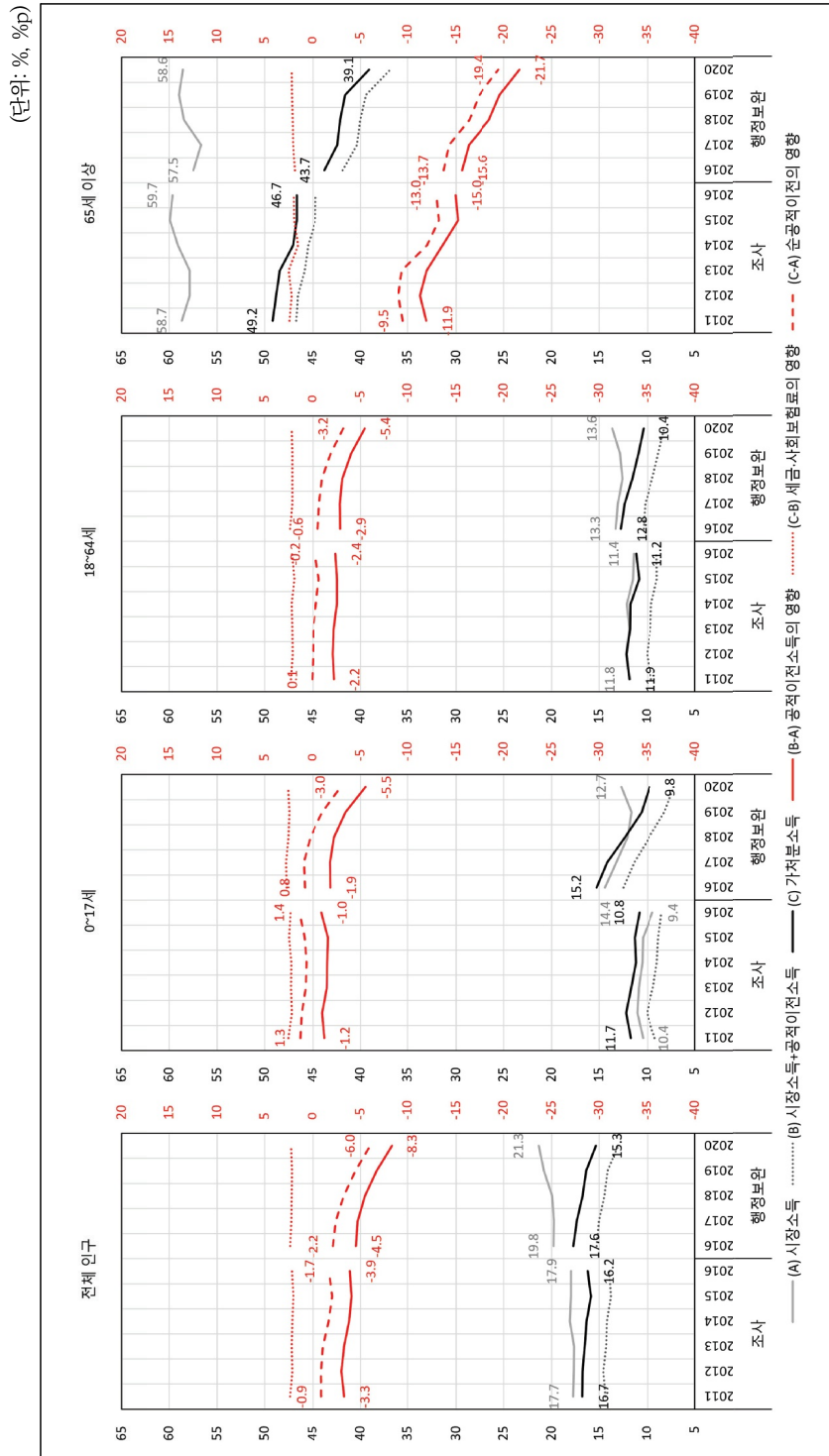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6-3>에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2010년대 소득보장제도 확대가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그림 6-4]에는 시장소득(A),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B),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세금·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가처분소득(C)의 지니계수를 보고하였다. 이때 (B-A)를 공적이전소득의 영향, (C-B)를 세금·사회보험료의 영향, (C-A)를 순공적이전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을 살펴보면, 세금·사회보험료보다 공적이전소득의 지니계수 감소 효과가 횡단적으로 컸고 시간에 따라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즉, 2010년대 시장소득 불평등 정체·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 불평등이 감소한 변화에 조세제도 확대가 일정하게 기여하였지만 소득보장제도 확대가 더 크게 기여한 것이다. 2016~2020년 공적이전소득과 순공적이전의 지니계수 감소 효과는 각각 0.033에서 0.053으로, 0.046에서 0.073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6-5]와 [그림 6-6]에는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을 보고하였다. 그림은 2010년대에 시장소득 빈곤이 증가하였지만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가 증가한 덕분에 가처분소득 빈곤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¹⁶⁾ 2016~2020년 전체 인구의 시장소득 빈곤갭비율이 9.8%에서 10.7%로 증가하였지만,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가 4.6%포인트에서 6.9%포인트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이 6.4%에서 4.8%로 감소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소득보장제도가 아동과 근로연령층보다 노인의 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횡단적으로 훨씬 컸고 시간에 따라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주요 정책지표인 노인 빈곤율이 2016~2020년 43.7%에서 39.1%로 감소한 것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15.6%포인트에서 21.7%포인트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소득보장제도의 아동 빈곤 감소 효과는 노인 빈곤 감소 효과보다 훨씬 작았지만, 2010년대 중후반에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2020년 공적이전소득의 아동 빈곤율 감소 효과와 아동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는 각각 1.9%포인트에서 5.5%포인트로, 1.7%포인트에서 2.8%포인트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는 2018년 이후 아동수당 시행·확대, 2019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가 아동 빈곤 감소에 중요하게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 결과, 2016~2020년 아동 빈곤율은 15.2%에서 9.8%로, 아동 빈곤갭비율은 5.0%에서 3.0%로 크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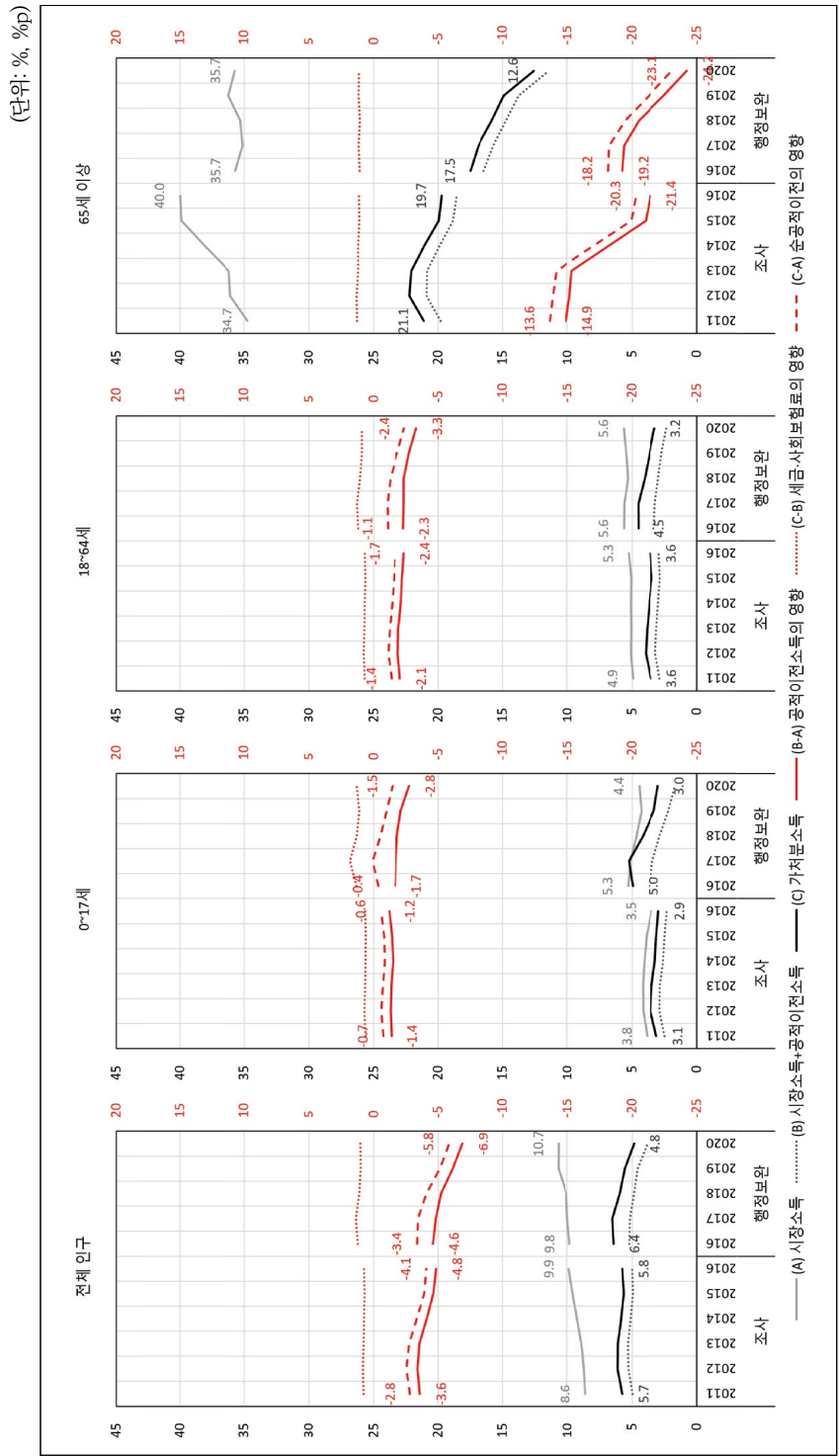
16) 빈곤선을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로 고정하였기 때문에, 세금·사회보험료를 차감하면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이 소폭 증가한다는 점을 언급해둔다.

[그림 6-5] 빈곤율



주: 가구원 수 계급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6-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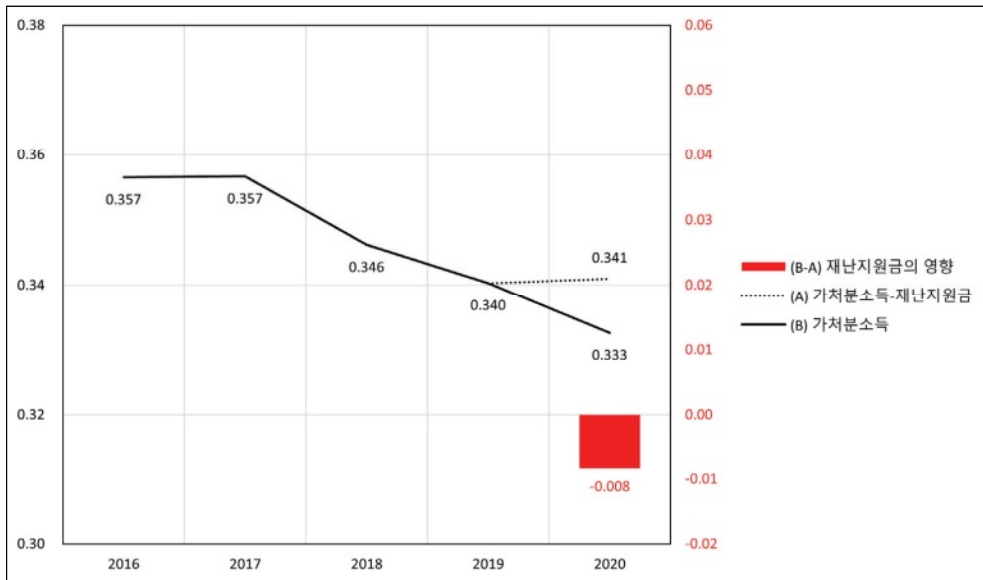
[그림 6-6] 빈곤감비율



주: 가구원 수 계급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증위값의 50%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6-3>에 제시하였다.

[그림 6-7]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지니계수 변화

(단위: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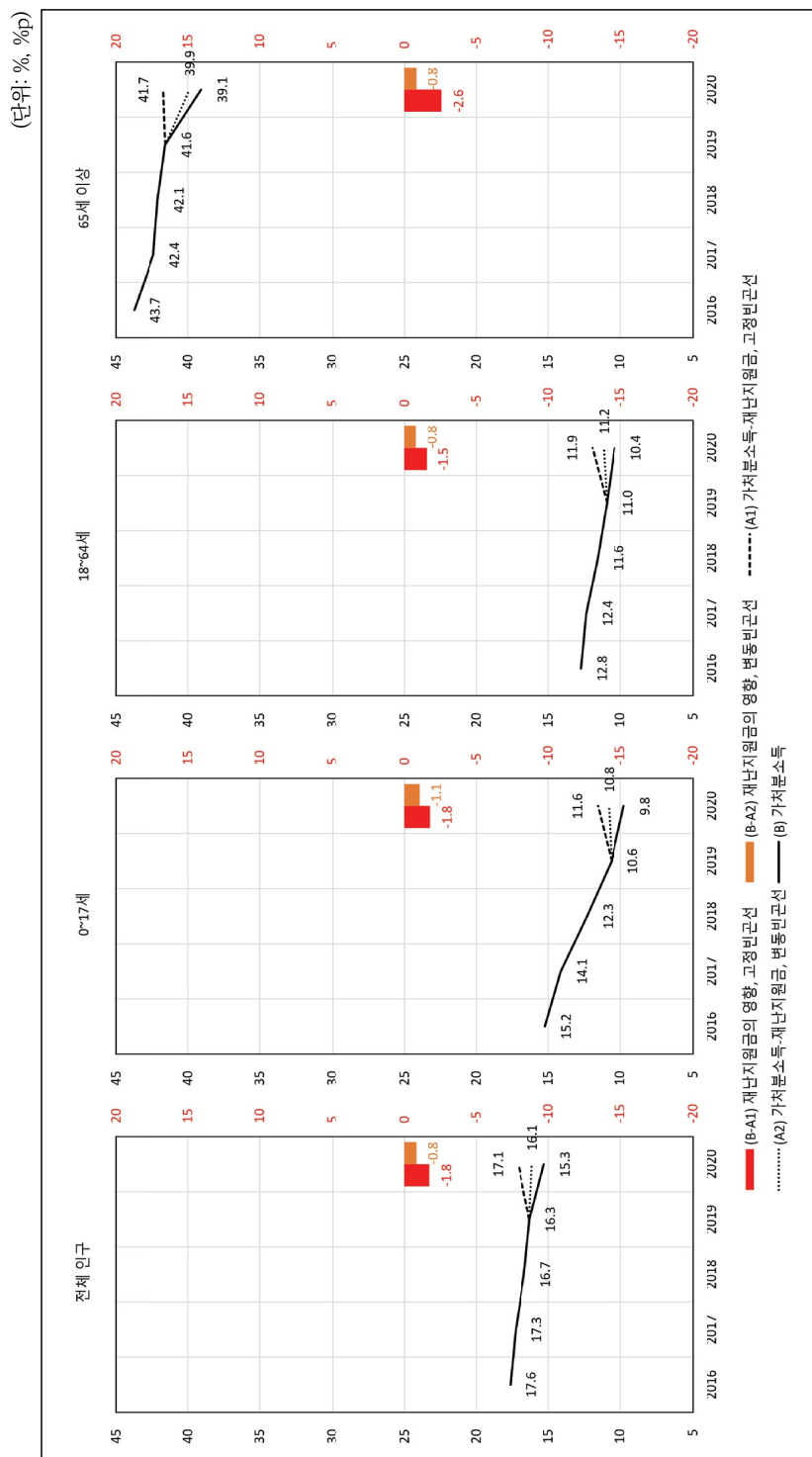
주: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지금까지는 2020년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의 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일회성 급여였으므로,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분배 효과 추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그림 6-7]에는 가치분소득의 지니계수와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가치분소득의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실제 가치분소득 지니계수는 2019년 0.340에서 2020년 0.333으로 감소하였는데, 만약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면 가치분소득 지니계수가 2020년 0.341로 소폭 증가하였을 것이고, 2017년 이후 지니계수 감소 추이가 중단되었을 것이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기존 소득보장제도만으로 이와 같은 충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시사한다.¹⁷⁾ 즉, 코로나19 확산의 소득분배 악화 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7)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등 기존 소득보장제도 급여가 좀 더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분배 효과를 강화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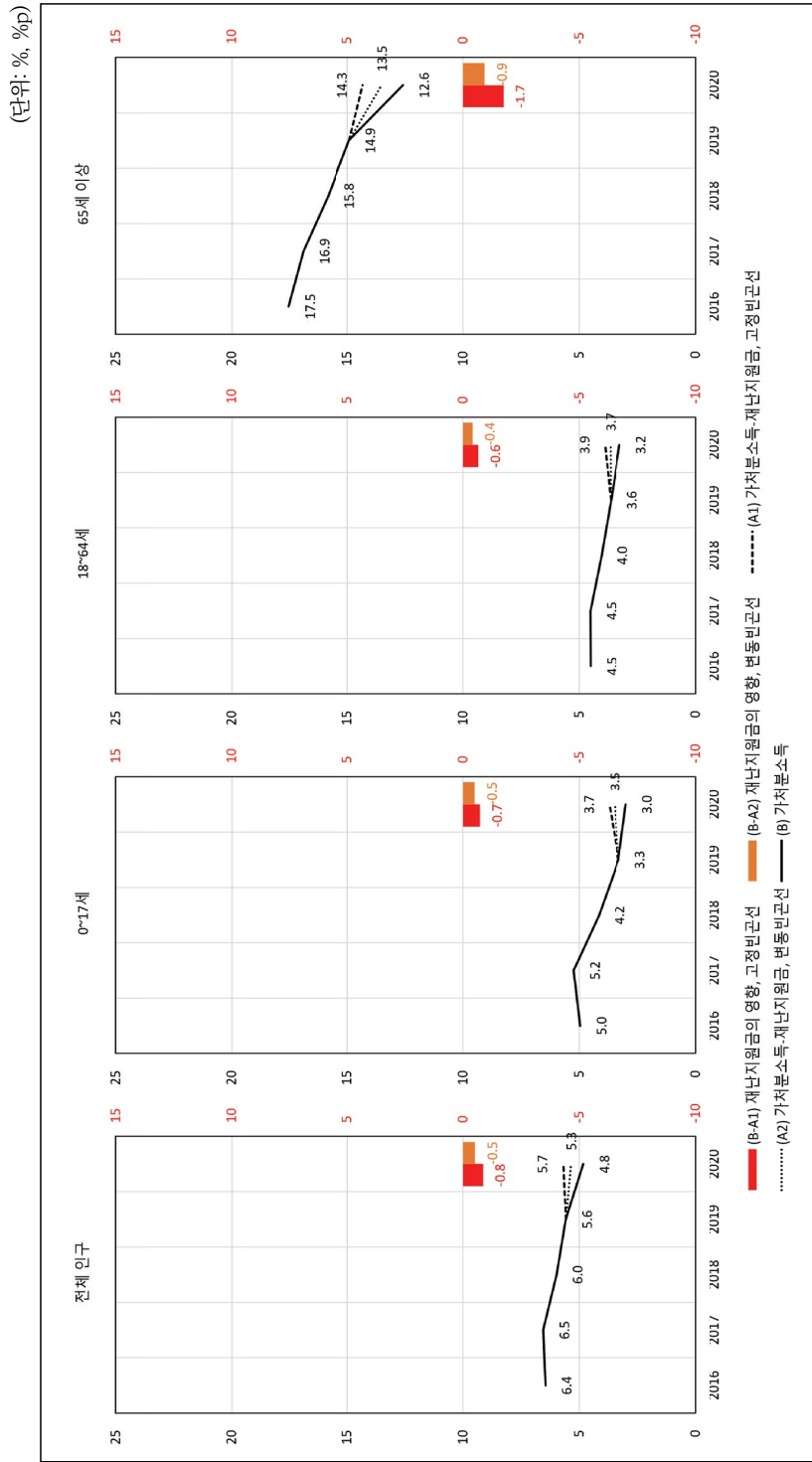
[그림 6-8]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빈곤율 변화



주: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만의 중위값의 50%이고, 변동빈곤선은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6-9]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빈곤감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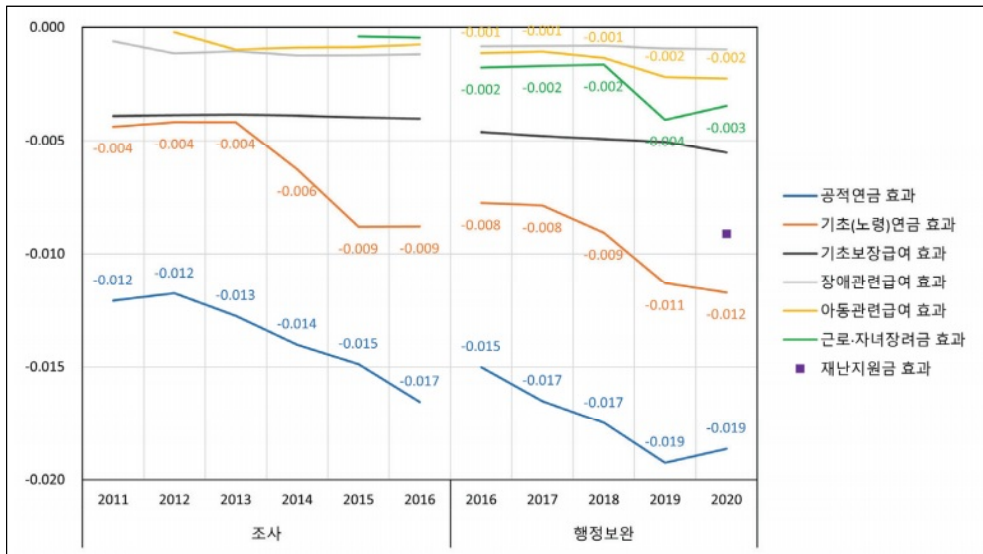


[그림 6-8]과 [그림 6-9]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런데 빈곤지표 분석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전체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위값과 빈곤선을 증가시켰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0년 빈곤선을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가처분소득 증위값의 50%로 고정하면,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의 빈곤갭비율이 5.7%로 계산되었다(A1).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가처분소득 증위값과 빈곤선을 하향 조정하면,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의 빈곤갭비율이 5.3%로 계산되었다(A2). 이하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변동빈곤선 기준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2019~2020년 실제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은 5.6%에서 4.8%로 감소하였는데, 0.5%포인트의 빈곤갭비율 감소는 재난지원금 때문이었으므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면 5.6%에서 5.3%로 감소한 데 그쳤을 것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면 2019~2020년 아동과 근로연령층의 빈곤갭비율이 각각 3.3%에서 3.5%로, 3.6%에서 3.7%로 증가했을 것이고, 2017년 이후 아동 및 근로연령층 빈곤갭비율 감소 추이가 중단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재난지원금이 2017년 이후 아동 및 근로연령층 빈곤갭비율 감소 추이를 2020년까지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노인 빈곤갭비율은 2019년 14.9%에서 2020년 12.6%로 비교적 크게 감소하였는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면 2020년 13.5%로 감소한 데 그쳤을 것이다. 주요 정책지표인 노인 빈곤율 역시 2019년 41.6%에서 2020년 39.1%가 아니라 39.9%로 감소하였을 것이다.

다음으로 [그림 6-10]에서는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지니계수 감소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림은 시장소득에 개별 공적이전소득 항목을 합산할 때 지니계수가 얼마나 감소하였는지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지니계수 감소 효과가 횡단적으로 컸고 시간에 따라 크게 증가해왔다. 공적연금의 효과가 증가한 것은 공적연금의 성숙에 따른 결과로, 기초(노령)연금의 효과가 증가한 것은 2014년, 2018년, 2019년 급여 인상과 같은 때 시기 정책적 선택의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단, 2020년에는 공적연금 지니계수 감소 효과의 증가 추이가 중단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아동 관련 급여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지니계수 감소 효과는 2019년에 증가하였다. 장애 관련 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지니계수 감소 효과는 그다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림 6-10]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지니계수 감소 효과

(단위: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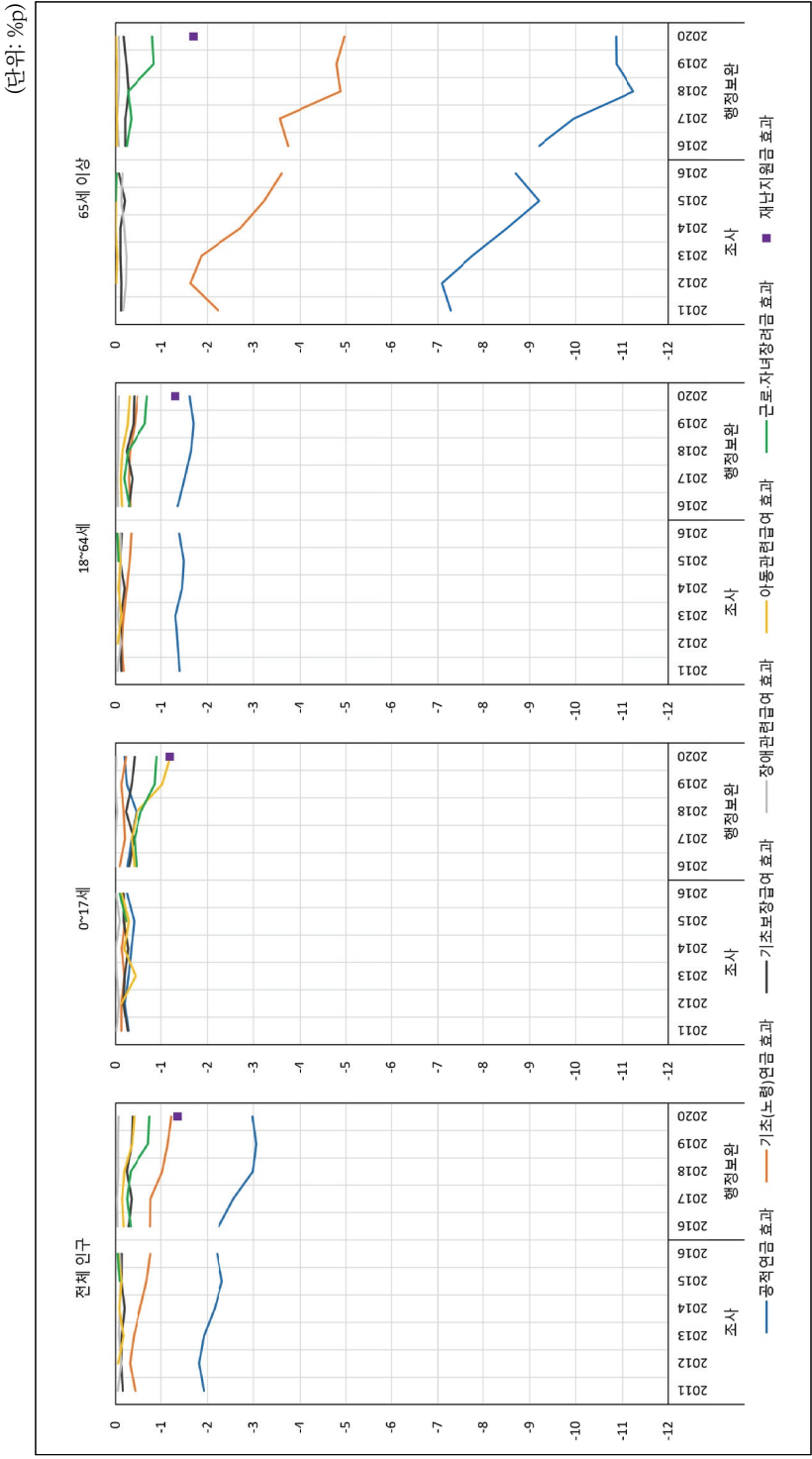


주: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시장소득+해당 공적이전소득 항목>의 분배지표에서 <시장소득>의 분배지표를 차감한 값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6-4>에 제시하였다.

[그림 6-11]에는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빈곤율 감소 효과를 보고하였다. 전체 인구의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6-10]의 지니계수 분석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였다.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효과가 횡단적으로 컸고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고, 아동 관련 급여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효과가 2019년에 증가하였으며, 장애 관련 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효과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단, 공적연금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2018년부터 대체로 정체하였다. 아동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까지 대부분의 소득보장제도가 아동 빈곤율을 거의 감소시키지 못했으나, 2018년 이후 아동 관련 급여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효과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020년 아동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소득보장제도는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인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효과가 시간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고, 2019년에 근로장려금의 효과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맞춤형급여체계 개편과 2015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인 빈곤율 감소 효과는 횡단적으로 작았고 시간에 따라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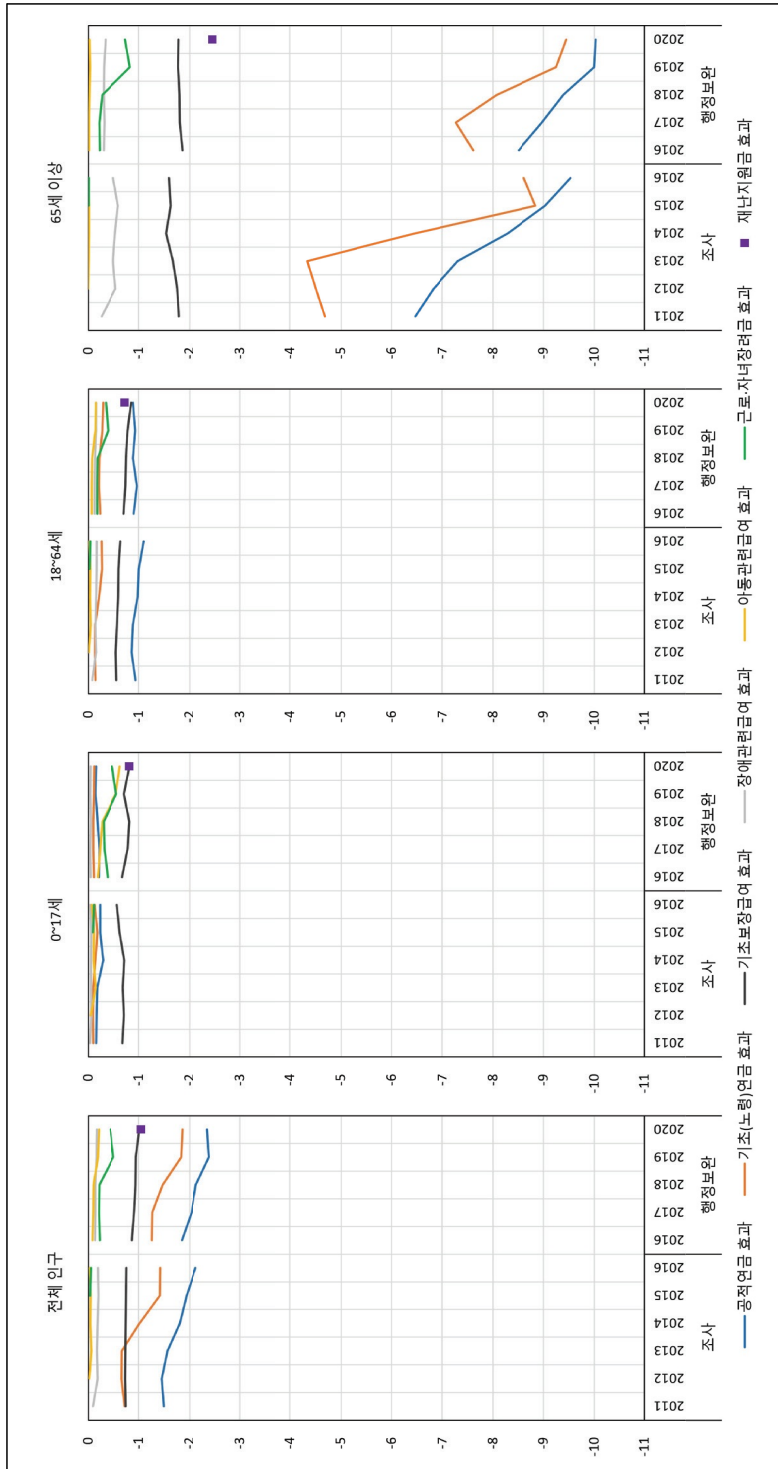
[그림 6-11]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빈곤율 감소 효과



주: 가구월 수 제평균으로 나누어 표준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시장소득+해당 공적이전소득 항목>의 분배지표에서 <시장소득>의 분배지표를 차감한 값이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6-4>에 제시하였다.

[그림 6-12]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빈곤감비용 감소 효과

(단위: %p)



주: 가구월 수 제평균으로 나누어 표준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시장소득+해당 공적이전소득 항목>의 분배지표에서 <시장소득>의 분배지표를 차감한 값이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6-4>에 제시하였다.

[그림 6-12]에서 빈곤갭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6-11]의 빈곤율 분석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관찰되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연구는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적용하였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훨씬 높다. 예를 들어,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53만 원이었지만(보건복지부, 2020, p.XII),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에서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는 월 125만 원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기는 어렵지만, 빈곤갭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아동 관련 급여와 유사하였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보다 작았지만,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는 아동 관련 급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보다 컸다. 또한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인 빈곤율 감소 효과는 0.2%포인트에 그쳤지만, 노인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는 1.8%포인트였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갭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지는 않았다.

둘째,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 역시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율 감소 효과는 5.0%포인트로 공적연금(10.9%포인트)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지만, 노인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는 9.4%포인트로 공적연금(10.0%포인트)에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 감소 효과가 공적연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빈곤갭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 감소 효과가 공적연금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노인 빈곤율이 주요 정책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빈곤갭비율이 빈곤의 규모와 심도를 모두 반영하는 빈곤지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 감소 효과가 공적연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3절 2020년 하위집단별 분석 결과

제3절에서는 2020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하위집단별 실태를 자세하게 살펴본다. 이 절에서는 경제활동, 연령, 시장소득, 순자산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하위집단을 구성

하였다(〈표 6-3〉 참조). 우선, 전체 인구를 가구 내 취업자가 없는 가구에 속한 개인(‘비근로가구’)과 가구 내 취업자가 있는 가구에 속한 개인(‘근로가구’)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가구 내 취업소득의 존재가 시장소득 빈곤위험을 크게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비근로가구를 0~17세(‘아동’), 18~34세(‘청년’), 35~49세(‘장년’), 50~64세(‘중년’), 65세 이상(‘노인’)으로 구분하였고, 자산의 규모와 중요성이 증가하는 생애주기의 중년과 노인에 대해서는 순자산 1·2분위(‘저자산’)와 3·4·5분위(‘고자산’)를 추가적으로 구분하였다. 근로가구는 아동, 청년, 장년, 중년, 노인을 구분한 후 시장소득 1분위(‘최저소득’), 2분위(‘저소득’), 3·4·5분위(‘중저소득’), 6·7·8·9·10분위(‘고소득’)를 구분하였다. 또한 중년과 노인에 대해서는 시장소득계층 내에서 저자산층과 고자산층을 구분하였다.

[그림 6-13]에서 이와 같이 구성한 하위집단 비율을 살펴보면, 대체로 중고소득층과 고자산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소득 3~5분위/6~10분위와 순자산 3~5분위를 세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이다. 대체로 최저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이들의 시장소득 빈곤위험이 크기 때문에 소득보장제도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6-14]에는 하위집단별 공적이전소득 및 세금·사회보험료 평균을 보고하였다. 우선 공적연금은 전반적으로 중년과 노인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급여를 제공하였는데, 자산 수준에 따른 공적연금 격차가 상당히 컸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비근로가구-노인 중에서 고자산층은 공적연금을 연간 835만 원 받았지만 저자산층은 연간 171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 즉, 자산 수준이 높은 퇴직 중고령자가 공적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것이다. 근로가구 노인 내에서도 시장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자산과 공적연금의 정적 관계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공적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시장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은 노인을 더 강하게 지원하였다. 예를 들어, 비근로가구-노인 중에서 고자산층의 기초연금은 연간 144만 원이었지만 저자산층의 기초연금은 연간 307만 원이었다. 단, 이처럼 고자산 노인보다 저자산 노인이 기초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으로 인한 소득 격차를 상쇄하지는 못했다.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노후소득보장 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집단은 비근로가구-노인-고자산 집단과 비근로가구-중년-고자산 집단이었고, 다음으로는 근로가구-노인-최저소득-고자산 집단이었다.

〈표 6-3〉 2020년 하위집단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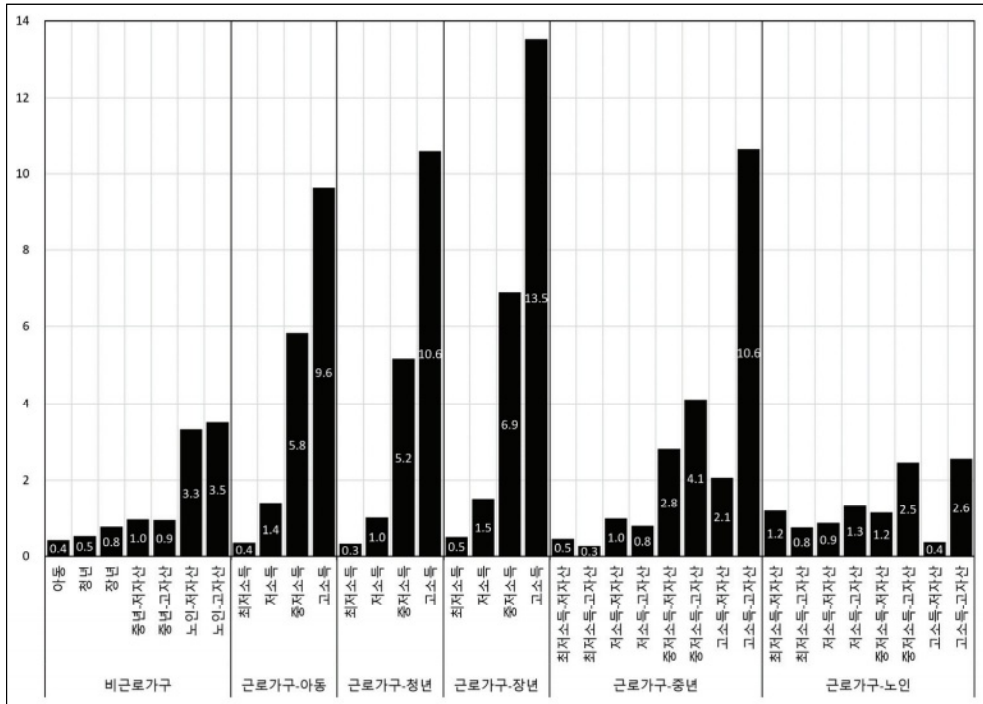
구분				표기	사례 수
가구 내 취업자가 없는 가구에 속한 개인	0~17세			비근로가구-아동	177
	18~34세			비근로가구-청년	249
	35~49세			비근로가구-장년	343
	50~64세	순자산 1·2분위		비근로가구-중년-저자산	514
		순자산 3·4·5분위		비근로가구-중년-고자산	493
	65세 이상	순자산 1·2분위		비근로가구-노인-저자산	2,089
		순자산 3·4·5분위		비근로가구-노인-고자산	2,025
가구 내 취업자가 있는 가구에 속한 개인	0~17세	시장소득 1분위		근로가구-아동-최저소득	156
		시장소득 2분위		근로가구-아동-저소득	553
		시장소득 3·4·5분위		근로가구-아동-중저소득	2,284
		시장소득 6·7·8·9·10분위		근로가구-아동-고소득	3,501
	18~34세	시장소득 1분위		근로가구-청년-최저소득	164
		시장소득 2분위		근로가구-청년-저소득	463
		시장소득 3·4·5분위		근로가구-청년-중저소득	2,146
		시장소득 6·7·8·9·10분위		근로가구-청년-고소득	4,231
	35~49세	시장소득 1분위		근로가구-장년-최저소득	229
		시장소득 2분위		근로가구-장년-저소득	630
		시장소득 3·4·5분위		근로가구-장년-중저소득	2,822
		시장소득 6·7·8·9·10분위		근로가구-장년-고소득	5,062
	50~64세	시장소득 1분위	순자산 1·2분위	근로가구-중년-최저소득-저자산	239
			순자산 3·4·5분위	근로가구-중년-최저소득-고자산	144
		시장소득 2분위	순자산 1·2분위	근로가구-중년-저소득-저자산	521
			순자산 3·4·5분위	근로가구-중년-저소득-고자산	419
		시장소득 3·4·5분위	순자산 1·2분위	근로가구-중년-중저소득-저자산	1,324
			순자산 3·4·5분위	근로가구-중년-중저소득-고자산	1,863
		시장소득 6·7·8·9·10분위	순자산 1·2분위	근로가구-중년-고소득-저자산	937
			순자산 3·4·5분위	근로가구-중년-고소득-고자산	4,531
	65세 이상	시장소득 1분위	순자산 1·2분위	근로가구-노인-최저소득-저자산	838
			순자산 3·4·5분위	근로가구-노인-최저소득-고자산	489
		시장소득 2분위	순자산 1·2분위	근로가구-노인-저소득-저자산	538
			순자산 3·4·5분위	근로가구-노인-저소득-고자산	788
		시장소득 3·4·5분위	순자산 1·2분위	근로가구-노인-중저소득-저자산	653
			순자산 3·4·5분위	근로가구-노인-중저소득-고자산	1,278
		시장소득 6·7·8·9·10분위	순자산 1·2분위	근로가구-노인-고소득-저자산	175
			순자산 3·4·5분위	근로가구-노인-고소득-고자산	1,166

주: 순자산 5분위는 비균등화 순자산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5등분하여 구성하였다. 시장소득분위는 균등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를 10등분하여 구성하였다.

자료: 필자가 작성하였다.

[그림 6-13] 2020년 하위집단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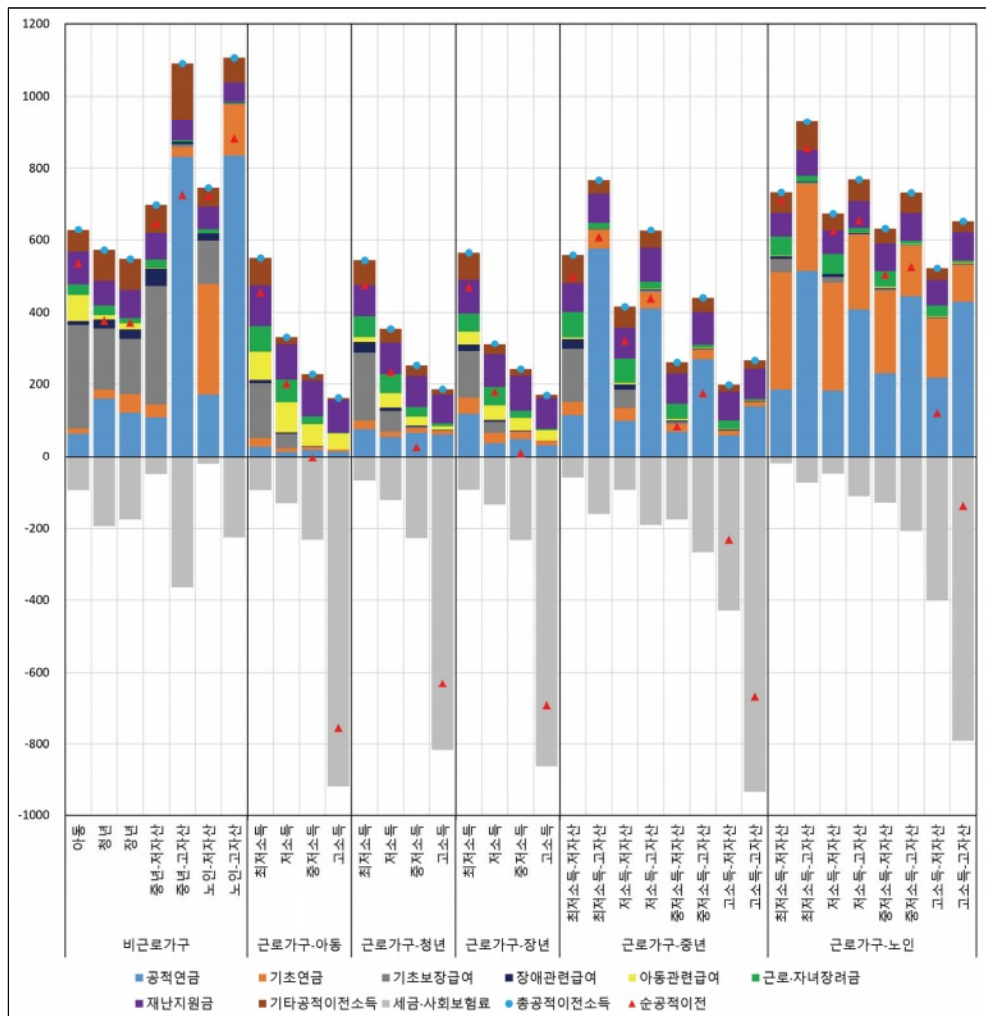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로 비근로가구, 저소득층, 저자산층에게 급여를 집중하였다. 비근로가구 중에서는 아동, 청년, 장년, 중년-저자산, 노인-저자산 집단이 많은 급여를 받았고, 근로가구 중에서는 아동/청년/장년-최저소득 집단, 중년-최저소득-저자산 집단이 많은 급여를 받았다. 근로가구-중년/노인-최저소득-고자산 집단은 시장소득 수준이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한 대신, 공적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다. 또한 근로가구-노인-최저소득-저자산 집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연간 36만 원밖에 받지 못한 대신, 기초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다. 제2절의 연령대별 분석 결과에서는 아동과 근로연령층에 비해 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그림 6-1] 참조), 하위집단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취업소득이 없거나 적은 빈곤층 내에서는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을 받은 노인보다 아동과 근로연령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더 많이 받은 입체적인 패턴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적 성격을 보여준다. 아동과 근로연령층은 시장소득 빈곤율이 낮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이 높지 않지만, 소수의 빈곤한 아동과 근로연령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집단은 비근로가구-중년-저자산 집단, 다음으로는 비근로가구-아동 집단이었다.

[그림 6-14] 2020년 하위집단별 공적이전소득 및 세금·사회보험료 평균

(단위: 만 원/년, 2020년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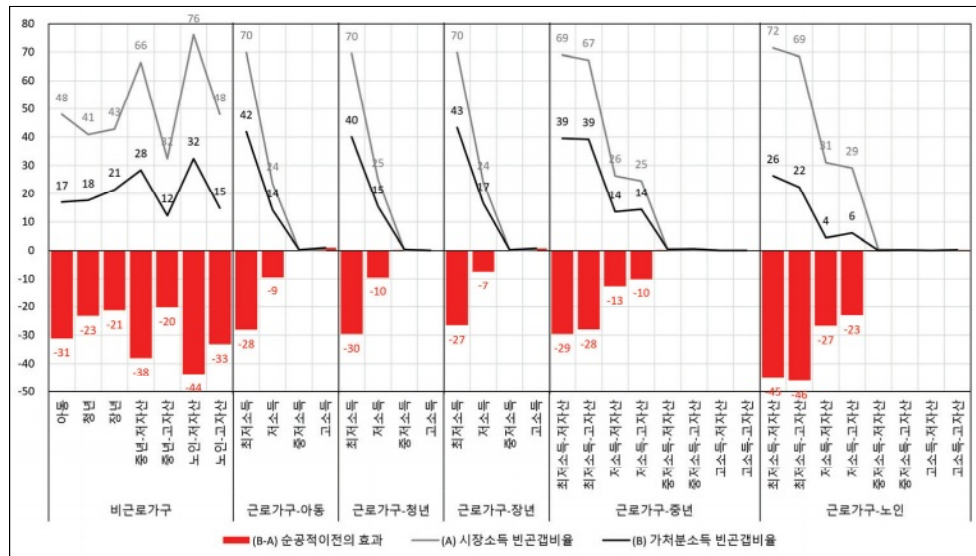
주: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6-5>에 제시하였다.

아동 관련 급여는 주로 아동, 부분적으로 아동의 부모 세대인 청년과 장년에게 지급되었고, 대체로 시장소득 수준에 따른 급여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아동, 청년, 장년, 중년, 노인에게 고르게 지급되었고, 각 연령집단 내에서 대체로 비근로가구보다 근로가구가, 고소득층·고자산층보다 저소득층·저자산층이 더 많은 급여를 받았으며, 특히 근로가구-아동-최저소득 집단이 가장 많은 급여를 받았다. 이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고, 특히 아동이 있는 근로빈곤층에게 좀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2절의 [그림 6-3]에서는 시장소득 1분위보다 2분위가 더 많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림 6-14]에서 근로가구만을 살펴보면 이러한 패턴이 대체로 사라졌다. 이는 시장소득 1분위보다 2분위가 더 많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은 주된 원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근로빈곤층이 1분위보다 2분위에 좀 더 많이 분포하기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재난지원금은 대체로 모든 하위집단에게 고르게 지급되었다.

[그림 6-15] 2020년 하위집단별 빈곤갭비율

(단위: %, %p)



주: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6-15]에서는 하위집단별 빈곤갭비율을 분석하였다. 그림에서 회색 실선은 시장소득 빈곤갭비율을, 검정 실선은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을 의미하고, 그 차이를 빨강 막대로 표시하였다. 소득보장제도가 이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시장소득 빈곤갭비율이 높고 소득보장 욕구가 강한 집단에게 충분한 공적이전이 지원되어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의 수준과 집단 간 차이가 작게 나타나야 한다. 또한 공적이전이 지원된 후에도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이 높고 소득보장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집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득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을 살펴보면, 근로가구 중에서 시장소득 1분위와 2분위의 시장소득 빈곤갭비율이 각각 67~72%, 24~31%로 나타났다. 비근로가구 중에서는 저자산-중년/노인 집단의 시장소득 빈곤갭비율이 66~76%로 상당히 높았고, 아동, 청년, 장년, 고자산-중년/노인 집단의 시장소득 빈곤갭비율은 32~48%였다. 대체로 시장소득 빈곤갭비율이 높은 집단일수록 순공적이전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가 컸는데, 이는 소득보장제도와 조세제도가 하위집단별 소득보장 욕구에 일정하게 대응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순공적이전이 반영된 가처분소득의 빈곤갭비율은 미충족 소득보장 욕구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0년 전체 인구의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은 4.8%였지만([그림 6-6] 참조), 하위집단별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은 최대 43%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가구-아동/청년/장년/중년 시장소득 1분위의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이 39~43%로 높게 나타나 공적이전이 최저소득층의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근로가구-노인 시장소득 1분위의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은 22~26%로 근로가구-비노인 시장소득 1분위보다 훨씬 낮았다. 비노인보다 시장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이 공적이전을 더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시장소득 수준이 유사한 저소득층 내에서도 노인이 더 많은 공적이전을 받은 것이다. 근로가구-시장소득 2분위 내에서도, 아동/청년/장년/중년의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은 14~17%였지만 노인의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은 4~6%로 훨씬 낮았다. 즉, 근로연령층보다 노인의 빈곤갭비율이 훨씬 높지만, 시장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가구 저소득층 내에서는 노인보다 비노인의 빈곤갭비율이 높고 미충족 소득보장 욕구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과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근로가구 비노인 저소득층의 빈곤을 집중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

금·자녀장려금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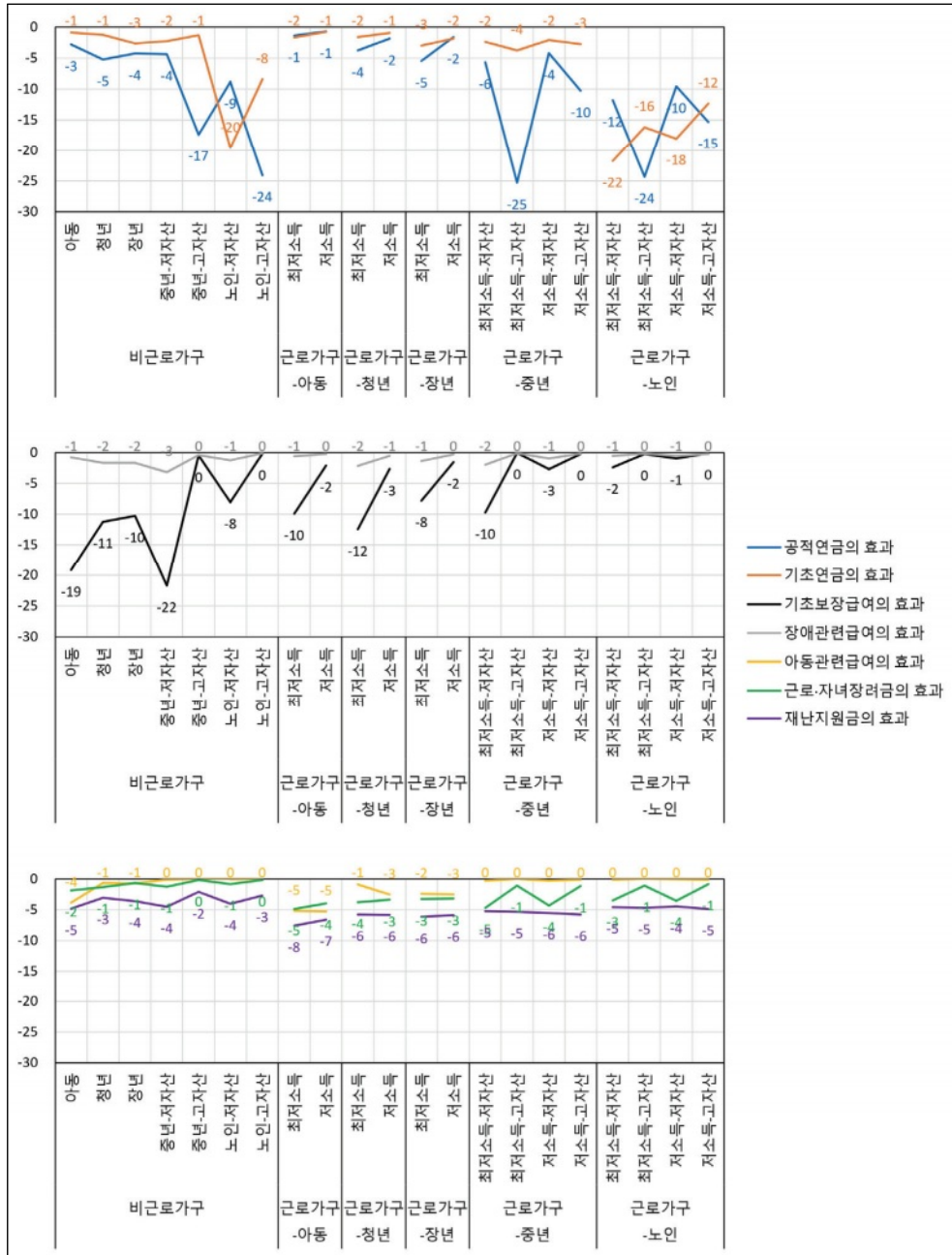
비근로가구 중에서는 노인-저자산 집단의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이 32%로 가장 높았다. 비근로가구-노인-저자산 집단은 시장소득 빈곤갭비율이 76%포인트로 매우 높았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비교적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하위집단 중에서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이 가장 높았다. 비근로가구-노인-저자산 집단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확대의 영향을 받기 어렵고, 이들의 빈곤갭비율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비근로가구-중년-저자산 집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가장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이 2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빈곤갭비율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그림 6-16]에서는 개별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를 살펴보았다. 공적연금은 취업소득이 없거나 시장소득 수준이 낮지만 자산 수준이 높은 중고령자의 빈곤갭비율을 크게 감소시켰다. 생애과정에서 안정적인 노동이력을 축적하고 은퇴한 노인이 공적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적연금은 시장소득계층 간 격차를 축소하지만 자산계층 간 격차를 확대한다. 또한 공적연금은 중고령자뿐만 아니라 아동, 청년, 장년의 빈곤갭비율을 일정하게 감소시켰는데, 이는 주로 노부모와의 동거를 통해 근로연령층이 공적연금 급여를 가구 내에서 공유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초연금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시장소득 및 자산 수준이 낮은 노인의 빈곤갭비율을 크게 감소시켰다. 흥미롭게도, 노인 하위집단 중에서 공적연금의 효과가 큰 집단은 기초연금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기초연금의 효과가 큰 집단은 공적연금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기초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로 시장소득 1분위의 근로가구 극빈층과 저자산 비근로가구의 빈곤갭비율을 감소시켰다. 비노인보다 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더 많이 받지만, 취업소득이 없거나 시장소득 수준이 낮은 빈곤층 내에서는 노인보다 비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가 훨씬 컸다. 즉, 비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이 비교적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소수의 극빈 아동과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에 중요하게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6-16] 2020년 하위집단별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단위: %p)



주: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시장소득+해당 공적이전소득 항목>의 분배지표에서 <시장소득>의 분배지표를 차감한 값이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포함한 아동 관련 급여는 주로 아동, 부분적으로 청장년의 빈곤갭비율을 감소시켰다. 아동 관련 급여는 보편성이 강하기 때문에 급여 규모에 비해 빈곤 감소 효과가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비근로가구 및 시장소득 1·2분위 근로가구 아동의 빈곤갭비율을 작지 않게 감소시켰다(4~5%포인트).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주로 시장소득 1·2분위 근로가구의 아동/청년/장년, 저자산 중년/노인의 빈곤갭비율을 3~5%포인트 감소시켰다. 보충급여 방식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체로 근로가구보다 비근로가구의 빈곤갭비율을, 시장소득 2분위보다 시장소득 1분위의 빈곤갭비율을 더 크게 감소시킨 것과 달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비근로가구보다 근로가구의 빈곤갭비율을 더 크게 감소시켰고 시장소득 1분위와 2분위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에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 공공부조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주요 급여대상과 정책목표에 작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하였다. 공적연금의 성숙,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시행·확대가 2010년대 소득보장체계의 양적 확대를 주로 견인하였지만, 2013년 양육수당 확대, 2018년 아동수당 시행, 2019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 등 아동과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 역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그림 6-1] 참조). 이처럼 소득보장제도가 확대된 결과 시장소득 1·2분위의 순공적이전은 시간에 따라 크게 증가한 반면, 조세제도가 확대된 결과 시장소득 9·10분위의 순공적이전은 시간에 따라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6-2] 참조). 이는 소득보장제도-조세제도 조합의 분배 효과가 시간에 따라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한편, 2010년대 중반에 세금·사회보험료보다 공적이전소득을 많이 받는 소득보장제도·조세제도 순수혜 집단이 시장소득 1·2분위에서 3·4분위로 확장되었다([그림 6-2] 참조). 노인과 극빈층 중심의 공적연금-기초(노령)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합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보편적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극빈층보다 근로빈곤층을 강하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

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득보장체계가 확장되면서 선별성이 조금씩 약해진 것이다. 요컨대,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2010년대 소득보장체계가 양적으로 확대된 동시에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이원진 외, 2021, pp.218-219). 노인과 극빈층에서 아동, 근로연령층, 중간소득계층으로 정책대상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고, 노후소득보장과 극빈 제거에서 아동 양육 지원, 근로유인 제고, 취업 지원 등으로 정책 목표가 다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2010년대 소득보장제도 확대에 따라 시장소득 분배가 정제·악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 분배가 개선되었다([그림 6-4]~[그림 6-6] 참조).

이하에서는 개별 소득보장제도의 분배 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사점을 논의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체계 내 공적연금-기초연금 최적조합을 설계·실행해야 한다.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생애소득을 평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연금과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의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공적연금 성숙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는 매 시기 기초연금 급여액을 인상하는 정책적 결정의 결과로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되었다([그림 6-11], [그림 6-12] 참조). 또한 공적연금은 고자산 노인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기초연금은 저자산 노인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지원하는 형태로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그림 6-16] 참조). 이러한 공적연금-기초연금 조합은 노인 빈곤율을 2011~2016년 49.2%에서 46.7%로, 2016~2020년 43.7%에서 39.1%로 감소시킨 성과를 거두었다([그림 6-5] 참조). 그런데 이 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2019년 이후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 감소 효과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11], [그림 6-12] 참조). 공적연금 성숙에 따른 노인 빈곤 감소 효과 증가 추이가 구조적으로 약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노인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초연금과 같은 비급여 방식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갭비를 감소 효과가 이미 공적연금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그림 6-12] 참조), 향후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비급여 방식 급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감소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2015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등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분석 결과에서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 빈곤 감소 효과의 증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그림 6-11], [그림 6-12] 참조). 아직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영향이 데이터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가 전체 인구의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이십여 년간 소득보장체계의 양적 확대·질적 고도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시간에 따라 감소해왔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감소 효과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가구 비노인 극빈층의 미충족 소득보장 욕구 수준이 매우 높았다는 점([그림 6-15] 참조), 다른 소득보장제도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가구 비노인 극빈층 보호에 효과적이었다는 점([그림 6-16] 참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재산 컷오프제 시행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셋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심의 공공부조 체계를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노인보다 노인의 빈곤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시장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가구 저소득층 내에서는 대체로 노인보다 비노인의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이 높았고 미충족 소득보장 욕구가 컸다([그림 6-15] 참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경제활동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장소득을 확보하지 못하는 아동과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2019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연령·소득·재산 조건 완화와 급여액 인상은 아동, 근로연령층, 노인에게 고르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1], [그림 6-11], [그림 6-12] 참조). 이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 근로연령층뿐만 아니라 노인의 소득보장 강화에도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최근 노인의 경제활동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의 노인 빈곤 감소 효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넷째, 2020년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의 소득 충격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만약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면, 2017년 이후 전체 인구의 불평등과 아동 및 근로연령층의 빈곤 감소 추이가 2020년까지 지속되지 못했을 것이다([그림 6-7]~[그림 6-9] 참조). 재난지원금의 분배 효과에 대해서는 제7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본다.



제7장

코로나19 이후 소득분배 변화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고용형태별 코로나19 이후 취업소득 변화

제4절 가구형태별 코로나19 이후 취업소득 변화

제5절 가구형태별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 분배 변화

제6절 소결

제 7 장 코로나19 이후 소득분배 변화

제1절 분석 개요

제7장에서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분배 변화를 살펴본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학교와 시설 등이 장기간 폐쇄되기를 반복하였고, 사적 모임 인원과 시간을 제한하면서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를 경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 간 이동 역시 제한되면서 수출과 수입 관련 업종에도 타격이 컸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98년 금융위기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최평천, 2021).

이와 같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는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 연구에서는 소득분배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취업소득의 변화가 어떠한 집단에서 가장 컸는지를 살펴본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하여 대면서비스 산업과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가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종관, 2020; 남재현, 이래혁, 2020).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가 그러하듯 특정 시점의 고용형태별 소득을 비교하는 방식은 사업장 폐업이나 이직, 전직 등에 따른 노동시장 내 이동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가령, 코로나19 초기에 비하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자영업자는 사업체를 유지하기보다는 폐업 후 임시·일용직으로 이직하거나 노동시장을 이탈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고용형태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실제 고용형태별 코로나19의 영향을 과소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시점별 고용형태별 비율을 코로나19 이전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각 집단별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이후 실업과 일시휴직 등의 증가가 특히 노동시장 내에서 취약한 집단에 집중되었던 만큼 시장소득의 분배 악화를 예상하게 한다(김태완, 이주미, 2020). 그러나 실제로는 이전 연도와 대비하여 2020년 분배지표 악화는 예상만큼 큰 폭으로 관측되지 않았다. <표 7-1>의 시장소득 분배지표를 살펴보면 2020년 지니계수는 0.405로 2019년에 비하여 0.001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전 연도의 증가폭에 비

교하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5분위배율 역시 2020년 11.37배로 2019년에 비하여 오히려 그 수치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 역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0.9%포인트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가 이후인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하여 0.5%포인트 증가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시장소득 빈곤율이 높아졌다고 해석하기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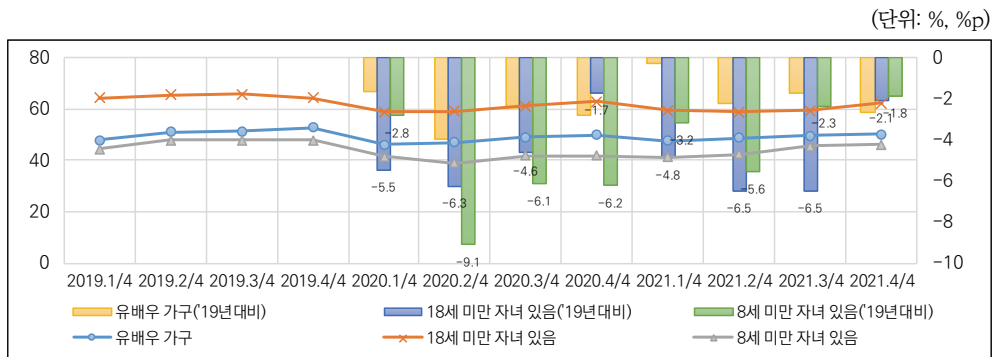
〈표 7-1〉 소득분배지표, 2017~2020년

(단위: 0~1, 배,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지니계수	시장소득	0.406	0.402	0.404	0.405
	처분가능소득	0.354	0.345	0.339	0.331
소득 5분위배율	시장소득	11.27	11.15	11.56	11.37
	처분가능소득	6.96	6.54	6.25	5.85
상대적 빈곤율 (중위 50% 기준)	시장소득	19.7	19.9	20.8	21.3
	처분가능소득	17.3	16.7	16.3	15.3

자료: 통계청. (2021a).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집계자료.

〔그림 7-1〕 맞벌이 비율



주: 18세 미만 자녀는 8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를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이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개인의 고용 및 근로·사업소득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구 시장소득의 전반적인 분배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한 가지 가능한 가설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영향을 받은 집단이 여성과 청년층이라는 점에서(함선유, 이원진, 김지원, 2020; Collins et al., 2020; Landivar et al., 2020; Lee, Park, & Shin, 2021) 고용영향을 받은 이들이 가구 내에서 2차 소득자였

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이들의 소득이 가구의 소득으로 합산되어 가구소득 분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대면서비스업에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아동 돌봄의 공백으로 인하여 여성의 고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Ham, 2021). 실제 [그림 7-1]에서도 코로나19 이후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장에서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고용률과 취업소득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가구구성원의 소득 변화가 가구의 소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에 관련하여 세 번째로 주목할 만한 점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례적으로 다양한 인구집단에 대한 공적 지원이 이뤄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 아동돌봄쿠폰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현금 이전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소득분배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수혜금이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7-1>에서 보듯이 공적이전을 반영한 가처분소득의 분배지표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하여 이후에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공적이전의 역할이 컸음을 예상케 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은 특정한 집단에 더 큰 폭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 수혜금이 이러한 집단에게 적절하게 분배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공적이전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남재현, 이래혁, 2021; 이승호, 홍민기, 2021) 이 장에서는 소득의 측면에서 보다 세밀하게 공적이전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분석 방법

1. 분석 데이터

이 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소득분배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9~2021년 가계동향조사 분기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 및 소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는 조사로,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진다. 분석 시점 현재 이용가능한 최신자료는 2021년 4/4분기 자료로 2019년 1/4분기부터 2021년 4/4분기까지를 분석대상 기간으로 삼았다. 각 분기별 분석대상 사례 수는 아래 <표 7-2>에 수록하였다.

<표 7-2> 분석대상 사례 수

(단위: 가구)

구분	2019				2020				2021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체 가구	4451	4386	5989	6058	6123	6326	6360	6558	6436	6508	6484	6551
8세 미만 아동	499	471	669	719	716	695	674	669	672	664	660	658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539	511	713	663	704	749	768	785	775	743	751	814
노인 1인	520	509	670	670	653	670	707	747	704	680	665	677
노인 다인	462	454	616	651	643	650	671	707	692	667	688	724
비노인 1인	835	858	1063	1054	1082	1164	1138	1214	1197	1288	1286	1279
비노인 다인	1596	1583	2258	2301	2325	2398	2402	2436	2396	2466	2434	2399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소득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자료를 공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현황을 살펴보는 데 적합한 데이터이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우선 실제 자료의 수집은 월 단위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공표 시 분기를 합산하여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환자는 1월 23일 확인되었으나, 본격적인 코로나19의 영향은 2020년 2월 18일 31번째 확진자를 기점으로 대구 경북에서 신천지 관련 집단감염이 발견되면서 큰 폭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고용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2020년 1분기의 경우 제한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2020년 1분기를 코로나19 이전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가계동향조사의 또 다른 한계점은 가구 구성원의 근로·사업소득을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만 제공하고, 그 이외 가구원의 경우 모든 이들을 합산하여 기타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된 모든 개인의 소득 변화를 관측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개인의 근로·사업소득 변화가 어떻게 가구의 소득분배에 영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때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과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장에서는 주로 코로나19 이후 개인(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 및 가구의 취업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변동을 살펴보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총소득(취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합산한 소득)과 시장소득(취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한 소득), 가처분소득(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공적이전지출을 차감한 소득)도 함께 살펴보았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기 위하여 2020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보정하였다.

2. 분석 방법

이 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소득분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2019년 동분기 대비 개인의 고용형태와 고용형태별 소득, 가구형태 및 가구형태별 가구소득 등에 대한 기술통계를 검토하였다. 분석대상 기간 동안 가구주와 배우자의 고용형태와 소득 변화를 파악하고, 코로나19 전후 취업소득의 분배지표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특성별 평균 수준의 변화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노동시장 내 고용형태 변화 및 맞벌이 비율 변화 등에 따른 소득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2020년 이후 시점의 고용형태별 비율과 배우자 취업률 등을 2019년 동분기 수준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재가중 방법(DiNardo et al., 1996)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고용형태와 배우자의 취업률을 과거 시점과 동일하게 고정함으로써 고용형태 변화의 영향과 2차 소득자 취업률 변화가 코로나19 이후 소득 변화에 기여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재가중치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산출하였다

$$\psi(X) = \frac{\Pr(X|D_t = 1)}{\Pr(X|D_t = 0)} = \frac{\Pr(D_t = 1|X)/\Pr(D_t = 1)}{\Pr(D_t = 0|X)/\Pr(D_t = 0)} \quad (7-1)$$

여기서 $\Pr(D_t = 1|X)$ 는 코로나19 이후 시점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산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포함된 설명변수는 각 절의 모델에 따라 달리 설정하였다. 고용형태별 근로·사업소득 변화를 살펴본 제3

절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이탈이나 고용형태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목적임으로 설명변수로 취업과 고용형태의 더미변수(미취업,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와 개인의 특성(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주 여부)의 교차항을 설명변수로 투입하였다. 가구의 2차 소득자의 고용상태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제4절에서는 설명변수로 배우자의 상태(배우자 없음, 배우자 있으나 동거하지 않음, 배우자 있으나 미취업, 배우자 취업)와 가구의 특성(3세 미만 자녀 여부, 8세 미만 자녀 여부, 18세 미만 자녀 여부, 노인 가구 여부)의 교차항을 설명변수로 투입하였다.

〈표 7-3〉 분석대상 및 분석 방법

구분	분석대상	소득 변수 구성	분석 방법
제3절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 (가구가중치 적용)	개인의 취업소득	- 2019년 동분기와 고용형태별 구성이 같도록 재가중 - 재가중 시 포함된 변수: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주 여부, 취업·고용형태, 연령×취업·고용형태, 성별×취업·고용형태, 교육수준×취업·고용형태, 가구주 여부×취업·고용형태
제4절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 (가구가중치 적용)	가구주와 배우자의 합산 취업소득	- 2019년 동분기와 배우자 특성이 같도록 재가중 - 재가중 시 포함된 변수: 3세 미만 자녀 여부, 8세 미만 자녀 여부, 18세 미만 자녀 여부, 노인 가구 여부, 배우자의 유무·취업상태, 3세 미만 자녀 여부×배우자의 유무·취업상태, 8세 미만 자녀 여부×배우자의 유무·취업상태, 18세 미만 자녀 여부×배우자의 유무·취업상태, 노인 가구 여부×배우자의 유무·취업상태
제5절	전체 가구원 (가구가중치×가구원 수 적용)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의 취업소득, 총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 2019년 동분기 대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변화 수준 검토 - 2019년 동분기 대비 가구형태별, 소득원천별 소득 수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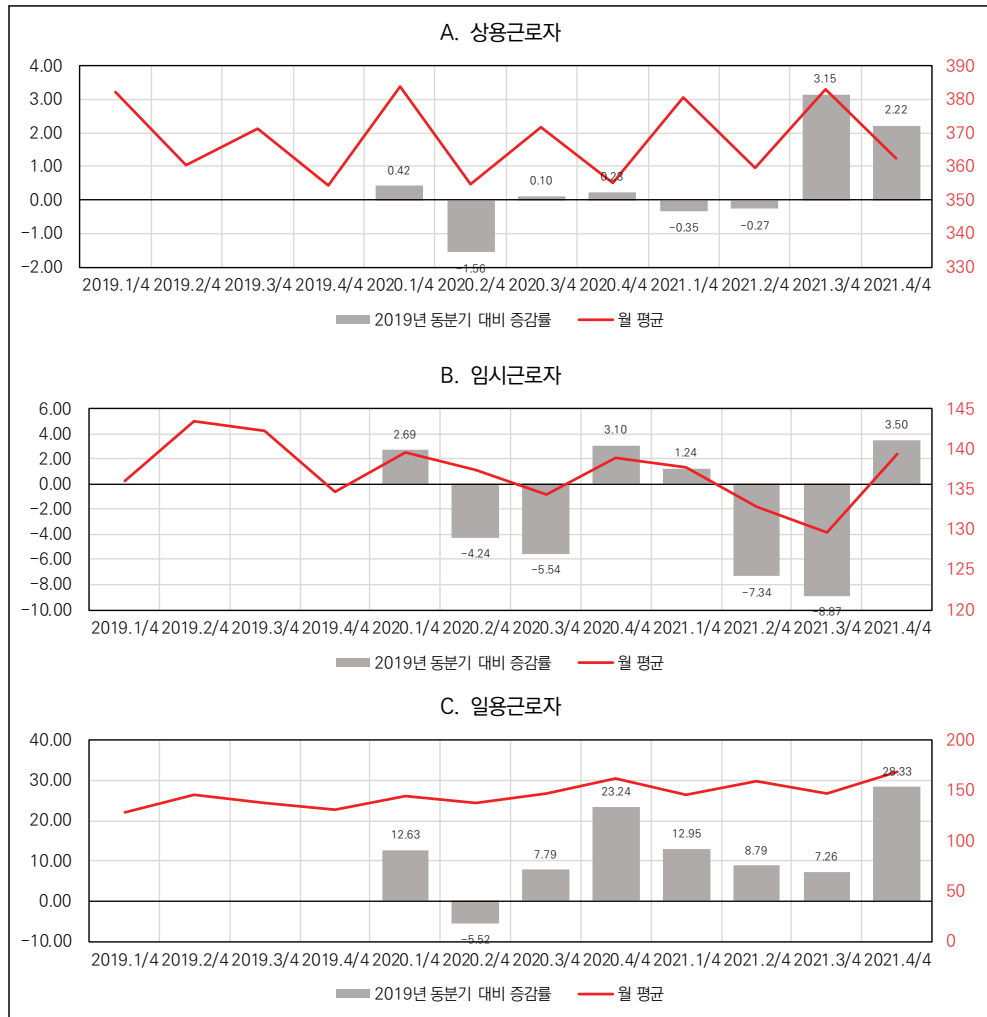
자료: 필자가 작성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2020년 이후 고용형태별 비율과 배우자 고용률이 2019년 동분기와 동일하게 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산출된 재가중치를 적용하여 만약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하게 고용형태별 비율과 각 고용형태별 성별, 학력, 연령, 가구주 비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고용형태의 평균 취업소득 수준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였다. 동일하게 2019년 이후 맞벌이 비율과 가구의 특성별 맞벌이 비율을 고정하였을 때 부부 소득의 평균과 분배지표 등을 산출하였다.

제3절 고용형태별 코로나19 이후 취업소득 변화

[그림 7-2] 임금근로자의 분기별 취업소득과 2019년 동분기 대비 변화율

(단위: %, 만 원/월, 2020년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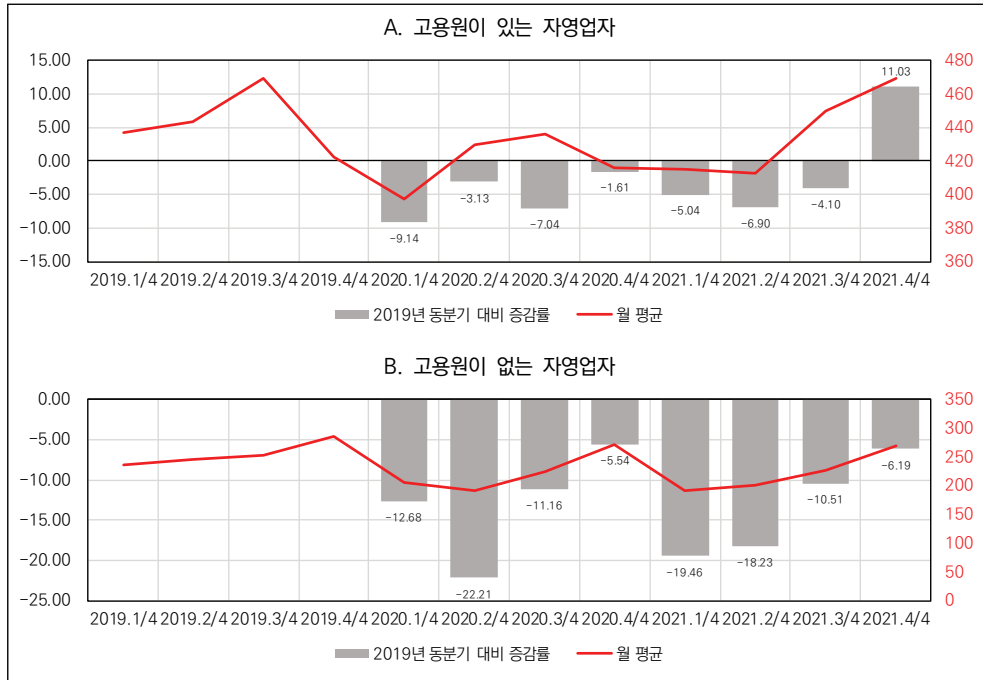


주: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에 한정하여 개인의 고용형태별 평균 근로·사업소득을 계산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7-3] 자영업자의 분기별 취업소득과 2019년 동분기 대비 변화율

(단위: %, 만 원/월, 2020년 실질)



주: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에 한정하여 개인의 고용형태별 평균 근로·사업소득을 계산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제3절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취업소득이 고용형태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우선 [그림 7-2]는 각 분기마다 고용형태별 평균 취업소득을 나타내고 있다. 고용형태별로 코로나19 이후 취업소득의 변동 폭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우선 상용근로자들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분기에 취업소득이 대략 1.6%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취업소득의 감소 폭은 크게 관측되지 않았으며, 2021년 3분기에 이르러서는 2019년 3분기에 대비하여 취업소득이 3.2% 가량 증가하였다. 임시근로자들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소득의 하락 폭이 두드러진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2분기의 경우 2019년 2분기에 비하여 평균 소득이 4.2% 감소하였으며, 3분기에는 5.5%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다. 이후 2020년 4분기와 2021년 1분기에 다소 하락 폭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분기에만 평균 소득이 5.5% 가량 감소하였고, 이후에는 오히려 소득이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소득의 변동 폭이 컸던 집단은 역시 자영업자였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모두 2019년 동분기 대비하여 평균 소득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1분기 9.1%, 3분기 7.0% 가량 소득이 감소하였다. 이들은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월 평균 400만 원 내외의 소득을 나타내고 있어, 평균 변화액 역시 가장 컸다. 2020년 2분기의 경우 전년 동분기 대비 월 소득이 40만 원 가량이 줄어들었다.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했던 2021년 4분기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2019년 4분기에 비하여 11.0% 증가하여, 소득 회복의 양상이 나타난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비하여 평균 소득 수준이 200만 원 내외로 낮으나, 소득 감소율은 더 크게 나타났다. 2020년 1분기 12.7% 소득이 감소하였으며, 2분기에는 22.2%가 감소하여 더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감소 폭이 다소 줄어든 반면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21년에 이르러서도 감소 폭이 크게 유지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들은 2021년 1분기에 이르러 평균 소득이 190만 원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 2021년 4분기의 경우, 소득 수준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달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소득 감소 폭이 줄어들었을 뿐 감소 추세는 유지되었다. 이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가 상당히 컸으며, 그 회복세도 더딤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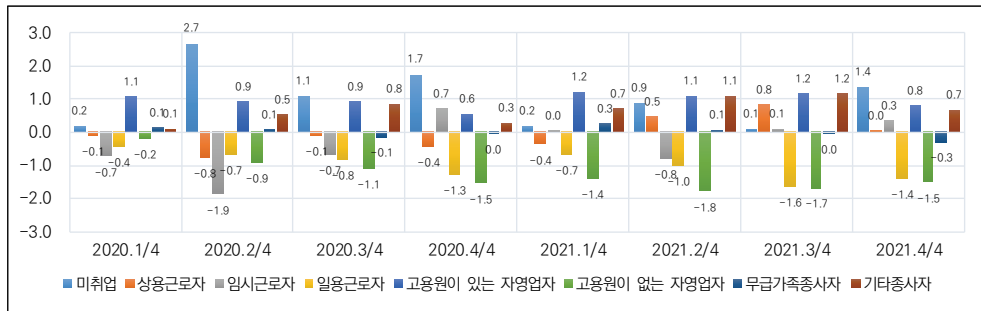
이러한 고용형태별 평균 소득은 각 고용형태별 구성원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7-4]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고용형태의 변화가 관측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분기는 2019년 2분기에 비하여 미취업자의 비율이 2.7%포인트 가량 늘어났으며,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은 1.9%포인트 줄어들었다. 이후 2020년 3분기와 4분기 역시 미취업자의 비율이 2019년 동분기에 비하여 늘어났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그 비중이 2019년에 비하여 2020년과 2021년 다소 늘어나고 있다.¹⁸⁾ 물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18) 다만, 이러한 양상은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와는 상이하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같은 시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그 비율이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부표 7-1 참조). 이처럼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다른 까닭은 이 연구의 분석대상을 가구주와 배우자로

경우 <표 7-4>에서 보듯 그 비율이 2019년에는 1%대이며, 2020년에 이르러서도 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증감 추세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소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 7-4] 2019년 동분기 대비 고용형태별 비율 변화

(단위: %p)



주: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에 한정하여 개인의 고용형태별 비율을 계산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7-4> 고용형태별 비율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미취업	33.65	30.98	31.19	30.14	33.82	33.66	32.28	31.88	33.84	31.85	31.29	31.49
상용근로자	33.93	33.95	34.45	35.37	33.82	33.19	34.35	34.93	33.57	34.41	35.28	35.41
임시근로자	9.05	10.73	9.88	9.13	8.33	8.87	9.22	9.84	9.09	9.94	9.98	9.46
일용근로자	4.99	5.48	5.64	5.6	4.55	4.82	4.81	4.33	4.32	4.49	4.01	4.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42	1.54	1.52	1.99	2.48	2.45	2.42	2.54	2.63	2.62	2.67	2.7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3.26	13.41	13.34	13.56	13.07	12.5	12.25	12.03	11.87	11.63	11.66	12.06
무급가족종사자	2.63	2.78	2.87	2.91	2.76	2.86	2.73	2.87	2.89	2.84	2.83	2.62
기타종사자	1.07	1.13	1.11	1.3	1.18	1.66	1.95	1.58	1.77	2.21	2.27	1.97

주: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에 한정하여 개인의 고용형태별 비율을 계산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한정하였기 때문에 보인다. 실제로 이 연구의 분석대상의 2020년 평균 연령은 51.2세 정도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응답자의 평균 연령인 47.3세에 비하여 높았다. 즉, 부모 등과 동거하고 있어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기타 가구원으로 파악된 젊은층이 이 연구의 분석대상에서는 빠지게 된 것이다. 그 외에도 두 조사의 종사상지위 분류도 차이가 있는데,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기타 종사자 항목을 별도로 두고 있어 특수고용이나 독립계약자 등 기존의 종사상지위 체계 내에서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집단이 여기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기타종사자의 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고용형태의 변화는 하위집단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우선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는 본래 고용형태별 비율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표 7-6>을 보면 가구주는 미취업자의 비율이 낮으며,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기간에 따라 15~18%를 나타낼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가구주의 배우자는 미취업 비율이 높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표 7-5> 가구주 및 배우자의 고용형태별 비율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가 구 주	미취업	21.36	18.22	19.21	18.09	20.15	19.96	19.24	19.40	21.02	17.89	17.88	18.32
	상용근로자	42.93	42.67	42.72	43.82	42.52	42.16	43.64	43.84	42.33	43.66	44.47	44.36
	임시근로자	8.41	10.49	9.85	9.18	9.07	9.49	9.42	10.03	9.40	10.46	10.45	9.80
	일용근로자	5.94	6.56	6.30	6.41	5.74	5.67	5.38	4.97	5.07	5.40	4.62	4.8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12	2.27	2.18	2.80	3.44	3.50	3.47	3.62	3.95	3.91	3.97	4.0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8.45	18.87	18.77	18.54	18.07	17.61	17.01	16.59	16.38	16.51	16.34	16.63
	무급가족종사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종사자	0.78	0.92	0.97	1.16	1.01	1.61	1.84	1.55	1.85	2.17	2.27	1.94
가 구 주 의 배 우 자	미취업	51.41	49.43	48.52	47.61	53.79	53.6	51.34	50.18	52.71	52.32	51.06	50.98
	상용근로자	20.92	21.34	22.48	23.11	21.13	20.12	20.76	21.86	20.68	20.85	21.74	22.16
	임시근로자	9.98	11.08	9.94	9.05	7.24	7.97	8.92	9.56	8.64	9.18	9.29	8.96
	일용근로자	3.6	3.91	4.69	4.43	2.81	3.58	3.99	3.39	3.22	3.15	3.11	3.2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41	0.5	0.56	0.82	1.06	0.92	0.88	0.95	0.7	0.74	0.75	0.8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76	5.52	5.48	6.34	5.76	5.06	5.28	5.34	5.24	4.47	4.76	5.29
	무급가족종사자	6.43	6.8	7.03	7.14	6.79	7.01	6.72	7.09	7.15	7.01	7.01	6.51
	기타종사자	1.49	1.43	1.31	1.49	1.42	1.73	2.11	1.62	1.66	2.28	2.28	2.01

주: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에 한정하여 개인의 고용형태별 비율을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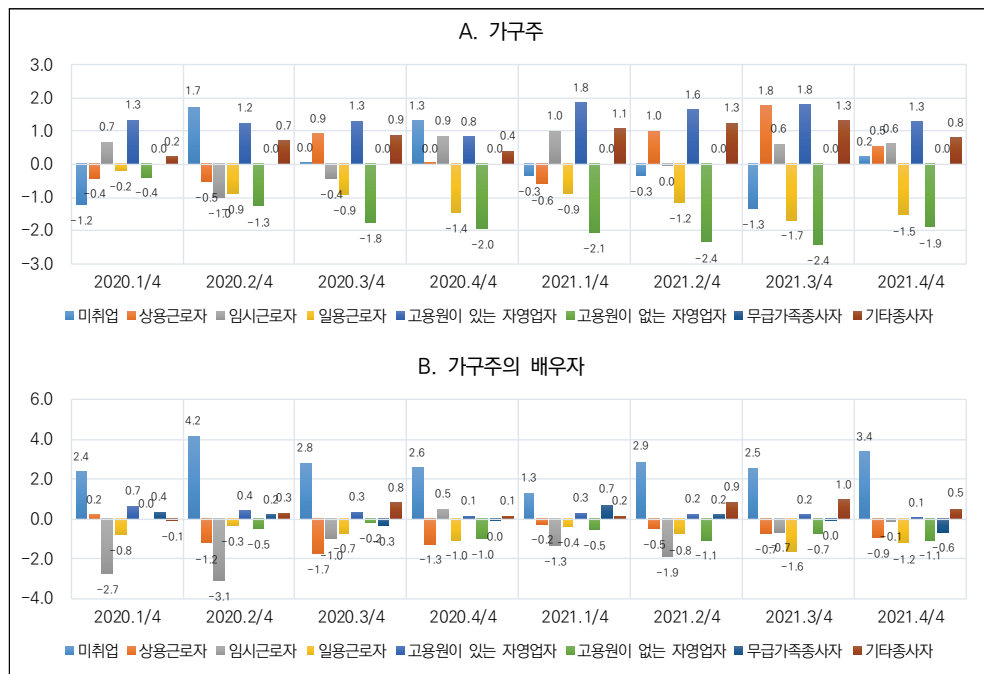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이처럼 가구주와 배우자의 본래 고용형태가 상이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고용형태의 변화 역시 가구주와 배우자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가구주에 한정하여 고용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더불어 일용근로자의 비중 역시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편, 미취업자의 비율은 2020년 2분기와 4분기 각각 코로나19 유행기에 다소 늘어나기는 했으나, 2021년에 이르러 2019년 동분기 대비 미취업자가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대신 상용근로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늘어났다. 가구주의 배우자는 가구주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코로나19 이후 미취업자의 비율이 상당히 늘어났으며, 이러한 취업자 감소가 특히 임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감소와 관련 있어 보인다.

[그림 7-5] 가구주 및 배우자의 2019년 동분기 대비 고용형태별 비율 변화

(단위: %p)



주: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에 한정하여 개인의 고용형태별 비율을 계산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교육수준과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별 비율도 코로나19 이전부터 집단별로 상이하며, 코로나19의 변화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남성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20%대로 낮고 일용근로자의 비중은 8%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모든 집단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또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 역시 25%

내외를 나타내, 전체 4분의 1 가량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초대졸 이상 학력의 남성은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60%에 이를 정도로 높으며, 일용근로자의 비율은 2% 내외에 불과하였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6〉 남성의 고용형태별 비율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고 졸 이 하	미취업	28.51	24.41	25.55	25.13	28.01	28.16	26.63	26.08	27.93	25.56	25.55	26.93
	상용근로자	26.87	27.71	28.06	28.08	26.05	25.07	26.44	26.86	25.61	26.81	26.91	26.84
	임시근로자	8.86	11.15	8.90	7.72	8.80	9.22	8.24	9.11	9.04	9.62	8.25	7.82
	일용근로자	8.56	9.09	8.88	8.72	7.71	7.97	8.58	7.94	8.74	9.07	7.84	8.1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4	2.35	2.23	2.56	3.10	3.29	3.33	3.01	3.43	4.22	4.73	3.9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4.43	24.79	25.53	26.73	25.56	24.96	25.65	25.93	23.73	22.54	24.41	25.05
	무급가족종사자	0.31	0.33	0.34	0.44	0.40	0.71	0.49	0.41	0.47	0.74	0.84	0.50
	기타종사자	0.22	0.19	0.50	0.63	0.37	0.62	0.64	0.67	1.06	1.46	1.48	0.78
초 대 졸 이 상	미취업	14.79	13.29	14.62	13.53	15.27	16.13	15.39	14.38	15.54	15.00	15.09	14.09
	상용근로자	61.74	60.56	59.20	60.56	59.99	58.29	59.60	61.25	59.75	59.98	60.13	60.45
	임시근로자	4.68	6.16	5.98	5.22	4.66	5.54	5.11	4.71	4.46	5.75	5.72	4.94
	일용근로자	2.24	2.40	2.74	3.23	2.22	2.44	2.46	2.34	2.19	1.64	1.48	1.9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46	2.69	2.50	3.48	4.24	4.19	4.29	5.11	5.20	4.65	4.75	5.4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3.39	14.10	13.86	12.70	12.46	11.50	10.66	10.29	10.96	11.09	10.06	10.64
	무급가족종사자	0.18	0.26	0.36	0.36	0.23	0.35	0.30	0.16	0.21	0.37	0.44	0.29
	기타종사자	0.52	0.56	0.75	0.93	0.93	1.57	2.19	1.77	1.68	1.52	2.32	2.15

주: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에 한정하여 개인의 고용형태별 비율을 계산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여성들 역시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미취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고졸 이하 학력 여성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초대졸 이상 여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무급가족종사자 역시 고졸 이하 여성은 7% 내외로 나타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7-7〉 여성의 고용형태별 비율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고 졸 이 하 여 성	미취업	49.61	46.95	44.64	43.73	49.45	47.58	45.79	46.35	49.84	45.23	44.66	46.25
	상용근로자	15.98	14.98	16.31	17.28	15.63	16.27	17.65	17.23	15.17	16.66	18.24	17.82
	임시근로자	13.16	15.23	14.82	14.28	12.11	12.91	13.79	14.40	13.36	15.47	15.60	14.78
	일용근로자	5.83	6.88	7.60	6.92	5.51	6.13	6.27	5.36	4.62	5.26	4.87	5.0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72	0.79	0.72	0.99	1.13	0.66	0.80	0.87	0.81	0.78	0.62	0.7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95	7.18	7.45	7.94	7.82	7.33	6.85	7.04	7.52	7.48	6.68	6.83
	무급가족종사자	6.43	6.72	7.32	7.59	7.17	7.34	7.18	7.50	7.22	7.15	7.20	6.70
	기타종사자	1.31	1.27	1.14	1.28	1.20	1.77	1.67	1.25	1.47	1.98	2.12	1.87
초 대 졸 이 상 여 성	미취업	36.96	35.02	36.91	34.68	38.47	40.20	38.14	36.90	38.02	38.84	37.21	35.50
	상용근로자	37.52	38.53	39.50	41.25	39.62	37.30	37.78	38.84	38.84	38.65	38.93	39.84
	임시근로자	8.05	8.85	8.31	7.60	6.40	6.50	8.42	9.91	8.32	7.38	9.02	9.04
	일용근로자	2.71	2.87	2.53	2.93	2.21	2.18	1.46	1.43	1.55	1.68	1.78	1.6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36	0.44	0.75	1.17	1.76	2.07	1.65	1.57	1.50	1.21	1.00	1.4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9.73	9.04	7.72	8.15	7.35	7.32	7.60	6.61	6.27	6.20	7.10	7.49
	무급가족종사자	2.36	2.59	2.13	1.75	1.84	1.66	1.52	2.00	2.45	1.96	1.76	1.96
	기타종사자	2.31	2.66	2.14	2.48	2.34	2.76	3.43	2.75	3.06	4.09	3.22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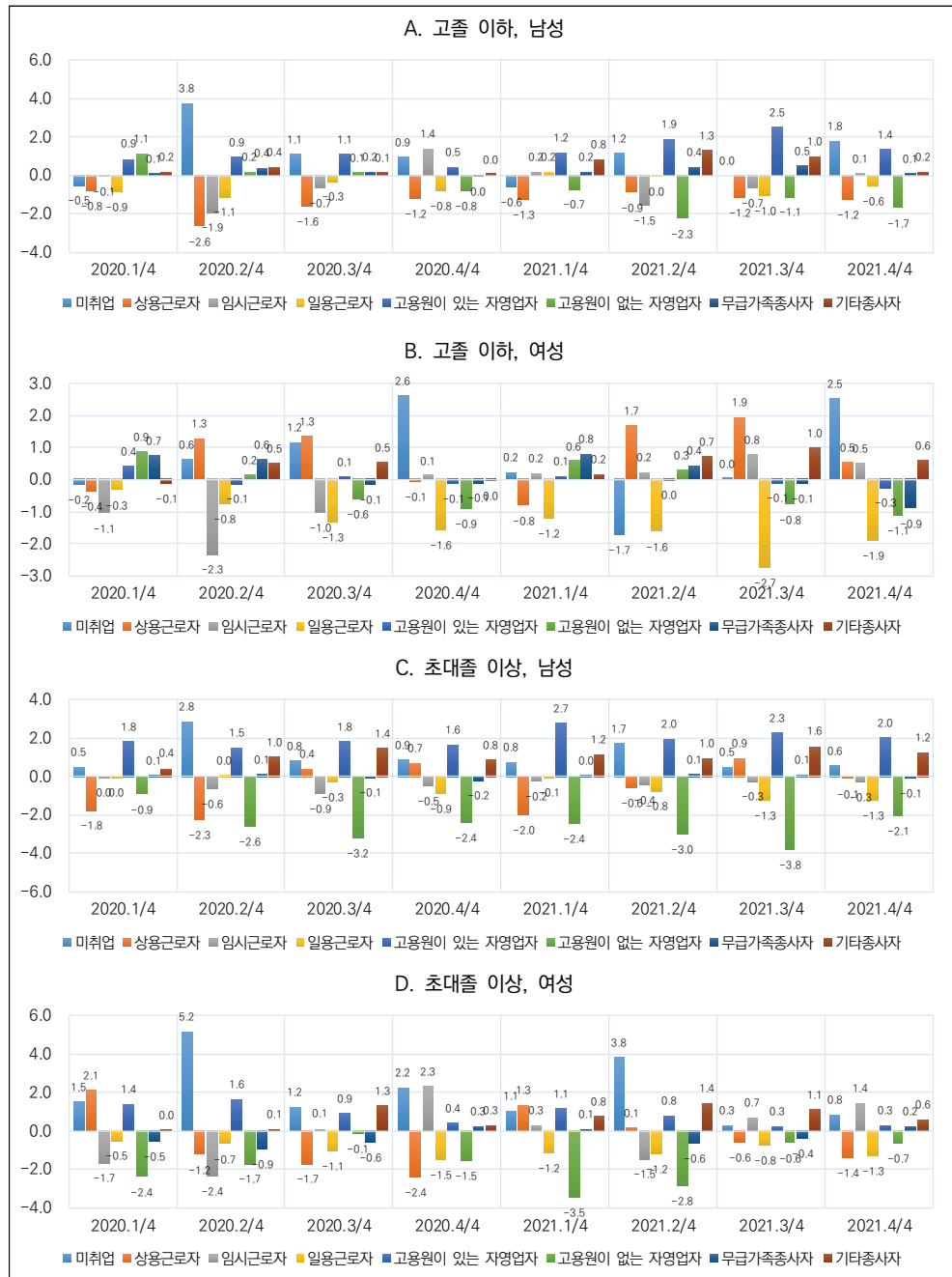
주: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에 한정하여 개인의 고용형태별 비율을 계산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대졸 이상 남성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 감소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초대졸 이상 여성의 경우 코로나19의 주요 유행기마다 미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고졸 이하 여성의 경우 코로나19 초기 임시근로자의 감소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는 일용근로자의 비중 감소가 컸다. 고졸 이하 남성과 초대졸 이상 남성 모두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분기를 제외하고는 미취업자 증가가 크지 않았다. 이는 여성 미취업자 증가의 양상과는 대조적이다.

[그림 7-6] 성·교육수준별 2019년 동분기 대비 고용형태별 비율 변화

(단위: %p)



주: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에 한정하여 개인의 고용형태별 비율을 계산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이처럼 고용형태의 변화와 고용형태별 구성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재가중 방법을 활용하여 2020년 이후 각 분기별 고용형태의 비율과 각 고용형태별 성, 연령, 교육 수준, 가구주 여부를 2019년 동분기와 동일하도록 바꾼 결과는 [그림 7-7]에 수록하였다. 만약 2019년과 각 고용형태별 구성원이 동일하다면, 상용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이 더 큰 폭으로 낮아졌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상용근로자가 코로나19 이후에도 평균 임금 수준이 크게 변하지 않았던 이유는 상용근로자 중에서도 임금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 상용직에서 이탈하여, 실제 상용근로자 소득 변화의 크기를 과소추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월평균 소득의 변화를 시기에 따라 2만 원에서 6만 원 가량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분기 당시 2.8만 원 수준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2021년 3분기에 이르러 6.2만 원으로 그 크기가 더욱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8〉 2019년 동분기 대비 임금근로자의 취업소득 변화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구분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상용 근로자	A) 2019년 동분기 대비 차이	1.6	-5.6	0.4	0.8	-1.3	-1.0	11.7	7.9
	B) CF_2019년 동분기 대비 차이	-1.2	-9.0	-4.1	-1.3	-6.0	-6.3	5.5	4.8
	B-A) 특성 변화에 따른 차이	-2.8	-3.4	-4.4	-2.1	-4.6	-5.4	-6.2	-3.0
임시 근로자	A) 2019년 동분기 대비 차이	3.7	-6.1	-7.9	4.2	1.7	-10.5	-12.6	4.7
	B) CF_2019년 동분기 대비 차이	2.3	-8.7	-7.2	4.4	-0.1	-10.8	-11.6	4.4
	B-A) 특성 변화에 따른 차이	-1.3	-2.7	0.7	0.2	-1.8	-0.3	1.0	-0.3
일용 근로자	A) 2019년 동분기 대비 차이	16.2	-8.0	10.7	30.4	16.7	12.8	9.9	37.1
	B) CF_2019년 동분기 대비 차이	13.9	-8.6	7.9	25.5	11.1	5.6	3.7	31.2
	B-A) 특성 변화에 따른 차이	-2.3	-0.5	-2.7	-4.9	-5.5	-7.2	-6.3	-5.9

주: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에 한정하여 개인의 고용형태별 평균 근로·사업소득을 계산하였다. 'CF'는 재가중 결과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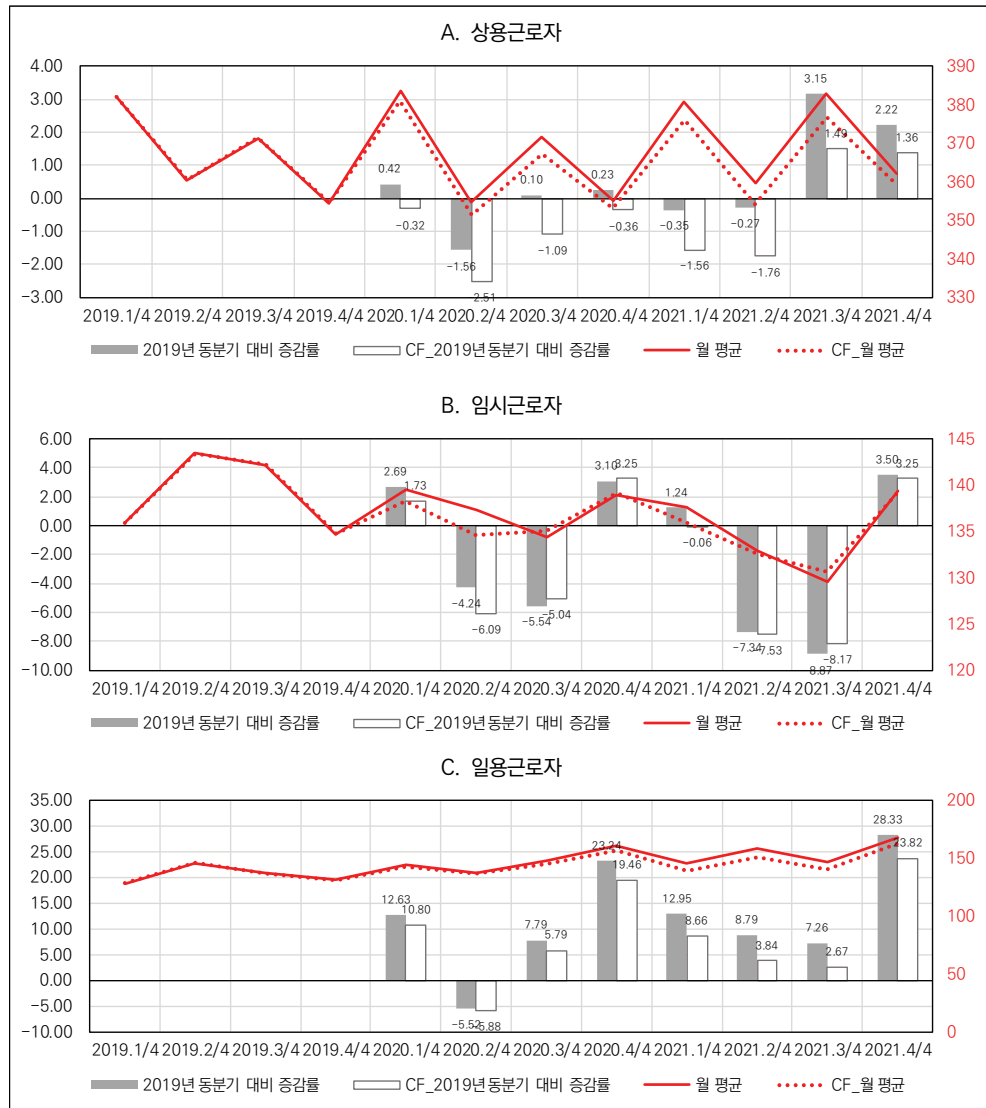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임시근로자 역시 코로나19의 초기 영향이 본격화되는 2020년 2분기의 경우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특성 차이에 따라 2.7만 원 가량 소득이 과소 추정되었다. 다만, 임시직 근로자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특성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소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일용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구성을 조정하더라도 임금 변화의 방향과 추세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다만, 특성 변화 차이에 따른 소득 변화

분이 코로나19 초기 유행 당시에 비하여 장기화 상황에서 그 크기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7] 재가중 결과: 임금근로자의 분기별 취업소득과 2019년 동분기 대비 변화율

(단위: %, 만 원/월, 2020년 실질)



주: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에 한정하여 개인의 고용형태별 평균 근로·사업소득을 계산하였다. 'CF'는 재가중 결과를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7-9〉 2019년 동분기 대비 자영업자의 취업소득 변화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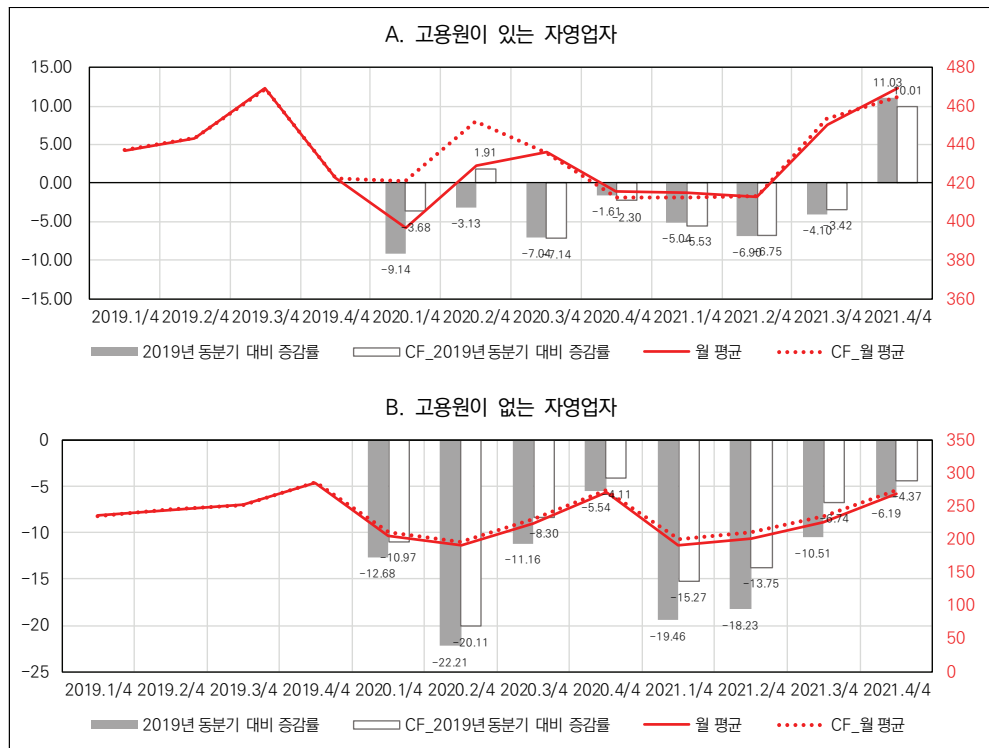
구분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고용원 있음	A) 2019년 동분기 대비 차이	-40.0	-13.9	-33.1	-6.8	-22.0	-30.6	-19.2	46.6
	B) CF_2019년 동분기 대비 차이	-16.1	8.5	-33.5	-9.7	-24.2	-29.9	-16.1	42.3
	B-A) 특성 변화에 따른 차이	23.9	22.3	-0.4	-2.9	-2.1	0.7	3.2	-4.3
고용원 없음	A) 2019년 동분기 대비 차이	-29.9	-54.5	-28.2	-15.9	-45.9	-44.7	-26.5	-17.8
	B) CF_2019년 동분기 대비 차이	-25.9	-49.3	-20.9	-11.8	-36.1	-33.7	-17.0	-12.5
	B-A) 특성 변화에 따른 차이	4.0	5.1	7.2	4.1	9.9	11.0	9.5	5.2

주: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에 한정하여 개인의 고용형태별 평균 근로·사업소득을 계산하였다. 'CF'는 재가중 결과를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7-8] 재가중 결과: 자영업자의 분기별 취업소득과 2019년 동분기 대비 변화율

(단위: %, 만 원/월, 2020년 실질)



주: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에 한정하여 개인의 고용형태별 평균 근로·사업소득을 계산하였다. 'CF'는 재가중 결과를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 초기에 다소 상이한 양상을 나타낸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분기에 소득이 3.1% 감소하였는데, 실제 이들의 구성을 조정하고 나면 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1.9% 가량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7-8] 참조). 이를 실제 값으로 보면 대략 22.3만 원 정도가 특성 변화에 의하여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2019년에 비하여 코로나19 초기에 확인되는 소득 감소분의 일부는 주로 높은 소득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해당 고용형태를 이탈하면서(또는 주로 낮은 소득인 이들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진입하면서) 구성 차이에 의하여 소득 감소가 관측된 것임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양상은 코로나19 초기에만 관측되고 그 이후에는 관측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관측된 평균 소득 하락률에 비하여 가상의 소득분포가 더 작은 하락률을 나타냈다.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2019년에 비하여 더 낮은 소득을 받는 이들로 구성됨에 따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하락폭을 다소 크게 추정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 커진다. 둘의 차이가 2020년 2분기에는 2.1%포인트 정도였으나, 2021년 1분기에 4.2%포인트로 격차가 커졌으며, 2021년 2분기 4.5%포인트로 그 격차가 커졌다. 실제 가격으로 보더라도, 2020년 2분기 5.1만 원에서 2021년 2분기에는 11.0만 원으로 그 크기가 커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 비중이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이들의 소득 하락 폭이 과소 추정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실제로는 더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해당 고용형태에 남아 있으면서 소득 하락 폭이 과대추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코로나19 이전과 고용형태별 비율을 고정하더라도 소득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집단은 자영업자였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업 여부와 고용형태별 특성의 변화를 차감하더라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월평균 취업소득이 대략 20만 원 정도 감소하였으며, 특히 2020년 3분기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 2021년 1분기와 2분기에도 각각 24.2만 원과 29.9만 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였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감소 폭이 더 컸는데, 2020년 2분기 당시 49.3만 원이 감소하여, 소득이 5분의 1 가량이 줄어들었다. 그 후 2021년 1분기와 2분기에도 각각 36.1만 원, 33.7만 원이 줄어들어 높은 감소 폭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코로나19 이후 고용형태의 변화를 감안할 경우 임금근로자, 특히 상용근로자들의 경우 2019년 동분기 대비 소득이 감소하지 않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소득이 주로 낮은 이들이 노동시장에 이탈하면서 실제 소득 감소 폭이 다소 과소추정되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맥락에서 노동시장 내 구성 변화의 영향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영업자는 가장 큰 소득 감소 폭을 나타냈는데, 분석 결과, 일부는 특성 변화에 따른 부분이 고려되지 않아 소득 감소가 과대추정되었을 수 있음을 나타냈다. 다만, 이러한 특성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 감소 폭은 상당히 커, 자영업 종사자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선행연구(남재현, 이래혁, 2020)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맥락에서도 이러한 소득 감소 폭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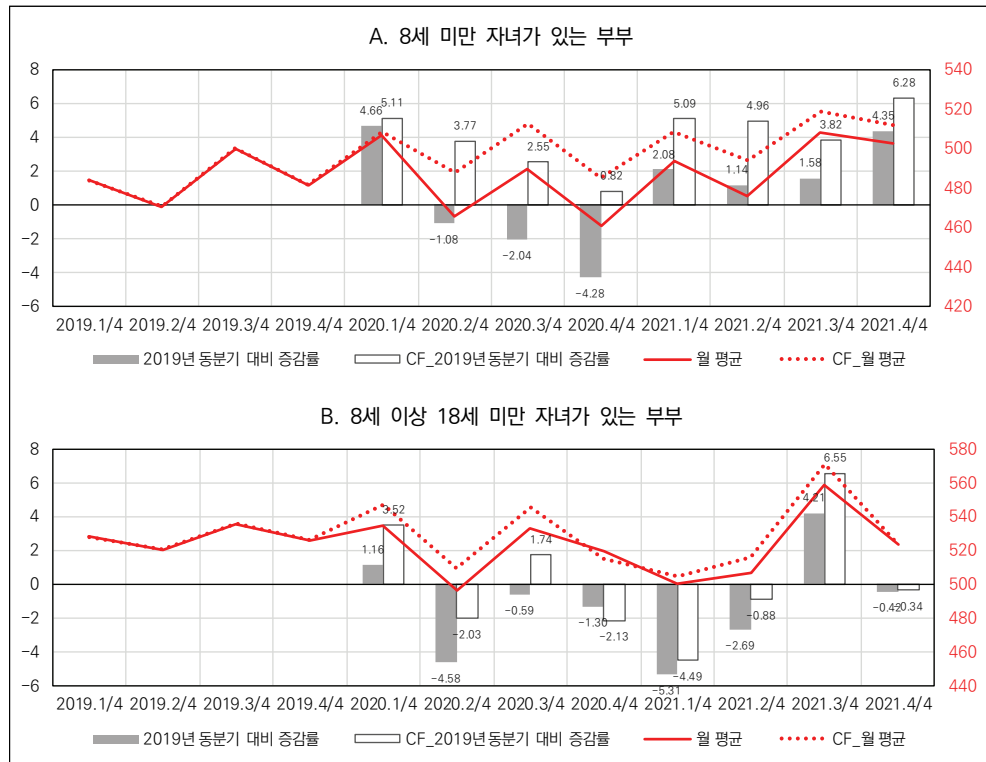
제4절 가구형태별 코로나19 이후 취업소득 변화

다음으로 본 절에서는 가구의 소득에 있어서 배우자의 소득 변화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그림 7-5]에서 살펴보았듯이, 가구주는 미취업자 비율의 증가 폭이 작았던 반면, 배우자는 미취업자 비율의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난다. 배우자 취업률의 변화는 맞벌이 부부 비율의 변화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림 7-1]과 같이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맞벌이 부부 비율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이처럼 배우자의 취업률 감소가 가구소득 감소에 기여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4절에서는 재가중 방법을 활용하여 가구주의 배우자 취업률을 2019년 동분기로 맞춘 결과를 확인하였다.

우선 [그림 7-9]를 살펴보면,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의 평균 취업소득은 2020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2019년에 동분기에 비하여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다가 2021년 1분기부터는 2019년 정도로 회복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한편, 8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코로나19 직후의 소득 감소 폭이 컸으며, 2021년 1분기 감소 폭이 다시 커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에 비하여 8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의 소득 감소율이 더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9] 재가중 결과: 아동이 있는 가구의 부부 취업소득과 2019년 동분기 대비 변화율

(단위: %, 만 원/월, 2020년 실질)



주: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에 한정하여 가구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을 계산하였다. 'CF'는 재가중 결과를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러나 배우자의 취업률을 2019년 동분기로 조정한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코로나 19의 영향이 특히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소득 감소분이 전적으로 배우자의 취업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배우자 취업상태를 고정할 경우 2020년 소득은 오히려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실질 값으로 보면 2020년 2분기 배우자의 특성이 2019년 2분기와 동일하였다면, 부부의 취업소득이 17.7만 원 증가하여야 했으나, 실제로는 5.1만 원 줄어들면서 코로나19 이후 배우자 취업상태 변화에 따른 소득 감소는 22.8만 원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2020년 4분기에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에 이르러서는 그 폭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가구소득 평균 10만 원 내외를 나타낸다.

〈표 7-10〉 아동이 있는 가구의 부부 취업소득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구분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8세 미만 자녀 있음	평균 소득	506.4	465.3	489.7	460.8	493.9	475.8	507.8	502.3
	CF_평균 소득	508.5	488.1	512.6	485.3	508.5	493.7	519.0	511.6
	A) 2019년 동분기 대비 차이	22.6	-5.1	-10.2	-20.6	10.1	5.4	7.9	20.9
	B) CF_2019년 동분기 대비 차이	24.7	17.7	12.7	4.0	24.6	23.3	19.1	30.2
	B-A) 배우자 특성 변화에 따른 차이	2.2	22.8	22.9	24.5	14.5	17.9	11.2	9.3
8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있음	평균 소득	534.4	496.6	532.7	519.1	500.2	506.4	558.4	523.8
	CF_평균 소득	546.9	509.8	545.2	514.8	504.6	515.8	571.0	524.2
	A) 2019년 동분기 대비 차이	6.1	-23.8	-3.2	-6.9	-28.1	-14.0	22.6	-2.2
	B) CF_2019년 동분기 대비 차이	18.6	-10.6	9.4	-11.2	-23.7	-4.6	35.1	-1.8
	B-A) 배우자 특성 변화에 따른 차이	12.5	13.3	12.5	-4.3	4.4	9.4	12.6	0.4

주: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에 한정하여 가구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을 계산하였다. 'CF'는 재가중 결과를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8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2020년 소득 감소 폭의 일부는 배우자 고용상태 변화로 설명이 되지만 그 비율이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아동에 비해서는 낮고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비하여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그 폭이 다소 줄어들었다. 이들 가구의 경우 배우자 고용률 변화에 따른 영향은 2021년에 이르러 작아졌음에도 2021년 1분기 평균 소득이 23만 원이 하락하여 상당히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 이는 배우자의 고용률은 변화하지 않았으나, 실질소득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 감소의 원인은 〈표 7-11〉에 수록한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의 취업소득과 고용형태 변화로 일부 설명된다. 가구주 소득의 경우 코로나19가 장기화된 2020년 4분기와 2021년 1분기에 2019년 동분기 대비하여 소득이 각각 5만 원과 7만 원이 줄어들기는 하나, 가구주의 배우자에 비하여 큰 감소 폭을 기록하지 못한다. 가구주의 배우자의 경우 2020년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2019년 동분기에 대비하여 취업소득이 26만 원과 21만 원 줄어들었으며, 2021년 1분기에 21만 원, 2분기에 18만 원이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초기 소득 감소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취업상태 변화에 의하여 상당 부분이 설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기 미취업자의 비율이 전년 대비 4.8%포인트와 3.9%포인트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7-11〉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 및 고용형태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취업 소득	가구주 소득	401	391	409	416	419	393	426	411	394	395	443	414
	배우자 소득	128	130	127	110	115	104	106	108	106	111	115	122
가구주 고용 형태	미취업	6.0	4.3	4.9	4.2	7.0	7.1	6.3	6.9	8.7	6.2	5.1	5.0
	상용근로자	62.1	60.1	60.6	60.6	58.2	60.9	64.4	60.4	56.2	62.4	63.8	64.0
	임시근로자	4.5	6.7	7.0	5.8	5.4	5.1	4.0	4.4	4.4	4.4	3.6	3.3
	일용근로자	3.7	4.2	3.6	4.2	4.8	3.4	2.3	2.4	4.4	3.8	2.3	2.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0	3.3	2.8	3.7	6.6	6.4	5.8	6.1	6.1	5.1	4.9	5.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9.1	19.6	19.9	20.3	17.1	15.4	15.0	18.3	17.4	15.7	17.3	17.8
	무급가족종 사자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종사자	1.7	1.9	1.3	1.3	1.0	1.8	2.2	1.5	2.8	2.6	3.1	2.4
	미취업	41.9	41.8	40.0	41.3	46.7	46.7	43.9	41.5	43.5	44.4	45.8	41.6
	상용근로자	30.6	30.0	30.4	27.8	26.4	26.6	26.4	30.0	28.7	30.8	29.3	31.0
배우자 고용 형태	임시근로자	10.7	11.1	10.1	7.4	7.8	9.7	10.3	9.9	9.8	8.7	9.5	10.3
	일용근로자	1.4	2.4	4.3	6.0	3.0	3.5	4.5	3.1	2.1	2.5	3.4	3.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6	0.4	0.5	1.1	0.9	0.9	0.6	1.2	0.6	0.5	0.8	1.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7.2	6.8	7.1	7.1	7.4	5.6	6.3	5.8	6.5	4.8	5.0	5.8
	무급가족종 사자	4.8	4.6	5.2	6.5	5.9	5.0	5.0	6.4	7.0	5.4	4.0	3.9
	기타종사자	2.8	2.9	2.4	2.7	1.8	2.1	3.0	2.1	1.8	3.0	2.3	2.4

주: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에 한정하여 개인의 고용형태별 비율을 계산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러나 2021년 상반기의 경우 고용률 변화가 크지 않았음에도 큰 폭의 소득 감소가 있었다. 미취업자의 규모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소득이 크게 감소한 2021년 1분기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2019년 1분기에 비하여 대략 2.2%포인트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코로나19 초기에는 배우자의 노동시장 이탈에 따라 소득 감소가 있었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일을 하

기는 하였지만, 가족의 자영업을 돕는 역할을 하면서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는 자녀 돌봄의 필요에 따른 영향이기보다는 자영업자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가구주의 배우자가 무급가족종사자로 전환되면서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게 됨을 의미한다. 다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의 취업소득을 합산한 평균이 400만 원 후반에서 500만 원대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 가구의 소득 분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표 7-12〉 아동이 없는 가구의 부부 취업소득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구분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노인 부부	평균 소득	72.3	69.5	78.5	101.9	65.7	79.2	97.5	116.5
	CF_평균 소득	72.2	68.6	76.2	103.0	65.6	78.7	94.2	117.2
	A) 2019년 동분기 대비 차이	17.2	3.7	12.5	1.7	10.7	13.4	31.5	16.3
	B) CF_2019년 동분기 대비 차이	17.2	2.8	10.2	2.7	10.6	12.9	28.2	17.0
	B-A) 배우자 특성 변화에 따른 차이	-0.1	-1.0	-2.3	1.0	-0.1	-0.5	-3.3	0.8
비 노인 부부	평균 소득	336.4	311.6	346.8	371.3	338.7	333.9	356.5	379.2
	CF_평균 소득	343.0	322.4	356.1	379.7	342.0	342.0	364.3	392.9
	A) 2019년 동분기 대비 차이	-12.2	-38.1	-9.9	-5.5	-10.0	-15.9	-0.2	2.4
	B) CF_2019년 동분기 대비 차이	-5.7	-27.4	-0.6	2.9	-6.7	-7.7	7.6	16.1
	B-A) 배우자 특성 변화에 따른 차이	6.6	10.7	9.3	8.4	3.3	8.1	7.8	13.7

주: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에 한정하여 가구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을 계산하였다. 'CF'는 재가중 결과를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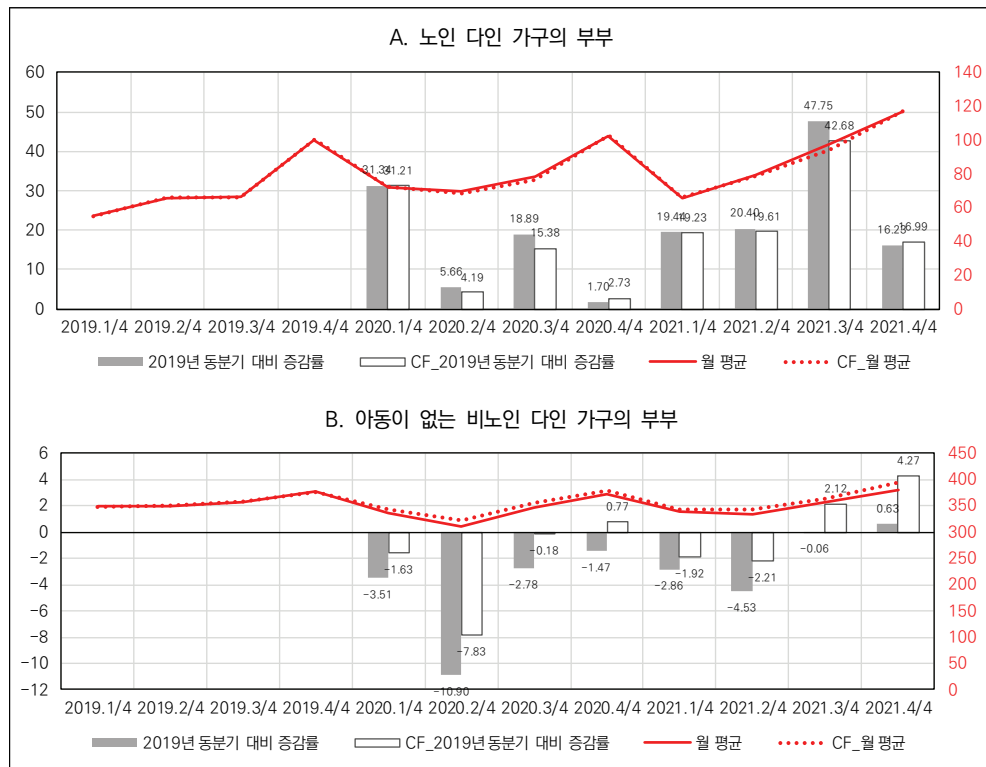
한편, 아동이 없는 가구를 살펴보면, 노인 부부의 경우 평균 소득이 2019년에 비하여 오히려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낸다. 아동이 없고, 노인 가구가 아닌 경우 코로나19 이후 소득 하락 폭이 가장 크게 관측된다. 특히 2020년 2분기의 경우 2019년 2분기에 비하여 평균 소득이 10.9%나 하락하였으며, 2021년 3분기에 이를 때까지 등락 폭의 차이가 있을 뿐 소득 하락이 크게 관측되고 있다. 다만, 아동이 없는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취업 여부를 보정하더라도 가구의 평균 소득 변화가 크지 않았다. 특히 노인 부부의 경우 배우자 취업 조정 후에 소득 변화가 거의 관측되지 않았다. 아동이 없는 비노인 부부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2분기 10.9%의 소득 감소 중에서 배우자의 고용상태 변화를 차감하고 나면 소득이 7.8% 감소하여 전체 감소분의 3.1%포인트

트 가량이 배우자 고용형태 변화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배우자 소득의 설명분은 각 분기마다 상이했으나, 대략 전체 소득 하락 폭의 1~2%포인트 정도가 배우자 고용률 변화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차 소득자 중에서도 어린 자녀가 있는 이들의 고용률 변화가 두드러졌다는 점을 가늠하게 한다. 그러나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 감소 영향이 소득 상승을 상쇄하는 양상을 나타내어, 실제 부부의 취업소득의 감소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7-10] 재가중 결과: 아동이 없는 가구의 부부 취업소득과 2019년 동분기 대비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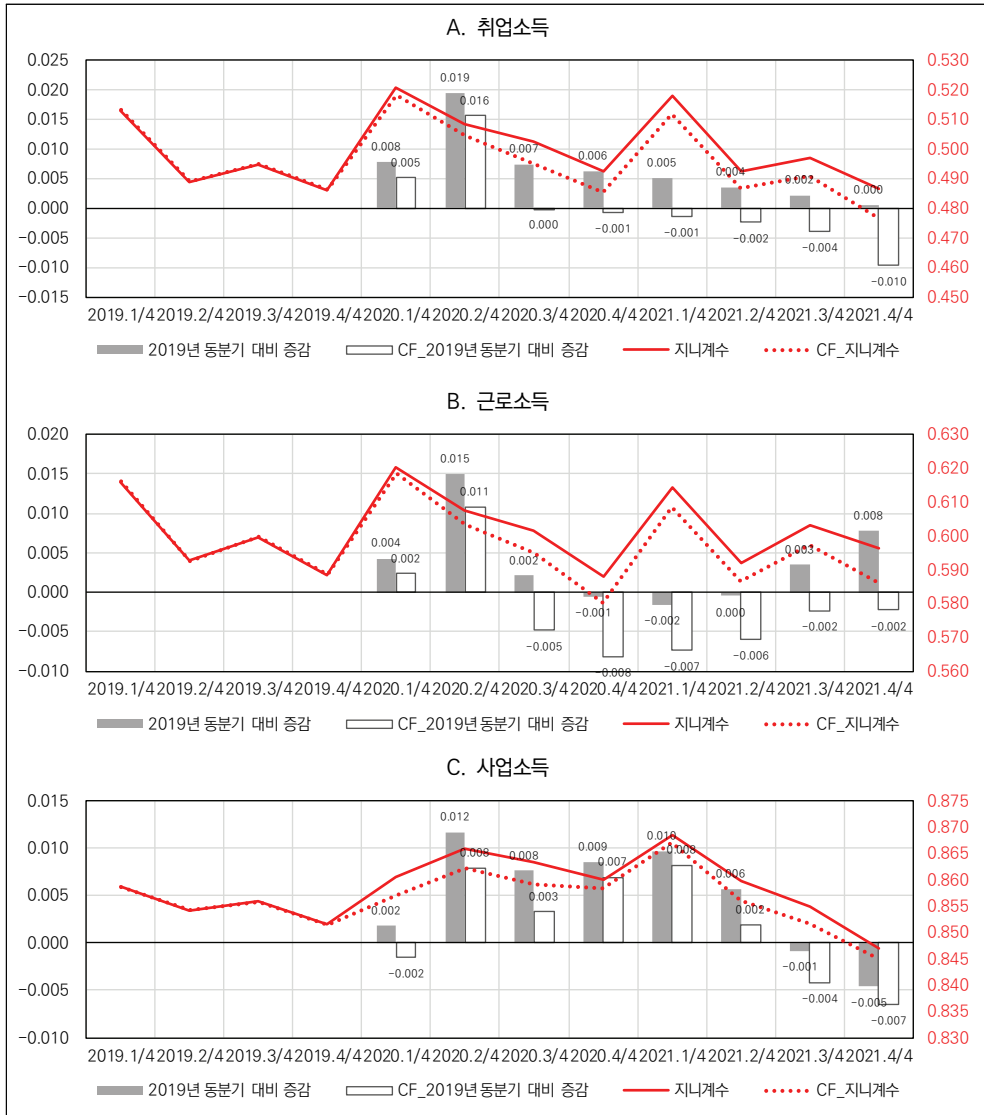
(단위: %, 만 원/월, 2020년 실질)



주: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에 한정하여 가구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을 계산하였다. 'CF'는 재가중 결과를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7-11] 재가중 결과: 부부 소득의 지니계수 변화

(단위: 0~1)



주: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에 한정하여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을 토대로 지니계수를 계산하였다. 'CF'는 재가중 결과를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7-11]의 부부 소득 불평등 수준 변화 역시 같은 맥락으로 나타난다. 코로나 19 이후, 특히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분기에 취업소득의 불평등 수준이 2019년 동분기에 비하여 높아지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 증가폭이 점차 작

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초기의 경우 배우자의 취업률을 보정하더라도 이러한 불평등 상승의 대부분이 유지되었으나, 2020년 3분기 이후로는 배우자의 취업률을 보정할 경우 2019년 동분기와 지니계수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지니계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코로나19 초기의 경우 가구주의 배우자 고용의 영향보다는, 부부의 소득 변화 자체가 불평등을 심화시켰으나, 그 후로는 배우자의 노동시장 이탈이 불평등 수준 증가를 대부분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7-11]의 패널 B와 C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분배지표를 살펴보면, 배우자 고용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득원은 근로소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절 가구형태별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 분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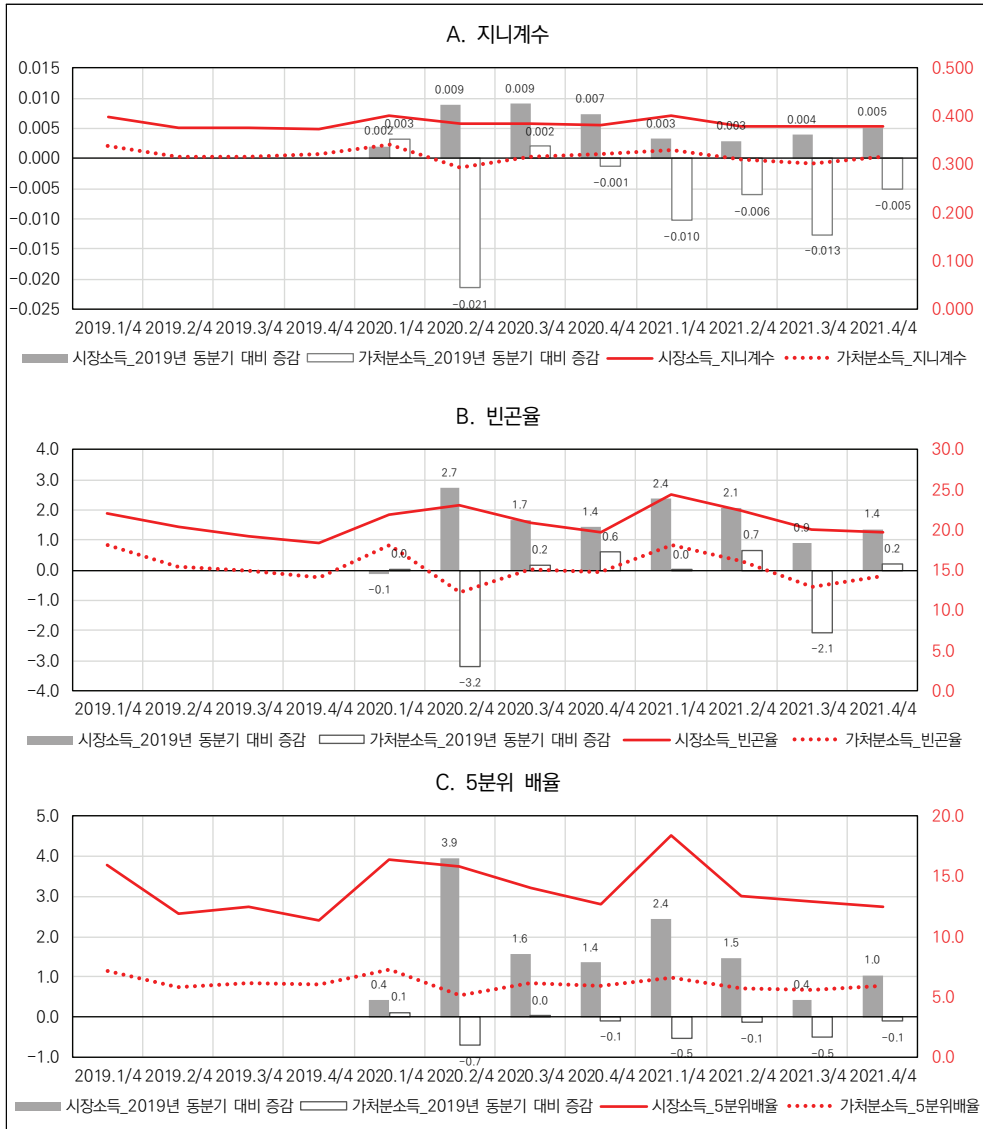
제5절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의 분배지표를 검토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가구 시장소득의 불평등 수준은 다소 높아졌으며, 특히 코로나19 초기에 그 영향이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 2020년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2019년 동분기 대비 0.009가 증가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비율을 나타내는 빈곤율 역시 2.7%포인트, 1.7%포인트 증가하였다. 5분위배율도 2020년 2분기에 3.9배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배지표의 악화는 주로 코로나19 초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점점 그 영향이 줄어들었다.

가처분소득 분배지표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거의 변화하지 않거나 오히려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특히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분기에 지니계수는 0.021이 줄어들었으며, 빈곤율 역시 3.2%포인트가 줄어들었다. 이는 공적이전의 영향을 나타내는 결과로, 코로나19 이후 상당한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소득에 포함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소득 불평등을 상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가구소득 분배를 개선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영향은 특히 2020년 2분기와 2021년 3분기에 두드러진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공적이전(사회적 수혜금)이 가구의 주요 특성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의 형태를 6개로 나누어 각 집단별 소득원천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6개의 집단은 크게 아동 가구와 노인 가구, 아동과 노인이 없는 가구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1인 가구 여부와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아동이 있을 경우 노인 가구 여부와 관련 없이 아동을 우선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하였다.

[그림 7-12]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배지표 변화

(단위: 0~1, %, %p, 배, 배p)



주: 시장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이다. 가처분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공적이전소득-사적·공적이전지출(비경상소득 및 사회적 현물이전 제외)>이다. 빈곤율은 각 연도 기준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을 토대로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을 계산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7-13〉 가구형태 정의

대분류	하위분류
아동 가구	8세 미만 아동이 속한 가구
	8세 이상 아동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가구
노인 가구	노인 1인 가구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 모두 노인인 가구
비노인, 비아동 가구	1인 가구
	다인 가구

자료: 필자가 작성하였다.

1. 가구형태별 소득 수준 변화

〈표 7-14〉 가구형태별 취업소득 평균 및 취업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취 업 소 득	8세 미만 아동	256	245	261	251	263	244	257	244	260	250	268	268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286	282	289	286	291	267	288	283	270	272	300	282
	노인 1인	24	32	32	33	28	30	40	49	29	42	50	57
	노인 다인	39	46	47	71	51	49	55	72	46	56	69	82
	비노인 1인	241	233	228	227	233	217	237	229	246	237	247	243
	비노인 다인	264	267	274	287	266	247	270	288	262	256	276	291
사 업 소 득 비 중	8세 미만 아동	14.1	16.8	17.0	16.0	14.1	16.2	16.9	14.6	14.4	19.0	17.3	16.8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20.6	21.9	21.8	25.8	21.7	20.9	21.7	25.9	22.1	19.3	21.5	21.8
	노인 1인	23.0	25.0	30.2	44.5	27.9	24.9	34.8	41.2	25.2	28.3	32.8	40.9
	노인 다인	49.5	46.5	49.0	46.3	30.6	43.2	50.4	56.8	36.5	39.0	55.0	64.5
	비노인 1인	18.7	19.5	18.1	18.6	16.2	15.7	14.1	13.7	12.4	14.7	14.4	16.5
	비노인 다인	22.3	23.9	23.8	28.7	22.5	24.4	24.6	27.6	22.5	23.1	23.4	28.1

주: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을 토대로 집단별 평균을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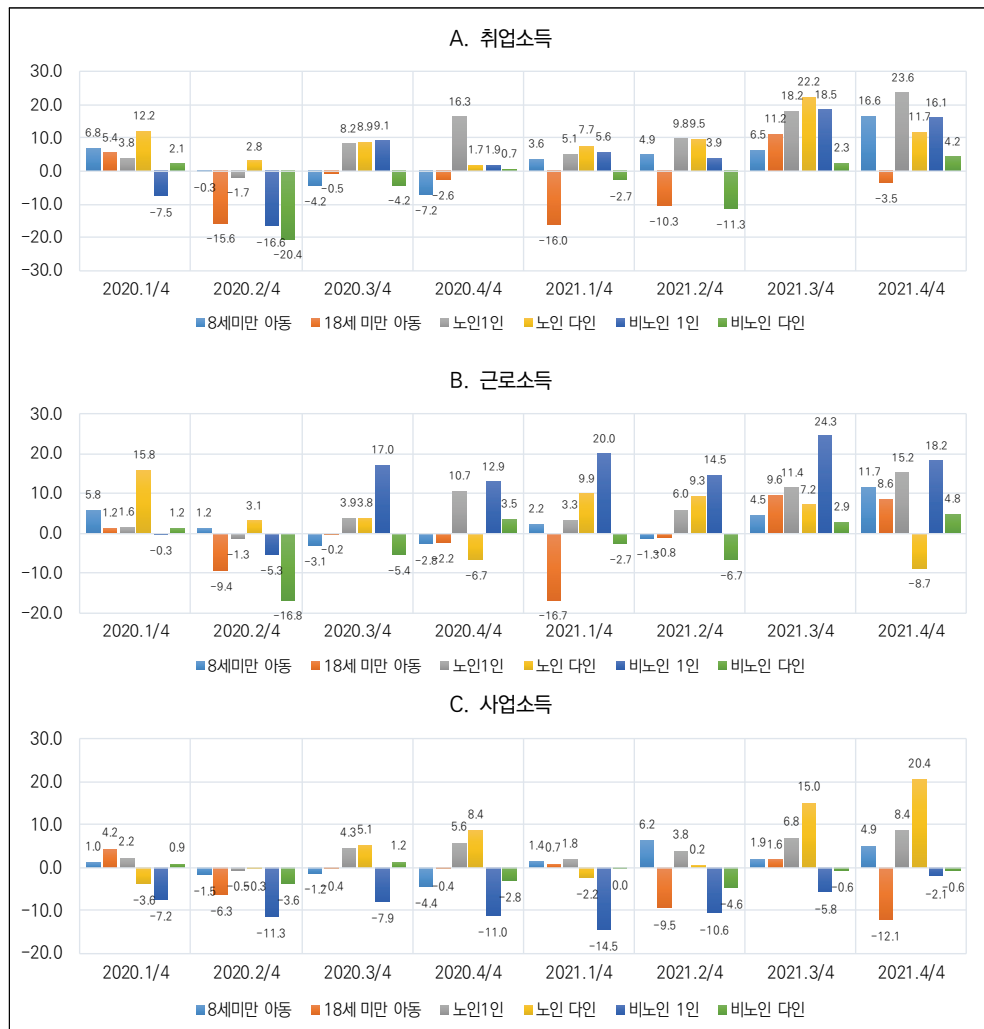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우선 가구형태별 취업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노인 가구, 특히 노인 1인 가구의 취업 소득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동이 있는 가구와 아동이 없는 비노인 가구 모두 균등화 평균 취업소득이 200만 원 중후반대를 나타내고 있다. 평균 취업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였으며, 다음으로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와 비노인 다인 가구가 높은 취업소득 수준을 나타냈다. 가구소득을 원

천별로 살펴보면,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사업소득의 비중이 15% 내외,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20% 내외를 나타냈다. 비노인의 경우 1인 가구는 15% 내외가, 다인 가구는 20% 이상이 사업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노인의 경우 다인 가구의 사업소득 비중이 50% 정도를 차지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림 7-13] 가구형태별 2019년 동분기 대비 취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변화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주: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을 토대로 집단별 평균을 계산하였다. 18세 미만 아동은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을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가구형태별 취업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취업소득의 감소가 관측되었던 시점이 2020년 2분기였으며, 이후로는 취업소득의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2020년 2분기에 노인 가구는 취업소득의 감소가 크게 관측되지 않는다. 취업소득의 변화가 가장 컸던 가구는 비노인 가구로 비노인 1인 가구와 비노인 다인 가구의 경우 각각 소득이 16.6만 원과 20.4만 원이 감소하였다. 한편,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2020년 2분기의 소득 감소와 더불어 2021년 1분기와 2분기 소득 감소도 두드러진다. 이들의 소득 감소는 앞서 제4절에서 보았듯이 코로나19 초기에는 주로 배우자의 취업상태 변화로 설명되었으나, 2021년에 이르러서는 배우자의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커짐에 따라 배우자 소득이 감소하였다.

취업소득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비노인 다인 가구의 경우 2020년 2분기 16.8만 원이 줄어들어 취업소득 감소 대부분이 근로소득 감소에 기인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비노인 1인 가구의 경우 2019년에 비하여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의 평균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비노인 1인 가구의 사업소득이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비노인 1인 가구의 소득원천별 증감이 상이하게 나타나면서, 전체 취업소득의 큰 변화는 관측되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1인 가구 내에서도 이질적인 집단이 포괄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가령 45세 미만인 청장년층 1인 가구의 경우 분석대상 기간 동안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근로소득의 증가분은 사업소득의 감소분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반면, 45세 이상 중년층 1인 가구의 경우 고용형태의 변동이 크지 않았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즉, 이들 집단에서 근로소득의 상승분은 주로 45세 미만의 청년층이 자영업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취업소득의 변화에 대하여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지급된 공적 이전은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을까? 우선 2020년 이전에 사회적 수혜금의 수급 양상을 살펴보면,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와 노인 1인 가구의 공적이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의 경우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2018년 9월부터 도입되었으며, 보육시설을 보내지 않을 경우 아동 연령에 따라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 등의 제도를 통하여 공적이전소득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7-15〉 가구형태별 사회적 수혜금 및 총소득 평균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회적 수혜금	8세 미만 아동	11	10	13	12	12	39	22	14	18	16	28	15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3	3	5	3	5	25	10	6	10	5	19	6
	노인 1인	10	11	13	9	6	30	13	9	12	12	21	13
	노인 다인	5	7	9	7	8	27	11	8	8	10	19	8
	비노인 1인	5	4	10	7	6	22	12	9	12	9	17	8
	비노인 다인	6	6	7	4	6	27	10	8	11	8	19	9
총소득	8세 미만 아동	294	271	290	284	306	305	301	283	305	287	317	300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327	309	318	308	332	321	326	313	310	301	344	312
	노인 1인	117	123	124	113	113	135	128	143	126	135	156	148
	노인 다인	142	143	161	183	155	181	169	190	164	171	192	186
	비노인 1인	288	276	267	266	270	264	277	261	287	274	293	281
	비노인 다인	319	317	328	330	330	320	327	340	330	318	342	351

주: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공적이전소득+비경상소득>이다.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을 토대로 집단별 평균을 계산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20년 이후 사회적 수혜금의 증감을 살펴보면, 2020년 2분기 사회적 수혜금의 증가가 가장 컸던 집단은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였다. 이들은 평균 29.3만 원이 증가하여 여타 가구의 증가 폭에 비하여 더 큰 증가 폭을 나타내고 있다. 8세 미만 아동 가구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 가구주의 배우자의 취업률 감소로 인하여 가구 소득 하락이 있었으나, 이들의 부부의 합산 소득은 이러한 변화를 상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취업소득의 하락 폭은 여타 집단에 비하여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회적 수혜금은 여타 집단에 비하여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 한 명당 40만 원의 아동돌봄쿠폰이 2020년 4월에 지급되었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2020년 2분기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총소득은 33.7만 원이 증가하였다.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2021년 상반기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2021년 상반기의 경우 대규모 공적 지원이 없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적 지원도 없어, 2019년 동분기에 대비하여 총소득은 2021년 1분기

16.8만 원, 2분기 8.8만 원이 줄어들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시기 8세 이상 18세 미만 가구의 소득 감소에는 가구주의 배우자가 임금근로 대신에 무급가족종사자로 가족의 자영업을 돕는 일을 하면서 배우자의 소득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7-14] 가구형태별 2019년 동분기 대비 취업소득, 사회적 수혜금 소득, 총소득 변화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주: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공적이전소득+비경상소득>이다.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을 토대로 집단별 평균을 계산하였다. 18세 미만 아동은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을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노인 가구 역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업소득의 변화는 크게 관측되지 않았으나, 사회적 수혜금의 규모는 여타 집단들과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총소득은 코로나19 초기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초기 총소득이 유일하게 줄어든 집단은 아동이 없고, 노인도 아닌 1인 가구였다. 이들은 취업소득이 16.6만 원 감소하였으나, 그에 대비하여 사회적 수혜금의 규모는 가장 작았고, 결과적으로 총소득이 11.7만 원 감소하였다. 아동과 노인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연령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이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추가적으로 45세 미만의 1인 가구와 45세 이상의 1인 가구를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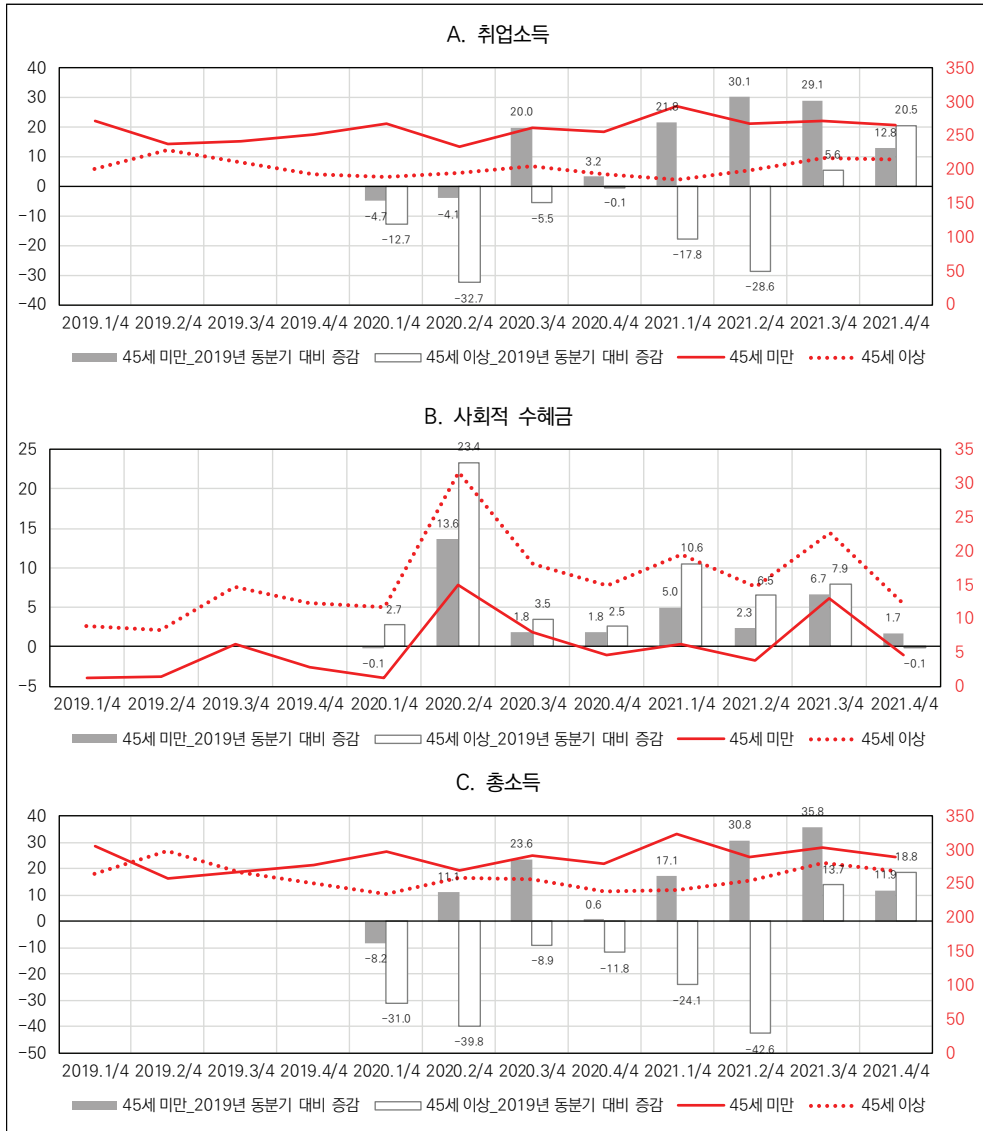
[그림 7-15]의 결과를 살펴보면, 45세 미만의 청장년층은 취업소득의 감소가 크게 관측되지 않았으며,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하여 총소득이 증가하였다. 반면, 45세 이상의 중년층의 경우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분기 월평균 취업소득이 32.7만 원 감소하였으며, 2021년 1분기에 이르러 다시 17.8만 원, 2021년 2분기에 28.6만 원 감소하였다. 이들 집단은 청년층에 비하여 더 많은 사회적 수혜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소득 감소 폭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총소득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중년층 1인 가구가 가장 큰 소득 감소를 경험하였음을 나타낸다.

다만, 코로나19 이후로 총소득이 감소한 집단의 경우 본래 소득 분포 내에서 중간 또는 중상위 소득층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8세 미만 18세 이상 아동 가구의 경우 5분위 중 하위 1분위에 포함된 비율이 12% 내외였으며, 주로 4분위와 5분위에 속한 비율이 높았다. 노인이 아닌 1인 가구에 속한 이들 역시 1분위의 비율이 25~29%로 다소 높기는 하였으나, 5분위에 속한 비율 역시 15~20%로 작지 않았다. 반면, 저소득 분위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노인 1인 가구나 노인 다인 가구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거의 변화하지 않거나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2021년 3분기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취업소득은 2019년 3분기에 비하여 대체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소득증가에 더하여 2021년 3분기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기준중위소득 180%에 이르는 이들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면서, 사회적 수혜금이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결과적으로 2021년 3분기에 모든 집단에서 총소득이 대략 20만 원 가량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15] 비노인 1인 가구의 2019년 동분기 대비 취업소득, 사회적 수혜금, 총소득 변화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주: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공적이전소득+비경상소득〉이다.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을 토대로 집단별 평균을 계산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 가구형태별 빈곤율 변화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이후 가구형태별로 빈곤율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빈곤율이 본래 가장 높은 집단은 노인 가구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노인 가구의 빈곤율은 2019년에도 이미 70%를 넘어섰으며, 특히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80%를 상회하기도 하였다. 공적이전을 반영한 가처분소득의 빈곤율 역시 노인 가구는 50~60%를 나타내고 있어, 공적이전을 통하여 일부 빈곤율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 가구가 빈곤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16〉 가구형태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빈곤율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 장 소 득	8세 미만 아동	10.39	9.30	7.07	8.74	11.32	12.29	10.55	11.71	14.63	13.06	12.35	10.85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0.77	8.79	9.18	8.41	12.06	12.90	10.07	9.66	14.58	12.56	8.17	10.37
	노인 1인	83.12	78.65	78.81	79.04	81.19	80.55	78.04	71.26	80.94	77.35	73.48	72.56
	노인 다인	78.20	75.77	74.28	69.37	75.42	74.31	74.07	65.97	75.35	72.80	69.88	66.61
	비노인 1인	21.36	21.71	22.44	23.08	22.33	23.68	20.27	21.09	23.55	21.67	20.10	19.14
	비노인 다인	20.37	19.02	17.48	14.74	18.98	21.46	18.62	16.73	20.60	19.89	17.82	16.19
가 처 분 소 득	8세 미만 아동	8.79	9.33	6.19	7.73	11.08	6.06	7.91	10.44	11.90	11.13	8.24	8.86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2.35	8.89	8.96	9.06	12.28	7.27	8.98	11.04	13.55	11.85	5.69	8.28
	노인 1인	63.33	56.25	55.14	55.97	62.59	38.79	54.21	48.39	57.60	49.84	43.55	50.97
	노인 다인	62.80	53.87	52.90	41.33	52.06	38.12	49.40	36.91	49.05	44.42	40.93	41.80
	비노인 1인	20.20	19.67	19.76	20.37	20.52	17.35	16.18	17.71	19.99	18.33	14.81	16.56
	비노인 다인	14.61	11.89	13.05	11.29	15.13	10.68	13.05	11.56	14.07	12.86	11.59	11.65

주: 시장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이다. 가처분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공적이전소득-사적·공적이전지출(비경상소득 및 사회적 현물이전 제외)>이다. 빈곤율은 각 연도 기준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아동 가구의 경우 10% 내외의 빈곤율을 나타내 가장 빈곤율이 낮은 집단이었으며, 아동과 노인이 없는 가구의 경우 비노인 1인 가구는 20% 내외의 빈곤율을, 다인 가구는 분기에 따라 10~15%의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시장소득 빈곤율에 비하여 대략 1%포인트 내외 감소하여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비노인 가구 역시 노인 가구에 비하여 공적이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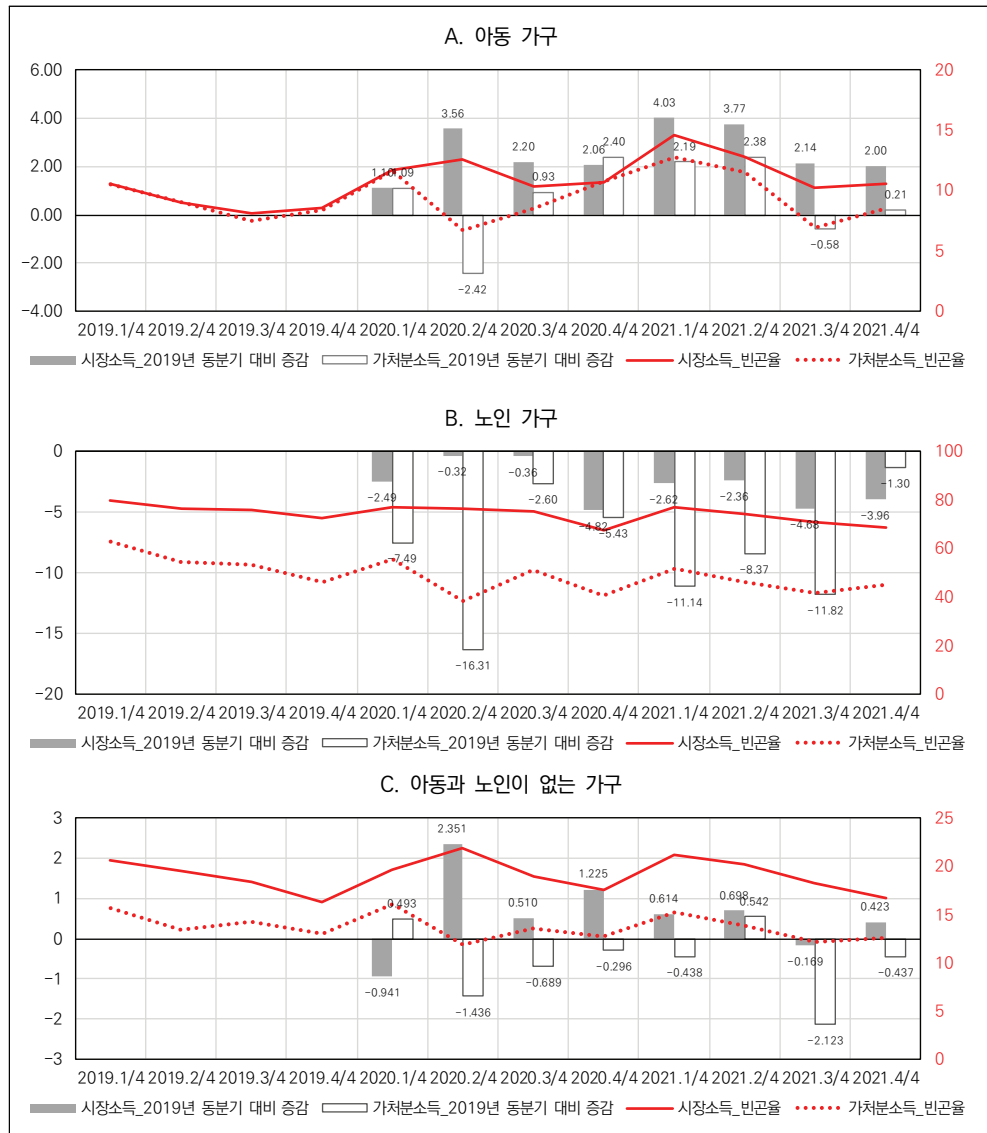
빈곤율 감소 효과는 미미한데, 특히 비노인 1인 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20% 내외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공적이전에 따른 빈곤율 감소량은 2%포인트 내외를 나타내고 있다. 아동과 노인이 없는 다인 가구의 경우 2019년 당시 빈곤율이 10~14%를 나타냈는데, 공적이전을 통하여 3~7% 포인트 가량 줄어들어 1인 가구에 비하여 공적이전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의 빈곤율을 살펴보면, 아동이 있는 가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2019년과 유사한 빈곤율을 나타낸다. [그림 7-16]을 보면 빈곤율이 상당히 높은 노인 가구의 경우 2020년 이후 시장소득 빈곤율이 2019년 동분기에 대비하여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공적이전을 포함하는 가처분소득의 빈곤율은 2019년에 비하여 더 큰 폭으로 줄어들어, 노인의 빈곤율은 2020년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과 노인이 없는 가구의 경우 코로나19의 1차 유행이 시작된 2020년 2분기의 경우 시장소득의 빈곤율이 2.4%포인트 증가하였고, 그 후 증가 폭이 줄어들었다가 2차 유행기인 2020년 4분기에 1.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공적이전을 반영한 가처분소득의 빈곤율은 2019년 동분기 대체로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빈곤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집단은 아동 가구다. 아동 가구의 경우 시장소득 빈곤율이 코로나19 유행기마다 2019년 동분기에 대비하여 3~4%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들 아동 가구는 공적이전을 포함한 가처분소득의 빈곤율 역시 코로나19 이후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 가구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코로나19 관련 전국민 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2분기와 2021년 3분기에만 2019년 동분기 대비 줄어들고, 나머지 분기들에서는 모두 늘어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 가구를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와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로 나누어 보면,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 2분기, 2021년 1, 2분기에 빈곤율이 다소 올라가는 양상을 나타내는 반면,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2020년 2분기 이후 모든 분기에서 시장소득 빈곤율이 3~4포인트 높아지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된 2021년 3분기에도 시장소득 빈곤율이 5.3%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앞서 제4절에서 살펴보았듯,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가구주의 배우자의 노동참여 및 취업소득의 감소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유지되고 있다는 맥락과 일치하는 양상이다.

[그림 7-16] 집단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빈곤율 변화

(단위: %, %p)



주: 시장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이다. 가처분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공적이전소득-사적·공적이전지출(비경상소득 및 사회적 현물이전 제외)>이다. 빈곤율은 각 연도 기준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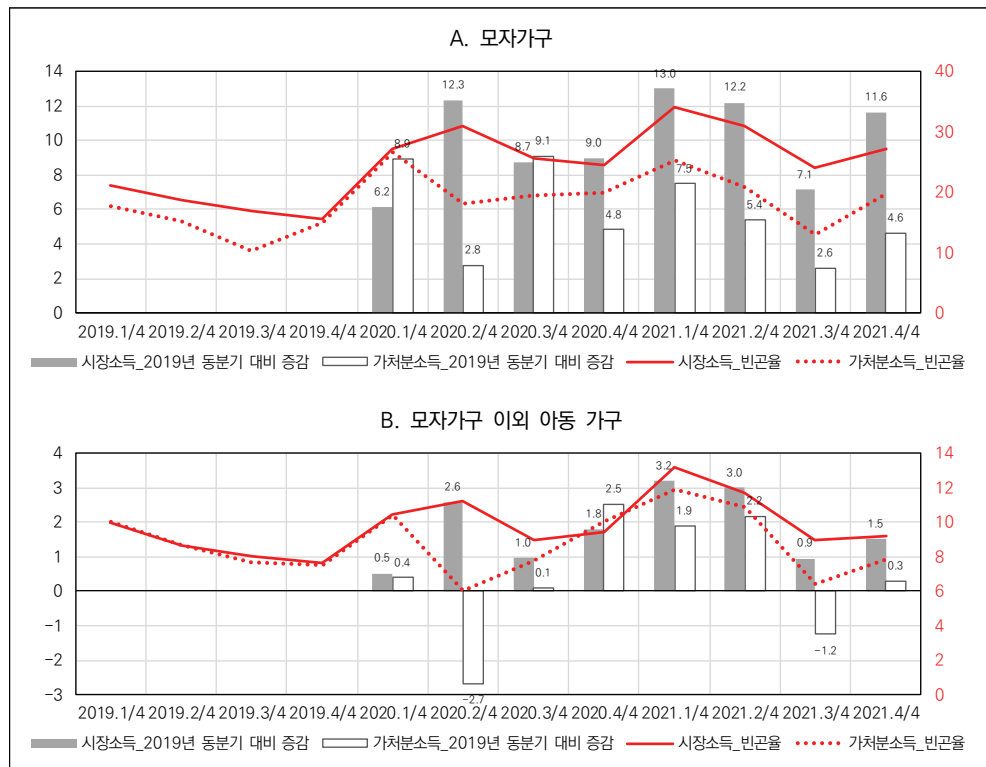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렇다면 아동이 있는 가구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모자가구와 모자가구 이외의 아동 가구를 나누어 빈곤율을 살펴보았다. [그림 7-17]을 살펴보면, 모자가

구의 경우 시장소득 빈곤율이 코로나19 이전에 20% 내외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30% 내외를 나타내 무려 10%포인트 이상 빈곤율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모자가구는 공적이전을 포함한 가처분소득의 빈곤율 역시 코로나19 이후 모든 기간 동안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17] 아동 가구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빈곤율 변화

(단위: %, %p)



주: 시장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이다. 가처분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공적이전소득-사적·공적이전지출(비경상소득 및 사회적 현물이전 제외)>이다. 빈곤율은 각 연도 기준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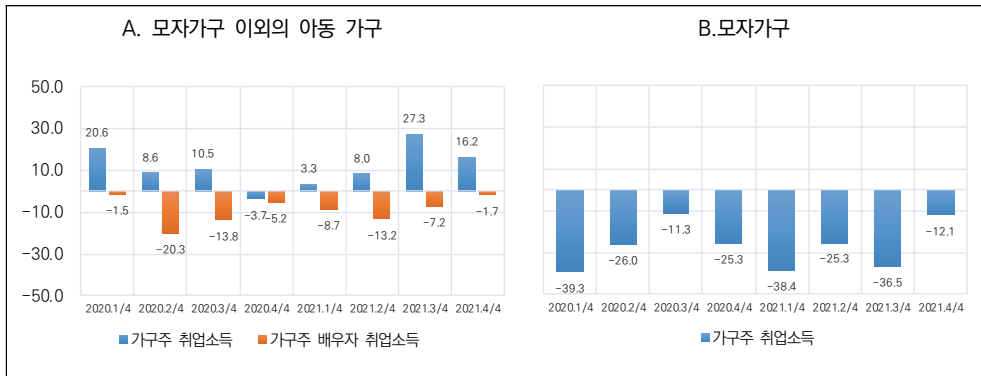
모자가구가 아닌 아동 가구의 경우 본래 빈곤율이 10% 내외로 낮은 편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로 이들 2~3%포인트 가량 빈곤율이 높아졌다. 다만, 모자가구가 아닌 아동 가구의 경우 대규모 공적이전이 있었던 2020년 2분기와 2021년 3분기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있는 가구 중에서도 저소득 가구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시장소득이 빈곤율 아래로 떨어지는 소득 감소를 겪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모자가구의 소득 하락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원천별 평균 소득 변화를 보더라도 모자가구는 모든 기간에서 취업소득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여타 아동 가구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구주보다는 배우자 취업소득의 감소가 관측되는 반면에, 모자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취업소득 감소가 상당히 큰 폭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고용률 감소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아동 가구의 여성은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과 대면서비스업의 타격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컸다. 이러한 여성의 소득 감소가 아동 가구의 빈곤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자가구의 경우 이러한 소득 감소를 완충할 만한 여타의 소득원이 충분치 않으며, 공적이전의 효과 역시 빈곤율 증가를 방어하는 데에는 충분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림 7-18] 아동 가구의 취업소득

(단위: 만 원/월, 2020년 실질)



주: 해당 가구에 소속된 가구주와 배우자의 평균 취업소득을 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제6절 소결

이 장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분기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소득분배 현황을 살펴보았다. 노동시장 내에서 가장 취약한 일자리에 있는 이들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분배

지표가 큰 변동이 없었던 원인을 가늠해보기 위하여, 코로나19로 어떠한 이들의 취업 소득의 감소 폭이 컸었는지, 이들의 소득이 가구소득으로 합산될 때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가구소득의 감소 폭이 컸던 집단과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많았던 집단을 함께 살펴보았다.

우선 코로나19 이후로 취업소득 감소 폭이 가장 컸던 집단은 자영업자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의 첫 유행 시점과 2020년 말, 2021년 초에 걸친 3차 유행기까지 장기적으로 소득 감소가 나타났다. 고용형태의 변화를 고려할 경우,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그 감소 폭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특성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큰 폭의 취업소득 감소가 나타났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의 초기뿐만 아니라 장기화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상용근로자들의 경우 2019년 동분기 대비 소득이 감소하지 않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소득이 주로 낮은 이들이 노동시장에 이탈하면서 실제 소득 감소 폭이 다소 과소추정되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맥락에서 이러한 특성 변화에 따른 소득 변화가 커지면서, 노동시장 내 구성 변화의 영향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별로 코로나19 이후 고용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특히 가구주의 배우자의 미취업자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여러 연구들이 코로나19 이후 여성이 돌봄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을 이탈하거나,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고용률이 크게 하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구주의 배우자의 고용률 감소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노인 부부 가구나, 아동이 없는 부부 가구의 경우 배우자 고용률 감소의 영향이 미미한 수준으로 관측되었던 반면,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배우자 취업률 변화로 인한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배우자 취업의 영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코로나19 초기에 배우자의 취업률 변화에 따른 영향이 관측되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취업률 변화에 따른 영향이 줄어들었다. 배우자의 취업률 변화가 크지 않았음에도 이들 가구의 소득이 2021년 상반기에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배우자의 임금노동 비율이 줄어들고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늘어나는 시점과 일치하였다. 즉, 이들은

아동 돌봄에 따른 영향보다는 코로나19 장기화 맥락에서 자영업자의 고충이 반영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공적이전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 특성별 코로나19 이후 취업소득의 변화를 살펴보고, 공적이전을 반영한 총소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적이전이 있었던 2020년 2분기와 2021년 3분기의 경우 2019년 동분기에 대비하여 모든 집단에서 공적이전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 2분기의 경우 특히 가구의 취업소득 감소 폭이 컸는데, 이를 만회하는 수준의 공적이전이 지급되면서, 실제 총소득은 대부분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다만, 중년층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 총소득이 감소하였다.

2020년 2분기에 총소득 증가 폭이 컸던 집단은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이들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취업률 변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가구의 평균 취업소득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으며, 가장 많은 공적이전을 받아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균등화한 총소득이 30만 원 넘게 증가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총소득이 감소한 또 다른 집단은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로, 이들 가구의 경우 2021년 상반기 소득 감소 폭이 컸으나, 그 당시 대규모 공적 지원은 없어 총소득이 감소하게 되었다. 한편, 2021년 3분기의 경우 대부분의 집단에서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기 대규모 공적이전이 추가되면서 모든 집단의 소득이 20만 원 가량 높아졌으며,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와 빈곤율 모두 큰 폭으로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총소득 감소가 큰 폭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이들 집단의 빈곤율이 높아졌다. 본래 빈곤율이 높았던 노인 가구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시장소득 빈곤율이 감소하였으며, 아동이나 노인이 없는 가구 역시 빈곤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반면,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빈곤율이 10%대로 낮았으나, 코로나19 이후 시장소득 빈곤율이 3~4%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특히 아동 가구 중에서도 모자가구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2019년 동분기에 비하여 무려 10%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아동 가구의 평균적인 소득 변화는 제한적으로 관측되나, 저소득 아동 가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빈곤한 상황에 처했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코로나19의 고용 영향이 주로 여성과 가구주의 배우자를 중심으로 영향을 주었으나, 이들의 소득이 가구소득으로 합산되면서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취업소득 감소는 주로 자영업자에게서 관측되었으며, 가구 수준에서 보면 사업소득의 감소 폭이 컸던 중년층 1인 가구가 코로나19 초기와 장기화되는 맥락에서 지속적인 소득 감소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들 중년 1인 가구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으며, 저소득 비율이 높았으나, 가처분소득 중 공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율과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 역시 전체 중장년 가구에 비하여 낮았다(정찬미, 2021). 이는 중년 1인 가구가 시장소득과 가족 자원, 공적이전의 측면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존의 취약성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되고, 가중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1인 가구의 확산 등 가구 구조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맥락에서 이들 집단에 대한 사회보장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은 전체 가구소득의 분배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여성 경제활동 측면에서 중대한 과제를 남긴다. 다양한 사회적 돌봄 정책의 발전과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왔던 추세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역행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높은 의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을 병행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사회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향후 코로나19 이후에 노동시장을 이탈한 여성 인력들의 재진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전체 소득의 분배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이에 의존하고 있는 모자가구의 급격한 빈곤율 증가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 가구의 소득 감소는 주로 가구주의 배우자 소득 감소와 관련이 있는 반면에, 모자가구의 경우 가구주인 엄마의 소득 감소가 매우 큰 폭으로 관측되었다. 이들에 대한 공적 지원이 여타 아동 가구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급되었음에도 소득 감소 폭이 더 커, 가처분소득의 빈곤율 역시 높아졌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돌봄과 생계 모두 어려움에 놓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가 가장 큰 상황은 변함없으나,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고용형태를 고정할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폭이 다소 줄어든다는 분석 결

과는 열악한 상황의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는 열악한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더 괜찮은 상황의 자영업자들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실제 코로나19 이후에 자영업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현상철, 2021), 자영업자의 폐업이 감소하였다는 보고가 있다(이웅, 2021). 향후 사업장 단위 또는 개인을 단위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패널조사를 통하여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지만, 폐업 시 사업자 대출을 즉시 상환하는 문제나, 정부의 손실보상 등에서 제외될 우려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지연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이웅, 2021).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자영업자의 손실과 이의 영향은 코로나19 사태가 호전된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안정적인 폐업 지원 등 자영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8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과제

제 8 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한국의 소득분배는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후반까지 크게 악화한 후 2010년대에 점차 개선되었다. 2000년대 후반까지의 소득분배 악화에는 노동시장 불평등 확대, 고령화, 가구 구조 변화와 같은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10년대의 소득분배 개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진단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2010년대 소득분배 변화와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가처분소득 분포가 결정되는 단계를 고려하여, 이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다. 첫째, 2010년대 개인취업소득 분배가 시간에 따라 개선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인구·가구 구조 변화는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셋째, 소득보장제도 확대는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하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한다.

1. 개인취업소득 분배 변화

제2장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분포 변화를 분석하였다. 아동과 비취업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는 2011~2016년 0.750에서 0.726으로, 2016~2020년 0.720에서 0.704로 감소하였다. 경제활동참여가 불가능한 아동을 제외한 18세 이상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는 2011~2016년 0.683에서 0.661로, 2016~2020년 0.654에서 0.640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무직·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취업자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는 2011~2016년 0.487에서 0.452로, 2016~2020년 0.476에서 0.469로 감소하였다.

이 장에서는 고용률 증가와 종사상지위 변화가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연령, 교육수준을 통제했을 때 2011~2020년 고용률 증가는 비취업자를 포함한 전체 인구나 18세 이상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를 약 0.004~0.005

감소시켰지만, 취업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를 약 0.002~0.008 증가시켰다. 주로 여성과 중고령자를 중심으로 고용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고용률이 증가한 결과 취업자 내에서 여성과 중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취업자의 집단 내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고용률 증가에 따라 개인취업소득이 존재하는 집단의 상대적인 규모가 증가한 변화는 비취업자를 포함한 전체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을 감소시켰다. 이는 고용률 증가의 분배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고용률 증가가 결과적으로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임금근로자의 집단 내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하고 소득 수준을 향상시켜 불평등과 빈곤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장에서는 성·연령, 교육수준, 고용률을 통제한 상태에서 종사상지위 변화가 개인취업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상용근로자 비율 증가,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감소 등과 같은 2011~2020년 종사상지위 변화는 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전체 인구, 18세 이상 인구, 취업자, 비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를 약 0.007~0.019 감소시켰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일자리의 질 향상이 노동시장 불평등을 축소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개인취업소득 분배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계자영업과 비공식부문의 축소, 고용안정성 강화, 비정규직 차별 완화 등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용률과 종사상지위 변화를 종합하면, 경제활동 변화가 2011~2020년 전체 인구와 18세 이상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감소량의 약 1/4~1/3을 설명하였다.

한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연령, 교육수준, 고용률, 종사상지위를 통제한 후에도 전체 인구, 18세 이상 인구, 취업자, 임금근로자의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가 시간에 따라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종사상지위로 설명되지 않는 일자리 특성 변화,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요인이 개인취업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제3장에서는 임금불평등 변화를 심층 분석하였고, 제4장에서는 최저임금의 분배 효과를 살펴보았다.

2. 임금불평등 변화와 최저임금의 영향

제3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04년 이후 임금불평등 변화를 분석하였다. 2004년 이후 임금불평등은 대체로 2000년대 말 금융위기까지 증가한 후 최근까지 감소하였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임금 지니계수는 2004년 0.386에서 2007년 0.413으로 증가한 후 2020년 0.317로 크게 감소하였고, 월임금 지니계수는 2004년 0.333에서 2010년 0.350으로 증가한 후 2021년 0.319로 크게 감소하였다. 대체로 월임금보다 시간당임금의 불평등이 더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근 단시간 근로 확대가 월임금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2004~2008/2009년 임금분배 악화기, 2008/2009~2019년 임금분배 개선기를 구분하여 임금불평등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2004~2008/2009년 임금분배 악화기에는 임금근로자의 고령화, 생산직 감소 및 단순노무직 증가가 시간당임금 및 월임금 지니계수 증가량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였다. 또한 시간제 일자리 증가 역시 월임금 지니계수 증가에 중요하게 기여하였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금융위기까지의 시기에는 탈산업화에 따라 제조업·생산직의 중간임금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하였고,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중고령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하고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임금불평등이 증가한 것이다.

다음으로 2008/2009~2019년 임금분배 개선기에는 고령화와 시간제 일자리 증가가 분배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상용직 증가 및 임시·일용직 감소가 분배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임금근로자의 특성 변화로 설명되지 않는 시간당임금 및 월임금 지니계수 감소량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 제조업·생산직 일자리 감소세가 중단되었고, 중간임금 일자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제조업·생산직 일자리의 완만한 감소세가 다시 시작되어 중간임금 일자리가 감소하였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일자리의 상대임금 수준을 향상시켜 임금불평등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간임금 일자리의 정책적 중요성을 시사하는데,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질 향상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임금불평등을 상당히 증가시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최저임금이 임금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최저임금이 평균적인 임금 수준이 낮은 지역의 임금불평등을 더 강하게 축소할 것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최저임금의 분배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1분위 임금과 5분위 임금의 격차를 뚜렷하게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3분위까지 임금불평등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최저임금의 파급효과를 시사하였다. 추정 결과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최저임금이 2008~2020년 중하위 임금불평등 감소량의 약 3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임금불평등 감소 효과를 분명하게 실증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중하위 임금 일자리 확대 등과 같은 노동시장 변화 역시 2010년대 임금불평등 감소에 중요하게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3. 인구·가구 구조의 영향

제5장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가구 구조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는 주로 전체 인구의 가구소득 분배를 악화시켰다. 2011~2020년 성·연령 변화는 2020년 전체 인구의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빈곤율을 각각 0.007~0.020, 1.0~2.5%포인트 증가시켰다. 다음으로, 인구 구조를 통제했을 때 가구의 소규모화, 노인-자녀 동거 감소 등과 같은 가구 구조 변화는 주로 노인의 빈곤율을 증가시켰다. 2011~2020년 가구원 수 변화는 2020년 노인의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을 각각 2.3~3.7%포인트 증가시켰고, 2011~2020년 노인-자녀 동거 변화는 2020년 노인의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을 각각 1.6~2.2%포인트 증가시켰다. 성·연령·가구원 수 변화의 영향을 종합하면, 2011~2020년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2020년 전체 인구의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빈곤율을 각각 0.010~0.026, 1.5~3.2%포인트 증가시켰고, 2020년 노인의 가구취업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을 1.9~3.5%포인트 증가시켰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2010년대에 개인취업소득 분배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취업소득 및 시장소득 분배가 정체·악화된 이유를 설명해준다. 2010년대에 전체

인구의 개인취업소득 분배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지만, 전체 인구 중에서 가구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결과 가구취업소득 분배가 개선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노인 중에서 가구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녀 비동거 노인과 독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결과 노인의 가구취업소득 빈곤율이 감소하지 못했다. 만약 인구·가구 구조가 변화하지 않았더라면, 개인취업소득 분배가 개선된 만큼 거의 그대로 가구취업소득 분배가 개선되었을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이 노동시장 불평등을 축소하는 정책이 개인취업소득 분배 개선을 경유하여 가구소득 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소득분배를 악화시켰다는 제5장의 분석 결과는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이유는 노인이나 자녀 비동거 노인 등과 같이 횡단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인구·가구집단의 상대적인 규모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이나 자녀 비동거 노인 등과 같이 횡단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인구·가구집단의 소득을 전체 인구의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면, 인구·가구 구조가 변화하더라도 소득분배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인구·가구 구조 변화의 소득분배 악화 효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노동시장 정책, 주로 소득보장정책을 활용하여 생애과정에서 소득을 충분히 평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강화가 필수적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금 등과 같은 빈곤정책, 노인일자리아업과 같은 고용정책 역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소득보장제도 확대의 영향

제6장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보장제도의 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주로 공적연금 성숙과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시행·확대에 따라 소득보장체계가 양적으로 강화되어왔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양육수당,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아동 및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 역시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극빈층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을 지원하는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에서 아동을 보편적으로 지원

하는 아동수당·양육수당, 경제활동 참여를 전제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등으로 소득보장체계가 다변화·고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보장제도 확대 덕분에 2010년대에 시장소득 분배가 정체·악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 분배가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2016~2020년 전체 인구의 시장소득 빈곤갭비율은 9.8%에서 10.7%로 증가하였지만,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가 4.6%포인트에서 6.9%포인트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이 6.4%에서 4.8%로 감소하였다. 한편, 주요 정책지표인 노인 빈곤율이 2011~2016년 49.2%에서 46.7%로, 2016~2020년 43.7%에서 39.1%로 감소한 변화에도 공적연금 성숙과 기초연금 인상 등의 소득보장제도 확대가 주된 영향을 미쳤다.

이 장에서는 2020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활동, 연령, 시장소득, 순자산을 기준으로 구성한 하위집단별 소득보장 실태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노인 근로가구 시장소득 1분위의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은 39~43%로, 노인 근로가구 시장소득 1분위의 가처분소득 빈곤갭비율인 22~26%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과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노인 빈곤층에 비해 비노인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훨씬 작지만,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의 소득보장체계로는 소수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비노인 근로빈곤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소득보장체계의 최적조합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개별 소득보장제도는 노후소득보장, 극빈 제거에서 아동 양육 지원, 근로유인 제고, 취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목표를 갖는다. 기본소득이나 부의 소득세와 같은 단일 제도로 소득보장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대안은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목표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상병수당 시행 등으로 현행 소득보장체계에 부재하거나 약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근로장려금-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조합 등 다양한 정책 조합을 정비하여 전체 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보장성과 효율성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후소득 보장 최적조합을 설계·실행하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노인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같은 비기여 방식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빈곤 감소 효과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코로나19 이후 소득분배 변화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가계동향조사 분기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소득 분배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장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취업소득이 크게, 오랫동안 감소하였다. 가구주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취업소득은 2019년 동분기와 비교할 때 2020년 2분기에 22.2%, 2021년 1분기에 19.5%, 2021년 2분기에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취업소득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분석 결과는 종사상지위별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주 지위를 통제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과 같은 대규모의 보편적 지원이 전체 인구의 소득분배 악화를 방지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하였지만, 이제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손실보상이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가구주의 배우자 집단의 고용이 크게, 오랫동안 감소하였다. 가구주의 배우자 집단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2019년 동분기와 비교할 때 미취업 비율이 2020년 2분기~2021년 4분기에 1~4%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코로나19가 한편으로 대면서비스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한편으로 자녀 돌봄 공백을 발생시킴에 따라 여성의 고용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2019년 동분기 대비 시장소득 빈곤율을 살펴보면,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은 2020년 2분기~2021년 4분기에 2~5%포인트 증가하였고, 모자가구의 빈곤율은 2020년 2분기~2021년 4분기에 7~13%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여성 경제활동 축소가 아동 빈곤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향후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을 이탈한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코로나19 이후 빈곤율이 급증한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지급된 다양한 재난지원금은 소득분배 악화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동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시장소득 빈곤율은

2.7%포인트 증가하였지만,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3.2%포인트 감소하였다. 2019년 동분기 대비 2020년 3분기~2021년 4분기 시장소득 빈곤율 역시 1~2%포인트 증가하였지만,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단, 코로나19 이후 전체 인구의 빈곤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자영업자, 아동 가구, 중년 1인 가구 등 소득 수준이 감소하거나 빈곤이 증가한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코로나19의 소득·고용 충격에 따른 피해를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집단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과제

첫째, 국세청 소득자료 등과 같은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분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주요 서베이 데이터에 의존하였다. 이 연구의 핵심 데이터인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행정자료 보완 작업을 통해 근로소득 과소보고와 같은 측정오차가 상당히 교정되었지만, 고소득층의 응답 거부 등으로 인해 표본이 일정하게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서베이 데이터는 과세행정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저임금·불안정 근로자의 근로소득,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빈곤 노인의 사적이전소득 등을 풍부하게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지만, 서베이로 조사하기 어려운 고소득층의 근로소득 분포를 정교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소득분배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가계동향조사 분기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소득분배를 분석하였지만, 연간 소득분배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기 이전 분석대상 기간이 2019년 한 해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가 축적된 후 코로나19 확산 전후 연간 소득분배 변화에 초점을 맞춘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전후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변화와 소득지위 이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도 필요하다.



- 강승복. (2016). 최저임금의 사업체 내 임금압축 효과. 노동경제논집, 39(4), 31-56.
- 강신옥, 김현경. (2016).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율 변화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 1999년과 2008년의 비교. 한국경제의 분석, 22(2), 1-31.
- 김대일, 이석배, 황운재. (2014). 가구구성과 소득 불평등. 노동경제논집, 37(3), 1-44.
- 김대일. (2015). 가구 구성의 불평등 완화 효과와 그 변화. 노동경제논집, 38(3), 23-51.
- 김미곤, 고제이, 이철희, 홍석철, 전병목, 여유진 ... 서효진. (2019).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서울,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영민, 정지운. (2020). 최저임금이 산업별 임금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Korean Economic Studies, 38(4), 95-119.
- 김태완, 이주미. (2020). 코로나 시대의 소득불균형 심화와 정책적 대응. 보건복지포럼, 290, 20-33.
- 김태훈. (2019).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임금효과. 노동정책연구, 19(2), 135-174.
- 김현경, 이원진, 정은희, 정해식, 김예슬. (2020). 주요 소득보장제도 효과 평가 연구. 서울, 세종: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재현, 이래혁. (2020). 코로나19의 영향은 모두에게 동등한가?: 종사상 지위별 소득과 빈곤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2, 215-241.
- 남재현, 이래혁. (2021).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 소득 계층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8(1), 63-95.
- 반정호. (2011). 가구 구성방식의 다양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8(1), 85-111.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20).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각 연도).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각 연도). 기초연금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성명재, 박기백. (2009).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57(4), 5-37.
- 성재민. (2013). 임금불평등 추세와 원인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성재민. (2018). 임금불평등의 최근 추세와 원인. 노동리뷰, 2018년 8월호, 55-74.
- 성재민. (2022).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과 향후 과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토론회문(2022. 4. 15.).
- 손병돈, 문혜진. (202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 집중되었는가? 한국사회 복지학, 73(3), 9-31.
- 신윤정, 고든솔, 박소은, 안수란, 우해봉, 이다미, ..., Gietel-Basten, S. (2021).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 (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윤규 외. (2020). 노동시장과 불평등 현황과 대책.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병희, 이시균, 오상봉. (2017). 노동시장제도와 경제적 불평등.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 (2014). 2000년대 소득불평등 증가요인 분석: 단계적 분석방법. 경제발전연구, 20(1), 73-103.
- 이승호, 홍민기. (2021).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정책, 28(3), 17-44.
- 이아영, 황남희, 양준석, 안영. (2019).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용. (2021). [팩트체크] 자영업자 폐업 안 하는 게 코로나 사태 호전 기대 때문? 연합뉴스 (2021. 12. 25.).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4141700502>에서 2022. 4. 6. 인출.
- 이원진, 김현경, 함선유, 하은솔. (2021). 한국 소득분배 추이와 영향요인.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원진, 정해식, 전지현. (2019).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 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종관. (2020).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 KDI 경제전망, 37(2), 43-50.
- 이철희. (2008). 1996~2000년 한국의 가구소득불평등 확대: 임금, 노동공급,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 노동경제논집, 31(2), 1-34.
- 이태진, 이원진, 오욱찬, 김성아, 여유진, 구인회, 김미곤.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시행 20년의 변화와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지연, 이병희. (2013). 소득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과 정책 선택.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3, 71-109.

- 전병유. (2007).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관한 연구: 중간일자리 및 중간임금계층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13(2), 171-244.
- 전병유. (2013). 한국 사회에서의 소득불평등 심화와 동인에 관한 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3, 15-40.
- 정준호, 전병유, 장지연. (2017a). 199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 지정책, 44(2), 29-54.
- 정준호, 전병유, 장지연. (2017b). 임금 불평등 변화의 요인분해: 2006-2015년. 산업노동연구, 23(2), 47-77.
- 정준호. (2017).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정책 및 리쇼어링 현상. 노동리뷰, 2017년 6월호, 18-28.
- 정준호. (2022). 내부 자문회의 발표 자료(2022. 4. 19.).
- 정지운, 임병인, 김주현. (2014). 가구원수 분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7(2), 71-90.
- 정진호, 남재량, 김주영, 전영준. (2011). 최저임금의 효과분석.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정찬미. (2021). 1인 가구의 사회보장 수급현황 및 정책 방향: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과학논총, 24, 211-228.
- 최평천. (2021). [코로나 1년] 경제성장률 22년만에 마이너스...자동차·항공업 직격탄. 연합뉴스(2021. 1. 13.).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2143000003>에서 2022. 4. 6. 인출.
- 통계청. (2018).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2. 4. 6. 인출.
- 통계청. (2021a).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2. 4. 6. 인출.
- 통계청. (2021b).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 <https://meta.narastat.kr/>에서 2021. 8. 18. 인출.
- 통계청. (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2. 4. 4. 인출.
-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통계청 MDIS 원격접속(RAS22021803).
-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통계청 MDIS 다운로드.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 12. 19. 인출.
-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조사표.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 12. 19. 인출.
-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 12. 19. 인출.

-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코드집.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1. 12. 19. 인출.
-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2020). 2020년 빈곤통계연보.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함선유, 이원진, 김지원. (2021). 코로나 19의 확산과 청년노동시장 변화.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현상철. (2021). 코로나에도 소상공인 늘었다?...“대안이 없어서”. 아주경제(2021. 10. 23.). <https://www.ajunews.com/view/20211021151945775>에서 2022. 4. 6. 인출.
- 홍석철, 전한경. (2013).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의 심화. 한국경제의 분석, 19(1), 71-113.
- 황선웅. (2021).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평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발표문.
- Autor, D. H., Manning, A., & Smith, C. L. (2016). The contribution of the minimum wage to U.S. wage inequality over three decades: A reassessment.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8(1), 58-99.
- Blinder, A. S. (1973). Wage discrimination: Reduced form and structural estimate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8(4), 436-455.
- Chiquiar, D., & Hanson, G. H. (2005). International migration, self-selection, and the distribution of wages: Evidence from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3(2), 239-281.
- Collins, C., Landivar, L. C., Ruppanner, L., & Scarborough, W. J. (2021). COVID-19 and the gender gap in work hours. *Gender, Work & Organization*, 28, 101-112.
- DiNardo, J., Fortin, N. M., & Lemieux, T. (1996).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distribution of wages, 1973-1992: A semiparametric approach. *Econometrica*, 64(5), 1001-1044.
- Firpo, S., Fortin, N. M., & Lemieux, T. (2009).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s. *Econometrica*, 77 (3), 953-73.
- Ham, S. (2021). Explaining gender gaps in the South Korean labor marke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eminist Economics*, 27(1-2), 133-151.
- Landivar, L. C., Ruppanner, L., Scarborough, W. J., Collins, C. (2020). Early signs indicate that COVID-19 is exacerbating gender inequality in the labor force. *Socius*. January 2020.

- Lee, D. S. (1999). Wag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1980s: Rising dispersion or falling minimum wag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4(3), 977-1023.
- Lee, S., Park, M., & Shin, Y. (2021). Hit harder, recover slower? Unequal employment effects of the Covid-19 shock. NBER Working Papers 28354,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 Oaxaca, R. L. (1973).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4, 693-709.



〈부표 1-1〉 지니계수 및 빈곤율

(단위: 0~1, %, %p)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완데이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니 계수	(A) 개인취업소득	0.750	0.738	0.736	0.729	0.727	0.726	0.720	0.718	0.708	0.707	0.704
	(B)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0.417	0.403	0.399	0.397	0.396	0.405	0.415	0.417	0.416	0.421	0.420
	(C) 균등화 일차소득	0.412	0.401	0.396	0.394	0.394	0.400	0.410	0.413	0.411	0.414	0.414
	(D) 균등화 시장소득	0.398	0.390	0.386	0.385	0.385	0.390	0.403	0.406	0.403	0.405	0.405
	(E) 균등화 가처분소득	0.363	0.359	0.353	0.347	0.343	0.346	0.357	0.357	0.346	0.340	0.333
	(B-A)	-0.333	-0.334	-0.336	-0.333	-0.331	-0.322	-0.305	-0.301	-0.292	-0.287	-0.284
	(C-B)	-0.005	-0.002	-0.003	-0.003	-0.002	-0.005	-0.005	-0.004	-0.005	-0.007	-0.006
	(D-C)	-0.015	-0.011	-0.010	-0.009	-0.009	-0.009	-0.007	-0.007	-0.008	-0.009	-0.009
	(E-D)	-0.034	-0.031	-0.033	-0.039	-0.041	-0.044	-0.046	-0.050	-0.057	-0.065	-0.073
빈곤율	(A) 개인취업소득	62.6	62.6	62.0	61.4	61.1	60.5	62.6	61.9	60.9	61.2	61.3
	(B)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19.8	19.2	18.9	19.3	19.5	19.7	22.3	22.1	22.0	23.6	24.0
	(C) 균등화 일차소득	18.3	17.8	17.6	17.9	18.1	18.2	19.8	19.9	19.8	21.0	21.5
	(D) 균등화 시장소득	17.7	17.6	17.6	18.0	17.9	17.9	19.8	19.7	19.9	20.8	21.3
	(E) 균등화 가처분소득	16.7	16.7	16.5	16.3	15.8	16.2	17.6	17.3	16.7	16.3	15.3
	(B-A)	-42.8	-43.4	-43.0	-42.1	-41.6	-40.8	-40.3	-39.9	-38.9	-37.5	-37.2
	(C-B)	-1.5	-1.4	-1.4	-1.4	-1.4	-1.5	-2.5	-2.1	-2.2	-2.6	-2.5
	(D-C)	-0.6	-0.1	0.0	0.1	-0.2	-0.3	0.0	-0.2	0.1	-0.2	-0.2
	(E-D)	-0.9	-0.9	-1.1	-1.7	-2.1	-1.7	-2.2	-2.5	-3.3	-4.5	-6.0
65세 이상 빈곤율	(A) 개인취업소득	87.9	88.7	88.3	87.8	88.0	86.6	86.9	85.4	84.8	84.5	84.5
	(B)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66.8	64.5	63.7	65.2	66.8	67.1	67.1	65.8	65.6	67.6	67.1
	(C) 균등화 일차소득	61.7	59.6	59.3	60.9	61.7	61.7	59.7	58.9	59.5	60.5	60.2
	(D) 균등화 시장소득	58.7	57.9	57.8	59.1	59.9	59.7	57.5	56.7	58.5	59.0	58.6
	(E) 균등화 가처분소득	49.2	48.8	48.4	47.1	46.7	46.7	43.7	42.4	42.1	41.6	39.1
	(B-A)	-21.0	-24.2	-24.6	-22.6	-21.2	-19.5	-19.8	-19.6	-19.2	-16.9	-17.5
	(C-B)	-5.2	-4.9	-4.4	-4.3	-5.1	-5.4	-7.4	-6.9	-6.1	-7.1	-6.9
	(D-C)	-3.0	-1.8	-1.5	-1.8	-1.8	-2.1	-2.3	-2.2	-1.0	-1.5	-1.7
	(E-D)	-9.5	-9.1	-9.4	-12.0	-13.2	-13.0	-13.7	-14.3	-16.4	-17.4	-19.4

주: 균등화 소득은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눈 가구소득을 의미한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 50%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부표 2-1〉 개인취업소득 지니계수 재가중 분석 결과

(단위: 0~1)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완데이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2017	2018	2019	2020
(A)	전체 인구	0.750	0.738	0.736	0.729	0.727	0.726	0.720	0.718	0.708	0.707	0.704
	18세 이상 인구	0.683	0.668	0.668	0.662	0.661	0.661	0.654	0.652	0.643	0.644	0.640
	취업자	0.487	0.475	0.469	0.460	0.455	0.452	0.476	0.475	0.469	0.466	0.469
	임금근로자	0.432	0.429	0.423	0.420	0.414	0.408	0.446	0.446	0.442	0.432	0.434
	비임금근로자	0.597	0.576	0.574	0.556	0.555	0.560	0.552	0.550	0.539	0.554	0.559
(B)	전체 인구	0.750	0.740	0.738	0.733	0.732	0.731	0.720	0.718	0.709	0.707	0.705
	18세 이상 인구	0.683	0.671	0.668	0.662	0.659	0.659	0.654	0.650	0.640	0.636	0.634
	취업자	0.487	0.476	0.470	0.459	0.453	0.448	0.476	0.473	0.465	0.459	0.462
	임금근로자	0.432	0.430	0.423	0.419	0.412	0.405	0.446	0.444	0.439	0.427	0.429
	비임금근로자	0.597	0.578	0.575	0.555	0.554	0.559	0.552	0.548	0.536	0.548	0.554
(C)	전체 인구	0.750	0.742	0.740	0.736	0.735	0.734	0.720	0.717	0.708	0.705	0.705
	18세 이상 인구	0.683	0.672	0.671	0.665	0.663	0.663	0.654	0.649	0.639	0.635	0.634
	취업자	0.487	0.478	0.472	0.463	0.457	0.452	0.476	0.473	0.465	0.458	0.463
	임금근로자	0.432	0.431	0.424	0.420	0.413	0.405	0.446	0.443	0.438	0.426	0.428
	비임금근로자	0.597	0.580	0.579	0.561	0.562	0.567	0.552	0.549	0.538	0.549	0.557
(D)	전체 인구	0.750	0.744	0.742	0.737	0.734	0.735	0.720	0.717	0.711	0.706	0.708
	18세 이상 인구	0.683	0.675	0.673	0.666	0.662	0.664	0.654	0.650	0.641	0.636	0.638
	취업자	0.487	0.478	0.473	0.463	0.457	0.452	0.476	0.472	0.462	0.455	0.458
	임금근로자	0.432	0.431	0.424	0.421	0.413	0.405	0.446	0.443	0.437	0.424	0.426
	비임금근로자	0.597	0.580	0.580	0.561	0.562	0.568	0.552	0.548	0.533	0.544	0.549
(E)	전체 인구	0.750	0.745	0.744	0.740	0.738	0.739	0.720	0.718	0.712	0.708	0.710
	18세 이상 인구	0.683	0.676	0.675	0.670	0.667	0.669	0.654	0.650	0.643	0.638	0.641
	취업자	0.487	0.480	0.477	0.469	0.467	0.461	0.476	0.474	0.466	0.459	0.464
	임금근로자	0.432	0.431	0.423	0.421	0.415	0.406	0.446	0.443	0.438	0.425	0.427
	비임금근로자	0.597	0.582	0.585	0.570	0.576	0.577	0.552	0.549	0.537	0.548	0.558

주: (A) 연도별 실제 표본

(B)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분포를 t1 표본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t1: 조사데이터는 2011년, 행정보완데이터는 2016년)

(C)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교육수준 분포를 t1 표본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t1: 조사데이터는 2011년, 행정보완데이터는 2016년)

(D)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교육수준×취업상태 분포를 t1 표본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t1: 조사데이터는 2011년, 행정보완데이터는 2016년)

(E)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교육수준×취업상태×종사상지위 분포를 t1 표본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t1: 조사데이터는 2011년, 행정보완데이터는 2016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부표 2-2〉 종사상지위별 개인취업소득 평균 및 지니계수, 재가중 표본(E)

(단위: 만 원/년, 2020년 실질, 0~1)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완데이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상용근로자	3816	3766	3782	3816	3832	3914	4136	4186	4256	4372	4377
	임시·일용근로자	1336	1336	1381	1394	1420	1485	1526	1589	1591	1662	1621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7419	6788	7055	6428	6301	6662	7028	7150	6853	7082	683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898	2833	2967	2958	2954	2964	3099	3152	3138	3173	3013
	무급가족종사자	29	115	160	127	104	19	189	224	213	200	175
	기타 종사자	2696	2764	2606	2791	2840	2994	3288	3081	3176	3116	3165
지니 계수	상용근로자	0.374	0.371	0.366	0.363	0.356	0.351	0.404	0.400	0.391	0.377	0.374
	임시·일용근로자	0.384	0.395	0.384	0.389	0.389	0.365	0.393	0.408	0.415	0.403	0.426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443	0.437	0.446	0.413	0.423	0.436	0.430	0.409	0.398	0.426	0.459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449	0.439	0.437	0.437	0.446	0.433	0.428	0.431	0.423	0.428	0.432
	무급가족종사자	0.991	0.977	0.977	0.974	0.978	0.990	0.937	0.952	0.917	0.918	0.920
	기타 종사자	0.424	0.410	0.413	0.405	0.408	0.443	0.439	0.380	0.392	0.408	0.415

주: 성·연령×교육수준×취업상태×종사상지위 분포를 t1 표본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t1: 조사데이터는 2011년, 행정보완데이터는 2016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부표 5-1〉 2011~2020년 연령 변화에 따른 2020년 소득분배 변화

(단위: 0~1, %p)

구분		개인취업소득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균등화 시장소득	균등화 가처분소득
전체 인구 지니계수		-0.002	0.020	0.015	0.007
빈곤율	전체 인구	-0.8	2.5	2.2	1.1
	0~17세	0.0	-0.7	-0.5	-0.6
	18~64세	-0.9	0.4	0.4	-0.1
	65세 이상	0.0	-0.2	0.0	-0.2

주: 2020년 실제 표본 A의 분배지표에서 재가중 표본 B1의 분배지표를 차감한 값이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 재가중 시 가처분소득 중위값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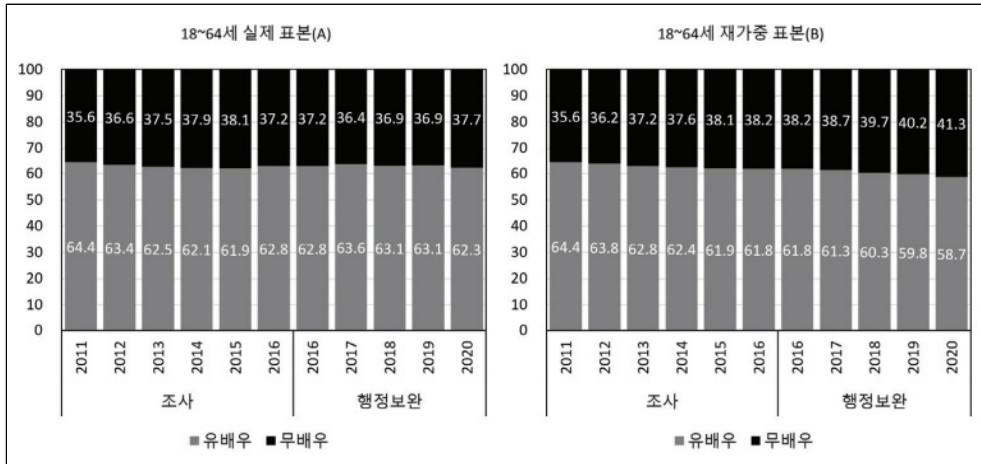
(A) 연도별 실제 표본

(B1)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연령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부도 5-1] 18~64세 결혼상태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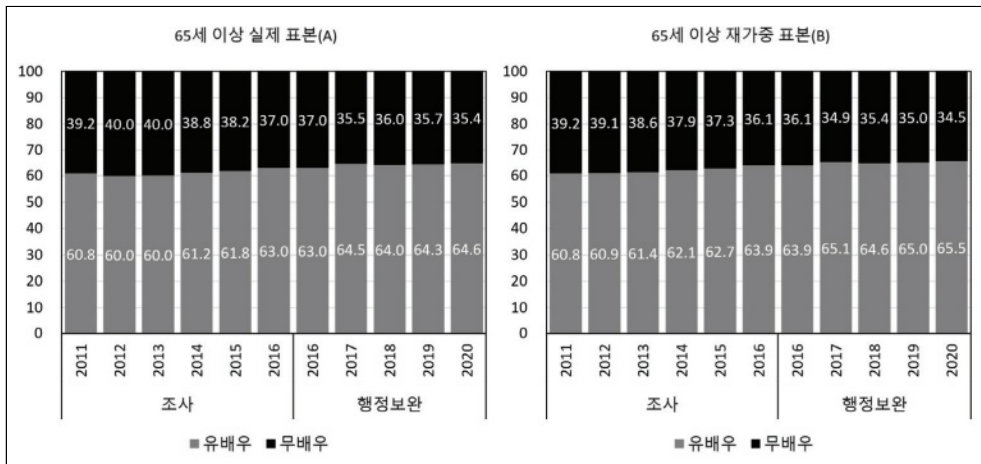
주: (A) 연도별 실제 표본

(B)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부도 5-2] 65세 이상 결혼상태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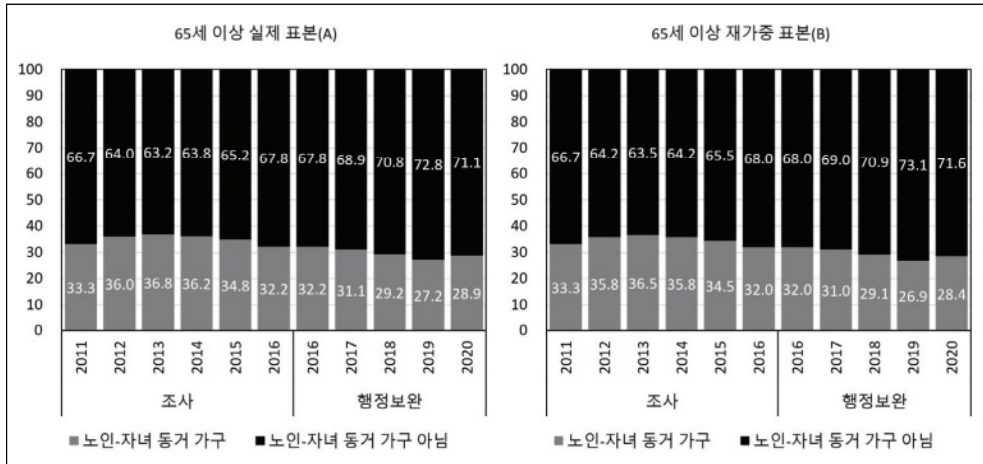
주: (A) 연도별 실제 표본

(B)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부도 5-3] 65세 이상 노인-자녀 동거 변화

(단위: %)



주: (A) 연도별 실제 표본

(B)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부표 5-2〉 성·연령 분포 변화

(단위: %)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완데이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
남성·0~4세	2.6	2.6	2.5	2.4	2.3	2.2	2.2	2.2	2.0	1.8	1.7	1.7
남성·5~9세	2.6	2.7	2.7	2.8	2.8	3.0	3.0	3.0	2.8	2.8	2.7	2.7
남성·10~17세	5.7	5.5	5.4	5.2	5.0	4.8	4.8	4.9	4.6	4.6	4.6	4.6
남성·18~24세	4.7	4.8	5.0	5.1	5.1	4.3	4.3	4.0	4.0	3.7	3.6	3.6
남성·25~29세	3.0	3.1	3.0	3.0	2.9	2.9	2.9	2.7	2.6	2.6	2.7	2.7
남성·30~34세	3.5	3.8	3.8	3.5	3.2	3.0	3.0	2.5	2.3	2.1	2.2	2.2
남성·35~39세	3.9	3.9	3.7	3.7	3.7	3.7	3.7	3.8	3.6	3.3	3.5	3.5
남성·40~44세	4.2	4.3	4.3	4.2	4.1	3.9	3.9	3.7	3.7	3.7	3.7	3.7
남성·45~49세	4.1	4.0	4.0	4.0	4.0	4.2	4.2	4.4	4.3	4.2	4.2	4.2
남성·50~54세	3.9	4.0	3.8	3.8	3.8	3.9	3.9	3.9	4.0	4.1	4.2	4.2
남성·55~59세	3.1	3.3	3.5	3.6	3.7	3.8	3.8	3.9	4.0	3.9	3.8	3.8
남성·60~64세	2.2	2.2	2.3	2.6	2.7	3.0	3.0	3.3	3.5	3.7	3.8	3.8
남성·65~69세	2.0	1.8	1.8	2.0	2.0	2.1	2.1	2.3	2.4	2.6	2.7	2.7
남성·70~74세	1.7	1.6	1.6	1.6	1.6	1.7	1.7	1.7	1.9	2.0	2.0	2.0
남성·75~79세	1.0	1.0	1.0	1.1	1.2	1.3	1.3	1.5	1.5	1.6	1.5	1.5
남성·80세 이상	0.8	0.7	0.8	0.9	0.9	1.0	1.0	1.1	1.3	1.5	1.5	1.5
여성·0~4세	2.6	2.6	2.5	2.4	2.3	2.2	2.2	2.0	2.0	1.7	1.8	1.8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완데이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2017	2018	2019	2020	
여성·5~9세	2.4	2.5	2.5	2.5	2.6	2.7	2.7	2.5	2.5	2.6	2.6	
여성·10~17세	5.3	5.0	4.9	4.7	4.5	4.4	4.4	4.5	4.3	4.3	4.2	
여성·18~24세	4.3	4.5	4.4	4.5	4.6	4.6	4.6	4.4	4.4	4.1	3.9	
여성·25~29세	2.9	3.0	2.9	2.8	2.7	2.7	2.7	2.6	2.5	2.6	2.6	
여성·30~34세	3.8	3.9	3.8	3.6	3.4	3.1	3.1	2.8	2.6	2.4	2.6	
여성·35~39세	4.0	3.9	3.9	3.8	3.9	3.9	3.9	3.8	3.7	3.6	3.6	
여성·40~44세	4.5	4.4	4.2	4.2	4.2	4.2	4.2	4.2	4.1	4.1	4.0	
여성·45~49세	4.0	4.0	4.1	4.1	4.2	4.3	4.3	4.3	4.2	4.1	4.3	
여성·50~54세	4.1	4.2	4.1	4.0	3.9	3.8	3.8	3.8	4.1	4.2	4.2	
여성·55~59세	3.2	3.2	3.5	3.8	4.0	4.1	4.1	4.3	4.2	4.1	3.9	
여성·60~64세	2.6	2.5	2.5	2.6	2.8	3.1	3.1	3.3	3.7	3.9	4.0	
여성·65~69세	2.3	2.0	2.1	2.1	2.3	2.3	2.3	2.5	2.6	2.9	3.0	
여성·70~74세	2.1	2.1	2.0	2.0	1.9	2.1	2.1	2.1	2.1	2.3	2.2	
여성·75~79세	1.6	1.6	1.7	1.7	1.7	1.7	1.7	1.9	2.1	2.2	2.0	
여성·80세 이상	1.5	1.6	1.7	1.8	1.9	2.1	2.1	2.1	2.3	2.5	2.6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부표 5-3〉 가구유형 분포 변화, 실제 표본(A)

(단위: %)

[illegible]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완데이터				
	11	12	13	14	15	16	16	17	18	19	20
18~34세·성인가구원2명이상·아동가구원0명·노인가구원1명이상	1.6	1.7	1.8	1.7	1.6	1.5	1.5	1.3	1.2	1.1	1.3
18~34세·성인가구원1명이상·아동가구원1명이상·노인가구원1명이상	0.5	0.5	0.5	0.5	0.4	0.4	0.4	0.3	0.3	0.3	0.2
35~49세·성인가구원1명·아동가구원0명·노인가구원0명	1.1	1.1	1.1	1.1	1.2	1.2	1.2	1.2	1.2	1.3	1.5
35~49세·성인가구원2명이상·아동가구원0명·노인가구원0명	4.2	4.1	4.1	4.2	4.2	4.2	4.2	4.1	4.0	3.8	4.0
35~49세·성인가구원1명·아동가구원1명이상·노인가구원0명	0.6	0.5	0.4	0.3	0.4	0.3	0.3	0.3	0.3	0.3	0.4
35~49세·성인가구원2명이상·아동가구원1명이상·노인가구원0명	15.6	15.6	15.3	15.0	15.1	15.3	15.3	15.5	14.9	14.6	14.5
35~49세·성인가구원1명·아동가구원0명·노인가구원1명이상	0.7	0.7	0.7	0.8	0.8	0.8	0.8	0.9	0.9	1.0	1.1
35~49세·성인가구원2명이상·아동가구원0명·노인가구원1명이상	0.9	0.9	1.0	1.1	1.0	1.0	1.0	1.0	1.0	0.9	1.0
35~49세·성인가구원1명·아동가구원1명이상·노인가구원1명이상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35~49세·성인가구원2명이상·아동가구원1명이상·노인가구원1명이상	1.4	1.5	1.4	1.3	1.3	1.3	1.3	1.2	1.1	0.9	0.8
50~64세·성인가구원1명·노인가구원0명	1.5	1.5	1.5	1.5	1.6	1.7	1.7	1.9	2.1	2.2	2.4
50~64세·성인가구원2명이상·노인가구원0명	14.2	14.7	14.9	15.6	15.9	16.6	16.6	17.0	17.9	18.0	17.8
50~64세·성인가구원1명·노인가구원1명이상	1.3	1.1	1.1	1.2	1.2	1.4	1.4	1.5	1.7	1.8	1.9
50~64세·성인가구원2명이상·노인가구원1명이상	2.0	2.1	2.2	2.2	2.1	2.0	2.0	2.0	1.9	1.9	2.0
65세이상·성인가구원0명·노인가구원1명	2.6	2.4	2.5	2.6	2.7	2.9	2.9	3.1	3.5	4.0	3.7
65세이상·성인가구원0명·노인가구원2명이상	4.9	4.4	4.6	4.7	5.1	5.5	5.5	6.0	6.5	7.4	7.3
65세이상·성인가구원1명이상·노인가구원1명	3.9	3.9	3.9	3.9	3.8	3.9	3.9	3.9	4.0	4.1	4.2
65세이상·성인가구원1명이상·노인가구원2명이상	1.6	1.7	1.8	1.9	2.0	1.9	1.9	2.1	2.1	2.2	2.3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부표 5-4〉 가구유형 분포 변화, 재가중 표본(B)

(단위: %)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완데이터					
	11	12	13	14	15	16	16	17	18	19	20	
0~4세·아동가구원1명	1.7	1.8	1.7	1.6	1.6	1.5	1.5	1.6	1.5	1.7	1.7	
0~4세·아동가구원2명이상	3.4	3.4	3.5	3.5	3.5	3.6	3.6	3.6	3.6	3.5	3.4	
5~17세·성인가구원1명이하·아동가구원1명	0.5	0.4	0.4	0.4	0.4	0.5	0.5	0.4	0.4	0.4	0.5	
5~17세·성인가구원1명이하·아동가구원2명이상	0.9	0.8	0.8	0.7	0.7	0.5	0.5	0.5	0.5	0.6	0.6	
5~17세·성인가구원2명이상·아동가구원1명	3.4	3.6	3.7	3.8	3.8	4.0	4.0	3.9	3.8	3.7	3.8	
5~17세·성인가구원2명이상·아동가구원2명이상	11.2	11.3	11.2	11.2	11.1	11.1	11.1	11.3	11.3	11.3	11.2	
18~34세·성인가구원1명·아동가구원0명·노인가구원0명	1.1	1.0	0.9	0.8	0.9	1.1	1.1	1.0	1.1	1.2	1.5	
18~34세·성인가구원2명이상·아동가구원0명·노인가구원0명	11.7	11.9	12.2	12.5	12.8	12.9	12.9	13.1	13.6	13.6	13.5	
18~34세·성인가구원1명이상·아동가구원1명이상·노인가구원0명	7.1	6.9	6.6	6.5	6.2	6.0	6.0	5.9	5.5	5.3	5.0	
18~34세·성인가구원1명·아동가구원0명·노인가구원1명이상	0.2	0.2	0.2	0.2	0.2	0.2	0.2	0.2	0.2	0.3	0.3	
18~34세·성인가구원2명이상·아동가구원0명·노인가구원1명이상	1.6	1.6	1.7	1.7	1.6	1.6	1.6	1.5	1.4	1.4	1.6	
18~34세·성인가구원1명이상·아동가구원1명이상·노인가구원1명이상	0.5	0.5	0.5	0.4	0.4	0.4	0.4	0.4	0.3	0.3	0.3	
35~49세·성인가구원1명·아동가구원0명·노인가구원0명	1.1	1.1	1.1	1.2	1.2	1.2	1.2	1.2	1.3	1.4	1.6	
35~49세·성인가구원2명이상·아동가구원0명·노인가구원0명	4.2	4.1	4.1	4.2	4.2	4.1	4.1	4.0	4.1	3.9	4.0	
35~49세·성인가구원1명·아동가구원1명이상·노인가구원0명	0.6	0.5	0.4	0.4	0.4	0.3	0.3	0.3	0.3	0.4	0.4	
35~49세·성인가구원2명이상·아동가구원1명이상·노인가구원0명	15.6	15.7	15.6	15.5	15.5	15.7	15.7	15.9	15.6	15.7	15.4	
35~49세·성인가구원1명·아동가구원0명·노인가구원1명이상	0.7	0.7	0.8	0.8	0.8	0.8	0.8	0.9	1.0	1.1	1.2	
35~49세·성인가구원2명이상·아동가구원0명·노인가구원1명이상	0.9	0.9	1.0	1.1	1.0	1.0	1.0	1.0	1.1	1.0	1.0	
35~49세·성인가구원1명·아동가구원1명이상·노인가구원1명이상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35~49세·성인가구원2명이상·아동가구원1명이상·노인가구원1명이상	1.4	1.5	1.5	1.4	1.3	1.3	1.3	1.2	1.1	1.0	0.8	
50~64세·성인가구원1명·노인가구원0명	1.5	1.4	1.4	1.4	1.4	1.5	1.5	1.5	1.6	1.7	1.8	
50~64세·성인가구원2명이상·노인가구원0명	14.2	14.3	14.3	14.4	14.5	14.6	14.6	14.5	14.6	14.5	14.3	
50~64세·성인가구원1명·노인가구원1명이상	1.3	1.1	1.1	1.1	1.1	1.1	1.1	1.2	1.3	1.3	1.3	
50~64세·성인가구원2명이상·노인가구원1명이상	2.0	2.1	2.2	2.1	1.9	1.8	1.8	1.7	1.5	1.5	1.5	
65세이상·성인가구원0명·노인가구원1명	2.6	2.5	2.5	2.5	2.6	2.6	2.6	2.7	2.8	2.9	2.7	
65세이상·성인가구원0명·노인가구원2명이상	4.9	4.7	4.7	4.8	4.9	5.1	5.1	5.2	5.2	5.5	5.5	
65세이상·성인가구원1명이상·노인가구원1명	3.9	4.1	4.0	3.9	3.6	3.5	3.5	3.4	3.3	3.0	3.1	
65세이상·성인가구원1명이상·노인가구원2명이상	1.6	1.8	1.9	1.9	1.9	1.8	1.8	1.9	1.7	1.6	1.7	

주: (B)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부표 5-5〉 성·연령·가구원 수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및 빈곤율 변화

(단위: 0~1, %)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완데이터				
		11	12	13	14	15	16	16	17	18	19	20
전체 인구 지니 계수	(A) 개인취업소득	0.750	0.738	0.736	0.729	0.727	0.726	0.720	0.718	0.708	0.707	0.704
	(A)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0.417	0.403	0.399	0.397	0.396	0.405	0.415	0.417	0.416	0.421	0.420
	(A) 균등화 시장소득	0.398	0.390	0.386	0.385	0.385	0.390	0.403	0.406	0.403	0.405	0.405
	(A) 균등화 가처분소득	0.363	0.359	0.353	0.347	0.343	0.346	0.357	0.357	0.346	0.340	0.333
	(C) 개인취업소득	0.750	0.740	0.737	0.730	0.727	0.727	0.722	0.719	0.710	0.708	0.708
	(C)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0.417	0.408	0.402	0.397	0.393	0.397	0.408	0.405	0.397	0.394	0.394
	(C) 균등화 시장소득	0.398	0.394	0.388	0.386	0.382	0.384	0.397	0.396	0.388	0.385	0.386
	(C) 균등화 가처분소득	0.363	0.362	0.354	0.347	0.341	0.342	0.353	0.351	0.337	0.329	0.322
전체 인구 빈곤율	(A) 개인취업소득	62.6	62.6	62.0	61.4	61.1	60.5	62.6	61.9	60.9	61.2	61.3
	(A)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19.8	19.2	18.9	19.3	19.5	19.7	22.3	22.1	22.0	23.6	24.0
	(A) 균등화 시장소득	17.7	17.6	17.6	18.0	17.9	17.9	19.8	19.7	19.9	20.8	21.3
	(A) 균등화 가처분소득	16.7	16.7	16.5	16.3	15.8	16.2	17.6	17.3	16.7	16.3	15.3
	(C) 개인취업소득	62.6	61.9	62.2	61.6	61.1	60.7	62.9	62.1	61.3	61.5	62.1
	(C)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19.8	19.3	19.4	19.5	19.2	18.5	21.3	20.4	19.6	20.1	20.8
	(C) 균등화 시장소득	17.7	17.8	17.9	18.2	17.6	16.9	19.0	18.3	17.9	17.8	18.6
	(C) 균등화 가처분소득	16.7	17.0	16.6	16.2	15.6	15.5	17.2	16.4	15.6	14.5	13.8
0~17세 빈곤율	(A) 개인취업소득	100.0	99.9	99.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11.0	11.5	11.1	10.6	10.6	9.7	14.7	13.5	12.4	12.6	13.3
	(A) 균등화 시장소득	10.4	11.0	10.9	10.5	10.5	9.4	14.4	13.2	12.1	11.7	12.7
	(A) 균등화 가처분소득	11.7	12.2	11.7	11.2	11.3	10.8	15.2	14.1	12.3	10.6	9.8
	(C) 개인취업소득	100.0	99.9	99.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11.0	10.9	11.3	10.7	10.9	9.8	14.8	13.7	12.9	13.1	14.1
	(C) 균등화 시장소득	10.4	10.7	10.9	10.6	10.7	9.5	14.5	13.4	12.5	12.1	13.5
	(C) 균등화 가처분소득	11.7	12.2	11.6	11.0	11.3	10.9	15.2	14.2	13.0	11.2	10.5
18-64세 빈곤율	(A) 개인취업소득	45.5	46.1	45.3	44.7	44.2	43.3	46.5	45.3	44.1	44.0	44.4
	(A)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13.3	13.2	12.7	12.9	12.4	12.5	15.0	14.5	13.9	14.6	15.3
	(A) 균등화 시장소득	11.8	12.2	11.9	12.1	11.5	11.4	13.3	13.1	12.6	12.9	13.6
	(A) 균등화 가처분소득	11.9	12.2	11.8	11.8	10.9	11.2	12.8	12.4	11.6	11.0	10.4
	(C) 개인취업소득	45.5	44.5	44.9	44.0	43.3	42.9	46.2	45.2	44.2	44.6	45.4
	(C)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13.3	12.9	13.1	13.1	12.5	12.0	14.7	14.1	13.4	13.8	14.5
	(C) 균등화 시장소득	11.8	12.1	12.1	12.4	11.6	11.1	13.2	12.7	12.2	12.3	13.0
	(C) 균등화 가처분소득	11.9	12.2	11.8	11.8	10.9	11.1	12.9	12.3	11.6	10.9	10.2
65세 이상 빈곤율	(A) 개인취업소득	87.9	88.7	88.3	87.8	88.0	86.6	86.9	85.4	84.8	84.5	84.5
	(A)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66.8	64.5	63.7	65.2	66.8	67.1	67.1	65.8	65.6	67.6	67.1
	(A) 균등화 시장소득	58.7	57.9	57.8	59.1	59.9	59.7	57.5	56.7	58.5	59.0	58.6
	(A) 균등화 가처분소득	49.2	48.8	48.4	47.1	46.7	46.7	43.7	42.4	42.1	41.6	39.1
	(C) 개인취업소득	87.9	87.2	87.7	87.6	87.7	86.1	86.5	85.1	84.4	84.2	84.8
	(C)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66.8	65.3	64.8	66.0	66.6	65.3	65.3	63.3	62.0	62.9	63.6
	(C) 균등화 시장소득	58.7	58.3	58.4	59.6	59.6	58.0	55.7	54.5	55.4	54.8	55.2
	(C) 균등화 가처분소득	49.2	48.8	48.5	47.2	46.0	45.2	42.1	40.2	39.3	38.3	37.2

주: 균등화 소득은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눈 가구소득을 의미한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
윗값의 50%로, 재가중 시 가처분소득 중윗값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A) 연도별 실제 표본

(C) 연도별 표본을 재가중하여 성·연령×가구원 수 분포를 2011년과 동일하게 조정한 표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부표 6-1〉 공적이전소득 및 세금·사회보험료 평균

(단위: 만 원/년, 2020년 실질)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완데이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인구	공적연금	66	68	74	80	89	101	110	120	128	138	142
	기초(노령)연금	13	13	13	20	29	29	30	31	36	45	48
	기초보장급여	9	9	9	9	10	10	13	14	14	15	17
	장애관련급여	2	4	4	5	5	4	3	3	3	3	4
	아동관련급여		1	7	7	7	7	9	8	10	19	20
	근로·자녀장려금					1	2	7	7	7	18	16
	재난지원금											84
	기타공적이전소득	20	15	16	15	16	16	16	17	21	25	29
	세금·사회보험료	-303	-311	-326	-332	-342	-369	-415	-448	-469	-486	-512
	총공적이전소득	109	110	123	137	156	169	189	199	219	264	358
	순공적이전	-194	-201	-203	-195	-186	-200	-226	-250	-250	-223	-154
0~17세	공적연금	9	9	10	12	12	13	17	15	16	14	17
	기초(노령)연금	4	4	4	5	7	6	7	6	7	8	8
	기초보장급여	8	9	9	9	8	8	10	12	12	11	14
	장애관련급여	1	2	2	3	2	2	1	1	1	1	1
	아동관련급여		2	15	16	15	16	22	19	26	49	54
	근로·자녀장려금					3	3	10	10	9	18	15
	재난지원금											95
	기타공적이전소득	18	10	9	9	8	8	8	7	10	12	13
	세금·사회보험료	-327	-326	-342	-347	-366	-406	-447	-495	-517	-565	-592
	총공적이전소득	39	36	50	54	55	56	75	70	81	114	216
	순공적이전	-288	-290	-293	-293	-311	-351	-372	-425	-436	-451	-376
	공적연금	59	61	63	68	72	80	88	94	96	100	101
	기초(노령)연금	5	6	6	9	12	11	12	12	13	16	17
18~64세	기초보장급여	7	7	7	8	8	9	11	11	12	13	15
	장애관련급여	2	3	4	5	5	4	3	3	3	4	4
	아동관련급여		1	6	6	5	5	8	7	8	15	16
	근로·자녀장려금					1	1	6	6	6	18	15
	재난지원금											85
	기타공적이전소득	16	12	13	12	13	13	13	13	18	21	26
	세금·사회보험료	-331	-339	-356	-365	-376	-405	-455	-493	-521	-543	-568
	총공적이전소득	89	89	98	106	116	125	141	146	155	186	279
	순공적이전	-242	-250	-258	-259	-259	-281	-314	-347	-366	-356	-289
	공적연금	194	208	228	246	282	316	343	362	381	404	419
	기초(노령)연금	67	69	68	104	146	145	144	143	161	191	203
	기초보장급여	20	20	20	19	20	20	25	25	26	27	28
	장애관련급여	4	8	7	8	9	8	5	5	5	5	6
65세 이상	아동관련급여		0	1	1	1	1	1	1	1	2	2
	근로·자녀장려금					0	0	5	5	6	18	16
	재난지원금											69
	기타공적이전소득	40	40	41	44	42	43	43	47	49	50	53
	세금·사회보험료	-122	-132	-141	-144	-143	-151	-184	-197	-203	-202	-226
	총공적이전소득	324	345	365	421	500	533	566	589	628	697	796
	순공적이전	202	213	224	277	357	382	383	392	425	495	570

주: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아동 관련 급여는 2012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재난지원금은 2020년에 조사되었으므로, 연도별로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세금·사회보험료는 음수로 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부표 6-2〉 시장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 및 세금·사회보험료 평균

(단위: 만 원/년, 2020년 실질)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완데이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2017	2018	2019	2020
1분위	공적연금	231	219	250	275	307	335	280	315	321	361	350
	기초(노령)연금	59	57	59	91	131	134	123	125	143	179	189
	기초보장급여	75	77	78	80	82	85	102	111	113	116	131
	장애관련급여	9	18	17	19	20	19	15	14	16	18	19
	아동관련급여		1	3	1	2	1	4	4	5	8	7
	근로·자녀장려금					1	2	11	10	12	25	24
	재난지원금											71
	기타공적이전소득	68	50	53	52	45	55	48	54	69	75	74
	세금·사회보험료	-34	-38	-39	-38	-40	-42	-48	-52	-49	-53	-54
	총공적이전소득	441	422	460	518	588	632	583	634	678	783	865
	순공적이전	408	384	420	480	548	590	535	581	630	730	811
2분위	공적연금	102	109	104	106	122	137	154	157	199	210	205
	기초(노령)연금	24	22	23	35	51	53	52	56	75	96	96
	기초보장급여	7	6	8	9	10	11	18	18	23	25	27
	장애관련급여	3	5	5	6	6	6	4	5	5	6	6
	아동관련급여		2	7	7	6	4	8	9	10	21	25
	근로·자녀장려금					5	6	20	20	20	48	40
	재난지원금											82
	기타공적이전소득	27	27	24	30	32	26	29	29	38	44	45
	세금·사회보험료	-74	-84	-85	-84	-83	-88	-98	-100	-99	-100	-118
	총공적이전소득	163	171	171	193	233	243	286	294	370	449	525
	순공적이전	89	87	86	109	151	155	188	195	271	349	407
3·4분위	공적연금	49	52	66	70	75	93	110	124	130	148	158
	기초(노령)연금	10	11	11	17	25	23	24	27	31	40	45
	기초보장급여	2	2	1	1	2	2	3	3	2	4	3
	장애관련급여	1	3	2	4	3	4	2	2	1	2	2
	아동관련급여		1	10	10	10	10	13	10	16	24	25
	근로·자녀장려금					2	3	12	12	10	32	26
	재난지원금											90
	기타공적이전소득	19	12	14	14	13	12	15	19	23	25	35
	세금·사회보험료	-137	-147	-156	-158	-165	-172	-172	-173	-177	-179	-194
	총공적이전소득	82	81	104	115	131	148	180	198	213	275	384
	순공적이전	-55	-66	-52	-43	-34	-24	8	25	37	96	190
5·6분위	공적연금	42	49	49	52	54	67	87	88	93	105	105
	기초(노령)연금	6	7	7	9	13	14	17	17	16	22	22
	기초보장급여	0	0	0	0	0	0	0	0	0	1	1
	장애관련급여	1	2	3	5	4	3	1	1	1	1	1
	아동관련급여		1	8	9	7	8	12	11	13	24	25
	근로·자녀장려금					1	1	4	4	4	13	11
	재난지원금											90
	기타공적이전소득	14	11	9	7	12	12	10	10	12	19	20
	세금·사회보험료	-218	-234	-244	-246	-256	-279	-267	-272	-285	-300	-323
	총공적이전소득	63	70	76	83	91	105	132	131	140	185	275
	순공적이전	-155	-163	-169	-164	-166	-174	-135	-142	-145	-115	-49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완데이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2017	2018	2019	2020	
7·8분위	공적연금	36	38	41	48	44	55	73	77	81	79	83	
	기초(노령)연금	4	4	4	8	11	10	12	11	14	18	20	
	기초보장급여	0	0	0	0	0	0	0	0	0	0	0	
	장애관련급여	0	1	2	2	1	1	1	1	1	0	1	
	아동관련급여		0	8	7	7	7	9	7	9	17	20	
	근로·자녀장려금					0	0	2	2	2	7	7	
	재난지원금											84	
	기타공적이전소득	10	7	8	8	7	9	10	8	11	12	21	
	세금·사회보험료	-338	-356	-378	-385	-408	-421	-418	-442	-465	-502	-518	
	총공적이전소득	50	50	64	73	70	83	108	107	118	133	237	
순공적이전	-288	-306	-314	-312	-338	-339	-310	-335	-347	-369	-282		
9·10분위	공적연금	36	38	37	40	57	51	65	72	74	74	86	
	기초(노령)연금	3	3	3	5	7	6	8	7	9	9	11	
	기초보장급여	0	0	0	0	0	0	0	0	0	0	0	
	장애관련급여	0	1	1	2	3	2	1	1	1	1	1	
	아동관련급여		0	4	5	5	5	7	5	6	14	15	
	근로·자녀장려금					0	0	0	0	0	2	2	
	재난지원금											78	
	기타공적이전소득	9	7	9	7	8	8	9	7	7	8	7	
	세금·사회보험료	-769	-756	-788	-812	-820	-910	-1144	-1278	-1343	-1374	-1439	
	총공적이전소득	47	49	53	58	80	73	90	93	97	109	202	
순공적이전	-722	-708	-734	-754	-741	-837	-1054	-1185	-1246	-1265	-1237		

주: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시장소득분위는 균등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를 10등분하여 구성하였다. 아동 관련 급여는 2012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재난지원금은 2020년에 조사되었으므로, 연도별로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세금·사회보험료는 음수로 표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부표 6-3〉 지니계수, 빈곤율, 빈곤갭비율

(단위: 0~1, %, %p)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완데이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니계수	(A) 시장소득	0.398	0.390	0.386	0.385	0.385	0.390	0.403	0.406	0.403	0.405	0.405	
	(B)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0.372	0.366	0.361	0.356	0.352	0.356	0.370	0.371	0.365	0.360	0.352	
	(C) 가처분소득	0.363	0.359	0.353	0.347	0.343	0.346	0.357	0.357	0.346	0.340	0.333	
	(B-A) 공적이전소득의 영향	-0.025	-0.024	-0.025	-0.029	-0.032	-0.034	-0.033	-0.035	-0.038	-0.046	-0.053	
	(C-B) 세금·사회보험료의 영향	-0.009	-0.007	-0.008	-0.009	-0.009	-0.010	-0.013	-0.015	-0.019	-0.019	-0.019	
	(C-A) 순공적이전의 영향	-0.034	-0.031	-0.033	-0.039	-0.041	-0.044	-0.046	-0.050	-0.057	-0.065	-0.073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안데이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인구 빈곤율	(A) 시장소득	17.7	17.6	17.6	18.0	17.9	17.9	19.8	19.7	19.9	20.8	21.3	
	(B)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14.4	14.6	14.3	14.2	13.8	14.0	15.3	15.0	14.5	14.1	13.0	
	(C) 가처분소득	16.7	16.7	16.5	16.3	15.8	16.2	17.6	17.3	16.7	16.3	15.3	
	(B-A) 공적이전소득의 영향	-3.3	-3.0	-3.3	-3.8	-4.1	-3.9	-4.5	-4.7	-5.5	-6.7	-8.3	
	(C-B) 세금·사회보험료의 영향	2.4	2.1	2.2	2.1	2.0	2.2	2.4	2.3	2.2	2.2	2.3	
	(C-A) 순공적이전의 영향	-0.9	-0.9	-1.1	-1.7	-2.1	-1.7	-2.2	-2.5	-3.3	-4.5	-6.0	
0~17세 빈곤율	(A) 시장소득	10.4	11.0	10.9	10.5	10.5	9.4	14.4	13.2	12.1	11.7	12.7	
	(B)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9.2	10.0	9.4	9.0	8.8	8.5	12.5	11.4	9.8	8.2	7.2	
	(C) 가처분소득	11.7	12.2	11.7	11.2	11.3	10.8	15.2	14.1	12.3	10.6	9.8	
	(B-A) 공적이전소득의 영향	-1.2	-1.0	-1.5	-1.6	-1.6	-1.0	-1.9	-1.8	-2.3	-3.5	-5.5	
	(C-B) 세금·사회보험료의 영향	2.6	2.2	2.3	2.2	2.5	2.3	2.7	2.8	2.6	2.4	2.6	
	(C-A) 순공적이전의 영향	1.3	1.2	0.8	0.7	0.9	1.4	0.8	0.9	0.3	-1.0	-3.0	
18~64세 빈곤율	(A) 시장소득	11.8	12.2	11.9	12.1	11.5	11.4	13.3	13.1	12.6	12.9	13.6	
	(B)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9.6	10.1	9.7	9.6	9.0	9.0	10.4	10.2	9.4	8.8	8.2	
	(C) 가처분소득	11.9	12.2	11.8	11.8	10.9	11.2	12.8	12.4	11.6	11.0	10.4	
	(B-A) 공적이전소득의 영향	-2.2	-2.1	-2.2	-2.6	-2.6	-2.4	-2.9	-2.9	-3.1	-4.0	-5.4	
	(C-B) 세금·사회보험료의 영향	2.3	2.1	2.1	2.2	1.9	2.2	2.4	2.2	2.1	2.1	2.2	
	(C-A) 순공적이전의 영향	0.1	0.0	-0.1	-0.4	-0.6	-0.2	-0.6	-0.7	-1.0	-1.9	-3.2	
65세 이상 빈곤율	(A) 시장소득	58.7	57.9	57.8	59.1	59.9	59.7	57.5	56.7	58.5	59.0	58.6	
	(B)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46.7	46.6	45.9	45.5	44.7	44.7	41.9	40.3	40.0	39.4	36.9	
	(C) 가처분소득	49.2	48.8	48.4	47.1	46.7	46.7	43.7	42.4	42.1	41.6	39.1	
	(B-A) 공적이전소득의 영향	-11.9	-11.3	-11.9	-13.6	-15.2	-15.0	-15.6	-16.3	-18.4	-19.6	-21.7	
	(C-B) 세금·사회보험료의 영향	2.4	2.2	2.5	1.6	2.0	2.0	1.9	2.1	2.1	2.2	2.2	
	(C-A) 순공적이전의 영향	-9.5	-9.1	-9.4	-12.0	-13.2	-13.0	-13.7	-14.3	-16.4	-17.4	-19.4	
전체 인구 빈곤갭 비율	(A) 시장소득	8.6	8.7	8.9	9.2	9.6	9.9	9.8	10.0	10.1	10.7	10.7	
	(B)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5.0	5.3	5.3	5.1	4.9	5.0	5.2	5.2	4.9	4.6	3.8	
	(C) 가처분소득	5.7	6.1	6.1	5.9	5.6	5.8	6.4	6.5	6.0	5.6	4.8	
	(B-A) 공적이전소득의 영향	-3.6	-3.4	-3.6	-4.1	-4.6	-4.8	-4.6	-4.8	-5.2	-6.1	-6.9	
	(C-B) 세금·사회보험료의 영향	0.8	0.8	0.8	0.7	0.7	0.7	1.2	1.4	1.1	1.0	1.0	
	(C-A) 순공적이전의 영향	-2.8	-2.6	-2.8	-3.4	-3.9	-4.1	-3.4	-3.5	-4.1	-5.1	-5.8	
0~17세 빈곤갭 비율	(A) 시장소득	3.8	4.1	4.2	4.1	3.9	3.5	5.3	5.2	4.7	4.3	4.4	
	(B)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2.5	2.8	2.8	2.6	2.5	2.3	3.6	3.4	2.9	2.2	1.7	
	(C) 가처분소득	3.1	3.6	3.5	3.2	3.1	2.9	5.0	5.2	4.2	3.3	3.0	
	(B-A) 공적이전소득의 영향	-1.4	-1.3	-1.4	-1.5	-1.4	-1.2	-1.7	-1.7	-1.8	-2.1	-2.8	
	(C-B) 세금·사회보험료의 영향	0.6	0.7	0.7	0.6	0.6	0.6	1.3	1.8	1.3	1.1	1.3	
	(C-A) 순공적이전의 영향	-0.7	-0.6	-0.7	-0.9	-0.8	-0.6	-0.4	0.1	-0.5	-1.0	-1.5	
18~64세 빈곤갭 비율	(A) 시장소득	4.9	5.1	5.1	5.1	5.1	5.3	5.6	5.6	5.3	5.5	5.6	
	(B)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2.9	3.2	3.1	3.0	2.8	2.9	3.3	3.2	3.0	2.7	2.3	
	(C) 가처분소득	3.6	4.0	3.8	3.7	3.5	3.6	4.5	4.5	4.0	3.6	3.2	
	(B-A) 공적이전소득의 영향	-2.1	-1.9	-2.0	-2.1	-2.2	-2.4	-2.3	-2.4	-2.4	-2.7	-3.3	
	(C-B) 세금·사회보험료의 영향	0.7	0.8	0.7	0.7	0.6	0.7	1.2	1.3	1.1	0.9	0.9	
	(C-A) 순공적이전의 영향	-1.4	-1.1	-1.2	-1.4	-1.6	-1.7	-1.1	-1.1	-1.3	-1.8	-2.4	
65세 이상 빈곤갭 비율	(A) 시장소득	34.7	36.1	36.2	38.1	39.9	40.0	35.7	35.1	35.3	36.2	35.7	
	(B)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19.8	20.9	20.8	19.9	18.9	18.6	16.4	15.7	14.8	13.8	11.5	
	(C) 가처분소득	21.1	22.2	22.0	21.1	20.0	19.7	17.5	16.9	15.8	14.9	12.6	
	(B-A) 공적이전소득의 영향	-14.9	-15.2	-15.4	-18.2	-21.0	-21.4	-19.2	-19.4	-20.5	-22.5	-24.2	
	(C-B) 세금·사회보험료의 영향	1.3	1.3	1.2	1.2	1.1	1.1	1.1	1.2	1.1	1.2	1.1	
	(C-A) 순공적이전의 영향	-13.6	-13.9	-14.2	-17.0	-19.9	-20.3	-18.2	-18.2	-19.5	-21.3	-23.1	

주: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illegible]

구분		조사데이터						행정보완데이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인구 빈곤갭 비율	공적연금 효과	-1.5	-1.5	-1.6	-1.8	-1.9	-2.1	-1.8	-2.0	-2.1	-2.4	-2.4
	기초(노령)연금 효과	-0.7	-0.7	-0.7	-1.0	-1.4	-1.4	-1.3	-1.3	-1.5	-1.8	-1.9
	기초보장급여 효과	-0.7	-0.7	-0.7	-0.7	-0.7	-0.8	-0.9	-0.9	-0.9	-0.9	-1.0
	장애관련급여 효과	-0.1	-0.2	-0.2	-0.2	-0.2	-0.2	-0.1	-0.1	-0.1	-0.2	-0.2
	아동관련급여 효과		0.0	-0.1	0.0	0.0	0.0	-0.1	-0.1	-0.1	-0.2	-0.2
	근로·자녀장려금 효과					0.0	-0.1	-0.2	-0.2	-0.2	-0.5	-0.4
	재난지원금 효과											-1.0
0~17세 빈곤갭 비율	공적연금 효과	-0.2	-0.2	-0.2	-0.3	-0.2	-0.2	-0.2	-0.2	-0.2	-0.1	-0.2
	기초(노령)연금 효과	-0.1	-0.1	-0.1	-0.1	-0.2	-0.1	-0.1	-0.1	-0.1	-0.1	-0.1
	기초보장급여 효과	-0.7	-0.7	-0.7	-0.7	-0.6	-0.6	-0.7	-0.8	-0.8	-0.7	-0.8
	장애관련급여 효과	0.0	-0.1	-0.1	-0.1	-0.1	0.0	0.0	0.0	-0.1	0.0	0.0
	아동관련급여 효과		-0.1	-0.1	-0.1	-0.1	-0.1	-0.2	-0.2	-0.3	-0.5	-0.6
	근로·자녀장려금 효과					-0.1	-0.1	-0.4	-0.3	-0.3	-0.6	-0.5
	재난지원금 효과											-0.8
18~64세 빈곤갭 비율	공적연금 효과	-0.9	-0.9	-0.9	-1.0	-1.0	-1.1	-0.9	-1.0	-0.9	-0.9	-0.9
	기초(노령)연금 효과	-0.1	-0.1	-0.1	-0.2	-0.3	-0.3	-0.2	-0.2	-0.2	-0.3	-0.3
	기초보장급여 효과	-0.6	-0.5	-0.6	-0.6	-0.6	-0.6	-0.7	-0.7	-0.8	-0.8	-0.9
	장애관련급여 효과	-0.1	-0.2	-0.1	-0.2	-0.2	-0.2	-0.1	-0.1	-0.1	-0.2	-0.2
	아동관련급여 효과		0.0	0.0	0.0	0.0	0.0	-0.1	-0.1	-0.1	-0.1	-0.2
	근로·자녀장려금 효과					0.0	0.0	-0.2	-0.2	-0.2	-0.4	-0.3
	재난지원금 효과											-0.7
65세 이상 빈곤갭 비율	공적연금 효과	-6.5	-6.8	-7.3	-8.3	-9.0	-9.5	-8.5	-9.0	-9.4	-10.0	-10.0
	기초(노령)연금 효과	-4.7	-4.5	-4.3	-6.5	-8.8	-8.6	-7.6	-7.3	-8.1	-9.2	-9.4
	기초보장급여 효과	-1.8	-1.8	-1.7	-1.5	-1.6	-1.6	-1.9	-1.8	-1.8	-1.8	-1.8
	장애관련급여 효과	-0.3	-0.5	-0.5	-0.5	-0.6	-0.5	-0.3	-0.3	-0.3	-0.3	-0.3
	아동관련급여 효과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근로·자녀장려금 효과					0.0	0.0	-0.2	-0.2	-0.3	-0.8	-0.7
	재난지원금 효과											-2.5

주: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시장소득+해당 공적이전소득 항목>의 분배지표에서 <시장소득>의 분배지표를 차감한 값이다.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부표 6-5〉 2020년 하위집단별 공적이전소득 및 세금·사회보험료 평균

(단위: 만 원/년, 2020년 실질)

구분		공적 연금	기초 연금	기초 보장 급여	장애 관련 급여	아동 관련 급여	근로· 자녀 장려 금	재난 지원 금	기타 공적 이전 소득	세금· 사회 보험 료	총 공적 이전 소득	순 공적 이전
비근로 가구	아동	64	14	289	11	71	30	91	62	-94	630	536
	청년	161	25	170	26	11	26	68	85	-194	572	378
	장년	121	52	155	25	18	14	78	86	-175	547	372
	중년-저자산	108	36	329	47	2	23	74	79	-51	699	648
	중년-고자산	831	27	7	7	0	4	57	157	-365	1091	726
	노인-저자산	171	307	120	19	0	14	63	51	-22	746	724
	노인-고자산	835	144	3	1	0	2	53	67	-224	1106	882
근로가구 -아동	최저소득	27	25	151	9	78	73	113	74	-94	550	456
	저소득	12	12	39	3	83	62	101	19	-130	332	202
	중저소득	18	9	1	1	61	21	99	17	-231	227	-4
	고소득	14	6	0	0	44	2	91	6	-918	163	-755
근로가구 -청년	최저소득	76	24	187	31	13	57	87	67	-67	544	476
	저소득	55	14	58	8	41	52	90	38	-121	355	234
	중저소득	67	12	3	3	25	27	87	29	-226	252	26
	고소득	62	10	0	2	10	8	78	15	-817	186	-631
근로가구 -장년	최저소득	119	45	128	21	36	49	92	75	-93	565	471
	저소득	37	29	30	4	40	50	90	30	-134	313	179
	중저소득	49	20	2	1	35	20	97	18	-232	242	10
	고소득	32	12	0	0	28	4	86	8	-862	170	-692
근로가구 -중년	최저소득-저자산	115	36	146	29	4	70	79	78	-59	559	499
	최저소득-고자산	575	56	0	1	0	17	80	37	-159	767	607
	저소득-저자산	100	34	51	13	5	66	88	59	-93	416	323
	저소득-고자산	412	45	5	3	2	18	94	50	-190	629	439
	중저소득-저자산	69	22	6	4	3	42	83	31	-176	260	84
	중저소득-고자산	268	27	1	2	2	11	90	40	-266	441	175
	고소득-저자산	60	12	1	2	2	23	79	18	-429	198	-231
	고소득-고자산	139	13	0	2	1	4	83	23	-933	265	-668
근로가구 -노인	최저소득-저자산	186	325	36	8	1	52	69	56	-21	733	712
	최저소득-고자산	515	242	3	2	0	16	71	80	-74	930	856
	저소득-저자산	182	300	16	8	1	54	68	47	-49	675	626
	저소득-고자산	408	206	2	4	2	13	75	59	-111	769	658
	중저소득-저자산	230	230	5	3	4	42	76	44	-129	634	505
	중저소득-고자산	445	138	2	1	3	9	80	55	-207	733	526
	고소득-저자산	218	166	1	1	3	29	70	33	-401	522	121
	고소득-고자산	429	103	1	2	3	5	81	30	-791	654	-137

주: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단위로 분석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부표 7-1〉 고용형태별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미취업	40.4	38.7	38.5	38.6	40.1	40.0	39.6	40.0	41.4	39.0	38.7
상용근로자	31.6	31.7	32.1	32.5	32.6	32.3	32.4	32.3	32.7	32.8	33.1
임시근로자	10.3	11.1	10.9	10.8	9.9	9.9	10.1	10.2	9.3	10.6	10.8
일용근로자	3.2	3.3	3.2	3.2	2.9	2.9	3.0	3.0	2.7	2.9	2.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6	3.5	3.4	3.3	3.2	3.1	3.0	3.0	2.9	2.9	2.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8.8	9.3	9.3	9.2	9.1	9.4	9.4	9.3	9.1	9.5	9.4
무급가족종사자	2.2	2.5	2.6	2.4	2.2	2.4	2.4	2.3	2.0	2.4	2.3

자료: 통계청. (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